

발간등록번호

11-1290000-000793-01

자해사망 군인의 예우에 관한 외국 법제 및 적용방안 연구

2020. 1. 20

제 출 문

국방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자해사망 군인의 예우에 관한 외국 법제 및 적용방안 연구」 과제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 20.

책임연구원 : 이재승 건국대학교

참여연구원 : 최관호 순천대학교

이재학 건국대학교

김학진 서울대학교

보조연구원 : 조현실 건국대학교

윤 박 건국대학교

| 목 차 |

목 차	i
표 목 차	iii
그림목차	iv

제1장 서론1

1.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2
3. 한국의 보훈법제의 실태	4
4. 정책제안의 요약	5

제2장 독일의 처우실태7

1. 자해사망자 현황	7
2. 보훈법제	11
3. 공상 또는 순직 인정의 조건	17
4. 자해사망과 순직	37
5. 유족에 대한 보훈급부내역	50
참고문헌	62

제3장 미국의 처우실태64

1. 미국 군대와 자해사망자 현황	64
2. 미국의 보훈법제	71
3. 자해 사망과 직무 관련성	77
4. 사망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	81
참고문헌	91

제4장 대만의 처우실태96

1. 대만의 군대	96
2. 대만의 보훈정책	98
3. 자해사망한 군인에 대한 대만의 처우실태	117
4. 소결	126
참고문헌	129

제5장 이스라엘의 처우실태133

1. 이스라엘군대 개관	133
2. 이스라엘군의 자해사망자 현황	137
3. 이스라엘의 보훈제도 및 관련 법령	146
4. 보훈조직	155
5. 상이군인 보상 정책	157
참고문헌	161

제6장 한국의 처우실태163

1. 한국 군대와 자해사망자 현황	163
2. 한국의 보훈법제	167
3. 자해사망군인에 대한 보훈법제의 변화	175
4. 소결 : 한국보훈법제의 문제점	180
참고문헌	184

제7장 정책적 제언186

1. 보훈법제의 총평	186
2. 제언방향	189
3. 보훈법제의 개선점	190
4. 의무복무군인에 대한 특별규정	195
5. 국립묘지 안장	198

| 표 목 차 |

제2장 독일의 처우실태

<표2-1> 직무수행중 사망자통계	9
<표2-2> 자해사망자 통계	9
<표2-3> 파병지역의 사망자	11
<표2-4> 조건설과 상당인과관계설	27
<표2-5> 경제적 급부의 내역	50

제4장 대만의 처우실태

<표4-1> 대만 군인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	110
---------------------------------	-----

제5장 이스라엘의 처우실태

<표5-1>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여성 (전투) 군인의 역사	136
<표5-2> Suicide cases in the Israeli army since 1980-2017	138

제6장 한국의 처우실태

<표6-1> 징병제 국가 병사 임금 비교 (2012년 기준)	164
<표6-2> 2009~2018년 군 사망사고 현황	165
<표6-3> 2006~2010.6. 자해사망군인 자해사망 수단	167
<표6-4> 예우보상의 내용 및 관련 법률	167
<표6-5> 순직자 분류기준표 중 순직Ⅲ형	170
<표6-6>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내용 비교	171
<표6-7>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기준	173
<표6-8> 국립묘지의 종류 및 안장 대상	173
<표6-9> 전공사상사처리훈령(2-14) 개정내용	179

제7장 자해사망군인의 보훈에 대한 정책적 제언

<표7-1> 현재 관행과 제언 방향 대비	189
------------------------------	-----

| 그림 목차 |

제2장 독일의 처우실태

<그림2-1> 독일군인 총수의 변천	8
<그림2-2> 프랑스의 솔레흐 묘지(2,228인 안장)	55
<그림2-3> 하이델베르크 독일군 묘지	56
<그림2-4> 노이에 바케(베를린)	57
<그림2-5> 피에타(노이에 바케, 베를린)	58
<그림2-6> 독일군 사망자 기림비(베를린 국방부 경내)	59
<그림2-7> 추모명부	60
<그림2-8> 추모표식(추모의 숲, 포츠담)	61
<그림2-9> 추모의 숲(카불, 아프가니스탄)	61

제4장 대만의 처우실태

<그림4-1> 4개월 상비병역 군사훈련(의무역) 신병훈련 과정)	97
<그림4-2> 대만에서의 모병제로의 전환과 처우개선	98
<그림4-3>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조직표	101
<그림4-4> 국민혁명총렬사	114
<그림4-5> 타이베이군인묘지	115
<그림4-6> 국군시범묘지	116
<그림4-7> 국군타이베이총령탑	116
<그림4-8> 대만의 자해사망률과 자해사망자 수(1994~2018)	121
<그림4-9> 대만의 연령별 자해사망률(1994~2018)	122
<그림4-10> 미군, 이스라엘군, 대만군의 자해사망률 비교(2008~2015)	122
<그림4-11> 대만 전체 자해사망률과 군인 자해사망률 비교(2003~2015)	123

제5장 이스라엘의 처우실태

<그림5-1> Tel Hi 비석	154
<그림5-2> 마사다(Masada)	154

제6장 한국의 처우실태

<그림6-1> 2009~2018년 현역병 입영 현황	164
------------------------------------	-----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자해사망군인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사망한 군인에 대한 통일적 보훈기준(유공자) 혹은 포용적 보훈기준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의 제도 및 정책을 분석·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결론적으로 군복무 중 자해사망자에 대한 합리적인 예우 및 보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표와 인식을 갖고 수행하였다.

첫째,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보훈법제, 판례, 결정관행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훈법제는 해당국가의 연금법제, 사회보장법제, 공무원법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경로의존성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최장기적인 시각에서 제도설계를 제안하는 대신에, 2010년 이후의 판례와 법제를 정합적으로 재구축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책임원칙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둘째, 이 연구는 이러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독일, 미국, 대만, 이스라엘 등 주요국가의 자해사망자 예우에 관한 법제, 판례, 관행을 수집·분석하였다. 이러한 나라들은 각기 고유한 법제와 역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의 법제에 간단히 이식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제도에 대해서든지 다른 제도적 씨앗을 접맥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각국의 보훈법제의 특징 및 장점을 주목하고자 하였다.

셋째, 징병제 또는 모병제가 보훈제도 전반에 결정적인 경로의존성을 발휘하는지를 주목하였다. 실제로 모병제 국가는 다른 민간부문의 직장보다 군대가 처우상의 장점을 갖도록 설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군인의 처우나 자해사망군인의 처우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군대에 비해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징병제 국가는 본질적으로 국가에 대한 군인의 헌신과 의무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해사망에 대한 국가책임의 인정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자해사망에 대한 국가정책은 징병제 국가에서도 자해사망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오랫동안 징병제를 유지해왔던 독일은 20세기 전반기에 자해사망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였다. 현재 독일은 모병제로 전환하였지만 이에 관한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이스라엘도 자해사망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다가 1976년 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대만은 몇 차례

인권침해사건을 겪고 군대제도에 대한 대규모 실용주의적 개혁을 단행하여, 자해사망을 병사로 취급하고 유족에게 보훈급부를 제공하고 있다. 대만은 현재 모병제로 전환하였지만 이 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다. 따라서 모병제를 채택하는가, 징병제를 시행하는가에 따라 자해사망 군인에 국가책임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모병제 하에서 군인을 우대하지 않으면 군대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병제 국가가 자해사망 군인에 대한 처우와 인정 정책에 있어서 관후한 방침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면, 징병제 국가는 자해사망 군인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을 국민적 기초와 여론에 입각하여 강력하게 제도화할 수도 있다. 모병제 국가는 제도유지의 편의성 때문에, 징병제 국가는 정치적 정당성 때문에 각기 국가책임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넷째, 본 연구의 대상은 각국의 보훈법제의 기본원칙, 인과관계의 판단, 보훈예우(경제적 보상, 연금, 안장제도)를 중심으로 한다. 실제로 연구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나 판례, 통계자료들이 국가별로 일정하지 않다. 많은 국가들이 중요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연구에서 판례나 법령을 중심으로 탐구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결정은 보훈부서 내부에서 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국가의 보훈법제의 실상을 완전하게 드러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자해사망 군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방안에 대해서 2000년대 이후 비로소 연구보고서나 단행논문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자해사망에 대한 선행연구로 취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훈제도 전반을 개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중에서 자해사망을 직접적으로 연구하거나 자해사망과 관련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들은 다음과 같다.

안석기 외, 군복무중 사망자(자살)의 국가책임론과 예우의 한계, 한국국방연구원, 2003.

안형주, 외국의 보훈제도(미국), 국가보훈처 보훈교육연구원, 2005.

김학준·신기현, “외국의 보훈제도(대만·호주)”, 국가보훈처 보훈교육연구원, 2005.

윤재왕·신오식, “외국의 보훈제도(독일·프랑스)”, 국가보훈처 보훈교육연구원, 2005.

안형주,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 관련 해외사례 소개 : 미국”, 2006년도 전문가 초청 토론회 자료집: 군내 자살처리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회,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안형근의원/김학송의원/박찬석의원, 2006.11.28.).

한인희,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 관련 해외사례 소개 : 대만”, 2006년도 전문가 초청 토론회 자료집: 군내 자살처리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안형근의원/김학송의원/박찬석의원, 2006.11.28.).

이재승, “군내 자살처리자에 대한 국가책임의 근거와 범위”, 2006년도 전문가 초청 토론회 자료집: 군내 자살처리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안형근의원/김학송의원/박찬석의원, 2006.11.28.).

송기춘 외, 군내 자살처리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군인의 자해사망에 대한 연구는 산업재해나 보험사고로서 자해사망에 대한 연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외국 법제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해당 국가의 보훈제도 전반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까닭에 자해사망을 비중 있게 다루지 못했다. 그러나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및 소개만으로도 국내법제의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미국이나 대만의 법제는 군인의 자해사망에 대한 책임논리에서 혁신적인 사고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군인의 자해사망의 법적 평가와 책임의 문제를 소상하게 다루지 못하여 해당국가의 제도의 실재를 이해하는 데 아쉬움을 남겼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각국의 보훈법제, 실제사례 및 판결들을 소개함으로써 선행연구를 최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는 정책적 전환을 목표로 한다. 2006년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자해사망에 대한 국가책임의 인정을 촉구하고 제도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후 자해사망군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논의가 다양하게 펼쳐졌으며, 몇 개의 주목할 만한 판결도 축적됨으로써 군인의 자해사망을 군인개인의 도덕적 비난사항이 아닌 국가책임의 정책적 문제로서 재인식되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자살방지프로그램, 군인사망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절차의 마련, 부대귀책적 자해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인정, 여타 자해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제안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소 미흡하지만 자해사망을 국가책임으로 인정하려는 법제가 2011년에 탄생하였다. 또한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군인의 인권보호와 인권감시를 위한 활동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동시에 2018년 군의문사 및 군사망사고의 진실규명을 위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자해사망의 원인이 부대나 국가의 귀책사유이든 그렇지 않은 정부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남북대치상황에 처한 군인들의 안위와 가족들의 생활보장을 고려하여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해사망에 대한 국가책임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필요에 최소한 부응하고자 한다.

3. 한국의 보훈법제의 실태

1) 자해사망자 현황

최근 10년간(2009~2018)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군인사망사건 중 자해사망의 비중이 60~70% 정도를 차지한다. 자살 예방 프로그램 및 군내의 예방적 조치와 병영문화의 개선을 통해 자살 건수는 낮아졌으나 높은 자해사망률로 인해 국민 대다수는 자해사망 자체를 군대의 인권침해의 심각한 사례로 인식한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적 수단을 투입해야 하지만 사망사고나 자해사망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사망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군 복무 중 자해사망자에 대한 사후적 조치로서의 예우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순직 인정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군내 사망사고, 특히 자해사망사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자해사망군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징병제 국가의 모병업무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크다.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군의 사기와 단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방부가 공개한 ‘군 사망자 현황 자료확인 결과 보고(2019)’를 보면 창군일인 1948년 11월 30일 이후 군 사망자는 23만2397명이며, 전사자 등을 제외하고 사망사고 처리된 군인은 7만4674명이다. 이 중 순직 심사 대기자와 순직자를 제외한 미순직 처리자는 3만9436명이다. 병사(1만7428명), 자살(1만2844명), 일반사망(5638명), 병사(3278명), 전사무효(151명), 실종(97명) 순이다. 이들은 군복무중 사망했지만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순직 심사는 1심인 각 군 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2심과 재심을 맡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로 이뤄진다. 1심에서 기각됐던 사망사건 450건 중 401건은 2018년 7월 국방부 2심에서 순직으로 인정되었고, 2심에서 기각된 45건 중 35건도 재심에서 순직으로 결정되어 모두 436건(96.8%)이 순직으로 인정되었다.

2) 국방부의 순직결정

국방부의 순직 인정 범위가 2012년 7월을 기점으로 위와 같이 확대되기 이전에는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라 자해사망자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훈령이 개정되

면서 공무 관련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도 순직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2014년 3월 훈령이 재개정되면서 자살의 순직 인정 기준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확대되었고 순직 인정 조건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바뀌었다. 2017년 6월에는 군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순직 심사에서 기각되더라도 1회에 한해 재심사를 허용하였고 입대 전 정신질환이 입대 후 악화돼 사망해도 순직을 인정하도록 바뀌었다. 이와 같이 자살의 순직 인정 기준 및 순직 인정 조건의 변화로 인하여 군복무 중 사망자, 특히 자해사망자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 및 공동체적 책임성이 일응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자해사망자에 대한 국방부의 순직 인정 결정은 보훈당국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3) 보훈처의 저조한 인정률과 문제상황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못한 자해사망자를 구제하려는 취지에서 2012년 보훈보상자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최소한 군인의 죽음에 대하여 안보재해라는 관념 아래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었으나 보훈당국의 경직된 법운용으로 인해 인정범위가 제약되어 자해사망군인의 유가족 상당수가 보훈보상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국방부와 보훈처의 결정 불일치는 국가에 대한 유가족들의 불신을 심화시켜왔다. 대법원이 자해사망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주는 보훈당국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주변화되었다. 국가 또는 공동체가 안보의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군인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군인의 신체와 정신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군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수해야 한다. 따라서 자해사망군인을 국가유공자 범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보훈보상자법은 불필요한 법일 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법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군인의 죽음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 경우 국가유공자의 범주에서 배제해야 하는 사례들 - 중대한 범죄를 자행한 후 자해사망한 경우 - 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정책제안의 요약

이 연구의 정책제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순직판정여부는 국방부와 보훈처가 합동으로 결정하거나, 단독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둘째, 군인사법상 순직I-III 유형을 사망의 등급이 아닌 사망의 유형으로 취급해야 한

다. 따라서 군인사법상 순직Ⅰ, 순직Ⅱ, 순직Ⅲ을 폐지하고 순직으로 단일화하고 순직자를 모두 국가유공자로 취급해야 한다.

셋째, 앞에서 거론한 순직의 등급구분을 전제로 한 비정상적인 보훈보상자법을 폐지해야 한다. 보훈보상자법은 순직자를 근거 없이 차별하는 법으로서 위헌의 소지도 있다. 공무원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순직판정의 기준이 되어야하므로 “직접적 관련성” 관념을 기준으로 개정된 보훈법제는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넷째,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반사망(공무에서 벗어난 죽음,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죽음)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보훈혜택을 제공하는 방침을 제안한다. 군인의 죽음에 대한 국가귀책사유 유무에 초점을 맞추는 단계에서 군인 가족의 불행과 곤궁을 합당하게 제거하는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을 ‘비순직 지원’으로 규정하고 국가유공자법에 근거조항을 도입한다. 비순직 지원의 내용은 현재의 보훈보상자법의 지원내용에 준하여 전반적으로 재조정한다.

다섯째, 중대한 범죄를 자행하고 유죄판결을 우려하여 자해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는 유공자법상의 보훈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제적으로 용인할 수 있다. 다만 해당범죄 목록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현역병 또는 의무복무중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서 (자해)사망한 군인에 대해서 사망의 복무관련성을 인정(추정)하는 방침을 채택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의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현역병의 중압감 못지않은 초급장교나 부사관의 직업적 부담에 의한 불행한 죽음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순직 여부에 관계없이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자해사망자나 일반사고 사망자도 국립묘지에 안장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를 자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군인이나 유죄판결을 우려하여 자해사망한 군인은 이러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2장 독일의 처우실태

1. 자해사망자 현황

1) 독일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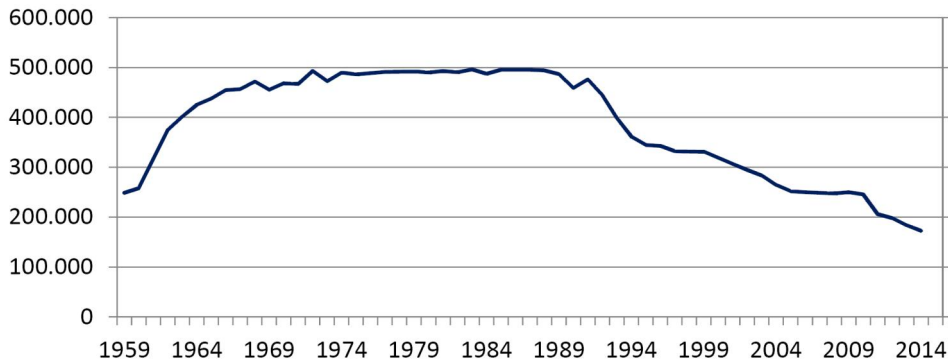
20세기 전반기 독일은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얼룩졌다. 제2차세계대전후 연합국들은 나치즘과 군사주의의 해체를 점령의 목표로 삼았다. 연합국은 나치군대를 폐지하고 나치 전범을 대대적으로 처벌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냉전질서가 고착화되면서 독일은 분단되었다. 서방국가들은 동유럽 공산국가들과 맞서기 위해 194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출범시켰다. 당시 서독지역을 점령하던 서방 연합국 사령관들의 승인 아래 서독은 1949년 5월에 기본법(이하 헌법)을 제정하였다. 서독 헌법은 과거 군사주의를 반성하고 국제평화주의를 천명하였다. 독일연방공화국은 본디 군대를 보유하지 않았고, 이례적으로 헌법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규정하였다(제4조 3항).

독일(서독)은 파리조약(1995년 5월 5일)을 통해 국제법적으로 주권국가의 지위를 잠정적으로 회복하였다. 독일은 1955년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일원이 됨과 동시에 연방군(Bundeswehr)을 창설하였다. 국방장관 블랑크(Blank)가 1955년에 101명의 지원병에게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독일군대는 재건된 것이다. 그러나 군대창설이나 징병제시행은 헌법체제의 근본적인 변경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격론을 피할 수 없었다.¹⁾ 독일은 1956년 3월에 헌법 제12조에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도입하고, 이어 병역법을 제정하였다. 수 천 명의 병역거부자들이 헌법상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원용하며 징집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1960년에 대체복무법이 추가로 도입되었다.

독일은 나치군사주의체제와 나치군대를 해체하고, 민주적이고 개혁된 군대를 출범시켰다. 패전국의 헌법의 평화주의적 지향 때문에 군대는 원래 헌법의 예정사항이 아니었다. 독일은 군대가 정치적 쟁점이 될 때마다 헌법에 새로운 규정을 두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군대에 대한 헌법조항을 가장 많이 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1) Bald, Detlef, Die Bundeswehr: Eine kritische Geschichte 1955-2005, Beck, 2005, 18쪽 이하.

<그림 2-1> 독일군인 총수의 변천



독일군대는 도표와 같이 1960년대에 40만을 상회하였고, 통일 전까지 50만에 육박하는 대병력을 유지하였다. 통일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독일군의 규모는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청년들까지 포함됨으로써 징집대상이 폭증하였다. 동시에 소수정예화, 첨단화를 추구함으로써 병력정원도 축소해나갔다. 현역병, 대체복무자(병역거부자), 병역면제자의 비율이 대등한 정도에 이르렀다. 따라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2019년 10월 31일 현재 독일군 정원은 182,649명(여군 22,512명)에 이른다. 현재 의무복무군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일군인은 직업군인(Berufssoldat)과 단기군인(Soldat auf Zeit)으로 구성되었다. 직업군인은 정년에 이르기까지 군복무를 수행하고, 단기군인은 대체로 2년 안팎의 단기간을 복무하지만 때로는 기간의 연장을 통해 최대 25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단기군인은 62세를 초과할 수 없다. 직업군인의 수는 53,405명이고, 그중 여군은 3,503명이다. 단기군인은 121,483명이고, 그 중 17,524명이 여군이다. 단기군인은 병, 부사관, 장교로 구성되어 있다. 종전에는 여군은 간호병으로 근무하였으나 다양한 전투병과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근무하고 있다.

2) 군인사망자통계

통일 이후 징집대상자(분모)의 증가에 비해 군대규모가 축소되고 군대의 처우도 향상됨으로써 군복무의 압박강도는 낮아졌다. 군대규모의 축소에 따라 순직자나 자해사망자의 수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해사망자의 비율이 순직비율보다 여전히 높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민간인 자살률보다 군인 자살률이 더 높게 나온다. 1955년 독일군의 창설 이래로 군인 및 군속 민간인 3200명 정도²⁾가 직무수행으로 인하여(infolge der Ausübung ihrer Dienstpflichten) 목숨을 잃었다.³⁾ 또한 같은 기간에

3500명 이상 자해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전반적으로 순직보다 자해사망자수가 많다.

<표2-1> 직무수행중 사망자통계

1956(4)	1957(50)	1958(72)	1959(105)	1960(80)	1961(113)	1962(166)
1963(132)	1964(148)	1965(112)	1966(92)	1967(100)	1968(95)	1969(115)
1970(90)	1971(80)	1972(75)	1973(70)	1974(64)	1975(103)	1976(57)
1977(71)	1978(58)	1979(52)	1980(60)	1981(62)	1982(33)	1983(57)
1984(37)	1985(46)	1986(38)	1987(29)	1988(42)	1989(21)	1990(42)
1991(37)	1992(19)	1993(27)	1994(19)	1995(38)	1996(28)	1997(44)
1998(37)	1999(39)	2000(42)	2001(51)	2002(46)	2003(51)	2004(43)
2005(23)	2006(23)	2007(27)	2008(28)	2009(10)	2010(16)	2011(12)
2012(12)	2013(5)	2014(5)	2015(10)	2016(7)	2017(10)	2018(11)
2019(5)						

<표2-2> 자해사망자 통계

1957(18)	1958(27)	1959(24)	1960(47)	1961(45)	1962(54)	1963(64)
1964(83)	1965(58)	1966(76)	1967(68)	1968(68)	1969(68)	1970(69)
1971(73)	1972(82)	1973(96)	1974(87)	1975(97)	1976(89)	1977(80)
1978(93)	1979(103)	1980(79)	1981(77)	1982(100)	1983(80)	1984(88)
1985(93)	1986(83)	1987(77)	1988(85)	1989(73)	1990(65)	1991(43)
1992(54)	1993(53)	1994(73)	1995(65)	1996(50)	1997(49)	1998(44)
1999(41)	2000(19)	2001(42)	2002(32)	2003(39)	2004(46)	2005(25)
2006(27)	2007(22)	2008(19)	2009(24)	2010(23)	2011(19)	2012(24)
2013(21)	2014(29)	2015(34)	2016(17)	2017(19)	2018(17)*	

*2018년 통계는 2019년 독일국방감독관보고서를 통해서 국방부통계추정치를 보정하였음

- 2) 3200명(순직자)과 3500명(자해사망자)의 통계치에서 ‘순직으로 인정된 자해사망자’가 어디에 속하는지 명료하지 않다. 자해사망자의 순직 인정비율이나 통계치 등은 찾을 수 없었지만 그다지 높지 않다고 추정한다. 순직으로 인정된 자해사망자는 3200명의 범주(순직자)에 산입되었다고 추정된다. ‘독일군 기림비’도 3200명 정도의 순직자를 동판에 새겨놓았다.

- 3) Im Gedenken an die Toten der Bundeswehr,
[https://www.bundeswehr.de/portal/a/bwde/start/gedenken/todesfaelle_in_der_bundeswehr/\(2019-12-31\)](https://www.bundeswehr.de/portal/a/bwde/start/gedenken/todesfaelle_in_der_bundeswehr/(2019-12-31))

3) 해외파병

세계대전의 악몽에 시달리는 유럽세계에서 독일군대의 해외파병은 국제적인 논쟁거리가 되기에 적합하다. 독일은 해외파병을 60년부터 소극적인 인도적 지원에 한정하였다. 독일통일 직후 나토 권역 이외에 독일군대를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펼쳐졌다. 집권여당인 기민당과 자민당은 콜-독트린(과거 나치시대에 독일군대가 점령하였던 지역에 독일군을 파병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유엔의 사명에 따른 투입을 지지한 반면, 사민당과 녹색당은 이에 반대하였다. 사민당은 1992년 페테스부르크 결의를 통해 입장을 선화하였고, 녹색당도 1998년 적록 연립정부에 참여하면서 유엔의 사명에 부합하는 파병을 지지하였다. 1994년 헌법재판소도 파병의 합헌성을 선언하였다.⁴⁾

독일정부는 1991년 걸프전 종식 이후 전쟁지역의 지뢰제거 작업에 독일해군을 파병하고, 1993년 프놈펜에 의무병을 파견하는 등 NATO와 UN의 결정에 따른 평화유지 및 원조활동에 참여하였다. 1999년 코소보 전쟁 당시 독일 공군이 베오그라드 폭격에 NATO군과 함께 참전하면서 최초로 전투병을 파견하였다. 밀로세비치 정권이 붕괴한 해에 코소보 평화유지군으로 4,700명의 육군을 투입하였다. 독일군은 2003년부터는 아프가니스탄 평화유지군의 주력부대를 이루어왔다. 독일군은 창건 이래로 현재까지 총 53회 해외에 파병하였고, 2019년 1월 31일까지 파병인원도 4만 3천을 상회한다. 2019년 12월 9일 현재 독일군대가 파병되어 있는 곳은 11개 지역이며, 파병군인의 숫자는 약 3,275명이다.⁵⁾ 연방국방부의 보고에 의하면 1993년 10월 14일부터 2018년 10월 6일 사이에 파병인원 중 111명이 사망하였다. 사고로 36명, 적의 영향으로 30명, 자해사망으로 24명, 자연사로 14명, 자살공격으로 7명이 사망하였다.

4) BVerfG, Urteil vom 12. Juli 1994, Az. 2 BvE 3/92, 5/93, 7/93, 8/93, BVerfGE 90, 286 – Out-of-area-Einsätze

5) Anzahl der an internationalen Einsätzen beteiligten deutschen Soldaten der Bundeswehr(Stand: 09. Dezember 2019)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72703/umfrage/anzahl-der-soldaten-der-bundeswehr-im-ausland/>(2019-12-31)

<표2-3> 파병지역의 사망자

투입지	사망자
아프가니스탄	58
말리	2
아드리아 (종료)	1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종료)	19
그루지아(종료)	1
캄보디아(종료)	1
코소보	28
이라크	1

해외파병 이후 독일 사회는 4만 3천 명의 귀환병들에게서 비롯된 트라우마, 빈곤, 폭력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PTSD 및 참전 후유증의 치료, 심리적 정신적 장애의 인정 및 보훈급부의 문제를 안고 있다.⁶⁾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퇴역군인들의 호소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퇴역군인들은 미국처럼 퇴역군인을 위해 묘지를 조성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월남전 파병 이후 미국 사회에서 군인의 트라우마가 보훈법의 주제가 되었듯이 독일 사회도 해외파병은 보훈법제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2. 보훈법제

1) 개관

(1) 보훈법제의 관할과 영역

독일의 법원조직에서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소재지: 칼스루에)가 최고사법기관의 지위를 차지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뿐만 아니라 재판소원

6) Timmermann-Levans, Andrea & Richrer, Andrea, Die reden Wir sterben Wie unsere Soldaten zu Opfern der deutschen Politik werden, Campus Verlag, 2010, 57쪽 이하; Zimmerman, Peter(hg.), Psychosoziale Belastungen, Psycotraumanzentrum am Bundeswehrkrankenhaus Berlin, 2014; 최근 독일군대 내에서의 자해사망에 대한 분석은 Helms, Christian, Die Assoziation der Suizide und Suizidversuch von Soldaten der Deutschen Bundeswehr 2010-2014 mit psychosozialen Risiko-und Schutzfaktoren, Universität Berlin Dissertation, 2017.

제도를 통해 여타 최고법원의 판결에 관여한다. 연방헌법재판소 아래 연방통상법원(Bundesgerichtshof, 칼스루에), 연방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 라이프치히), 연방재정법원(Bundesfinanzhof, 뮌헨), 연방노동법원(Bundesarbeitsgericht, 에르푸르트), 연방사회법원(Bundessozialgericht, 카셀)⁷⁾이 관할사건에서 최고법원으로 기능한다.

연방사회법원은 총 14부로 구성되어 의료보험, 재해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법정연금보험, 사회부조, 망명자급여, 실업보험, 연방수당법, 사회보상법 사건들을 최종적으로 관할한다.⁸⁾ 제9부는 사회적 보상법(soziales Entschädigungsrecht), 중장애인법(시각장애인) 사건을 담당한다. 사회적 보상법은 연방보훈법, 군인보훈법, 대체복무법, 접종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법, 구금자지원법, 독일통일 이후 형사복권법 및 행정복권법 사건을 담당한다. 군인보훈사건은 병무사건으로 행정기관으로서 병무청(현재에는 국방부인사청)이 판단하고, 이에 대한 소송은 사회법원, 주사회법원, 연방사회법원을 통해 해결되고, 재판소원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4심제가 작동하게 된다.

(2) 군인보훈법제의 약사

독일 제2제국(1871~1918)은 산업혁명을 배경삼아 각종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노동자의료보험법(1883), 산재보험법(1884), 폐질노령보험법(1889)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제2제국은 통일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사 및 상이 군인을 위하여 장교연금법(Offizierspensionengesetz 1871)⁹⁾과 병보훈법(Mannschaftsversorgungsgesetz 1906)¹⁰⁾을 제정하였다. 제1차세계대전 이후 약 7백만의 군인과 80만 명의 포로가 독일사회로 복귀하였는데, 그중 상이자가 1백 5십만에 이르렀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전쟁상이자 및 전쟁유족배려규정(Die Verordnung über die soziale Kriegsbeschädigten- und Kriegshinterbliebenenfürsorge 1919)>과 <라이히보훈법(Reichsversorgungsgesetz 1920)>을 제정하여 전쟁피해자들의 의료적 처우와 보훈급부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재의 독일 보훈법제는 제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를 부양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보훈제도의 근간은 군인보훈법,¹¹⁾ 연방보훈법,¹²⁾ 공무원보훈법¹³⁾이다. 군인보훈법은 독

7) 연방사회법원 공식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bsg.bund.de/DE/Home/home_node.html

8) 독일사회법에 대한 개황은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Übersicht über das Sozialrecht 2019/2020, Bildung und Wissen, 2019.

9) Gesetz über die Pensionierung der Offiziere einschließlich Sanitätsoffiziere des Reichsheeres, der Kaiserlichen Marine und der Kaiserlichen Schutztruppen

10) Gesetz über die Versorgung der Personen der Unterklassen des Reichsheeres, der Kaiserlichen Marine und der Kaiserlichen Schutztruppen

일군대의 재건의 시점에 제정되었다.¹⁴⁾ 연방보훈법이 제1차세계대전과 제2차세계대전의 희생자를 배려하는 법이라면, 군인보훈법은 장래적인 법제이다. 보훈급부의 요건과 관련해서 군인보훈법은 연방보훈법을 널리 준용한다. 전쟁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라는 점에서 연방보훈법과 군인보훈법은 규율범위가 동일하다. 보훈급부의 수단과 관련해서는 군인보훈법은 공무원보훈법을 준용하고 있다. 공무원보훈법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사고뿐만 아니라 퇴직을 전제로 공무원이나 그 유족의 경제생활이나 노후생활의 안정을 확보하려는 법이다. 군인보훈법은 국방부인사청(과거에는 병무청)이, 연방보훈법은 연방사회부가, 공무원보훈법은 연방내무부가 관장한다.

(3) 한국의 보훈법제와의 비교

한국의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은 일반직종연금법과 유사하게 공무원이나 군인이 기여금을 납부하지만, 독일의 군인이나 공무원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독일군인은 순직이나 공상을 당한 경우 군인보훈법상의 혜택을 누린다. 이 경우 군인보훈법은 한국의 국가유공자법(또는 보훈보상자법)에 가깝다. 그러나 군인보훈법이 퇴역군인에 대해 퇴직연금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군인보훈법은 한국의 군인연금법의 기능을 수행한다. 어쨌든 독일의 군인보훈법제는 군인 개인의 기여금의 납부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법제와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군인보훈법은 한국의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 연금법과 영역적으로 중첩된다.

보훈법에서 보훈(報勳)은 ‘공훈에 대한 보답’을 의미한다. 보훈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형식과 내용이 한국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어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답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보훈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편의상 Soldatenversorgungsgesetz을 군인보훈법으로 번역하면서 Versorgung을 보훈으로 새겼다. 그러나 Versorgung은 개별법제의 맥락에 따라 생활배려, 가족부양, 지원, 보훈 등을 의미한다. 한국의 국가유공자법이 유공자성을 고수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만 이 법의 기능이 그만큼 배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독일의 군인보훈법이 보훈뿐만 아니라 가족부양, 생활배려의 맥락까지 고려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국가유공자법과 같은 배타성은 갖지 않는다. 오히려 독일의 군인보훈법은 재난을 당한 군인의 가족과 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법의 역할도 수행한다.

11) Gesetz über die Versorgung für die ehemaligen Soldaten der Bundeswehr und ihre Hinterbliebenen(1957)

12) Gesetz über die Versorgung der Opfer des Krieges(1960)

13) Gesetz über die Versorgung der Beamten und Richter des Bundes(1976)

14) 독일보훈법제에 대한 상세한 조망은 윤재왕·신오식, “외국의 보훈제도(독일·프랑스)”, 국가보훈처 보훈교육연구원, 2005, 1-139쪽.

(4) 의료감정기준

이 보고서는 사회적 보상법의 영역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원용되어온 <의료감정지침>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의료감정지침(Die Anhaltspunkte für die ärztliche Gutachtertätigkeit im sozialen Entschädigungsrecht und nach dem Schwerbehindertenrecht, 이하 AHP)¹⁵⁾은 사회적 보상법 및 중장애인법 뿐만 아니라 보훈 사건에서 감정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논리적 바탕을 이룬다. 법원이나 당사자는 지침에 제시된 기준을 개별사례에서 쉽게 부인할 수 없다. 의료감정지침을 원용한 감정의견을 부인하려는 청구인은 그 지침이 일반적으로 공인된 의학수준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 즉 낡은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¹⁶⁾ 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대체로 수용해 왔지만 보훈 사건에서 의료적 판단에 법원이 항상 구속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지침은 제1차세계대전 중인 1916년 독일에서 처음 마련되었으며 1920년 상이등급을 통일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확대되었다.¹⁷⁾

이 지침은 적용범위에서 점차 확대되었고 제2차세계대전후에도 몇 차례 개정되었다. 연방노동부산하의 의료인 전문가위원회가 이 지침을 작성해 왔으며 현재 이 지침에 대한 관할은 연방건강부(Bundesministerium für die Gesundheit)로 변경되었다. 2008년판 의료감정지침이 가장 최근이자 마지막 문서이다. 이러한 지침은 의료지식뿐만 아니라 법지식 및 판례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연방보훈법의 시행령인 보훈의료규정(Versorgungsmedizin-Verordnung 2009.1.1)¹⁸⁾ 제2조의 부속서(별지)는 의료감정지침을 대체로 수용하였다. 따라서 이 보고서가 이하에서 소개하는 <의료감정지침>은 이제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지만 보훈사건에 대한 의료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번역하여 첨부하였다. 상자 속에 ‘원칙’으로 제시된 것은 바로 의료감정지침상의 원칙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보훈의료규정’에 완전하게 흡수된 경우도 있고, 수정되거나 생략된 경우도 있다.

15)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Die Anhaltspunkte für die ärztliche Gutachtertätigkeit im sozialen Entschädigungsrecht und nach dem Schwerbehindertenrecht, 2008, 206-207쪽.

16) BSG, Urteil von 18.09.2003- B 9 SB 3/02 R.

17) Anhaltspunkte für die militärärztliche Beurteilung der Frage der Dienstbeschädigung oder Kriegsbeschädigung bei den häufigsten psychischen und nervösen Erkrankungen der Heeresangehörigen(1920).

18) 연방보훈법 제1조 제1항과 제3항, 제30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의 시행을 위한 규정(보훈의료 규정).

2) 보훈급부청구권

(1) 보훈급부청구권의 성격

보훈급부청구권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고유한 공법상 보상청구권이다. 전쟁희생자에 대한 급부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희생한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법정의 희생전보청구권이며, 국가의 배려의무(Fürsorgepflicht)에 입각한 형평사상에 근거하지 않는다.¹⁹⁾ 이 권리의 내용은 국가가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보훈급부청구권은 국가로 결합한 시민들의 전체를 위해 건강과 생명을 상실한 특수한 희생(자들)의 조정을 위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의 견해다툼이 있다. 최근에 국가공동체의 복리를 위해 특수한 희생은 국가의 책임에 대한 요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제1조상의 손상은 일반(이익)을 위한 특수한 희생의 성격이 부인되고 있다. 보훈급부청구권은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75조상 민법적인 희생전보청구권(Aufopferungsanspruch)이 아니다(BGH 1955.10.17.). 어떤 학자는 보훈급부청구권을 당연히 국가적인 위험책임(Risikohaftung)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으로 간주한다(SGb 1974, 45/52).²⁰⁾

보훈급부청구권은 민법적 원칙에 입각한 손해배상청구권(Schadenersatzanspruch)이 아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개별적인 손해의 조정(전보)을 지향하고, 즉 손해배상의 한도는 어떠한 경제적 손해가 개별사례에서 발생하고 현재까지 남아있는지, 그리고 공동원인으로 작용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손해배상사고가 직업손해조정(연방보훈법 제30조), 미망인 손해조정(연방보훈법 제40조의a)에서 반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손해전보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달리 총괄적인 손해조정을 고려할 뿐이다. 총괄적인 손해조정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 상호간의 법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손해사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개별적인 손해계산이 정당화된다.

전쟁희생자보훈에서 수백만 건의 개별적인 손해배상청구를 처리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쟁희생자 보훈청구는 국민 전체의 대표자인 국가를 상대로 한다. 국가는 일반공익을 위해 직무수행으로 건강상 및 경제상 손상을 입거나 부양자를 상실한 시민들에게 오로지 일반적으로만 전보할 수 있다. 보훈급부청구권자는 자신들의 희생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품위 있는 손해배상에 대한 동일한 필수적인 청구권을 보유한다. 물론 그 청구권의 한도는 국민전체가 제공하고자 하고 제공할 수 있는 수단에 한정된다.

19) BVerfGE 48, 281; BSGE 26, 30.

20) Wilke/Fehl/Förster/Leisner/Sailer, Soziales Entschädigungsrecht, Kommentar 7. Aufl., Boorberg, 1997, 22쪽 이하(이하에서는 Wilke로만 표시).

(2) 청구권의 경합 또는 이중지급

군인보훈법은 상관의 불법행위(배려의무위반)가 손상(자해사망)에 공동으로 기여하는 경우에도 보훈급부청구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상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훈급부청구권자가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는가? 또는 국가는 보훈급부를 제공한 데에 대해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군인보훈법 제91조의a(병역상의 손상에 입각한 청구권의 제한)

① 군인보훈법에 의해 보훈급부청구권을 보유한 사람은 연방을 상대로 81조의a 내지 제81조의f의 의미에서 병역상의 손상 또는 건강상의 손상과 관련해서는 이 보훈법에 입각한 청구권만 보유한다. 연방의 영역에서는 연방, 연방내부에서는 여타 공법상 기관장 또는 직무수행자의 고의적인 불법적인 행위가 제81조의a 내지 제81조의f의 의미에서 병역상의 손상 또는 건강손상의 원인이 되었던 경우에는 군인보훈법상 보훈급부권을 보유한 사람은 이 법률상의 급부를 초과하는 급부를 정당화하는 일반적 법률규정들에 따른 청구권을 그러한 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

보훈급부청구권자는 청구권의 발생에 연방정부, 공법상 기관장, 또는 그 직무수행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연방정부, 공법상 기관장 또는 그 직무수행자에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률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상관의 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임을 증명해야 한다. 국가는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입각하여 불법행위를 한 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²¹⁾

(3) 군인의 법정연금보험

보훈급부청구권과 법정연금보험(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은 성격이 다르다. 보훈급부청구권은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특수한 국가책임법이라면, 법정연금보험은 생산직 근로자나 사무직 근로자를 위하여 기업가와 근로자들이 일정하게 기여금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독일에서는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이러한 법정연금제도가 존재하지 않

21) 군인의 배려의무 위반에 대해서 군인지위법(Soldatengesetz)상의 책임도 발생한다.

군인지위법 제24조 제1항: 군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고의나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자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장에게 직무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다수의 군인이 공동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들은 연대책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았다. 징병제의 시행시점인 1957년 1월 1일 연금보험개정법(Rentenversicherungsneuregelungsgesetz)을 통해서 의무복무군인에 대해서 보험의무를 부과하였고 국가가 기여금을 대납하였다. 법정연금개혁법²²⁾을 통해서 법정연금보험은 1992년 1월 1일부로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제6편으로 편제되었다. 공무원 및 직업군인을 위한 연금보험제도까지 도입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적 의무에 기하여 병역 또는 대체복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보험가입의무를 진다(제3조). 부양료보장법(Unterhaltssicherungsgesetz)²³⁾에 따라 입대 후에도 임금을 계속해서 받거나 또는 자영업자로서 급부를 획득하는 병역이행자나 대체복무자는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이 경우 고용이나 자영업활동이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의무복무군인에 대한 연금은 군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경우에 유용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복무기간중 자해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는 이러한 보험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최소 가입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복무군인의 유족이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도 어렵다(제50조 제1항). 독일은 미국의 단체생명보험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

3. 공상 또는 순직 인정의 조건

1) 개괄

자해사망 군인의 유족이 군인보훈법상의 연금수령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문이 존재한다. 그것은 업무관련성 및 자유의지의 침해이다. 업무관련성이 없는 자해사망은 순직으로 인정될 수 없고, 업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자유의지의 침해를 야기할 정도가 아니라면 순직으로 인정될 수 없다. 독일의 법리는 2012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전의 판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해사망자의 순직 인정에서 독일의 문턱은 2012년 한국 대법원 판결(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자유의지에 입각한 사망인지를 규명하지 않고 순직으로 인정함)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국방부나 보훈처가 2012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야 하겠다.

22) Gesetz zur weiteren Reform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en und über die Fünfzehnte Anpassung der Renten aus den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en sowie über die Anpassung der Geldleistungen aus der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Rentenreformgesetz - RRG).

23)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나 군복무나 대체복무, 예비군복무에 소집되는 경우 가족들의 부양을 위해 임금 또는 수입의 상실분을 전보해주는 법이다.

우선 인과관계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독일 법원은 조건설을 따른다. 상당인과관계설은 원인행위와 결과발생의 관계를 상당성의 표준에 입각하여 사전적으로 통제하려는 관점이라면, 조건설은 결과발생에 이르게 한 다양한 요인들을 중립적으로 취급한다. 상당인과관계설은 결과발생에 상당한 원인에 대해 인과성(causality)을 인정함으로써 실제로 귀책(imputation)을 동시에 결정하는 이론들이다. 이에 비해 조건설은 결과발생 이전에 존재하고 결과발생에 함께 작용하는 요인들을 등가적으로 결과발생의 조건들(Bedingungen)로 다룬다. 조건설은 철학적-자연과학적 시각에서 조건을 조망하기 때문에 선행하는 모든 것들이 조건들로 무한정 수용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조건설은 수많은 조건들 중에서 결과발생에 밀접하게 작용하는 복수의 조건들을 본질적인 조건들로 제한한다. 동시에 조건설은 귀책성이라는 별도의 틀에서 사태를 다시 제약한다. 자해사망의 경우에 조건설은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인지 아니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침해가 있었는지를 다시 판단한다. 독일법원은 자해사망자의 공상인정의 요건으로 사망의 업무관련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 동시에 자유의지의 침해가 사망의 결과에 개입한다는 점을 요구한다.

비근한 예로 한국법원은 유서를 쓰고 자해사망한 군인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존재하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독일법원은 가족들에게 유서를 쓰고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 자유의지에 입각한 사망으로 판단하여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 물론 유서를 쓰고 사망했다는 사실이 자유의지를 판단하는 데에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지는 의문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비슷한 조건에서 독일법원이 지금까지는 자해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한 건수는 한국보다 더 많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 판결로 제시된 상당인과관계설을 취지대로 자해사망 사건에 적용한다면 독일의 본질적 조건설보다 순직 인정범위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2) 직무관련성

연방보훈법과 군인보훈법은 순직이나 공상(公傷) 개념을 채용하지 않고 병역상의 손상(Wehrdienstbeschädigung)만을 규정한다. 나아가 병역상의 손상(건강침해) 결과로 사망에 이른 경우 유족은 보훈급부권을 보유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순직개념을 추론할 수 있다(연방보훈법 제1조 제5항). 자해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유족은 보훈급부청구권을 보유한다.²⁴⁾

군인보훈법 제80조는 군인보훈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역상의 손상(이

24) 이하 직무관련성과 인과관계에 대한 서술은 윤재왕의 보고서와 Wilke의 Soziales Entschädigungsrecht를 전반적으로 참조하였다.

하에서는 공상)을 당한 군인은 군복무관계의 종료후에 공상의 건강상 및 경제상의 결과를 이유로 연방보훈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훈급부권을 보유한다고 규정한다. 공상을 당한 민간인 및 공상을 당한 사람의 유족은 보훈급부청구권을 보유한다. 반려자 (Lebenspartner)가 공상으로 사망하고, 다른 반려자가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공동체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다른 반려자도 연방보훈법 제40조, 제40조의a, 제41조의 준용하에 급부권을 보유한다.

공상 판정의 기준은 업무연관성이다. 군인보훈법은 제1항에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한다. 공상은 ‘직무활동’ (Dienstverrichtung), ‘직무수행중 사고’ (Unfall während der Ausübung der Wehrdienstes) 또는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 (Dem Wehrdienst eigentümliche Verhältnisse)에 의해 초래된 건강상의 손상이다(군인보훈법 제81조 제1항). 연방보훈법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군사적 또는 준군사적 직무활동, 군사적 또는 준군사적 직무수행중 사고,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을 통해서 건강상의 손상을 입은 사람은 손상의 건강상 또는 경제상 결과로 인하여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연방보훈법 제1조 제1항). 연방보훈법 제1조 제2항은 a)전쟁의 직접적 영향, b)전쟁포로, c)외국 또는 독일행정권에 속하지 않는 지역에서 독일국적인 또는 독일민족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구금, d) 군사적 또는 준군사적 직무와 관련된 형벌 또는 강제조치(단, 그러한 조치가 정황상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한한다), e)손상을 입은 자가 치료, 요양, 물리치료를 위해 출퇴근 과정에서 입은 사고, f)전호의 치료조치의 시행과정에서 입은 손상을 제1항의 손상으로 동일하게 취급한다.

연방보훈법 제1조의a는 나치범죄자 배제조항을 두고 있다. 앞선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나치통치 기간에 인도주의 또는 법치국가의 원칙에 반해서 사망하고 1997년 11월 13일 이후에 급부신청을 제출한 경우에는 급부를 배제한다. 청구권자가 친위대의 구성원이었다는 사정은 개별적인 행동으로 인도주의나 법치국가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특히 집중적인 심사의 사유가 된다. 앞의 배제사유가 존재하고, 개별적인 사례에서 급부의 계속보장에 대한 급부청구권자의 신뢰가 앞의 위반사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전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급부를 장래적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급부의 즉각적인 박탈이나 축소가 부당한 가혹을 야기하는 때에는 박탈이나 축소를 상당한 경과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한다(연방보훈법 제1조의a).

직무관련성 판단에 있어서 이하 세 가지 사유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직무활동은 좁은 의미의 직무를 의미하고, 직무수행중의 사고는 직무수행시 시간적인 연관을 가진 사고를 의미하고,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은 앞의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군복무와 관련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앞의 두 개의 사유에 입각한 직무관련성이 자해사망의 순직 판정에 그다지 밀접한 관련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 자해사망과 관련해서는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의 존재여부에 대한 평가가 결정적이다. 예컨대, 자해사망이 휴가기간에 이루어졌다면, 자해사망 자체가 직무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휴가기간중 자해사망은 직무수행중의 사고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자해사망의 배경이나 원인이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이 자해사망의 원인이나 배경이 되는지를 규명할 수 있다. 이 개념을 한국의 법적 용어로 번역하기 어렵다. 앞의 직무수행이나 직무상 사고를 ‘협의의 직무관련성’ 이라고 한다면,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은 ‘광의의 직무관련성’ 이라고 할 수 있다.

(1) 직무활동

연방보훈법이 제1차세계대전과 제2차세계대전에서 발생한 공상을 구제하려는 것이라면, 군인보훈법은 독일군대의 재건 이후에 발생한 공상을 구제하려는 것이다. 연방보훈법 제1조 내지 제6조와 군인보훈법 제81조가 보훈급부청구권의 근거를 제시한다. 군사적 직무활동은 ‘군사적 직무(militärischer Dienst)’ 또는 ‘준군사적 직무(militärähnlicher Dienst)’ 를 의미한다. 연방보훈법 제2조 내지 제4조가 군사적 혹은 준군사적 직무를 상세하게 제시한다. 군사적 직무는 병역법상 군인 또는 군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모든 직무, 독일국민돌격대에서의 직무, 야전헌병대에서의 직무, 후방고사포부대에서의 직무를 의미한다(제2조 제1항). 독일민족구성원이나 독일국적인으로서 거주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러한 직무도 독일 병역법상 직무로 간주한다(제2조 제2항, 제3항).

준군사적 직무는 징병검사를 위해 병무청으로부터 소집지시, 병무청이나 군명령권자의 소집에 따라 병역을 위해 수행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인 근무, 군함 또는 보조선박에 민간인의 계획적인 또는 비상적인 승선, 상관의 명령에 따라 군사적 조치의 지원을 위하여 동원된 제국철도원 또는 공무원의 직무 및 군사행정공무원의 직무, 군대보조자로서의 직무, 전시 군대에서 자발적인 간호업무 인력의 근무, 군관구사령관의 기마조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 소년보호대, 소년해군 및 공군의 부사관생도의 직무, 제국노동직무, 1938년 긴급명령에 따른 직무, 군사훈련소에서의 직무, 국방목적의 토트 조직(나치시대의 국방 공학단체)에서의 직무, 국방목적상 슈페어(동부투입) 건축팀에서의 직무, 1939년 방공법에 의한 방공 직무 등이다. 국방부에서 직무규정이나 노동계약에 근거하여 수행된 민간업무는 건강에 대한 특별한, 전쟁에 특유한 위험과 연결되지 않은 한 준군사적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연방보훈법 제3조).

소집장소로 피소집자의 입소경유로, 직무관계의 종료후 귀가로, 지정장소에서 직무상 여행, 직무상 외출, 직무활동, 근무장소의 통근길, 직무시설에의 참여 등도 군사적 또는 군사적 직무에 해당한다. 손상자가 근무지와 가족주소지와의 간격 때문에 근무지나 인근에 숙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주소지로 오가는 행로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이러한 원칙은 전쟁포로, 구금된 자, 송환된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연방영역의 현재 경계 안에서 주거지를 갖고 있지 않는 피석방자에게도 임시로 정한 거주장소에 도착하는 귀로도 준군사적 직무로 간주한다(연방보훈법 제4조).

전쟁의 직접적 영향(Unmittelbare Kriegseinwirkung)은 두 차례 세계대전과 관련된 다음의 사유들이다. a)전투행위 및 전투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군사적 조치들, 특히 무기의 영향, b)전투행위 또는 그 준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관청의 조치, c)전투과정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위험으로부터 탈출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손상자가 노출된 영향, d)독일영토 또는 과거 독일이 점령한 영토의 군사점령 혹은 강제이주와 송환조치와 관련한 특별한 위험의 결과로 발생한 손상적 사건, e)전쟁에 특유한 위험영역을 남겨놓은 전쟁과정들의 사후적 영향(연방보훈법 제5조 제1항). 연방보훈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규정된 것과 다른 사례에서 연방노동사회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군사적 또는 군사용사적 직무나 직접적인 전쟁영향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다(연방보훈법 제6조).

(2) 직무수행 중 사고

직무상 사고(Dienstunfall)는 외부의 영향에 입각하고, 갑작스럽고, 장소와 시간상으로 특정가능하고, 신체침해를 야기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사고이다(군인보훈법 제27조 제2항). 직무표에 따라, 특수한 명령에 따라 또는 일반적인 군인의 의무이행으로 수행되는 활동들만이 병역에 속한다. 감염의 시간과 장소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군인이 특수하게 감염에 노출된 경우에는 그러한 전염병은 사고에 해당한다. 연방사회법원에 따르면 신체침해(부상)을 야기하는 사건은 사고의 특성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직무상 사고와 대조적으로 군인보훈법 제81조 제1항은 사고(건강상 손상)가 직무와 인과적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고, 오로지 사고가 “직무수행중” 반드시 발생해야 한다는 점만 요구한다. 군인이 실제로도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훈련, 보초, 총기정비 중 발생한 사고도 직무수행중 발생한 사고이다. 사고가 근무시간중 또는 군사적 직무관계 안에서 발생하였지만 군인이 사실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상 사고가 아니다(BSG 1958.11.25., BSG 1968.8.6.). 숙소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침대에서 추락하여 입은 손상은 좁은 의미에서 직무수행과 내적인 관계가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 복무

상 특유한 사정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군인이 직무시간중 직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직무상 사고가 아니다(직무시간중 스스로 제작한 폭발물로 사냥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직무명령에 일치하지 않은 모든 행동이 보훈법상의 보호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명령에 위반된 행동이 더 이상 직무와 관련을 갖지 않은 때에는 보훈법상의 보호가 소멸한다(BSG 1973.11.29.). 명령에 위반한 직무이탈로부터 명령된 원래의 직무로 복귀하는 도중에 당한 사고도 보훈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군인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고위험을 내포하는 나름의 행동으로 건강상 손상을 당했다면 마찬가지로 공상이 인정되지 않는다(BSG 1976.11.25.).

군인의 행동이 비이성적이고 위험스러운 까닭에 군인이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사고 발생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도라면, 그러한 직무수행은 손상결과에 대한 본질적 조건(wesentliche Bedingungen)이 아니다(BSG 1977.5.17). 군대 샤워장에서 직무종료 직후 목욕은 직무(신체를 오염시키는 활동)와 내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자유활동이 아니다. 자택에서 당한 사고도 공상(WDB)이 아니다(BSG 1971.9.22.).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에게 귀책사유(주의력부족, 금지명령 위반, 경솔)가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직무중 다른 군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보훈급부청구권을 보유한다. 사고는 병역에 특유한 사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BSG 1970.1.29.).

법률은 손상과 직무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손상이 직무수행중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중”이라는 말을 통해 특정한 사태와 사실상 혹은 법적 상태의 지속이 시간적인 연결성을 가져야 한다. 법률은 직무수행과 사고의 시간적 병발을 요구할 뿐, 인과적인 연관성을 요구하지 않는다.²⁵⁾ 연방보훈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마인츠 주 사회법원은 동료에 의해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군인의 사건에서 치명적인 사고가 직무활동이 원인이 아니었지만 사고의 피해자가 근무중이었기 때문에 보훈급부청구권을 인정하였다.

군사적 직무수행을 언제 거론할 것인지는 개별사건의 제반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 제반 여건에 비추어볼 때 군인이 군사적 목적과 이익에 반해서 행동하였다면 군사적 직무수행을 거론할 수 없다(BSG 1960.7.22.). 가족의 주소지에 휴가기간중 혹은 휴가지에서 통상적으로 직무수행을 논할 수 없다. 그러나 개별사례에서 휴가중의 활동도 “군사적 직무” 개념에 해당할 수 있다. 군인이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군사적 목적과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자행하는 경우에는 군사적 직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BSG 1960.7.22.). 직

25) LSG Saarbrücken Urteil vom 5.10.2004 – LS VS 19/01.

무상의 지시가 동시에 군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사항에 속한다는 사실은 지시의 군사적 성격을 배제하지 않는다(LSG Essen 1960. 4.13).

휴가중 사고와 마찬가지로 자유시간의 사고도 원칙적으로 보훈급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둔지의 시내 외출의 경우 숙소를 떠남으로써 직무로부터 벗어난다. 따라서 시내 외출중 가게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훈급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유시간을 영내에서 보내라는 명령을 받은 군인에게는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이 존재한다(BSG 1984.8.8.) 군인이 전혀 제한받지 않는 자유시간에 영내 도로에서 다른 장교의 오토바이에 치인 경우는 공상에 해당하지 않는다(BSG 1988.5.25.). 자유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영내에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은 군인이 영내시설 안팎에서 부상을 당했다면, 음주나 자초한 위험과 같은 인과관계를 배제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이 존재한다(BSG 1988.7.13.).

음주의 원인이 보훈법상 보호받는 활동과 연관된 경우에 발생한 음주사고는 보훈급부청구권이 인정된다. 음주가 직무상 또는 군사적 혹은 준군사적 직무에 고유한 사정에서 기인하고, 혹은 군지휘부가 부작위로 직무를 위반하여 알코올의 위험원인을 초래한 경우에는 보훈급부청구권이 인정된다(BSG 1987.10.8.). 그 밖의 사례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훈급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음주가 직무상의 이익 안에서 일어나고 직무와 내적인 연관성을 갖는 경우에는 음주는 직무관련성을 갖는다. 연방사회법원은 회식에 즈음하여 음주로 인한 주취를 직무연관적이라고 인정하였다(BSG 1965.8.27.). 그러나 만취상태 아래서 이루어진 행동은 행위자의 사적인 영역으로 귀속된다(BSG 1977.6.30.). 만취상태는 알코올로 인해 온갖 사리에 맞는 행동이 배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취상태는 보호받는 영역에서 벗어난다.

주취가 직무와 관련이 없고 만취상태에 이르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이 주취에 있는지 확정해야 한다. 음주하지 않았더라면 동일한 사태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개연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이 주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취가 사고원인으로서 배제되고, 혹은 주취가 기껏해야 보훈급부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다른 조건들(브레이크 고장, 타이어 펑크, 다른 교통관여자의 주의의무위반)과 동등하게 중요한 조건들중 하나인 경우에는 보훈급부청구권이 인정된다. 주취상태에 관하여 정립된 원칙은 명정상태를 초래하는 의약품의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운전불능에 대해서도 적용된다(BSG 1985.11.27.).

군인이 점심휴식시간에 축구시합을 하다가 입은 부상은 그 시합이 상관이 지도하거나 직무상의 이유로 승인되지 않았다면 병역상의 손상이 아니다(BSG 1981.11.17.).

(3)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

연방보훈법이나 군인보훈법은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 또는 군사적 또는 준군사적 복무상 특유한 사정으로 인한 손상을 공상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특유한/고유한 사정”²⁶⁾의 의미는 명료하지 않다. 그 의미는 판례와 학설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판례는 군복무의 특수한 분위기에서만 나오고 원칙적으로 군복무와 필연적으로 관련된 사정들을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이라고 한다.²⁷⁾ 여기서 사정이란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항상 똑같이 규정할 수는 없지만 직무의 고유한 특성에 상응하고 일반적으로 직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일정하지 않지만 함께 나타나고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직무의 특수한 정황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사정을 의미한다(BSG 1977.5.17.). 이 때 병역의 특유성이 반드시 일반 민간생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위험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시 또는 평화시의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제2차세계대전 중 병역을 피하기 위해 자해사망한 평화주의자에게도 군복무상의 특유한 사정은 인정된다.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과 유사한 상황이 민간생활에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민간생활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사정이다(BSG 1974.6.11.). 따라서 후방에서 군복제작소, 군보훈청, 군신고청, 관구사령부의 군공무원의 활동은 통상 민간인이 수용할 수 있는 부담을 초과하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일반적으로 내포하지 않는다고 본다(뮌헨 주보훈청 1952.3.21.). 그러나 군인들의 모든 일상이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시민생활의 관계들로부터 벗어나는 직무의 특수한 관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병영생활, 공동체구속, 다른 사람과 항상적인 밀착한 공동생활, 개별병과에서 직무의 특수한 영향 등이 그 예이다. 이는 개인적 자유가 현저하게 제한을 받는 군인의 특수한 신분관계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제반 상황을 뜻한다. 따라서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은 넓은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특별권력관계나 이로부터 파생하는 각종 부담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 개념은 직무활동이나 직무수행중 사고보다 넓은 직무연관성을 시사한다.

연방사회법원(1970.1.29.)은 직무시간 외에 매점에서의 싸움에서 제3자가 당한 사고를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으로 판단하였다. 군대매점은 일반사회의 공장매점과 달리 직무에서 벗어난 시간에 이용하게 되어 있고, 군인이 피할 수 없는 군복무와 관련된 갈등상황이 매점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인이 훈련용 폭약재료를 사적으로 활용하여 사냥하다 다친 상황은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이 아니다(BSG 1968.8.6.). 법원은 전방에서 사정

26) 보고서는 eigentümlich를 ‘특유한’ 이라고 옮겼으나 ‘고유한’ 으로도 옮길 수 있겠다.

27) LSG Rheinland-Pfalz, Urteil von 27. 01.2016.

과 후방에서의 사정을 구별한다. 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은 자유시간에도 민간생활이나 후방에서의 생활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행동한다. 베를린 주 사회법원은 전방에 투입된 군인은 항상 직무상태에 있다고 인정하였다(1955. 12.20). 전방에서 생일축하파티나 회식의 참여자가 총기를 소지하는 일은 복무상 특유한 사정이다. 그러한 회식에서 통상적인 과음 및 과잉사격을 통해 참여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훈급부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동일한 사정이 후방인가, 점령지인가, 전방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군인이 후방에서 직무 외에 목욕중 당한 사고는 공상이 아니다(BSG 1960.8.23.). 그러나 점령지 대서양이나 러시아 전선에서 직무 바깥에서 욕조에서 목욕중 사망했다면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금지명령을 위반하고 대서양에서 목욕을 하는 행위는 금지위반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보훈급부청구권을 배제하지 않는다.

무수한 손상들이 군대의 상관이나 군부대가 감독 및 배려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발생한다. 동료전우들도 배려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 군인의 의무위반 자체는 군대에서 지배적인 절대적 복종명령을 고려할 때 병역에 특유한 사정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군부대가 어떤 사람의 비정상적인 반응성향을 잘 알면서도 이 군인을 무기를 소지한 직무에 투입한 후 이 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군복무상 고유한 사정이 자해사망에 존재한다(LSG Bremen 1954.4.29.).

의무병의 응급치료가 건강상의 손상을 야기한 경우 치료의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손상은 군복무의 특유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다. 군병원 및 라자렛병원(후방부상자병원)의 조치는 군복무상 고유한 사정에 해당한다. 군인이 자유롭게 의사를 선택할 수 없고 질병발생시 군대에서 배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손상은 병역과 인과관계가 있다. 그와 같은 치료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건강침해는 손상결과이다. 환자가 군의가 취한 조치에 의해 건강상의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환자가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고지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치료 방법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통상적으로 취해졌어야 하고, 취해졌더라면 손상을 개연적으로 회피할 수도 있었을 조치가 중단된 경우에는 보훈급부청구권이 원칙적으로 발생한다. 때늦은 질병확진과 그로 인해 치료기회의 상실에 대해서도 보훈급부청구권이 발생한다(LSG Darmstadt 1957.7.10.). 직무중에 비손상질병(Nichtschädigungsleiden)에 대해 시행된 수술 후 나타난 건강침해는 생명의 유지를 위해 수술이 불가피하였고, 의학계의 공인된 규칙에 따라 적시에 적절하게 시행되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건강침해는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이 아니다(LSG München 1955.8.30.). 위생병이 비손상질병에 전형적인 수술을 시행하고 부대의사의 후속조치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은 부적절한 수술이다(LSG Hamburg 1969.12.17.). 군부대의 의료수준이 민간병원의 수준보다 떨어진다는 일반원칙은 라자렛병원(후방부상자병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자렛의 의료수준이 민간병원의 의

료수준보다 떨어진다는 점은 개별사례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범죄를 범하고 그에 대해 자유형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은 병역에 특유한 사정이 아니다. 따라서 수형생활로 인한 건강상의 침해는 공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죄판결로 인해 병역에서 해제되는 경우에도 수형생활중 받은 건강상 침해는 공상이 아니다. 자유형(1년 이하)의 유죄판결이 병역의 면제를 낳지 않은 경우에는 수형생활중의 건강상의 침해는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BSG 1959.10.13.). 군사적 및 준군사적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벌이나 강제처분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명백한 불법인 때에는 보훈급부청구권이 성립한다(보훈법 제1조 2항 d호). 특히 1991년 연방사회법원은 나치군사법원이 탈영자에게 선고한 사형판결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보훈급부청구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존의 판결을 극복하였다.²⁸⁾ 이후 독일정부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탈영병, 병역거부자-전시형사령에 의해 국방력파괴자로 빈번히 처형되었다에 대한 보상조치를 시행하였다.

군대 바깥에서 조달된 식료품, 자체적으로 조달한 식품이나 사랑의 선물을 섭취하여 사망한 경우는 부대의 열악한 생필품 조달사정을 고려하여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으로 인정한다. 군인이 직무여행중 기차칸에서 나동그라진 컵에서 알콜(메틸 알콜)을 섭취하는 행위는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BSG 1964.3.18.). 군사적 상관에 의한 부하의 살해는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이 될 수 있다(BSG 1966.12.6.).

3) 인과관계

(1) 법규정

연방보훈법과 군인보훈법은 보훈사건에서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보훈법상 인과관계이론, 개연성의 의미, 재량적 보훈을 살핀다. 동시에 <의료감정지침>은 실무상의 많은 난점을 해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2009년 시행령의 도입을 통해서 <보훈의료 규정>에 반영되었다.

연방보훈법 제1조 제3항

건강장애를 손상의 결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개연성으로 충분하다. 확인

28) Rath, Martin, Militärstrafjustiz vor dem BSG: 1991 - Ein anderer 11. September, ein anderer Krieg(2011.09.11.), <https://www.lto.de/recht/feuilleton/f/militaerstrafjustiz-vor-dem-bsg-1991-ein-anderer-11-september-ein-anderer-krieg/print.html>(2020-01-01)

된 질병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계에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건강장애를 손상의 결과로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개연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건강장애는 연방노동사회부장관의 동의 아래 손상의 결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동의는 일반적으로 발부될 수 있다.

군인보훈법 제81조 제6항

건강장애를 병역상 손상의 결과로 인정하는 데에는 인과관계의 개연성으로 충분하다. 확인된 질병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계에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건강장애를 병역상의 손상의 결과로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개연성이 없는 경우에는 연방노동사회부와 협의를 거쳐 연방국방부의 동의를 얻어 그 건강장애를 병역상 손상의 결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동의는 일반적으로 발부될 수 있다.

(2) 본질적 조건설

인과관계 개념은 법생활에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형법에서 라이히법원 이래로 조건설(등가설)이 관철되었다. 이에 따르면 결과에 이르렀던 모든 조건이 원인이다(conditio sine qua non). 민법에서는 라이히법원은 이른바 상당인과관계론(adäquanztheorie)을 취했다.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르면 다수의 조건들 가운데 인간의 예견에 따라 결과를 발생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적합한 조건만이 원인이 된다.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결과에 적합해야 한다. 한국의 판례는 법적 생활의 전영역에서 상당인과관계설을 따르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법영역마다 서로 다른 인과관계이론을 운용하고 있다. 조건설과 상당인과관계설의 가장 큰 차이는 조건설은 다양한 조건들을 원인으로 등가적으로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귀책국면에서 통제하려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설은 처음부터 특정한 조건만을 사태의 원인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표2-4> 조건설과 상당인과관계설

인과관계론	연쇄		자유의사
본질적 조건설 (독일)	이중연쇄: 복무여건→손상→사망	공동원인 허용	자유의사침해 필수
상당인과관계설 (한국)	단일연쇄: 복무여건→사망	단독원인만 가능	논외

독일 보훈법의 영역에서 본질적 조건설(Kausalitätstheorie der wesentlichen Bedingungen)이 관철되었다. 자연과학적·철학적 의미에서 조건설에 따르면 원인은 결과발생에 기여한 조건들 전부이다. 그러나 본질적 조건설은 결과발생에 기여한 모든 조건들을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는 조건설을 결정적으로 수정하였다. 독일형법학은 수정된 조건설을 합법칙적 조건설이라고 부른다. 본질적 조건설은 다양한 가치형량 아래서 결과에 대한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결과를 본질적으로 초래하였던 조건만을 원인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법적인 의미에서 결과발생의 원인으로 간주되는 조건과 그렇지 않는 조건은 반드시 구별해야 하고, 나아가 그러한 구별을 실제생활의 통념에 비추어 개별사례별로 수행한다. ‘본질적’이라는 어휘의 의미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나 본질적 조건설은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개별사례의 특수성을 주목한다.

본질적 조건설에 따르면 결과의 발생에 명백하게 작용하였던 원인 전체를 확정해야 하고, 이러한 원인들을 이제 자연과학적 실효성의 관점에서 심사하고, 그 다음 이러한 원인들중 어떤 원인이 결과발생에 매우 밀접한 것인지를 고려하는 순서로 작동한다. 본질적 조건설은 군사적 직무수행과 손상을 야기한 사건 사이의 관련성을 포착하기 위해 모든 조건들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손상을 야기한 사건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조건들만을 선택하게 된다. 본질적 조건설은 하나의 조건이 일반적으로 결과를 야기하기에 적절한 것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례에 비추어 특정한 조건이 결과발생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자해사망과 관련해서는 인과관계 판단에서 공동원인 또는 본질적인 공동원인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수의 여건들이 하나의 결과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러한 여건들이 결과의 발생에 있어서 그 중요성과 효과에서 대략 등가적인 경우에만 법적으로 병립적인 공동원인이다. 다른 여건에 대해 하나의 여건에 우월한 의미가 주어진다면, 해당 여건만이 법적인 의미에서 원인이다(BSG 1955.7.14.).” “어떠한 조건이 법적인 의미에서 원인 또는 공동원인으로 타당하고, 어떠한 조건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결정은 개별사례에서 실제생활관에서 도출되어야 한다(BSG 1955.6.10.).”

2008년 <의료감정지침>은 원인개념과 인과관계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이 원칙은 2009년 <보훈의료규정>에 그대로 수용되어 있다.

원칙 36 — 원인개념²⁹⁾

(1) 보훈법상 원인 개념은 의학적인 원인 개념과 동일하지 않다. 감정인은 자신의 감정을 합당하게 정식화하고 부정확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개념 규정을 숙지해야만 한다.

(2) 보훈법상의 원인은 결과에 대한 특수한 관련성으로 인해 결과의 발생에 본질적으로

함께 작용한 자연과학적-철학적 의미에서 조건이다. 복수의 여건들이 하나의 결과에 기여한 경우에 그러한 여건들이 중요성과 효과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에 대해 대략 등가적인 때에만 그러한 여건들은 보훈법상 병존적 공동원인들(Mitursachen)이(고 또한 원인처럼 평가되어야 한다. 다른 여건들에 비해 하나의 여건에 압도적인 중요성이 부여되는 때에는 이러한 여건은 보훈법상 단독 원인이다.

원인은 시간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혹은 반복적인 사소한 외적인 영향요소들도 총합적으로 건강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연적 원인(Gelegenheitsursachen), 최후의 자극, 기회(Anlass)는 개념상 본질적 조건들이 아니다. 문제의 사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건강손상이 일상적인 사건을 통해 대략 동일한 시간과 대략 동일한 정도로 개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문제의 사건은 우연적 원인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래서 체질적인 질병이 존재하는 경우 급부신청인은 예컨대, 탈장의 원인을 가벼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행동에서 찾는 것처럼 비본질적인 외적인 기회를 질병의 원인으로 탓한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외적인 요인은 질병의 발생에 본질적으로 함께 기여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장애(침해) 범위 안에서만 특히 특징적인 병증이 발현되도록 도왔을 뿐이다. 해명을 제시하는 경우 유발(Auslösung) 개념은 매우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그 단어는 피해야 한다.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병인학적 요인들중 어떤 것이 결과 발생에 대한 본질적인 조건, 즉 보훈법상 원인인지 명료하게 해명해야 한다.

자해사망과 관련해서 중요한 손상적 사건은 <의료감정규칙> 원칙37(2)의 밑줄 친 부분에서 드러난다. 자해사망에 이른 군인에게 특수하게 부담을 주었던 사정들이 손상적인 사건이다. 그것은 앞 절에서 논의한 ‘병역상 특유한 사정’을 의미한다. 사건, 손상, 사망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 증거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이 필요하다. 예컨대 자해사망자가 사망 전에 병리학적 증세를 갖고 있었다면 치료나 상담의 기록을 통해 증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원칙 37 - 인과관계 판단의 사실³⁰⁾

(1) 인과관계의 판단에 앞서 반드시 해명(완전하게 증명)되어야 할 사실은 손상적 사건, 건강손상, 판단되어야 할 건강장애 등이다.

(2) 손상적 사건은 예컨대, 폭약의 폭발, 자동차사고, 병원체의 감염 또는 강간 등과 같이 건강손상을 야기한 사건이다. 전방투입, 포로상태, 군대의 특정한 교육단계에서

29) AHP, 147쪽 이하.

직무수행 또는 구동독에서의 반법치국가적 구금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특수한 부담들도 손상적 사건에 해당한다. 직무수행의 바깥에 존재하는 병역상의 특유한 사정의 영향요소들이 고려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병역상의 특유한 사정들은 민간생활의 사정과는 다른 특수한 사정이고, 원칙적으로 민간생활의 사정과는 원칙적으로 이질적인 직무상의 사정이다(병영에서 밀착한 공동생활).

사고는 외적인 영향요소에 근거하고 급작스럽고, 시공간적으로 특정할 수 있고, 신체적 손해를 야기하는 사건이다.

(3) 건강손상은 손상적 사건, 즉 부상, 사고에 의한 침해, 부담에 의한 저항력감퇴 등을 통한 건강의 일차적인 침해이다. 남아있는 건강장애는 손상결과이다(병역손상결과, 대체복무손상결과 등).

(4) 손상적 사건과 건강장애 사이에는 의학 지식 및 의료적 경험과 조화되는 중단 없는 인과연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 경우 과도기적 증상들은 자주 필연적인 연결고리이다. 과도기적 증상들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문제는 주의깊게 심사해야 하고, 견해를 명백하게 객관적인 지식에 의존하여 설득력 있게 과학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5) 트라우마의 발생이 문제되는 일련의 질병에 있어서 예컨대 악성종양, 골수염에서 트라우마적 영향의 장소와 질병군집 사이에 지역적 연관성이 존재해야 한다.

(6) 인과관계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완전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이 말은 사실들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 또는 증거가 제출될 수 없는 경우라면 최소한 주어진 여건에 따라(소명에 의하더라도) 사태가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자해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죽음이 손상(공상)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원칙 46 — 손상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³¹⁾

(1) 죽음이 손상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죽음은 손상의 결과이다.

(2) 손상을 당한 사람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게 손상의 결과로 인정되고 사망의 시점에

30) AHP, 148쪽 이하.

연금수령의 근거였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즉 인정된 건강장애가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망은 항상 손상결과로 인정된다(법률상의 추정). 이러한 법률상의 추정은 감정의사에게 자신의 소견을 사망과 인정된 손상결과간의 인과관계의 문제에 국한하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직무와 인정된 손상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개연성에 대한 또 한번의 소견은 종래의 인정지식의 명백한 부정확성을 가리키는 사정들이 밝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하지 않다(원칙 25(3) 참조).

(3) 손상을 입은 자가 악화(Verschlimmerung)의 의미에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손상에 기인한 악화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던 때에는 법률상의 추정이 타당하다. 손상에 기인한 악화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는 개별사례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고, 손상과 무관하지만 함께 작용하는 여건을 고려한 심사를 필요로 한다. 악화 정도로 인정된 노동능력 감소의 한도는 이 경우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망의 시점에서 사실상 건강상의 여건이 판단 기준이 된다.

(4) 손상결과라고 볼 수 없는 복수의 질병들이 죽음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보훈법상의 인과개념(원칙 36)을 적용하여 손상결과가 최소한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략 등가적인 의미를 갖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 드물게 사망의 시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손상결과 이외에 의료적 경험에 비추어 손상결과가 없었더라면 이 시점(사망의 시점)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더 진행된 단계에서 조만간 저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손상과 무관한) 심각한 질병이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특히 사망의 시점이 중요하다. 그러한 사례에서 손상을 입은 사람이 손상결과가 없었더라면 개연적으로 최소한 1년 이상을 더 생존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은 손상결과로 간주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적 판단에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모든 상황요소들에 대한 주의깊은 형량이 요구된다.

(5) 직무상의 근거나 손상결과로 인해 적시에 또는 적절한 수술의 중단은 사망의 원인이다(원칙 44 참조).

(6) 손상과 사망간의 인과관계는 부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부검에 대한 유족의 동의를 적시에 확보해야 한다.

31) AHP, 158쪽 이하.

(3) 개연성 판단

법률은 건강손상과 건강장애 사이에 인과관계의 개연성(Wahrscheinlichkeit)을 요구한다. “개연성”이라는 기준은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이에 반해 인과관계의 근거가 되는 사실 자체(손상적 사건의 경과, 건강손상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 및 이로 인해 건강 또는 경제적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는 완전히 증명해야 한다. 개연성은 손상적 사건과 건강장애 사이의 인과관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과관계의 가능성(Möglichkeit)이나 시간적 연관성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간적 연관성은 보훈법적인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검토하는 계기만을 제공한다.

의료적 인과관계와 관련해서 일응의 증거는 배제된다(BSG 1957.9.17.). 일응의 증거는 전형적인 사태경과, 즉 경험상 특정한 원인이나 특정한 경과를 시사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사례에서만 적용가능하다. 이러한 일응의 증거만으로는 개연적이지 않다. 나아가 일응의 증거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허용하고 있는 민법에서처럼 주관적인 입증부담규율과 관련된 경우에만 합당하다. 형사소송법에서처럼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와 같은 원칙은 사회적 보상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보상법은 객관적인 입증부담규칙에 복종한다(BSG. 1987.1.20.). 보훈사건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보상과 관련된 행정절차와 불복절차에서는 직권조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입증책임과 진술책임의 범위가 완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사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사태가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보훈청구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문제된 건강손상과 관련된 병리학의 지배적인 견해를 토대로 삼는다. 직무수행과 건강손상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에는 대부분 인과관계가 존재할 개연성이 낮다. 물론 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다고 해서 곧장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군인이 복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건강했으나 복무기간 중에 발병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복무가 건강손상을 유발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무엇보다 특정한 직무수행이나 직무수행이 이루어진 전반적인 상황이 발병 또는 기존 질환의 악화를 초래했다는 개연성을 증명해야 한다.

현재의 의학적 이론에 비추어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보다 긍정하는 입장이 많은 경우에 개연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인과관계에 관한 확신이 이성적으로 개연성에 입각할 수 있을 정도로 개연성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일련의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과학적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보훈청구의 근거사실이 의문스러운 경우에 보훈청구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법률적인 증명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의 객관적 증명불능이나 미확인의 결과는 사실로부터 권리를 주장하려는 사람이 져야 한다.³²⁾

발생원인이 지금까지 의학으로 해명될 수 없었던 질병에서 인과관계의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BSG 1957.10.24.). 따라서 자해사망의 판정을 수긍하지 않고 망인이 유격대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유족은 유격대의 공격 사실을 반드시 증명하여야 한다.³³⁾

<의료감정지침>의 원칙 38은 2009년 <보훈의료규정>에 그대로 수용되어 있다.³⁴⁾

원칙 38 — 인과관계의 개연성³⁵⁾

(1) 건강침해가 손상의 결과라고 인정하는 데에는 보훈법적으로 인과관계의 개연성(Wahrscheinlichkeit)으로 충분하다. 현재의 의학 학설에 따라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보다 긍정하는 견해가 많은 경우 개연성은 존재한다.

특수한 주의를 기울여 찬반의견을 형량해야 한다. 인과관계의 판단문제가 어려운 경우에도 감정인은 활용할만한 판단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의료적 판단의 근거는 병인론과 질병발생학에 관하여 지배적인 학설이 인정한 지식이다. 개별학자가 작업가설을 세우거나 시험적 해명을 시도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판단을 내리는 의사의 주관적 견해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3) 과도기적 증상 없는 큰 시간적 간격은 그 자체로 인과관계를 다각도로 비개연적인 것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적절한 시간적 연결은 원칙적으로 인과관계의 개연성의 전제이다. 다른 한편 건강장애와 수행한 직무간의 시간적 연결성은 그 자체로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확립할 수 없다. 예컨대, 군인이 입대시에 건강하고, 직무의 영향요소에 노출되었고, 직무시간중 질병이 발생하거나 출현하였던 사실은 손상결과에 인정에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온갖 종류의 질병들, 특히 내적인 질병이 손상적인 과정의 본질적인 공동작용이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대한 특정한 직무수행 또는 일반적인 직무사정의 악영향이 오히려 반드시 명백하게 되어야 한다.

(4) 건강장애와 손상적 사건의 (인과)관계가 과학적 인식에 따라 배제될 수 없다는 사정으로부터 바로 그래서 인과관계가 개연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없다.

인과관계가 오로지 가능성만 가진다면 손상결과에 존재는 마찬가지로 인정될 수 없다.

32) Wilke, 60쪽.

33) BSG, Urteil vom 31.07.1962 - 9 RV 174/58

34)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Versorgungsmedizinverordnung: Versorgungsmedizinische Grundsätze, BMAS, 2015, 129쪽.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aegroto)’의 원칙은 의료전문가들의 감정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4) 재량적 보훈

독일법에서는 보훈청구사건에서 “의심스러운 때에는 청구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원칙, 입증책임전환이나 간주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입증문제에 있어서 유연한 규정을 두고 있다.

“확인된 질병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계에서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해 건강장애를 병역상의 손상의 결과로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개연성이 없는 경우에는 연방노동사회부와 협의를 거쳐 연방국방부의 동의를 얻어 그 건강장애를 병역상의 손상의 결과로 인정할 수 있다(군인보훈법 제81조 제6항 제2문).”

<의료감정지침>은 이러한 건강장애를 병역상의 손상의 결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제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원칙 39(2)).

원칙 39 - 재량적 보훈³⁶⁾

(1) 진단된 질병의 원인에 대해 의학계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건강장애를 손상결과로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개연성이 없다는 경우에는 그러한 건강장애는 원칙 37에서 해명된 원칙들에서 벗어나 연방보훈법 제1조 제3항 2문에 따라 손상결과로 인정할 수 있다(재량보훈). 여타 모든 사회적 보상법들(군인보훈법 제8조 제6항 제2문, 대체복무법 제47조 제7항 제2문, 구금자지원법 제4조 제5항 제2문, 전염병방호법 제61조 제2문, 형사복권법 제21조 제5항 제2문, 행정복권법 제3조 제5항 제2문, 폭력범죄희생자보상법 제1조 제12항 제2문)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다음과 같은 의료적 전제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

a) 병의 원인에 대해 연구와 경험을 통해 만족스럽게 확립된 의학적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가의 개인적 견해가 의학적 교설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학계에서의 불확실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b) 과학적 인식과 경험의 결함으로 인해 병의 발생과 진행에 대한 손상요건 혹은 손상결과의 인과적 중요성이 개연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허용되지 않는다. 개별사

35) AHP, 149쪽 이하.

례에서 존재하는 여건의 인과적 영향이 과학적 작업가설들에서 이론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반드시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병인학의 부족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영향요소들의 인과적인 중요성이 과학적으로 다투어질 수 없다면, 감정인은 인과관계가 개연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

c) 생물학적 경과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과 학술적 이론에서 질병의 양태에 대한 지지된 견해와 조화되는 시간적 연결이 인과적 중요성에서 과학적으로 논란되는 여건의 영향과 질병의 발현 또는 병증의 악화 사이에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3)~(7) 생략

어떤 질환이나 질병의 원인이 의학적으로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연방보건사회부 장관이 동의한 때에는 문제의 건강장애를 손상결과로 인정할 수 있다. 장관의 동의는 특정한 질환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008년 <의료감정지침>은 17개의 질병이나 질환에 대해 일반적 동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20개의 질병과 질환에 대해서는 개별사례에서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³⁷⁾ <의료감정지침>은 정신분열(Schizophrenie)과 정서적 사이코(affektive Psychosen)에서 재량적 보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원칙 69).

(5) 심리적 장애, 트라우마

전쟁이나 파병사고 이후 군인들이 트라우마를 겪다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프로이트는 <쾌락원칙의 저편>에서 제1차세계대전 이후 전쟁 트라우마를 반복하는 군인의 문제를 처음으로 다루었다.³⁸⁾ 1990년 대 이후 최근까지 독일은 4만 3천명을 해외로 파병하였다. 귀환병사들이 겪는 고통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이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군당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자해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해사망에 이르게 된 병적인 심리상태가 군사적 직무와 연관되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후 자해사망을 트라우마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수년간 포로생활후 귀환한 사람이 사회복귀에 부적응 증세를 보이다 자해사망한 사건에서 군인의 유족에게 보훈급부권을 인정하였다.

국방부는 연방건강부와 연방노동사회부와 협의를 거쳐 의학계의 지식수준에 따라 파병

36) AHP, 150쪽 이하.

37) AHP, 153-154쪽.

38) 프로이트/윤희기 박찬부 옮김, <쾌락원칙을 넘어서>,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275쪽 이하.

사고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여타 심리적 장애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어떠한 조건 아래서 추정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군인이 해외에 무장부대의 파병에 참여하였고, 교전에 참여하거나 연루된 경우에만 파병사고의 인과성이 추정된다(군인보훈법 제63조의c 제2항의a).³⁹⁾ 이에 따라 2012년 파병사고규정(Einsatzunfallverordnung)이 제정되었다.

심리적 장애가 해외파병의 종료후 5년 이내에 발생하였고, 환자가 해외파병중에 심리적 장애의 위험에 특별하게 노출되었다는 사정이 연방군의 정신분석 및 심리치료 전문의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한 심리적 장애의 원인은 파병사고(Einsatzunfall)로 추정한다(파병사고규정 제2조). 여기서 심리적 장애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sche Belastungsstörung), 적응장애(Anpassungsstörung), 급성 스트레스에 반응, 불안장애(Angststörung), 신체화장애, 단기 정신병적 장애 등 여섯 가지로 한정된다. 환자가 파병중 교전에 노출되거나 이에 참여하였거나 이에 견줄만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어야 한다. 나아가 파병 종료후 5년 이내에 여섯 가지 심리적 장애가 발현되는 경우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스트레스를 부과하는 사건 이후의 심리적 장애들은 흔히 시간적인 지연을 가진 후에 비로소 나타난다. 이는 사건과 심리적 장애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제대후 5년 이내에 발생한 심리적 장애를 파병사고로 추정하는 규정은 파병사고를 당한 군인의 권리주장에 매우 우호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 추정은 어디까지나 추정이기 때문에 개별사례에서 반박될 여지도 있다.

원칙 71 - 심리적 트라우마의 결과⁴⁰⁾

(1)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한 장애는 스트레스가 명료하게 드러나고 고통과 무력감의 체험과 연관되는 한에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심리적 스트레스(전쟁포로, 동독에서 불법적인 구금)나 비교적 단기간 지속적인 스트레스(인질, 강간)로 고려된다. 장애의 종류와 정도의 평가에서 관련자가 무엇을 체험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장애가 그의 개인적 부하력과 보상역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유의해야 한다.

스트레스는 그 유형, 형태, 영향, 기간에 따라 상이하다. 스트레스는 병적인 고통을 가진 단기적인 반응적 스트레스에 해당할 수 있다. 수개월에서 1-2년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진단을 경유하지 않고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보통 규정된다. 스트레스는 경우에 따라 잠복기를 지나서 등장한다. 전술한 스트레스의 만성화 또는 불신, 은둔, 동기상실, 공허감, 소외를 수반한 성격변화(과거: 경험과 관련된 성격전환)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인격구조에 깊이 간섭하고 보통 장기간 지속하는 스트레스를 전제한다.

39) 이 사정은 독일보훈청이 트라우마로 인한 자해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2) 비교적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스트레스와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발현의 경우에는 이러한 만성화의 책임이 손상요소에 있는지 손상과 무관한 요소들에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 손상과 연관된 조직상 건강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심인성 증상강화나 증상고착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3) 인성에 근거한 독자적인 경향상 정신적 표출로서 희망 및 목표반응은 손상결과가 아니다.

4. 자해사망과 순직

1) 의도적으로 초래한 손상

독일법은 자해손상을 보훈대상에서 배제한다. 연방보훈법과 군인보훈법은 이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연방공무원보훈법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⁴¹⁾ 연방보훈법은 ‘의도적으로 초래한 손상(absichtlich herbeigeführte Schädigung)’을 보훈법상의 손상(공상 또는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제1조 제4항). 군인보훈법도 ‘의도적으로 초래한 건강상의 손상(absichtlich herbeigeführte gesundheitliche Schädigung)’을 병역상의 손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제81조 제8항).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제정된 1927년 라이히보훈법 제2조 제4항도 “의도적으로 초래한 건강손상적 영향(absichtlich herbeigeführte gesundheitsschädigende Einwirkung)”를 직무상의 손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독일법상 ‘자해행위’ 규정은 2012년 개정 이전의 한국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와 동일하다. 자해사망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필요성 때문에 국가유공자법은 앞의 제4호를 삭제하였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1호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을 국가유공자의 인정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논쟁의 요소를 안고 있다. 자신의 총기로 자해사망을 결행한 사람이 제4호뿐만 아니라 제1호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행동양식은 허용하고, 경미한 행동양식은 허용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

40) AHP, 205쪽 이하.

41) 공무원보훈법(Beamtenversorgungsgesetz) 제31조의a 제4항: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하였거나 인질, 포로 여타 영향영역의 이탈 사유를 초래하였던 경우에는 사고배려급부를 배제한다. 단 그에 대한 배제가 부당한 과혹(過酷)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에 예시된 국가유공자 배제사유는 전체적으로 삭제하고, 해석론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의미에서 보훈보상자법도 마찬가지이다.

독일보훈법상 보훈급부청구권의 인정에서 자기귀책사유는 결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이른바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에서 자책사유(경과실, 중과실, 미필적 고의, 고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훈급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귀책사유는 독일법에서 손상자가 스스로 설정한 조건의 본질성을 판단하는 데에 기준이 아니다(BSGE 16 S. 220). 손상이 손상자에 의해 추구되었다면 그러한 손상은 의도적으로 초래된 것이다. 의도적인 행위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특정한 결과를 발생시키게 되거나 그럴 수 있다는 인식을 가졌다는 점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가 목표로서 이러한 결과를 지향했다는 점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의도(Absicht)는 고의(Vorsatz)를 초과하는 요소이다. 고의적인 행동이 겨냥하는 것은 손상 그 자체이지 손상의 결과로서 자신의 건강손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도적인 행동은 의지가 고의적 행동을 넘어 도달하고자 하는 특별한 목표를 겨냥하는 경우에만 존재한다.⁴²⁾ 따라서 의도와 고의는 동의어가 아니다. 의도적 행위의 전형적인 사례는 군인이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실행한 자상행위이다. 과거 군인보훈법도 군인의 자상행위(Selbstverstümmelung)를 보훈급부대상에서 배제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법제들도 의도적 행위와 고의적 행위, 의도와 고의를 통일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았다. 라이히보훈법은 ‘의도적인 행위’를 보훈대상에서 배제하였으나 병사보훈법(Mannschaftsversorgungsgesetz 1906)과 장교연금법(Offizierspensionsgesetz 1871)은 고의적인 행위도 보훈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양자를 동일시하는 결정들도 존재하였으나 점차 의도적 행위와 고의적 행위를 구분하고 의도적 행위를 좁게 해석함으로써 관련자에게 보훈급부를 인정하게 되었다.

2) 자해사망

군인보훈법은 자해사망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연방보훈법이 손상과 사망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군인보훈법은 연방보훈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군인보훈법의 적용에 기준이 된다.

연방보훈법 제1조 제5항: 손상을 입은 사람이 손상의 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유족은 보훈급부청구권을 보유한다. 제3항의 규정(인과관계규정)은 준용한다.

이 규정에 의해 손상의 결과로 (자해)사망한 사람의 유족도 보훈급부청구권을 갖게 된

42) BSG Urteil vo— 14.07.1955 - 8 RV 177/54.

다. 실제로 독일은 이러한 규정 아래서 일정한 자해사망자의 유족에게 보훈급부를 제공하였다. 독일 제2제국, 바이마르, 나치제국을 거쳐 현재까지 보훈급부청구권의 기본골격은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실제로 20세기 초반에 정신의학이 발전함으로써 자살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자해사망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의학적 통찰이 때로는 나치제국의 군사적 재정적 목표에 지배되었다. 나치제국은 전쟁수행을 위해서 자해사망을 공상으로 인정하는 비율을 낮추도록 압박하였다.⁴³⁾ 심지어 자해사망을 탈영과 같이 취급하고, 자해사망자의 가족들을 민족공동체로부터 배제하였다.

자해사망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자유로운 결단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보훈법상의 측면은 연방보훈법 제1조 제4항의 맥락에서 해명된다. 보훈급부청구권은 그 자체로 부정적으로 답변될 것이다. <의료감정지침>의 원칙 41에 의해서 군복무관련성 아래서 자해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침해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자해사망은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원칙 41 — 의도적으로 초래한 손상⁴⁴⁾

손상을 당한 사람에 의해 의도적으로 초래한 손상은 보훈법상 손상이 아니다. 손상이 손상을 당한 사람에 의해 추구된 것인 경우에는 그 손상은 의도적으로 초래한 것이다. 보훈법적으로 보호받는 요건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침해가 개연적이라면, 자해사망과 자해사망의 기도 혹은 자살의 결과는 의도적으로 초래한 것이 아니다.

명료한 인식과 자유로운 의지결단에 입각한 자해사망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군복무의 특유한 사정들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연방보훈법상 공상(순직)으로 볼 수 없다(뮌헨 주보훈청 1952.2.19.). 군복무에 특유한 사정이 자해사망에 영향을 미치고, 자해사망이 일정한 책임무능력 상태(정신질환, 정신적 장애)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공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인과성의 판단에 있어서 자해사망은 연방보훈법 제1조의 의미에서 건강손상이 아니라 그러한 손상의 결과를 의미한다.⁴⁵⁾ 여기서도 손상적 사건과 건강손상(정신질환) 사이에, 건강손상과 자해사망 사이에 이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방보훈법 제1조상의 요건과 자해사망의 관계가 존재한다.

자해사망이 연방보훈법 제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책임무능력(Unzurechnungsfähigkeit)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곧바로 보훈급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

43) Baumann, Ursula, Vom Recht auf den eigenen Tod, Hermann Böhlau Nachfolger, 2001, 360쪽.

44) AHP, 155쪽.

45) BSG, Urteil vom 14.07.1955- 8RV177/54.

결정의 침해(Beeinträchtigung der freien Willensbestimmung)가 존재하는 경우에 비로소 보훈급부청구권이 발생한다. 과거 라이히보훈법원도 군복무의 영향으로 인해 병적인 심리 상태(Krankhafter Gemütszustand)가 나타나고, 이러한 심리상태가 자해사망에 대한 방어 관념을 억제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자해사망에 대한 보훈급부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방보훈법 제1조상의 요건과 자해사망을 낳은 건강손상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본질적이다. 본질적 조건의 의미에서(제1조상의) 요건이 함께 작용하였다면, 즉 자해사망의 결단에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그 경우에만 이러한 인과관계가 긍정될 수 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1조 이외의 다른 여건에 의해 배제되거나 본질적으로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조건에 대한 관계에서 군복무의 영향이 부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연방보훈법에 따른 보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해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군복무상의 사정과 공상 사이에, 공상과 사망 사이에 이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두 번째 인과관계는 자유의사의 침해 여부이다. 여기서 앞서 논의한 고의적인 자해사망과 의도적인 자해사망도 구분할 수 있다. 실제로 모든 자해사망은 스스로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감수하기 때문에 고의적인 자해사망이다. 물론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결과를 감수할 의지가 없는 가운데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는 과실에 의한 자해사망이라고 할 수 있다(자해의사 없는 약물의 과다복용). 어쨌든 결과를 스스로 감수한다는 행위(고의적인 자해사망)와 결과를 의도한다는 행위(의도적인 자해사망)가 독일의 판례나 학설처럼 언어적으로 정식화될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의도적인 자해사망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아래서 이루어진 자해사망이고, 고의적인 자해사망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된 가운데 이루어진 자해사망이다. 독일법에서는 후자만이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원칙 74 - 자해사망 및 자해사망 시도⁴⁶⁾

(1) 손상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침해가 자해사망 또는 자해사망 시도의 시점에 존재하였다면, 자해사망 또는 그 시도의 결과는 병역상의 손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 통상적으로 일련의 원인과 동기들은 공동작용(Zusammenwirken)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소한 계기만으로도 자해사망의 결행을 충분히 가능하게 할 만큼 자해사망의 결단을 숙성시키게 하므로 망인의 인성 및 망인의 사회적 위치, 직업상 및 병역상 사정들에 대한 증인진술과 검사의 문서를 포함해 모든 활용가능한 문서들을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개인적 부하력(Belastbarkeit)에 유의해야 한다. 손상적 여건이 바로 이 망인

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다른 한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 하나에서 망인이 본질적으로 정신적 저항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 망인이 취약한 부하력을 가졌다는 점은 반드시 경우에 따라 자해사망자의 전체 생애사에 근거해서 개연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경험있는 정신과의사가 감정을 말아야 하며, 그는 빈번히 가족들로부터 추가적인 질의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3) 손상적 여건을 원인으로 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침해는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이나 자존감의 특수한 훼손의 경우에 존재할 수 있다.

(4) 손상과 무관한 정신적 장애에서 배려의무(Fürsorgepflicht) 위반이 자해사망이나 그 시도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던 경우에는 자해사망 또는 그 시도의 결과는 손상결과로 간주되어야 한다.

3) 순직으로 인정된 사례

(1) 부상과 약물중독(브레멘 주 사회법원-1954)

부상결과가 압도적으로 성격변화를 수반한 약물중독과 우울증 상태에 이르고 그리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된 경우에는 마취제의 과다투여로 인한 자해사망은 손상의 결과(순직)이다.⁴⁶⁾

원칙 73 - 의약품 및 알콜 중독

의약품 및 알콜중독과 그 영향은 손상과 관련된 건강장애의 수반현상들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손상결과가 아니다. 예컨대 드문 예외적 사례, 즉 고단위 약품으로만 통제할 수 있는 특이한 만성적인 통증상태나 부상후 처음으로 고단위 마취제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투여됨으로써 심각한 성격변화를 수반한 뇌손상은 약물남용에 따른 손상결과로 인정될 수 있다.

(2) 약화의 사례

슈투트가르트 주 사회법원은 자해사망이 군복무와 관련되고, 두통이 지속적으로 약화

46) AHP, 206쪽 이하.

47) Wilke, 76쪽.

되고 참을 수 없고 치료불가능하고 의식장애와 착란상태를 야기한 결과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현저한 침해상태에서 개연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족에게 보훈급부청구권을 인정하였다.⁴⁸⁾

제1차세계대전의 상이자가 폐결핵, 위장병, 일반적인 신경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의 70 퍼센트 상실로 1928년 7월 1일부터 연금을 수령하다가 1950년 4월 25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망인의 배우자가 자해사망이 직무상 손상으로 인정된 폐결핵과 연관된 신경장애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베를린 주 사회법원은 망인이 배우자와 함께 죽으려고 시도하였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연방사회법원은 망인의 신경장애가 점차 악화되어 사고의 시점에는 자살을 예견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배우자의 주장을 주목하고 주 사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⁴⁹⁾ 뮌헨보훈청도 다른 자해사망사건에서 “어떠한 정서(우울감)가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을 통해 초래되거나 어떤 소질이 결정적으로 악화되었다면 병적인 장애상태로 인정될 수 있다(1952.2.19.)” 고 전제하였다. <의료감정지침> 제46원칙 (3)도 손상과 관련된 악화에 대해서 보훈급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원칙 42 - 발생의 의미에서 인정과 악화의 의미에서 인정⁵⁰⁾

(1) 발생(Entstehung)의 의미에서 건강장애의 인정은 손상행위의 작용 시점에서 건강장애에 속하는 병리적인 신체적 또는 심리적 사정이 앞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한다. 건강장애에 하나의 성향이 관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손상행위의 작용시점에 건강장애에 속하는 병리적인 신체적 또는 심리적 사정이 미리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이미 존재하였던 한에서 외적인 작용이 병이 발현하였던 시점보다 앞서거나 혹은 병이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위중한 형태로 나타났던 시점보다 앞서는 경우에만 악화(Verschlimmerung)의 의미에서 보훈급부가 인정될 수 있다. 악화의 개념은 사태의 본질적인 변화라는 의미에서 악화와 구별되어야 한다(원칙 24 참조).

(2) 인정된 건강장애의 발생뿐만 아니라 악화를 아우르는 의미에서 심화(Verschlechterung)의 경우 병의 악화는 손상과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항상 심사해야 한다(원칙 47(2), (3)).

(3) 감정의사는 이미 존재하는 병이 주장된 손상을 통해 악화되었는지 또는 인정된 병의 추가적 발전이 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질병의 정상적인 경과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감정의사는 병의 고유한 발전만이 존

48) Wilke, 77쪽.

49) BSG, Urteil vom 23.02.1960 - 9RV638/55.

재하는지 혹은 병의 발현의 강도와 전개속도에 본질적인 조건으로 작용한 요인이 직무상의 것인지 혹은 직무외적인 것인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3) 비정상적인 인격

“비정상적인 인격구조는 보훈법상의 인과관계규범의 의미에서 공동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원헌 주 사회법원).”⁵¹⁾ 신경증적이고 비정상적인 인격은 군복무환경을 참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며, 군복무로부터 희망했던 제대 대신에 전선으로 파견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살을 시도한다.

원칙 72 - 비정상적 인격⁵²⁾

성격장애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에게 현저하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인격(종전-사이코패스)으로 규정된다. 심리적 태도에서 다양한 표현들의 인격연관적(체질연관적) 특징들이 문제된다. 허약증, 의기소침, 우울증, 조증 등이 빈번하다. 이러한 형태들은 손상결과가 아니다.

(4) 복무상 특유한 사정으로서 신경증(Neurose)

제2차세계대전중 파리의 육군 차량정비소의 재정담당자이자 관리기술사업소의 책임자인 사업가가 1943년 12월 18일에 산책후 부대로 귀환하지 않았다가 1944년 2월 3일 세느강변에서 상당히 부패한 채로 발견되었다. 감정의견에 의하면 그는 두개골 총상으로 사망하였고, 오른쪽 관자놀이에 절대적인 근접사격을 가했다. 부검결과에 따르면 타살이 아니라 자살로 추정되었다. 그의 배우자는 남편이 프랑스의 저항자들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훈급부를 주장하였다. 법원은 망인의 죽음을 신경증에 의한 자살로 판단하고 보훈급부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본질적인 침해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해사망이 어느 범위에서 보훈법상 손상결과인지에 대한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사례에서 있을법한 심리적 불안정성에서 출발하여,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이 바로 망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가 자신에게 기대가능한 의사의 적응 상황에서도 군복무와 관련한 여

50) AHP, 155쪽 이하.

51) Wilke, 77쪽.

52) AHP, 206쪽.

건에 대해 적응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밝혀진다면, 나아가 자해사망 결단의 원인으로 고려되는 (군복무와) 다른 여건들이 배제된다면,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은 보훈법상 인과관계 규범의 의미에서 본질적 조건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문제는 객관적 부담(objektive Belastung)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부하력(subjektive Belastbarkeit)이다.”⁵³⁾

(5) 감독, 주의, 배려의무 위반

직무상의 상관(Vorgesetzten)이 주의의무(Sorgfaltspflicht)를 위반하고 자해사망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존재한다. 병역 소집으로 군인은 이러한 직무의 법률에 복종하고, 특히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절대적 권력은 군대기관들에게 개별군인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군대기관들에게 의무도 부과한다. 주의의무 위반은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의 결과에 해당한다. 군인은 또한 동료에 대해서는 배려의무를 부담한다.⁵⁴⁾ 따라서 군인이 정신적으로 우려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상관이나 동료가 적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가운데 해당 군인이 자해사망한 사례는 배려의무(Fürsorgepflicht)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내생적인 우울증의 영향 아래서 일어난 자해사망은 질병(발병)을 알고 있음에도 치료와 지속적인 감독이 중단되었다면, 자해사망에 대하여 병역의 영향요소들은 본질적으로 공동원인이다(쉴레스비히 주 사회법원).” 가족의 나쁜 소식에 의해 정신적 우울증이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시술과 감독에서 라사렛 후송 병원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은 자해사망의 본질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⁵⁵⁾ “비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에 대한 소질적인 경향 이외에 병역에 특유한 사정들이 자해사망의 원인이 되고, 이러한 사정이 본질적인 원인으로 간주된다면, 보훈급부의 전제들은 존재한다. 군당국(부대)가 비정상적인 반응경향을 잘 알고서 사망자에게 집중근무에 투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⁵⁶⁾ 손상과 관련이 없는 정신적 장애의 경우에 배려의무 위반이 자해사망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면 자해사망은 공상으로 간주된다(의료감정지침 원칙 74(4)).

(6) 전쟁포로에 대한 공포

자해사망자가 러시아의 전쟁포로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면 연방보훈법 제1조상의 요건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침해가 존재한다.⁵⁷⁾

53) BSG, Urteil vom 03.12.1964 - 8RV229/62.

54) 독일군인지위법 제10조(상관의 의무), 제11조(전우애), 제24조(책임), 제38조(배려) 참조.

55) BSG, Urteil vom 30.11.1960 - 9RV 238/56.

56) LSG Bremen, Urteil vom 29.04.1954 - Ko19/4.

57) Wilke, 79쪽.

(7) 양심상의 강제

국제법적 및 윤리적 이유로 명령하달 또는 명령준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양심상의 강제로 인한 자해사망은 보훈급부청구권을 정당화한다(뒤셀도르프 고등행정법원 1949. 6.28). 예컨대, 군사법원판사가 명령에 따라 법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형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자신의 양심과 양립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급부청구권이 인정된다.⁵⁸⁾

(8) 포로귀환과 적응실패

마인즈 주 사회법원은 포로생활의 학대로 인해 정신적으로 위축된 사람에게 혼인, 가족,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부담은 쇼크로 작용하고 자해사망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수년간의 포로생활을 겪은 후 귀환은 연방보훈법 제1조의 손상요건에 해당한다(1962. 6.4.).⁵⁹⁾ 연방보훈법은 포로상태를 전쟁의 직접적 영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판결은 포로생활의 후유증을 주목하였다.

(9) 함장의 자폭행위

포로가 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선박의 침몰을 명령하고 스스로 사망한 함장의 결단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침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이 승인된 군사적 전통에 부합하고 그리하여 병역의 특유한 사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보훈급부청구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⁶⁰⁾

(10) 병역거부자

평화주의자가 병역을 피하고자 1945년 3월 28일 밤 군에 소집된 후 자해사망하였다. 유족의 신청에 대해 1949년 보훈청은 자살과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 사이에 인과관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자해사망에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사망자는 직접적인 전쟁영향에 노출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1987년 유족은 다시 보훈급부를 청구하면서 가족력상 증명된 우울증을 이유로 망인이 군대에 소집될 수 없었다고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이 신청도 거부되었다. 1992년 연방사회법원은 전심과 달리 비록 군복무상 집총근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였

58) Wilke, 79쪽.

59) Wilke, 80쪽.

60) Wilke, 79쪽.

다.⁶¹⁾ 독일은 2차대전당시 병역거부자를 전시군형법상의 국방력훼손죄로 처벌하였고, 200여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을 처형하였다. 이들은 집시나 강제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나치 불법보상법(1956)상의 보상대상에서 배제되었고, 90년대에 이르러 희생자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국방력훼손죄에 입각한 유죄판결은 1998년 나치불법판결파기법률에 의하여 무죄로 확인되었다.

4)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입각한 자해사망은 인과관계를 중단시킨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해사망이나 직무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침해가 없는 자해사망은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직무관련성이 부인되는 경우

① 상이군인의 신변비관으로 인한 자해사망

군복무중 폐확장증, 만성기관지염, 천식발작을 얻어 제대하고 40퍼센트의 노동능력상실로 라이히보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수령하던 퇴역군인이 제2차세계대전후 나치당원이었다는 이유로 교직에서 해임되고 연금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1946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뮌헨 주 보훈청(1952.2.19.)은 “자해사망이 무의식 상태에서 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배제하거나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신활동의 병적인 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상태가 신체상해급부법률 제1조 제1항(연방보훈법 제1조 제4항)상의 영향요소로 인한 경우에는 보훈급부청구권이 인정된다. 어떠한 정서(우울감)가 병역에 특유한 사정을 통해 초래되거나 어떤 소질이 결정적으로 악화되었다면 병적인 장애상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 자해사망을 ‘명료한 인식과 자유로운 의사결정 아래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의도적인 건강손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바이에른 주 사회법원 및 연방사회법원도 군복무중 얻은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군복무중 얻은 질병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⁶²⁾

② 연합국의 연금박탈조치와 자해사망

제1차세계대전에서 상이를 입고 1916년부터 노동능력의 80퍼센트의 상실로 장애연금을 수령해온 퇴역군인이 제2차세계대전후 연합국의 연금박탈조치로 인해 경제생활의 여건이 악화되자 비관하여 1945년 8월 9일에 자살하였다. 그의 배우자는 연금박탈조치가 전쟁의

61) BSG Urteil vom 26. 2. 1992 - 9 a RV 30/90 (LSG Hamburg Urteil 21. 11. 1989 IV KOBf 5/88).

62) BSG, Urteil vom 14.07.1955 - 8 RV 177/54 - NJW 1956, 118.

직접적 영향요소라고 주장하며 배우자연금을 청구하였다. 연방사회법원은 연합국의 연금 박탈조치는 전쟁의 직접적 영향요소가 아니라고 보았으며, 설혹 전쟁의 직접적 영향요소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산법상의 경제적 손실일 뿐이지 보훈법상의 연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건강상의 손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망인이 그러한 조치로 인하여 병적인 정신적 장애상태에서 자해사망을 결단하였더라도 자해사망은 보훈법상의 손상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⁶³⁾

③ 군의관의 약물투입

코블렌츠 군중앙병원에 근무하던 군의관이 집무실에서 독극물주사를 통해 자해사망하였다. 주 사회법원은 군의관의 자해사망이 직무의 특유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청구권을 부정하였다.⁶⁴⁾ 군의관으로 같이 근무해온 망인의 배우자는 남편의 자해사망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고, 그 사이 직무수행불능으로 군대에서 제대하였다. 배우자는 이를 이유로 다시 장애보훈급부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사회법원은 병역상의 영향요소와 청구인의 건강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자해사망한 남편을 보고 받은 배우자의 쇼크가 군의사로서가 아니라 배우자로서 받은 일반적 손상이라고 보았다.⁶⁵⁾

④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해사망

1983년부터 상사로 복무해온 군인이 당직사관으로 근무중 권총으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최근 130명의 보안부대를 지휘하는 보직을 받았는데 부대의 병사들 간에 음주 소란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직무상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사고당일 상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밤 9시 30분에 술에 취한 2인의 병사가 기차역에서 여행자들을 희롱하고 철로 위를 걷는다는 전화를 받았다. 상사는 두 사람에게 다음 외출을 금지하고 20 마르크의 범칙금을 부과한 후 밤 10시경에 자해 사망하였다. 올덴부르크 사회법원은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니더작센 주 사회법원은 심리적 인과관계를 주목하여 보훈급청구청구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연방사회법원은 직업병으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자해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⁶⁶⁾

⑤ 성탄절 회식후 자해사망

1939년 9월 입대하여 네덜란드 헤이그의 군부대에서 이등병으로 복무한 군인이 동료들과 성탄절 회식에 참여한 후 1940년 12월 24일 밤 10시 45분에 총기로 자해사망하였다.

63) BSG, Urteil vom 23.02.1960 - 9 RV 548/56.

64) LSG Rheinland-Pfalz Urteil vom 15.04.2015 - L 4 VS 5/14.

65) BSG, Urteil vom 26.10.2015 - B9V 34/15B.

66) BSG, Urteil vom 24.09.1992 - 9a RV 31/90.

이 군인은 가족에게 보낸 1940년 12월 22일자 편지에서 부대의 공식적인 성탄절 행사를 상세하게 적어 보냈다. 그러나 사망의 구체적인 정황을 알려주는 공식기록이나 부대자료는 재판과정에서 확보되지 않았다. 연방사회법원은 편지를 주목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군사적 직무활동,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다는 주 사회법원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⁶⁷⁾

그러나 사망한 군인의 가족은 망자가 쉽게 상처받는 성격적 특성을 가졌다는 점, 나쁜 시력으로 인해 동료들의 놀림감이 되었던 사정, 이런 상황에서 성탄절 회식에서 과음하고 동료들의 놀림감이 되자 일시적으로 강한 정신적 장애 상태에서 총기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유족들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관이나 동료의 배려의무 침해로 규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성탄절야에 자해사망을 결정한 사람의 심리적 상태는 <의료 감정지침> 원칙 74(3)에서 언급한 ‘절망적 상황’ 이나 ‘자존감의 특수한 훼손’ 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2) 자유의사의 침해가 부인되는 사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수치심으로 인한 자해사망은 개별 사례에서 정당화할만한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보호급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은 독일보훈법에서 확립된 전통이다. 독일학자들은 유죄판결에 의한 처형이나 수형생활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과 사정이 동일하다고 이해한다. 독일학자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자해사망을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자살, ‘숙고한 자살’ (Bilanzsuizid)⁶⁸⁾로 규정한다. 숙고한 자살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자해사망으로 이해된다. 독일의 판례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와 관련한 자해사망도 자유의사에 의한 자해사망으로 파악한다.

① 범죄후 우울한 심리상태

우울증상태가 형벌에 대한 두려움 또는 병역상 자행한 불명예스러운 또는 범죄적인 행동에 대한 수치심으로 초래되거나 본질적으로 악화된 경우에 보호급부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⁶⁹⁾ 군사법원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해사망한 경우 개별적인 사례에서 특수성이 다른 판단을 정당화해주지 않은 한에서 일반적으로 보호급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동료를 적으로 착오하여 총격하였다는 사실에 절망하여 자해사망한 경우에는 보호급부를 인정할만한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

67) BSG, Urteil vom 15.11.1955 - 10 RV 260/55.

68) 독일의 정신분석가이자 신경병리학자인 알프레트 에리히 호헤(1865-1943)가 건강한 사람의 합리적 판단에 의한 죽음을 ‘숙고자살’로 부르고 이러한 자살을 자유의사의 결정으로 보았다.

69) Wilke, 79쪽.

② 음주운전 교통사고후 허위보고

장교가 자신의 명령권을 남용하여 음주상태 아래서 자동차로 다른 군인을 치사케 하고 이윽고 자신의 부하에게 허위보고를 하도록 한 후에 총으로서 자해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의 보훈급부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⁷⁰⁾

③ 군용품착복

1940년 입대하여 위생병으로 유고슬라비아에 투입되었던 군인이 크로아티아인에게 군화 한 켤레를 팔았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자 1944년 2월 22일에 아그람(자그레브) 기차역 화물칸에서 목을 매어 죽었다. 연방사회법원은 군인의 사망과 군사적 직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⁷¹⁾ 1942년 4월 4일 생필품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던 장교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해사망한 사건에서 자살자가 유서를 남기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볼 때 자해사망과정에서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침해도 없다고 판단하였다.⁷²⁾

④ 동성애자 처벌

형법 제175조상의 범죄(이른바 계간죄)⁷³⁾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에 자해사망한 사례에서 보훈급부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⁷⁴⁾

⑤ 나치조직원

나치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우려한 자해사망에는 보훈급부청구권의 전제요건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비밀경찰 요원이 정치적 범죄로 인하여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자해사망도 보훈급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⁷⁵⁾ 연방보훈법은 나치범죄자의 배제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판결은 이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연방보훈법 제1조의a).

⑥ 군사재판후 동부전선 전출

군사법원에서 1943년 7월 24일 군용절도죄, 장물죄, 사기죄로 4년형과 계급박탈에 처해진 군인에게 군당국은 1944년 2월 20일까지 형의 일부를 집행하고 잔형의 집행을 전쟁종료시까지 연기하고 해당군인을 동부전선으로 전출시켰다. 그는 수치심으로 인해 목을

70) Wilke, 79쪽.

71) BSG, Urteil vom 31.07.1962 - 9 RV 174/58.

72) Hessisches LSG, Urteil vom 25.02.1971 - L5N790/76.

73) 독일신형법에서는 계간죄가 폐지되었다.

74) Wilke, 79쪽.

75) BSG, Urteil vom 26.11.1964 - 9RV44/63.

매어 자살하였다. 이 사건에서 자해사망한 군인의 자녀가 연방보훈법상 고아연금(Waisenrente)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사망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배제하는 정신활동의 병적 장애상태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이러한 병적 상태가 개연적으로 자신의 군사적 직무의 영향요소들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보지 않았다.⁷⁶⁾

5. 유족에 대한 보훈급부내역

1) 경제적 보훈급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에 유족이 받는 급부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⁷⁷⁾

<표2-5> 경제적 급부의 내역

급부종류	급부내역	법적 근거	순직	비순직
일회적 급부	운구 및 장례비용	군인지위법 제31조	○	○
	사망당월 급여	공무원보훈법 제17조	○	○
	사망일시금	공무원보훈법 제18조	○	○
	임시지원금	군인보훈법 제12조 제7항	○	○
	공제조합지원금	공제조합 정관	○	○
	배우자보상금	공무원보훈법 제21조	○	×
	일회적 재해보상	군인보훈법 제63조 이하	○	×
정기적 급부	배우자연금	공무원보훈법 제19조	○	×
	고아수당	공무원보훈법 제23조	○	×
	부양수당	공무원보훈법 제22조	○	×
	직종금고의 연금	사회법전	○	○
	기한부 지원금	군인보훈법 제42조	×	○

순직으로 인정된 자해사망의 경우 유족이 보훈급부청구권을 가진다. 보훈급부청구권을 보유한 유족의 범위는 연방보훈법 제38조 내지 제52조에 규정되어 있다. 형제자매는 부양

76) LSG Berlin, Urteil vom 19.09.2000 - L13V10/99.

77) Giesen, Hermann & Schleicher, Ernst, Meine Rechte Danach. Taschenlexikon der Versorgung für Soldaten, 11. Aufl., Walhalla, 1994, 143-147쪽의 표를 현행화한 것이다.

아동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훈급부청구권을 보유하지 않는다. BMA도 연방사회법원(1961.11.14.)과 일치하여 가혹조정(제89조)의 사례에서도 형제자매에게는 보훈급부를 제공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다른 모든 보훈법제와 마찬가지로 형제자매는 보훈급부에서 배제된다. 보훈법제상 유족은 배우자, 파트너(Lebenspartner) 또는 자녀(1순위), 부모(2순위), 조부모 또는 손자녀(3순위) 순서로 보훈급부청구권자가 된다. 군인이 사망하거나 퇴역군인이 사망한 보훈사안은 군인보훈법 제43조와 관련하여 공무원보훈법(Beamtenversorgungsgesetz) 제16조 이하에 따라 처리된다. 물론 공무원보훈법상의 보훈급부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제도가 존재한다.⁷⁸⁾

(1) 일회적 급부

① 운구 및 장례비용

군인지위법 제31조(배려)에 따라 국가는 사망한 군인의 장례와 유해인도의 비용을 지불한다. 유족의 신청없이 국가가 직권으로 집행한다. 순직 자해사망자뿐만 아니라 비순직 자해사망자에게도 해당된다.

② 사망당월 급여

상속인에게 사망한 군인의 사망한 달의 월급을 지급한다(공무원보훈법 제17조). 순직 자해사망자뿐만 아니라 비순직 자해사망자에게도 해당된다.

③ 사망일시금(Sterbegeld)

군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사망일시금을 수령한다(공무원보훈법 제18조). 사망자의 유족에게 군인보훈법 제63조 또는 제63조의a에 따라 일회적 재해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은 지급하지 않는다.⁷⁹⁾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자녀가 자신의 소득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망일시금을 지급받는다. 사망일시금은 급여의 2배를 한도로 한다.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사는 자원병역이행자(FWDL)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모는 일정한 조건 아래서 2,557 유로의 사망일시금을 수령한다. 순직 자해사망자뿐만 아니라 비순직 자해사망자에게도 해당된다.

78) 유족의 보훈급부에 대한 개괄은 Giesen, Hermann & Schleicher, Ernst, Meine Rechte Danach. Taschenlexikon der Versorgung für Soldaten, 11. Aufl., Walhalla, 1994, 143-145쪽; Klotz, Dieter & Arntz-Kohl, Wilfred, Meine Rechte Danach, Die Versorgung der Berufssoldaten, 18. Aufl., Walhalla, 2015, 124-145쪽.

79) Auslandsinsatz und Vorsorge - Hinterbliebenenversorgung, [http://www.continentale-soldatenversicherung.de/cipp/continentale/lib/pub/tt,oid,65611/lang,1/ticket,guest\(2020-01-01\)](http://www.continentale-soldatenversicherung.de/cipp/continentale/lib/pub/tt,oid,65611/lang,1/ticket,guest(2020-01-01))

④ 임시지원금(Übergangsbeihilfe)

단기군인(Soldat auf Zeit)의 유족은 군복무소집연한의 도과나 직무수행불능으로 군복무관계가 종료되는 군인에게 인정된 임시지원금을 수령한다(제12조). 예컨대 7개월을 근무하다가 단순사고로 퇴역한 군인은 최종월급의 1.5배를 받는다(제12조 제2항 제1호). 근무기간이 6개월에 이르지 못한 단기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소정의 임시지원금(월단위로 105유로, 일단위로 3,50유로)이 지급된다. 5개월 보름 근무하다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577.50유로의 임시지원금을 받는다.

⑤ 공제조합지원금

공제조합은 본에 소재하고 있으며, 직업군인인가 기한부군인인가, 기혼인가, 미혼인가, 순직인가 비순직인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⑥ 배우자보상금(Witwenabfindung)

재혼의 시점에 배우자수당 또는 부양수당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배우자는 배우자보상금을 보유한다. 배우자보상금은 소득세가 면제되며, 감액 또는 중단규정의 적용 전에 배우자가 재혼한 달에 수령해야 할 배우자수당이나 부양수당의 24배의 금액에 해당한다. 재혼을 해소한 경우(이혼 등) 배우자수당은 부활하며, 지급이 재개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배우자보상금은 반환되어야 한다(공무원보훈법 제21조). 배우자보상은 순직자의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

⑦ 일회적 재해보상

순직자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위험업무로 인한 순직자의 유족에게만 인정된 보훈급부이다. 특수한 위험활동으로서 전투기 비행사, 위험을 특별히 부담하는 항공인력, 낙하부대인력, 산악구조반, 기뢰설치반, 폭약 및 무기의 시험자 및 피시험자, 특수부대 등 특별히 위험한 활동에 종사한 군인이 사고를 당하여 노동능력의 5할 이상을 상실한 때에는 150,000 유로의 일회적 재해보상(einmalige Unfallentschädigung)을 수령한다(군인보훈법 제63조 제1항). 사고를 당한 군인이 사고의 결과로 사망하며 앞의 일회적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군인보훈법상 수급권을 가진 자녀는 100,000 유로의 일회적 보상금을 수령하고, 유족이 존재하지 않은 때에는 사망한 군인의 부모 및 군인보훈법상 수급권을 갖지 못한 자녀가 도합 40,000 유로의 일회적 재해보상금을 수령하고, 앞의 해당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나 손자녀가 20,000 유로의 일회적 보상금을 수령한다(제63조 제2항, 제3항).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특수한 생명의 위험에 노출되고 이러한 위험의 결과로 사고를 당하여 노동능력의 5할 이상을 상실한 경우 150,000 유로의 한도

안에서 일회적 재해보상금을 수령한다(군인보훈법 제63조의a 제1항). 공무수행과 관련한 사고와 질병의 결과로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Witwe) 및 군인보훈법상 수급권을 가진 자녀는 100,000 유로의 한도 내에서 일회적 재해보상금을 수령한다(제63조의a 제3항 1호). 제1호상의 유족이 존재하지 않은 때에는 사망한 군인의 부모 및 군인보훈법상 수급권을 갖지 못한 자녀가 도합 4만 유로의 한도 안에서 일회적 사고보상금을 수령한다(제63조의a 제3항 2호)

군인보훈법은 위험활동의 일환으로서 파병을 고려하였다. 파병과 관련된 보훈사건은 직무상사고(Dienstunfall)보다 넓은 파병사고(Einsatzunfall) 개념을 전제한다. 외국이나 파견선박, 파견항공기에서 직무와 관련된 사고는 파병사고에 해당한다(군인보훈법 제63조의c 제1항). 질병이나 사고가 파병에서 건강손상적인 또는 본국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정에 귀착되거나 해외파견에서 건강상의 손상이 납치나 포로상태와 연관된 사고나 질병에 귀착되거나 직무와 연관된 기타 이유로 당국의 영향권에서 배제된 사정에 입각하는 경우도 파병사고에 해당한다(제2항). 파병사고의 사망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제63조의a가 준용된다(제63조의e). 파병상황에 대해서는 여타 보충적인 우대조항들이 존재한다. 생명보험사가 피보험자인 군인의 사망에 대하여 전쟁면책조항(Kriegsklausel)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국가는 그에 대한 적절한 손해조정금(Schadensausgleich)을 제공해야 한다(군인보훈법 제63조의b). 생명보험 및 재해보험이 적극적으로 존재하고, 군인이 피보험자이고, 해외파병이 보험회사에 고지되고, 소극적인 전쟁위험이 보험에 함께 부쳐지고,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에 손실보증의 범위 안에서 국가는 손해조정금을 제공한다.

(2) 정기적 급부

① 배우자연금(Witwengeld, Witwergeld)

군인이 공상으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사망한 군인이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Ruhegehalt)의 55%를 수령한다(공무원보훈법 제20조). 사망자와 혼인이 최소한 1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배우자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또한 혼인의 유일한 혹은 중요한 목적이 배우자에게 연금을 받게 하려는 것인 경우에도 배우자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공무원보훈법 제19조). 이는 법률적 추정으로서 반증할 수 있다. 입법자는 단기간의 혼인에도 불구하고 개별사례에서 보훈목적이 결정적이었는지 여부를 배우자에게 심사할 의무를 보훈관청에 부과한다. 혼인직후 군인이 사고, 범죄 또는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은 경우와 같은 사정을 통해 법률상의 추정은 반박될 수 있다. 배우자가 망인보다 20세 이상 젊고 혼인관계에서 아동이 태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연금의 한도를 제한한다. 배우자연금은 20년을 상회하는 1년마다 5%씩 감액하고 감액의 최고한도는 50%로 한다. 미혼의 군인이

순직한 경우에는 부모연금에 지급된다(연방보훈법 제38조).

② 고아수당(Waisengeld)

고아수당은 배우자가 아니라 고아에게 귀속된다(공무원보훈법 제23조). 고아수당 청구권은 사망한 다음 달부터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만 18세가 되는 달의 마지막까지 존재한다.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는 만 25세까지 연장되거나 군복무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다. 편부 또는 편모의 자녀는 퇴직연금의 12%를, 고아는 20%를 수령한다.

③ 부양수당(Unterhaltsbeitrag)

부양수당은 65 내지 67세에 이른 퇴직공무원과 혼인한 배우자에게, 그 혼인이 1년 이상 존속하고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거부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배우자수당의 한도 안에서 발생한다(공무원보훈법 제22조). 부양수당은 공상으로 인정된 자해사망자의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고, 퇴직한 직업군인에게 한정된다.

각종보훈연금이 경합하는 경우에 배우자연금과 고아연금은 합산방식으로도, 개별적으로도 퇴직연금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 금액이 퇴직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한도로 동일비율로 감액한다(공무원보훈법 제25조).

④ 직종금고의 연금

단기군인의 직종금고는 규정에 따라 순직과 비순직을 구분하지 않고 연금을 지급한다. 직종금고의 연금은 순직 자해사망자뿐만 아니라 비순직 자해사망자의 유족에게 해당한다.

⑤ 기한부 지원금

6개월 이상 근무한 단기군인이 군복무관계중 사망하고, 사망이 공상의 결과가 아닌 경우에 사망한 군인의 유족과 부양청구권을 가진 아동은 필요한 기간 동안 기한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착지원금(Übergangsgebühren)⁸⁰⁾의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받는다(군인보훈법 제42조). 원래 정착지원금은 제대군인의 지원을 위해 군인의 근속연차(최소 4년 이상 근무)에 따라 지원금 지급기간이 상이하고(최소 12개월, 최대 60개월), 지원금의 한도도 급여의 75%로 규정한다(군인보훈법 제11조).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군인의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수단으로서 6개월 이상 근속자의 유족에게도 지원금을 제공한다.

2) 안장과 애도

80) 정착지원금은 원래 단기군인의 제대후 사회정착과 직업교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대군인지원수단이다(군인보훈법 제3조).

군인의 죽음은 영웅화에서 애도로, 현창에서 기억으로 옮겨가고 있다.⁸¹⁾ 독일묘지 제로도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1) 군인묘지

독일군은 제1차세계대전과 제2차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독일, 유럽, 북아프리카에서도 많은 전사자를 낳았다. 독일군은 군인의 공동묘역 수백 곳을 독일과 유럽전역에서 조성하였다. 이 묘지는 현재 독일정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 제1차세계대전 후 출범한 독일전몰자묘역관리협회(Volksbund Deutsche Kriegsgräberfürsorge e. V.)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1954년 독일연방정부는 해외에 존재하는 독일군 묘역을 발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이 단체에 위임하였다. 이 단체는 현재 800개 이상의 묘지를 관리한다.

나치시대에는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해사망군인에게 군사적 의례에 따른 장례식을 불허하였으며, 이러한 묘역에 안장될 수 없었다. 목회자들도 자해사망자들의 교회 영결식을 언제나 허용하지는 않았다. 나치시대 자해사망자의 유족에게는 보훈급부가 감액되거나 박탈되었다. 망인의 유족도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독일민족의 운명공동체에서 배척받았다.⁸²⁾

<그림2-2> 프랑스의 솔레흐 묘지(2,228인 안장)



81) 한국의 국립묘지는 국가유공자라는 독특한 인정구조와 결부되어 있으므로 애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이재승, 묘지의 정치, 통일인문학 제68호, 2016, 257-296쪽.

82) Janz, Nina, Deutsche Soldatengräber des zweiten Weltkrieges zwischen Heldenverherrung und Zeichen der Versöhnung, Universität Hamburg Dissertation, 2018, 63쪽 이하.

<그림2-3> 하이델베르크 독일군 묘지



제2차 세계대전후 독일 정부는 새로이 연방군을 재건하였지만 사망한 군인을 위한 군인묘역을 전혀 조성하지 않았다. 독일은 사망한 군인을 위해 군사적 예우로서 장례절차를 거친 후 유해를 가족에게 인계한다. 유해는 가족의 결정으로 교회묘지나 자치단체의 관리묘역에 안장될 수 있다. 묘지안장과 관리는 독일 주정부의 소관사항이다. 오늘날 모든 독일인은 주관리묘역에 안장될 권리(Friedhofsrecht)를 보유한다. 따라서 자해사망자의 안장 여부에 대한 논란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로서 독일이 군국주의 악몽에서 벗어나 정상국가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독일통일, 잦은 해외파병, 전사자의 등장으로 인하여 퇴역군인들은 군인묘지의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2) 장례식

군사적 예우로서 장례식은 국장이 인정되는 사망자(예컨대, 장관이나 정부요인), 직무안팎에서 불행한 죽음을 당한 군인, 직무수행중인 군인 혹은 군의 협력자나 무기에 의해 죽음을 맞은 사람, 과거 독일군대에서 퇴역한 군인, 최고훈장이나 무공훈장의 수훈자에게 인정된다. 군사적 예우는 오로지 가족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은 자해사망자도 군사적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장례식 신청서식에는 자해사망의 경우에 직무상의 상관이 군사적 예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⁸³⁾ 사망이 망인의 범죄와 연관되어 있거나 그 관련성에 대한 충분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군사적 예우

83) VB 11: Trauerfeier mit militärischen Ehren,
http://www.bestatter-wiki.de/cms/download.php?cat=30_B-FACHKRAFT&file=tf12-trauerfeiermitmilitaerischenehren.pdf.

가 제공되지 않는다. 군사적 예우는 규모에 따라 세 종류의 장례행렬이 예정되어 있다.⁸⁴⁾

(3) 국민애도일

독일은 국민애도일(Volkstrauertag)을 정하여 폭력적 압제의 희생을 포함하여 전쟁에서 죽은 군인과 민간인을 추도하고 있다. 1893년 프로이센 왕국에서 공휴일로 시작된 참회와 기도의 날(Buß-und Betttag)로 시작되었다가 1919년 독일전몰자묘역관리협회가 제1차세계대전에서 죽은 군인을 추도하기 위해 국민애도일을 제안하여 1922년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1934년 나치당은 이를 영웅추모일(Heldengedenktag)로 변경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1948년 다시 국민애도일이 부활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국민애도일은 교회력에 따라 강림절(advent) 이전의 두 번째 일요일이다. 국민애도일의 공식행사는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리며 연방수상, 각료,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연방대통령이 추도연설을 한다. 각주에서도 행사를 개최하고, 퇴역군인들도 참여한다. 2018년 국민애도일은 11월 18일이었고, 2019년 국민애도일은 11월 17일이었다.

(4) 노이에 바케

<그림2-4> 노이에 바케(베를린)



84) ZDv 10/8- Richtlinien für Trauerfeiern und Beerdigungen, Militärische Formen und Feiern der Bundeswehr(비공개).

<그림2-5> 피에타(노이에 바케, 베를린)



노이에 바케(Neue Wache)는 원래 프로이센 군대의 해방전쟁을 기념하는 시설이었으나 1931년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제1차세계대전의 전몰자를 위한 기념시설로 바꾸었다. 히틀러의 전쟁기간에는 영웅숭배의 공간으로 활용되다가 제2차세계대전 막바지에 파괴되었다. 독일분단 이후 동독정부는 1951년 세계청년학생축제에 앞서 이 시설을 재건하였고, 1960년에 파시즘과 군국주의의 희생자를 기리는 장소로 재개장하였다. 통일 이후 독일정부는 1993년에 노이에 바케의 건물 내부에 조각가 케테 콜비츠(Käthe Kollwitz 1867-1945)의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1938년작)>라는 조각상을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콜비츠는 반전운동가로서 제1차세계대전에서 전사한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슬픔을 오롯이 표현하였다. 노이에 바케는 죽은 군인을 현창하지 않고 애도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노이에 바케의 건물 입구 동판에는 나치즘의 희생자와 전체주의(동독)의 희생자를 동일시하는 문구가 또 다른 정치적 불화를 내포하고 있다.

(5) 독일군 기림비

독일정부는 2009년 전사 또는 순직 군인에 대한 상징적 예우로서 기림비(Das Ehrenmal der Bundeswehr)⁸⁵⁾를 조성하였다. 기림비는 독일군에 속한 군인 또는 민간인으로서 공무상 사망자를 추모할 수 있는 중심적 공간이다. 기림비는 2009년 국방부의 부지 안에서 조성되었다. 사민당, 자민당, 녹색당의 정치인들은 국회의사당 근처에 조성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국방부 부대시설로 삼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국방부 기림비는 길이 32미터, 너

85)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Das Ehrenmal der Bundeswehr. Den Toten unserer Bundeswehr - Für Frieden, Recht und Freiheit*, Zarbock, 2014.

비 8미터, 높이 10미터의 강철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판으로 만든 덮개로 덮혀 있고, 동판덮개는 이름이 각인이 되어 있다. 사망의 구체적인 원인은 표시되지 않고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관계만 표시한다. 기림비의 명부에는 2019년 현재 32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등록되어 있다. 자해사망자중 순직으로 인정된 소수만이 등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⁸⁶⁾

<그림2-6> 독일군 사망자 기림비(베를린 국방부 경내)



기림비의 내부에 고요의 공간(Raum der Stille)이 존재한다. 고요의 공간은 완전히 검정색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부의 빛을 통해서 태양이 공간으로 내려온다. 꽃과 기념물을 단 위에 놓을 수 있다. 사망한 3,200명의 이름이 벽에 투영된다. “독일군의 영령들에게. 평화, 법과 자유를 위하여” 라는 부조문구가 있다. 기림비의 바깥에 추모명부(Buch des Gedenkens)가 설치되어 있다. 사망자의 이름은 20개의 동판에 빼곡이 새겨져 있다. 추모명부는 2014년 5월 8일에 조성되었다. 기념시설의 마지막 요소로서 안내소가 2018년 6월 11일에 개관하였다. 120평방 미터에 건축물, 상징물, 의미가 해설되었다. 나아가 독일군 대의 역사와 현재에 관한 정보들이 전시되었다.

86) Meinke, Ulf, “Gratwanderung beim Ehrenmal der Bundeswehr (22-03-2009)”, <https://www.waz.de/waz-info/gratwanderung-beim-ehrenmal-der-bundeswehr-id188803.html> (2020-01-01).

<그림2-7> 추모명부



(6) 추모의 숲

추모의 숲(Der Wald der Erinnerung)⁸⁷⁾은 독일군의 사망자를 위해 2014년 베를린 근교 포츠담에 조성된 공원이다. 추모의 숲은 개인적인 애도의 장소이다. 추모의 숲은 베를린의 국방부의 독일군 기림비를 보완한다. 추모의 숲에는 추모의 길을 포함하여 10개 추도 시설과 추도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여기서 자해사망자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추모의 숲에서 군복무중 사망한 모든 군인과 국방부공무원을 추모하는지는 명료하지 않다. 해외파병과 관련한 사망자 110명의 이름이 모두 호명되고, 사망자의 계급이나 사망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다.⁸⁸⁾ 이것이 해외파병자에 국한된 것인지 일반적으로 자해사망자도 포함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기타 육군, 해군, 공군 기념비, 파병지역(보스니아, 아프가니스탄)의 기념시설 등이 존재한다. ⁸⁹⁾

87)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Der Wald der Erinnerung, Zarbock, 2015 참조.

88) 해외파병 추모공간의 조성이후 자해사망한 1인은 아직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다.

89) Hilscher, Andrea, "Verstorbene Soldaten: Der Wald der Erinnerung", R - O n l i n e (2 0 1 9 . 1 . 1 9 .) , https://www.lr-online.de/nachrichten/verstorbene-soldaten_der-wald-der-erinnerung-37986334.html(2020-01-01).

<그림2-8> 추모표식(추모의 숲, 포츠담)



<그림-9> 추모의 숲(카불, 아프가니스탄)



< 참고문헌 >

| 논문 및 도서

윤재왕 · 신오식, “외국의 보훈제도(독일 · 프랑스)”, 국가보훈처 보훈교육연구원, 2005.
이재승, 묘지의 정치, 통일인문학 제68호, 2016, 257-296쪽.
프로이트/윤희기 박찬부 옮김, <쾌락원칙을 넘어서>,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269-343쪽.

Zimmerman, Peter(hg.), *Psychosoziale Belastungen*, Psycotraumanzentrum am Bundeswehrkrankenhaus Berlin, 2014.

Bald, Detlef, *Die Bundeswehr: Eine kritische Geschichte 1955-2005*, Beck, 2005.

Baumann, Ursula, *Vom Recht auf den eigenen Tod*, Hermann Böhlau Nachfolger, 2001.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Der Wald der Erinnerung*, Zarbock, 2015.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Das Ehrenmal der Bundeswehr. Den Toten unserer Bundeswehr - Für Frieden, Recht und Freiheit*, Zarbock, 2014.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Umgang mit psychisch und/oder physisch Einsatzgeschädigten in der Bundeswehr*, 2018.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Die Anhaltspunkte für die ärztliche Gutachtertätigkeit im sozialen Entschädigungsrecht und nach dem Schwerbehindertenrecht*, 2008.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Übersicht über das Sozialrecht 2019/2020*, Bildung und Wissen, 2019.

Helms, Christian, *Die Assoziation der Suizide und Suizidversuch von Soldaten der Deutschen Bundeswehr 2010-2014 mit psychosozialen Risiko-und Schutzfaktoren*, Universität Berlin Dissertation, 2017.

Giesen, Hermann & Schleicher, Ernst, *Meine Rechte Danach. Taschenlexikon der Versorgung für Soldaten*, 11. Aufl., Walhalla, 1994.

Janz, Nina, *Deutsche Soldatengräber des zweiten Weltkrieges zwischen Heldenverherrlichung und Zeichen der Versöhnung*, Universität Hamburg Dissertation, 2018.

Klotz, Dieter & Arntz-Kohl, Wilfred, *Meine Rechte Danach, Die Versorgung der Berufssoldaten*, 18. Aufl., Walhalla, 2015.

Timmermann-Levens, Andrea & Richrer, Andrea, *Die reden Wir sterben Wie unsere Soldaten zu Opfern der deutschen Politik werden*, Campus, 2010.

Wilke/Fehl/Förster/Leisner/Sailer, *Soziales Entschädigungsrecht*, Kommentar 7. Aufl.,

Boorberg, 1997,

| 인터넷 자료

VB 11: Trauerfeier mit militärischen Ehren,
http://www.bestatter-wiki.de/cms/download.php?cat=30_B-FACHKRAFT&file=tf12-trauerfeiermitmilitaerischenehren.pdf (2020-01-01)

Hilscher, Andrea, "Verstorbene Soldaten: Der Wald der Erinnerung",
R-Online(2019.1.19.),https://www.lr-online.de/nachrichten/verstorbene-soldaten_-der-wald-der-erinnerung-37986334.html (2020-01-01)

Meinke, Ulf, "Gratwanderung beim Ehrenmal der Bundeswehr(22-03-2009)",
<https://www.waz.de/waz-info/gratwanderung-beim-ehrenmal-der-bundeswehr-id188803.html> (2020-01-01)

Rath, Martin, Militärstrafjustiz vor dem BSG: 1991 - Ein anderer 11. September, ein anderer Krieg(2011.09.11.),<https://www.lto.de/recht/feuilleton/f/militaerstrafjustiz-vor-dem-bsg-1991-ein-anderer-11-september-ein-anderer-krieg/print.html> (2020-01-01)

Auslandeinsatz und Vorsorge - Hinterbliebenenversorgung,
<http://www.continentale-soldatenversicherung.de/cipp/continentale/lib/pub/tt,oid,65611/lang,1/ticket,guest> (2020-01-01)

Anzahl der an internationalen Einsätzen beteiligten deutschen Soldaten der Bundeswehr(Stand: 09. Dezember 2019),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72703/umfrage/anzahl-der-soldaten-der-bundeswehr-im-ausland/> (2020-01-01)

Im Gedenken an die Toten der Bundeswehr,
https://www.bundeswehr.de/portal/a/bwde/start/gedenken/todesfaelle_in_der_bundeswehr/ (2020-01-01)

제3장 미국의 처우실태

1. 미국 군대와 자해사망자 현황

1) 미국 군대

미국에서 군대란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안경비대를 의미한다. 그리고 해병대와 우주군¹⁾이 있다. 1784년에 미 육군이 창설되었고, 1794년과 1798년에 해군과 해병대가 창설되었다. 해안경비대는 1790년에 밀수감시청으로 창설되었다가 1915년에 미국 생명구조대와 통합하여 정식 발족하였다. 미 공군은 육군의 일부로 1907년에 결성되어 1947년에 독립하였다. 우주군은 2019년에 12월 20일에 창설되었고, 1947년 독립된 미 공군이 창설된 이후 6번째 군대이다.

군대의 지휘권은 미국 헌법 제2조 제2항에서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육군과 해군의 총사령관이 되고, 각 주의 민병이 연방정부의 현역으로 복무할 때 그 민병대의 총사령관이 된다”고 하여 대통령에게 있다. 군사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있다.

미군은 인원수나 무력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 예산을 보유한다. 2019년 회계연도에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국방부 등에 6억 930만 달러의 기금이 책정되었다.²⁾ 이런 직접 지출 외에도 보훈국, 국토안보부, 핵무기 정비와 같은 다른 국방 관련 프로그램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미국 외 약 800여 곳³⁾에 군사 기지를 두고 있다. 2018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방위비 지출의 약 36%를 차지한다.⁴⁾ 2019년 10월 기준으로 총 현역 병력은

1)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법안으로 알려져 있는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의 6번째 군대로 우주군을 창설하였다. U.S. Dept. of Defense, “Trump Signs Law Establishing U.S. Space Force”, 2019.12.20., <<https://www.defense.gov/explore/story/Article/2046035/trump-signs-law-establishing-us-space-force/>>, 검색일: 2019-12-22.

2) National Defense Budget Estimates for FY 2020,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May 2019)
<https://comptroller.defense.gov/Portals/45/Documents/defbudget/fy2020/FY20_Green_Book.pdf>, 검색일: 2019-12-21.

3) “미군기지, 과연 평화를 위한 것인가”, 한겨레신문, 2017-10-20.,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15253.html>>, 검색일: 2019-12-20.

4) Dr Nan Tian/Dr Aude Fleurant/Alexandra Kuimova/Pieter D. Wezeman/Siemon T. Wezeman,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18”,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19), 2쪽.

1,337,576명이었고, 7개 예비군 부대로 803,078명이 추가된다.⁵⁾ 미군은 중국 인민해방군, 인도군에 이어 현역병으로는 세계 3위 규모이다.

2) 병역제도

(1) 모병제와 등록제

① 현행 제도

미국 역사에서 징병제의 시행과 중단이 반복되었지만, 베트남 전쟁에서 6만명의 군인이 사망한 후 1973년부터 모병제가 시행되었다. 미국은 닉슨 행정부 시기인 1971년 수정 병역법(Public Law 92-129: Amendments to the Military Services Act of 1971)을 통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⁶⁾

지금 미국의 병역제도는 모병제를 기본으로 운영되지만 의무징병등록제(Selective Service System)⁷⁾에 의하면 18세~25세의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남성 시민과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유학생이나 방문자 등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거주자도 원칙적으로 의무징병등록부(Selective Service System Registration)에 등록해야 한다.⁸⁾ 비이민 비자로 외교관 관계의 비자, 무역 관계 비자, 관광 비자와 학생 비자로 일시 주거하고 있는 남성은 제외한다.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는 국가의 긴급 사태 또는 전시에 군대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 의무징병등록청의 등록 명부에서 징병할 수 있다.

미 군대는 지원병제도를 통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의무징병등록제는 잠재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언젠가는 징병이 다시 필요하게 될 가능성을 가진 비상 체제이다. 따라서 미국의 현행 군사조직 운영은 모병제로 이해할 수 있다. 모병제는 군 복무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과 전역 후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의 근거가 된다.

② 의무징병등록제의 위헌 논의

의무징병등록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위헌논의가 있다. 2019년 2월 22일 미국 텍사스 남부 연방지방법원⁹⁾이 미국이 군대 징병을 위한 등록에서 여성을 배제시키는 것은 위헌이

5) DMDC, “DoD Personnel, Workforce Reports & Publications”, <https://www.dmdc.osd.mil/appj/dwp/dwp_reports.jsp>, 검색일: 2019-12-22.

6) 김정현, 미국의 군인복무법제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14), 13쪽.

7) 해당 규정은 미국연방규정집(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hapter XVI에 있다.

8) “Who Must Register”, Selective Service System, <<https://web.archive.org/web/20180515045908/https://www.sss.gov/Registration-Info/Who-Registration>>, 검색일: 2020-01-02.; “뉴욕 징병법 거부 폭동”, 한국일보, 2017-07-1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7121715572529>>, 검색일: 2019-11-14.

라고 판결하여 현재 상소 중이다.¹⁰⁾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예: 남성 등록 요건을 폐지할지, 아니면 성 중립적으로 개정할 지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미국에서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들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들은 의무징병 등록제에 의해서 명부에 등록하고 유지해야만 한다. 등록하거나 명부 유지를 하지 않으면, 벌금과 징역이 가능하다. 그리고 연방 지원 학생 대출이나 연방 부문의 고용과 같은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복무할 필요가 없는 여성은 등록을 요구받지 않는다. 1981년에 대법원은 징병등록을 남성에게만 요구하는 관행은 합헌이라고 하였다(Rostker 사례).¹¹⁾ 왜냐하면 여성은 전투 역할에서 복무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¹²⁾

반면에 2013년과 2015년 사이에 미 국방부는 전투병과에 자발적으로 복무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였다.¹³⁾ 이런 변화를 근거로 비영리 남성인권단체인 전국남성연합(the National Coalition for Men)은 2013년 4월 4일에 의무징병등록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¹⁴⁾ 국방부의 여성 전투역할에 대한 입장 변화로 Rostker 사례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남성만을 등록하는 징병등록제도는 성차별이라는 것이다.¹⁵⁾

(2) 군복무제도의 현황

① 병무행정 기관

미국의 병역제도는 모병제와 의무징병등록제라는 두 개의 제도로 운영된다. 모병제는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에서 주관하는 지원제도(Voluntary System)로 운영되고, 선발 징병제 명부 등록은 징병등록청(Selective Service System)의 관리하에서 운영된다.

징병등록청은 미국 징병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부 내에

9) National Coalition for Men v. Selective Service System (4:16-cv-03362).

10) “Drafting Only Men for the Military is Unconstitutional, Judge Rules”, The New York Times, 2019-02-24., <<https://www.nytimes.com/2019/02/24/us/military-draft-men-unconstitutional.html>>, 검색일: 2020-01-02.

11) Rostker v. Goldberg, 453 U.S. 57 (1981).

12) Wikipedia, “National Coalition for Men v. Selective Service System”, <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Coalition_for_Men_v._Selective_Service_System>, 검색일: 2020-01-02.

13) “Drafting Only Men for the Military is Unconstitutional, Judge Rules”, The New York Times.

14) “National Coalition for Men v. Selective Service System”, Wikipedia.

15) “National Coalition for Men v. Selective Service System (4:16-cv-03362) Document #1: COMPLAINT”, April 4, 2013.,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4543818/1/national-coalition-for-men-v-selective-service-system/>>, 검색일: 2020-01-02.

있는 독립기관이다. 징병등록청의 책임자는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 평시에는 전국본부(National Headquarters), 지역본부 그리고 데이터 관리 센터로 구성된다. 지역위원회와 지방항소위원회에서 일하는 11,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다.¹⁶⁾ 징집이 필요한 동원 기간 중에서는 기관은 56개 주 본부, 400개 이상의 지역 사무소 및 40개 이상의 대체 서비스 사무소로 확대된다.

모병제를 주관하는 즉, 법무행정을 주관하는 국방부는 국가 안보 및 미군과 직접 관련된 정부의 모든 기관과 기능을 조정하고 감독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부이다. 워싱턴 D.C. 외곽에 있는 버지니아 주 알링턴에 본사를 두고 있다. 국방예산은 7,160억 달러이고 국내 총생산의 3.1%에 해당한다. 215만 명의 현역 군인과 732,079명의 민간인을 직원으로 보유하고 있다.¹⁷⁾

국방부는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장관급인 국방장관이 있고, 국방부 아래에는 육군, 해군, 공군 등 3개 부서가 있다. 이외에도 국방정보국, 국가안보국, 국토지리정보국, 경찰국 등 4개 국가정보국이 있고, 방위사업청 등 외청이 있다.

② 선발시스템

○ 장교 선발시스템

선발시스템은 각 군별로 이루어진다. 장교 선발은 기본적으로 사관학교와 학군사관, 사관후보생, 직접임관(Direct Commission)의 네 가지 방법이 있다.¹⁸⁾

미국육군사관학교(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는 4년의 교육 기간을 수료하는 생도에게 학위를 인정하고 소위로 임관시킨다. 육군학군사관(Army ROTC)은 미국 전역의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4년간 군 장학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2~4년짜리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고, 현역 사병도 ROTC가 가능하다. 해병대와 해안경비대는 자체 ROTC 프로그램이 없다. 다만, 해군 ROTC를 통해서 해병대 복무가 가능하다.¹⁹⁾ 직접임관 장교(Direct Commission Officer, DCO)는 군사 작전, 병력 지원, 그리고 건강 및 과학 연구에 중요한 특수기술을 가진 민간인이 장교로 입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장교들은 보통 법, 과학, 의료, 약, 치과, 간호, 정보, 공급·물류·운송, 엔지니어링, 공공업무, 해양

16) "Selective Service System: About the Agency". Sss.gov., <<http://www.sss.gov>>, 검색일: 2020-01-03.

17) U.S. Department of Defense, "Our Story", <<https://web.archive.org/web/20181007223518/https://www.defense.gov/our-story/>>, 검색일: 2020-01-04.

18) 김주경, "미국 군복무제도의 변천과 현황", 워크숍자료집(한국법제연구원, 2014), 6면; 김정현, 위의 책, 19쪽.

19) "The NROTC marine Option Scholarship", Naval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https://www.nrotc.navy.mil/marine_2_1.html>, 검색일: 2020-01-03.

등의 분야에서 지휘자 역할을 한다.²⁰⁾

○ 부사관/병(enlisted) 선발시스템

사병은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주로 모집된다. 대상 연령은 육군 18~35세, 해병대 18~28세, 해군 18~34세, 공군 18~39세, 해안경비대 18~27세이다.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 17세에 응모하여 ‘입대 연기 프로그램’ (DEP)에 참여할 수 있다.

미국에서 부사관은 병에서 승진하기 때문에 따로 양성교육 등은 없다. 미군은 부사관 후보생 과정이 없이 병부터 시작해서 진급을 통해 병장(Sergeant)으로 올라간다.²¹⁾ 다만 부사관의 진급 시스템에 따라서 다음 계급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NCOES)을 수료해야 한다.

병은 보통 고졸 이상을 받아들인다. 육군의 경우 18~35세, 해군은 18~34세, 공군은 18~27세, 해병대는 18~28세이다. 해안경비대는 18~28세이나 특정 학교를 거친 경우엔 32세까지 인정된다. 17세인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의 허가를 받으면 ‘입대 연기 프로그램’ (Delayed Entry program)을 거쳐 입대할 수 있다. 지역 내의 군사 관련 활동을 이수하거나 스포츠 활동 등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²²⁾ 입대 연기 프로그램(DEP)은 ‘미래 군인 프로그램’ 이라고도 불린다.

등락을 마치면 신병은 군사특기(Military Occupational Specialty)를 부여받은 뒤에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초기 진입 훈련(Initial Entry Training)이라고도 한다. 정규군, 예비군 그리고 주방위군에서 행하는 신병훈련 프로그램이다. 이 훈련은 기본 전투 훈련(BCT)과 고급 개인 훈련(AIT)으로 나뉜다.²³⁾

③ 복무연한

미군에 입대하는 자는 풀타임 현역으로 입대하든 파트타임 주방위군이나 예비군으로 입대하든 최소 8년간의 복무 의무를 부담한다. 물론 군종별 4~6년의 현역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군이나 개별대기예비군(Individual Ready Reserve, IRR)에 편입되어서 남은 기간을 보낸다. IRR에서는 총 8년의 복무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언제든지 현역으로 소환될 수 있다. 실제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위해서 육군은 500명 이상의 IRR 병사를 현역으로 복귀시켰다.²⁴⁾

20) Wikipedia, “Direct commission officer”, <https://en.wikipedia.org/wiki/Direct_commission_officer>, 검색일: 2020-01-04.

21) 김정현, 앞의 책, 21쪽.

22) 김정현, 위의 책, 21쪽.

23) “Becoming a Soldier”, goarmy.com, <<https://www.goarmy.com/soldier-life/becoming-a-soldier.html>>, 검색일: 2020-01-05.

24) “What is the Minimum Military Enlistment obligation?”, the balance careers, <<https://www.thebalancecareers.com/period-of-time-to-enlist-in-military-3354093>>, 검색

육군의 복무기간은 2년에서 5년까지(특정 직종은 2년 및 3년 가능)이며, 해군의 복무기간은 2년이지만 2년 또는 4년의 해군예비군 복무와 연계된다. 공군, 해안경비대 그리고 해병대는 최소 4년이다. 현역예비군(Active Reserve)나 주방위군 최소 6년 이상이다(교육 혜택을 원하는 경우).

3) 군인 자해사망자 통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거의 100만 명이 자살로 사망한다. 미국에서는 31초마다 자살을 시도하고, 평균 11.9분 간격으로 1명이 자살한다. 역사적으로 군 자살률은 일반인의 자살률보다 낮았다. 그럼에도 지난 10년간 군 복무자와 재향군인들의 자살률은 상승하고 있다. 군인의 자살은 복무자인 현역의 자살과 퇴역자인 재향군인들의 자살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대군인의 자살 통계는 기존에 연방정부가 아닌 주나 지역의 보건 당국에 의해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 국가보훈부가 제대군인의 자살에 대한 조사와 예방 시스템 마련에 착수했다.²⁵⁾

2018년 발행한 “국방부 자살 사건 보고서 연간보고서(2017)”에 따르면 현역의 자살률은 100,000명당 21.9명이었다. 공군은 10만 명당 19.3명, 육군은 10만 명당 24.3명, 해병대는 10만 명당 23.4명, 해군은 10만 명당 20.1명이었다. 2017년 예비역 자살률은 10만 명당 25.7명이었다. 주방위군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9.1명이었다. 미국의 17~59세 성인(군 구성원들의 연령대와 비교해서)들의 2016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17.4명이었다.²⁶⁾

미국은 군대 내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과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향군인의 자살률을 봤을 경우에는 2005년에서 2016년까지 26% 증가하였다. 매일 평균 20명의 군인과 재향군인이 자살로 사망한다.²⁷⁾

자살 유형을 살펴보면 가장 일반적인 자살 방법은 개인 총기에 의한 것으로 2017년 조사 대상의 65.4%를 차지했다. 약물 및 알콜 과다 섭취는 자살 시도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살 시도 중 55.5%였다. 2017년에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절반 정도(50.8%)는 행동건강진단(behavioral health diagnosis) 자료가 없었으며, 사망자의 약 51.5%는 사망 90

일: 2020-01-06.

25) 이남형, “미국의 상이 제대군인 지원제도”, 보훈연구(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 2015), 106쪽.

26) DoDSER(Department of Defense, Suicide Event Report, Calendar Year 2017 Annual Report)(Psychological Health Center of Excell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Defense Health Agency, 2018), v-vi쪽.

27) The White House, “President Donald J. Trump Issues a National Call to Action to Empower Veterans and End the National Tragedy of Veteran Suicide”, 2019-03-05.,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president-donald-j-trump-issues-national-call-action-empower-veterans-end-national-tragedy-veteran-suicide/>>, 검색일: 2020-01-01.

일 전에 군보건시스템(Military Health System)에 접촉했다.²⁸⁾

자살예방청(the Office of Suicide Prevention)에 의하면 2016년 미국 전체 성인 자살자의 18%가 미국 인구의 8.5%에 해당하는 재향군인이었다. 이는 매일 약 20명의 재향군인이 자살로 사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자살 예방 프로그램

미국은 군인의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에 집중한다. 2007년에 제정된 제대군인 자살 방지를 위한 조슈아 법률(Joshua Omvig Veterans Suicide Prevention Act)은 국가보훈부가 제대군인의 자살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²⁹⁾ 2015년 2월에는 ‘미국 제대군인 자살 방지를 위한 클레이 헌트 법’ (The Clay Hunt Suicide Prevention for American Veterans Act)이 제정되었다. 기본적으로는 U.S. Code에서 자살 예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예비군과 관련해서도 관련 규정이 있는데, U.S. code title 10 군대(Title 10 - Armed Forces) E편 예비군(Reserve Components)은 제1부 조직과 관리(Part I -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제2부 병력 일반(Part II - Personnel Generally), 제3부 예비군 현역 목록에서 장교의 승진과 유지 (Part III - Promotion and Retention of Officers on the Reserve Active-Status List), 제4부 예비군 훈련과 교육 지원 프로그램(Part IV - Training for Reserve Components and Educational Assistance Programs), 제5부 서비스·공급·조달(Part V - Service, Supply, and Procurement)이다. 이 중에서 제1부 제 1007장(Chapter 1007) 예비군 관리(Administration of Reserve Components)의 §10219는 자살 방지 및 회복 프로그램이다.

§10219(자살 방지 및 회복 프로그램)은 국방장관에게 주방위군과 예비군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자살 예방, 회복 그리고 자살에 대한 공동체 치유 및 대응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수행하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은 자살 교육 예방 교육, 지역사회 대응 교육, 공동체 교육 지원, 협력(공동작업, collaboration), 원조활동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자살 예방 교육은 (1) 자살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예방과 조기 개입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가르치고, (2) 자살에 대한 위험 및 보호 요소에 대한 군사 문화의 영향을 검토하고, (3) 효과적인 조기 개입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화형 사례 시나리오와 역할극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역사회 대응 교육으로는 (1) 자살에 대한 통합적이고 조직화된 공동체 대응을 위해

28) DoDSER(Department of Defense, Suicide Event Report, Calendar Year 2017 Annual Report), vi쪽.

29) 이남형, “미국의 상이 제대군인 지원 제도”, 108쪽.

서, 공동체 구성원과 지역 서비스 제공업자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2) 안전 메시지, 적절한 기념 서비스 그리고 미디어 지침을 포함하여,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모범사례를 알리고, (3) 군과 더 큰 공동체에 미치는 자살의 영향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증가된 위험을 다루고, (4) 슬픔과 치유 과정을 통해서 자살 피해자의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 병사를 돕는 주요 공동체와 군 서비스 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동체 교육 지원프로그램은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과 협력해서 제공되는, 그 동료 병사와 가족들의 지역 공동체에 그러한 교육에 대한 지원 제공을 포함한다. 협력 프로그램은 기존 또는 개발 중인 자살 예방과 공동체 대응 프로그램에서 주방위군과 예비군 조직으로부터 얻은 “군사 교훈” 과 제안을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원조 활동은 주 부관감의 요청에 따라서 자살 예방 노력을 위해서 개별긴급예비역과 개별동원증원역인 예비군의 연락처를 국방장관은 공유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에 “재향 군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자살이라는 국가적 비극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통령 로드맵” (President’s Roadmap to Empower Veterans and End a National Tragedy of Suicide)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보훈, 국방, 보건 및 복지 사업, 국토안보부 등을 포함하는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행정명령은 자살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의 노력을 표현한 것이다. 재향군인 등 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 건강 서비스와 자살 예방을 위해 731억 달러를 확보하게 하였다.³⁰⁾

2. 미국의 보훈법제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모병제 국가이며 군인에 대한 지원제도는 ‘군인 재정착법’ (Serviceman’s Readjustment Act)과 ‘제대군인 고용우대법’ (Veterans Preference Act)에 근거한다. 보훈제도도 한국과 다르게 국가유공자 체계가 아니고 제대군인지원방식이다. 미국은 1776년 독립하기 전부터 상이군인들을 위한 연금, 의료 등 지원제도를 발달시켜 왔다.³¹⁾ 독립 후에는 참전군인과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시책도 확충해왔다.

1930년 창설되고 1989년에 내각의 한 부서로 승격한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가 상이군인의 신체적, 사회적 재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 제대군인에

30) The White House, “President Donald J. Trump Issues a National Call to Action to Empower Veterans and End the National Tragedy of Veteran Suicide” .

31) 안형주,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 관련 해외사례 소개 : 미국”, 2006년도 전문가 초청토론회 자료집: 군내 자살처리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안형근의원/김학송의원/박찬석의원, 2006.11.28.), 131쪽.

대한 행정을 관장한다.³²⁾

1) 미국 보훈법제의 연혁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전시에 약 1600만 명까지 달했던 병력을 1946년까지 순차적으로 100만 명 정도로 감축하였다. 당연히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군인들의 재사회화가 문제되었다. 트루먼 정부는 1944년에 G.I. Bill로 알려진 ‘군인 재정착법’ (Veterans’ Adjustment Act)을 제정했다.

본 법은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의 사회복귀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법률이었다. 1956년에 만료되었지만, 여전히 미국 퇴역군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데 G.I.Bill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본 법에 의한 혜택은 저비용 주택담보대출, 사업이나 농장을 창업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 실업보상 1년, 고교·대학 또는 직업학교에 다니기 위한 등록금과 생활비 등이었다. 대상자는 적어도 전쟁기간 동안 90일 이상 군 복무를 하고 불명에 제대를 하지 않은 모든 참전 용사들이었다.³³⁾ 이를 통해서 제대군인들은 교육, 직업훈련, 실업보상 등의 혜택을 제공받았다. 이후 한국전쟁 참전 병사들도 이 혜택의 수혜자가 되었는데, 1952년까지 760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³⁴⁾ 1956년까지 약 780만 명의 퇴역군인이 이 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았다. ‘1952년 군인 재정착 지원법’ (Veterans’ Adjustment Assistance Act of 1952)은 한국전쟁 참전 제대군인을 위해서 제정되었다.³⁵⁾

베트남 전쟁도 미국에 많은 영향을 줬다. 전투지역에서 민간인 생활로 수일 내에 복귀하는 것은 참전 용사들에게 새로운 사건이었다. 갑작스런 복귀로 인한 문화충격은 퇴역군인들에게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국내의 반전 풍토도 참전 용사들의 귀환에 특별한 재사회화문제를 일으켰다. 많은 참전 용사들은 그들의 세대와 사회로부터 고립되었고 소외감을 느꼈다. 미국의 베트남 철수는 국내 경기침체와도 겹쳤고, 그 결과 많은 퇴역군인들이 실직했다. 국가는 베트남 참전 용사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 개발의 책임을 가졌다. 교육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1966년 베트남 G.I. 법안이라고 불리는 ‘1966년 군인 재정착 지원법’ (Veterans Readjustment Benefits Act of 1966)을 제정했다. 180일 이상 연속

32) 안형주, 위의 글, 131쪽; 안형주, 외국의 보훈제도(미국)(국가보훈처, 2005) 2-3, 보훈처.

33) Glenn Altschuler/Stuart Blumin, The GI Bill: A New Deal for Veterans(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18쪽.

34) 손세호, 하룻밤에 읽는 미국사: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에서 트럼프 행정부까지(알에이치코리아, 2019), 316쪽.

35)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HISTORY IN BRIEF, <https://www.va.gov/opa/publications/archives/docs/history_in_brief.pdf>, 검색일: 2020-01-05. 16-17쪽.; CQ Almanac, “GI Bill Extended To Korea Veterans”, <<http://https://library.cqpress.com/cqalmanac/document.php?id=cqal52-1378844>>, 검색일: 2020-01-05.

현역으로 복무한 퇴역군인은 복무기간 한 달마다 1개월의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매달마다 1.5개월로 증가하였다. 1980년까지 1966년 법은 550만 명의 퇴역군인을 훈련시켰다.³⁶⁾

2008년에 제정된 ‘9/11 이후 재향군인 교육지원법’ (The Post-9/11 Veterans Educational Assistance Act of 2008)은 ‘2008년 보충세출법안’ (th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of 2008, Pub.L. 110-252, H.R. 2642)의 Title V이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복무한 군인들에게 교육 혜택을 확대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2001년 9월 11일 이후 3년간 현역으로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4년제 공립대학의 자금을 100%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제대 군인이 10년간의 복무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그 혜택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 개정법에서는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온라인 학습자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수당을 포함시켰다.

1944년 제정된 ‘제대군인 고용우대법’ (Veterans’ Preference Act)은 연방정부가 참전 제대군인을 우선 고용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이 법은 그 동안 대통령령 또는 행정 규칙 수준에서 시행되던 제대군인의 우선고용을 법률의 차원에서 보장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³⁷⁾ 1948년에 수정된 법은 제대군인의 어머니를 포함하였다. 1952년에는 1952년 4월 28일부터 1955년 7월 1일 사이에 미국 군대의 어느 곳에서든 현역으로 복무했다가 명예롭게 퇴역한 제대군인(Separated Veterans)³⁸⁾, 그의 미망인과 어머니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1966년에는 1955년 1월 31일부터 1976년 10월 10일 사이에 연속하여 180일 이상 현역으로 근무한 평화시 베트남 참전 용사가 포함되었다. 1967년에는 1955년 1월 31일부터 1976년 10월 10일 사이에 180일 이상 현역 근무한 모든 제대군인에게 확대되었다. 1976년에는 참전용사들이 장애인이 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는 등, 그 혜택을 제한하였다. 1978년 ‘공무원 제도 개혁법’ (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은 30% 이상의 장애를 가진 제대군인에게 새로운 혜택을 주었고, 제대군인들의 고용과 유지에도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했다.³⁹⁾

G.I. Bill과 관련한 가장 최근 정책은 ‘2017년 제대군인 교육 지원법’ (The Harry W. Colmery Veterans Educational Assistance Act)(Public Law 115-48)이다. 이것은 “Forever G.I. Bill” 로도 불린다. Post 9/11 GI Bill에서 규정된 교육 혜택 사용의 15

36)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위의 책, 18쪽.

37) 이남형, “미국의 상이 제대군인 지원제도”, 87-88쪽.

38) “Separated Veterans” 를 “이혼한 제대군인” 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미 군대,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서 대상 재향군인이 제대 또는 현역 해제가 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3년 내의 모든 재향군인을 의미한다. “Protected Veteran Status: A Brief Guide”, CareerMinds, <<https://blog.careerminds.com/protected-veteran>>, 검색일: 2020-01-06.

39) Wikipedia, “Veterans’ Preference Act of 1944”, <https://en.wikipedia.org/wiki/Veterans%27_Preference_Act_of_1944>, 검색일: 2020-01-10.

년 제한을 없었다. 휴교로 인한 잃어버린 GI Bill의 자격도 회복시키는 등 34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2)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1989년에 14번째로 미국 연방행정부가 되었다. 미국 연방행정부는 미국 의회와 사법부와 함께 연방정부를 구성한다. 현재 미국 연방행정부에는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법무부, 내무부, 농무부, 상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주택도시개발부, 교통부, 에너지부, 교육부, 국토안보부를 포함하여 총 15개이다.⁴⁰⁾

미국에서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은 플리머스 식민주의 청교도들(the Pilgrims of Plymouth Colony)이 피쿼트 인디언들과 전쟁을 하던 163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청교도들은 장애 군인들이 식민주의 지원을 받는다는 법을 입법하였다. 1776년 대륙회의는 독립 전쟁 중에 장애 군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였다. 공화국 초기에는 각 주와 지역 사회가 보훈대상자들에게 의료와 병원 진료를 직접 제공하였다. 1811년 연방정부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최초의 의료시설을 승인하였다. 19세기에는 국가보훈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미망인과 부양가족을 위한 급여와 연금을 포함하였다. 1917년 의회는 장애보상, 보훈대상자 보험 그리고 장애인 직업 재활 프로그램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보훈 혜택 시스템을 만들었다. 1921년 8월 9일 보훈국(the Veterans Bureau)을 창설하였다. 1930년 7월 21일 후버 대통령은 보훈국을 보훈처(the Veterans Administration, VA)로 만들어서 연방행정부로 승격시켰다. 당시 국민주택연금국(National Homes and Pension Bureau)도 VA에 합쳐졌다. 1945년 VA는 현대적인 조직으로 변모했다. 1988년 10월 보훈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장관급 행정부로 격상되었다. 1989년 3월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보훈처를 국가 보훈부(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로 개칭하였다.⁴¹⁾

1865년 3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국군과 수병 보호시설(병원)을 설립하는 법에 서명하였는데, 1873년에 국립 상이군인의 집(“The National Home for Disabled Volunteer Soldiers”)으로 개칭되었다. 명예롭게 제대한 지원병을 위해 특별히 설립된 최초의 정부 기관이었다. 첫 번째 상이군인의 집은 1866년 11월 1일 메인 주 아우구스타 근처에서 문을 열었으며, “soldiers homes” 또는 “military homes”로 불렸다. 처음에는 북군연합군에 참여한 병사들만 시설 입주 자격이 주어졌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완전 기계화 전쟁이었고 가스, 화학물질 등에 노출된 참전 용사들은 전문화된 치료를 요구하였

40) Website USA.gov, <<https://www.usa.gov/branches-of-government>>, 검색일: 2019-12-20.

41)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History - VA History”, <https://www.va.gov/about_va/vahistory.asp>, 검색일: 2019-12-31.

다. 1928년 국립 상이군인의 집의 입주 허가가 여성, 주 방위군 그리고 민병대 보훈자로 확대되었다. 1929년에 국립 상이군인의 집의 연방정부 시스템은 모든 참전 병사들을 받아들이는 11개 기관으로 성장했다.⁴²⁾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은 참전 용사를 위한 병원의 설립도 촉진했다. 1918년 의회는 전쟁 참전 용사들의 복귀를 위해 특별히 병원의 운영을 두 개의 재무부 기관-전시 보훈국(the Bureau of War Risk Insurance)과 공중위생국(Public Health Service)-에 맡겼다. 1946년에 설립된 VA의 내외과국(Department of Medicine and Surgery)은 1991년 5월 보훈 보건처(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VHA)가 되었다. VA 건강관리 시스템은 1930년 54개 병원에서 현재 1,600개 건강관리 시설(144개의 VA 의료센터와 1,232개의 외래환자 진료소를 포함)로 발전하였다.⁴³⁾ VHA는 국가 보훈부의 3개의 주요한 주무 부처 중 하나이다.

VA의 두 번째 주무부서로는 보훈보상처(Veterans Benefits Administration, VBA)가 있다. 제대군인과 그 가족들 그리고 유족들에 대한 재정지원, 기타 형태의 국가보훈부의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⁴⁴⁾ 보훈보상처의 지방조직은 1차 세계대전 시기 참전군인 직업재활을 위해 1918년 연방직업교육위원회에서 14개 지역 사무소를 설치한 데서 시작되었다. 1944년 2차 대전 참전군인을 위한 교육지원법(G.I. Bill)이 실시되었고, 1953년에는 보훈보상부(Department of Veterans Benefit)가 설립되었고, 1991년에 현재의 보훈보상처로 개칭되었다. 보훈보상처의 처장은 차관(Under Secretary)이고, 차관보(Deputy under Secretary)가 업무를 보좌한다.⁴⁵⁾ 주요 프로그램 서비스는 보상 서비스, 연금 및 주택 서비스, 보험 서비스, 교육 서비스, 대출 보증 서비스, 사회복귀 및 경제 향상 사무실, 직업 재활과 고용(VR&E) 서비스, 현장 운영 서비스 등이다.⁴⁶⁾

세 번째 주무부서는 국립묘지관리처(National Cemetery Administration, NCA)다. 1862년 국회는 국가를 위한 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을 위해 국립묘지로 사용할 “매장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국립묘지는 남북전쟁 이후에 발전하였다. 1930년대에는 뉴욕, 볼티모어, 미니애폴리스,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샌안토니오 등 주요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재향군인들을 위해서 국립묘지가 새로 설치되었다. 이 중에서 게티스버그 등 전쟁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몇 개는 전투의 역사적 의의를 해석하는데 사용되는 가치 때문에 국립공원관리소(National Park Service)로 이관되었다. 동시에

42)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History - VA History” .

43)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위의 웹사이트.

44) 안형주, 미국의 보훈제도 (국가보훈처/보훈교육연구원, 2005), 8쪽.

45) 하유성, 미국 제대군인 지원 및 제대군인 단체 활동 연구(국가보훈처, 2013), 7쪽.

46)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bout VBA” , <<https://www.benefits.va.gov/BENEFITS/about.asp>>, 검색일: 2020-01-01.

1973년에 Public Law 93-43은 82개의 국립묘지를 육군성에서 보훈처(Veterans Administration)로 이전하는 것을 승인했다. 1998년 11월에 대통령은 보훈프로그램 강화법(the Veterans' Programs Enhancement Act of 1998)을 도입하여 국립묘지관리처(NCA)로 하여금 국립묘지 정책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오늘날에는 모두 135개의 국립묘지가 있다.

3) 보훈사건 절차

신청인은 보훈부에 보훈급부신청을 하고, 보훈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보훈심판위원회(Board of Veterans Appeals)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보훈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보훈부 지역사무소, 의료센터, 국립묘지 관리소 등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경위서(Statement of the Case)를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이 경위서는 사건의 경과, 관련법과 규제 등을 기재한다.⁴⁷⁾ 보훈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인용(Approval), 거부(Denial) 또는 보류(Remand)이다. 인용이나 거부는 최종결정이지만, 보류는 최종결정이 아니다. 위원회에 이의제기 되는 프로그램은 안장(매장), 보상, 교육, 보험, 대부, 의료, 연금, 재활·취업 등이다.⁴⁸⁾ 보훈심판위원회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가보훈부 내에 있는 행정심판원이다. 미국 참전군인들이 보훈 혜택과 서비스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률은 U.S. Code Title 38의 Chapter 71(§ 7101- § 7113)이다. 2018 회계연도에 의하면 위원회는 81,000건이 넘는 결정을 하였다. 이는 2017 회계연도에 비해서 62% 증가한 것이다.⁴⁹⁾

보훈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에는 다시 보훈사건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Veterans Claims)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988년 11월 18일에 레이건 대통령이 보훈사건재심사법(Veterans' Judicial Review Act)(Pub. L. No. 100-687)에 서명함으로써 기록법원(a court of record)으로서 설립되었다. 1998년 보훈프로그램 강화법(the Veterans' Programs Enhancement Act of 1998)(Pub. L. No. 105-368)에 따라 1999년 3월 1일부터 법원의 이름이 현재의 보훈사건 연방항소법원으로 변경되었다. 기록법원으로서, 미국 사법부의 일부이며 근거법은 U.S. Code title 38의 chapter 72(§ 7251- § 7299)이다. 법원은 보훈심판위원회(Board of Veterans Appeals)의 결정에 대

47) 이남형, 위의 글, 95-96쪽.

48) 하유성, 미국 제대군인 지원 및 제대군인 단체 활동 연구, 28-29쪽.

49)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Board of Veterans' Appeals: Annual Report Fiscal Year", <https://www.bva.va.gov/docs/Chairmans_Annual_Rpts/BVA2018AR.pdf>, 검색일: 2019-12-31. : 2018" 보훈심판위원회의 연례보고서는 <https://www.bva.va.gov/Chairman_Annual_Rpts.asp>에서 1991년부터 2018년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해서 독점적인 관할권을 가진다. 법원의 심리는 주로 서면을 통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기초하지만, 새로운 법적 논쟁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구두변론이 열린다.⁵⁰⁾ 법원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방 순회 항소법원(the U.S. Court of Appeal for the Federal Circuit)과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3. 자해 사망과 직무 관련성

1) 자살과 질병

현재 자살에 의한 상해 및 사망도 질병의 일환으로 이해한다. 보훈부가 모든 군인의 자살에 대해 “군 복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살은 정신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알코올 의존 등이 자살의 원인으로 주로 문제되었다. 이른바 마음의 병, 즉 정신 건강에 대한 위협을 대처하고자 2012년 8월 31일 대통령령 13625호(Executive Order - Improving Access to Mental Health Services for Veterans, Service Members, and Military Families)가 도입되었다. 이 법에 따라 국가보훈부, 국방부, 보건후생부를 중심으로 군인과 제대군인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부처 간 태스크 포스가 조직되었다.

미국 보훈법제의 역사에서 자살이 처음부터 질병으로 취급된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범죄로 간주되었다. 자해사망군인에 대한 초기 보고서로 Wickliffe Copper 대령사건을 제시할 수 있다. 코퍼 대령은 겁이 없고 대담한 군인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주정뱅이였다. 1867년 알콜 중독에 의한 섬망증으로 자살하였고, 그의 임신한 아내는 미망인이 되었다. 미망인과 고아들은 보조금을 신청하였지만 거부되었다. 18년 동안 의회에 대한 청원에도 불구하고, 미망인 Sarah Cooper는 남편의 연금 지급을 거부당했다.⁵¹⁾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자살을 정신질환이나 절망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족들이 모든 보훈혜택을 받는 것을 자동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군에서 통상적으로 400,000 달러의 생명보험은 비순직 자해사망에 대해서도 그 보훈 혜택을 지급한다.⁵²⁾

50) US Court of Appeals for Veterans Claims, “About the Court”, <<http://m.uscourts.cavc.gov/About.php>>, 검색일: 2020-01-01.

51) Stars and Stripes, “Study: Survivors of servicemembers who commit suicide should get full benefits”, <<https://www.stripes.com/news/study-survivors-of-servicemembers-who-commit-suicide-should-get-full-benefits-1.442306>>, 검색일: 2020-01-01.

52) Stars and Stripes, 위의 웹사이트.

2) 사망 관련 법제

U.S. Code Title 10은 군대(Title 10 - Armed Forces)에 군인의 사망에 관련된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군인 등의 사망이 비정상적이거나 타살의 혐의가 있는 때에는 군 의료검시관(Armed Forces Medical Examiner)에 의한 법의병리학(forensic pathology)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471).

사망조의금(Death Gratuity)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현역 또는 예비군 훈련 중에 사망한 사람(§ 1475), 제대 후의 사망 또는 의무나 훈련으로부터 해제 후의 사망(§ 1476), 조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생존자(§ 1477), 지급할 수 있는 금액(§ 1478), 수령자 결정 권한(§ 1479), 정보임무 등에 관련된 자와 군속에 대한 조의금 등(§ 1489)을 규정하였다.

유해와 관련해서도 U.S. code는 규정하고 있다. 유해의 회수, 관리 및 처분(§ 1481), 비용(§ 1482), 군속의 유해와 관련한 비용(§ 1482a), 전쟁포로와 억류된 적국인(§ 1483), 부양가족의 경우(§ 1485), 가매장(§ 1487), 유해의 이전(§ 1488), 퇴직자와 부양가족의 유해 운송(§ 1490), 재향군인을 위한 장례식 행사(§ 1491) 등이다.

미 국방부 지침 5505.10(DoDI 5505.10. August 15, 2013)은 지침 목적에서 비전투사망(noncombat death)의 범죄 수사의 정책을 수립하고 책임을 부여한다고 하였다.⁵³⁾ 비전투 사망이란 전쟁 또는 비상작전 환경에서 적, 반대군 또는 반란군에 의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행동 이외의 원인이나 방식에 의한 사망을 말한다. 수사할 필요가 가장 높은 비전투사망의 유형은 범죄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모든 의심되는 살인, 그리고 신고된 사고, 자살 또는 사인불명의 사망(undetermined deaths)을 포함한다.⁵⁴⁾ 살인과 자살을 모두 수사할 필요가 높은 유형으로 동일하게 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의학적 자연사가 아니라고 결정된 사망은 확고한 증거가 없는 한 잠재적으로 타살이라고 가정”⁵⁵⁾하면서 수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이라고 해서 절차를 간이하게 진행하거나, 유족을 차별하는 경우는 없다.

U.S. Code Title10의 § 113 note(흔히 “유족 통지와 사망한 군인과 관련한 보고서”로 알려짐)는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사망보고서 및 사망기록이 그 가족들에게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내용들이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방부는 지침 5505.10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지침에 의하면 ‘군 범죄수사 당국’(Military Criminal Investigative Organization, MCIO)⁵⁶⁾은 사망한 현역병의 가족에게 정보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

53) 미 국방부 지침 5505.10(DoDI 5505.10. August 15, 2013.) 1.b.

54) 미 국방부 지침 5505.10(DoDI 5505.10. August 15, 2013.) GLOSSARY.

55) 안형주,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 관련 해외사례 소개 : 미국”, 132쪽.

명의 대표자를 지명해야 한다.⁵⁷⁾ 유족에 의해서 요청된 경우에는 제공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된 조사기관인 MCIO의 모든 완료된 조사 보고서 등 규정에 의한 사망보고서의 복사본을 사망자의 가족에게 제공해야 한다.⁵⁸⁾

3) 자해사망 판정규정(직무관련성)

미 육군 규정은 현역 군인이 사망한 모든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⁵⁹⁾ 조사결과가 사망 시에 직무 중이었는지 의도적인 비행이나 부주의가 사망의 원인이었는지를 밝혀야 하고 사고발생 후 50일 이내에 조사보고서의 작성을 규정하였다.⁶⁰⁾

자해사망 판정과 관련한 미군의 주요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Army Regulations 600-8-4 line of Duty: Policy, Procedures and Investigations(2008)

Section II

3-8. 조사절차 (h)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망자 또는 부상자의 정신적 능력 또는 침해와 관련한 증거. 자살 또는 자살미수의 모든 경우에 사망자 또는 부상자의 정신적 상태와 관련된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이 모든 증거는 개인의 사회적 배경, 자살 또는 자살 미수 직전 그 또는 그녀의 행동들과 기분들, 사고를 유발했을만한 온갖 문제거리들, 특별히 노련하거나 경험있는 사람들에 의한 온갖 관련된 조사나 상담을 포함한다. 자해사망이나 특이하거나 의문스러운 정황과 관련된 사고(예컨대, 나홀로 자동차 사고)로부터 귀결된 사망의 경우 혹은 사망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 자해행동의 개연적 원인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군인이 사고의 시점에 정신적으로 온전한 것인지에 대해 정신보건 장교의 의견이 중요하다.

56) ‘군 범죄수사 당국’ 이란 미 육군범죄수사대(U.S. Army Criminal Investigation Command), 해군범죄수사대(Naval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그리고 공군특수수사대(Air Force 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s)를 말한다. DoDI 5505.08. April 17, 2013.) GLOSSARY.

57) 미 국방부 지침 5505.10(DoDI 5505.10. August 15, 2013.) Enclosure 2, 2.a.(2).

58) 미 국방부 지침 5505.10(DoDI 5505.10. August 15, 2013.) Enclosure 2, 2.a.(3).

59) Army Regulation (AR) 600-8-1, Army Causality and Memorial Affairs and Line of Duty Investigations.

60) 안형주,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 관련 해외사례 소개 : 미국”, 132쪽.

제4장 특수한 고려사항 및 직무상 행위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문제들

4-11. 정신적 책임, 정서적 장애들, 자살, 자살시도들

a. 의료팀(MTF)은 반드시 정신적 정서적 장애들을 확인하고, 평가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군인이 정신적 결함, 질병 또는 정신착란의 결과로서 자신의 행동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거나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는 자신의 행동들 및 그 예측가능한 결과들에 대해 책임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들은 군입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군복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복무중의 장애들이다. 성격 장애들은 본성상 EPTS(입대전사유)로 간주된다.

b. 자살 또는 자살미수에 대한 복무관련성 조사는 군인이 사고의 시점에서 정신적으로 온전했는지를 반드시 판정해야 한다. 온전성의 문제는 개인의 사회적 배경, 자살 또는 자살미수 직전 그 또는 그녀의 행동들과 기분들, 사고를 유발했을법한 온갖 문제거리들, 특별히 노련하거나 훈련된 사람들에 의한 온갖 관련된 조사나 상담을 조사하고 수집하는 경우에만 해결할 수 있다. 사망한 군인의 개인적 노트나 일기는 가치 있는 증거들이다. 자살 또는 자살미수의 모든 사례에서 정신보건장교는 수집된 증거를 검토하여 자신의 삶을 끝내고자 하는 군인의 욕구에 기여했던 생-심리사회적 요인들을 판정한다. 정신보건장교는 군인이 사고의 시점에 정신적으로 온전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다.

c. 군인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신보건장교는 군인의 정신적 조건이 복무로 악화된 입대전사유의 조건인지 혹은 군인 자신의 직무위반(비행)인지를 판정해야 한다. 현역복무의 첫 6개월 안에 발생한 그러한 조건들은 상황에 따라서 입대전 존재사유로 간주될 수도 있다.

d. 무단이탈중 자살 또는 자살미수의 경우에는 이탈의 개시점에서 정신적 온전성이 또한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

e.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황에서 (독극물이나 약물을 취하는 시도를 포함하여) 자해 시도들로부터 나오는 의도적 자해적 침해나 질병 혹은 악영향은 직무위반(비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B-10. Rule 10

정신적으로 온전한 군인의 의도적인 자해에 의한 부상이나 여타 침해는 복무중 침해(in line of duty)가 아니다. 이러한 행위는 직무위반(misconduct)로 인한 것이다. 법은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은 자살을 감행(또는 진지하게 자살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추정은 다른 어떤 결론을 지지하는 실질적인 증거 및 우월한 증거로 깨뜨릴 때까지 유지된다. 단순히 자살 가능성을 확립하거나 또는 단순히

죽음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의심을 제기하는 증거는 복무중 행위라는 추정을 깨뜨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어떤 사례들에서 사망이 의도적인 자해 부상이나 침해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판정은 유해 발견을 둘러싼 정황에 입각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정황들은 명료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하며, 동시에 반대의 증거가 없어야 한다.

미군의 규정은 일정한 추정규정을 통해서 자해사망군인에게 우호적인 판정의 여지를 넓혀놓았지만 자해사망자를 모두 보훈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군인의 자해사망의 경우에는 단체보험에 따른 40만 달러의 생명보험금(Servicemembers' Group Life Insurance)이 지급되고 있을 뿐이다.

연방정부 법령(Code of Federal Regulations)은 보훈대상이 되는 자해사망과 보훈대상이 되지 않은 자해사망을 구분하는 데에 자해사망의 의도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의도적인 자살은 비행(misconduct)로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의사를 형성할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⁶¹⁾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의 자살은 그러한 의도를 결여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나 비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살 당시에 사람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서 그 행동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그 충동을 참을 수 없었는지 여부는, 자살 당시 자신의 정신적 상태에 존재하는 모든 가능한 상태와 의학적 증거에 근거해서, 각각의 개인적인 사례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자살 행위는 정신 불안정의 증거로 간주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자살 동기가 증거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그 행위는 정신 불안정에서 기인했다고 추정될 것이다.⁶²⁾ 자살을 본질적으로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는 질환이기 때문에 자살 행위가 군복무와 관련이 있다면 유가족은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다.⁶³⁾

4. 사망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

미 국방부 지침 5505.10에 의하면 ‘군 범죄 수사 당국’(Military Criminal Investigative Organization, MCIO)은 사망사고 즉시 유가족에게 통보하고 연락계획을 세

61) 38 CFR §3.302 (직무관련 정신불안정으로 인한 자살) (a)(1)-(2).

62) 38 CFR §3.302 (직무관련 정신불안정으로 인한 자살) (b)(1)-(2).

63) 안형주,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 관련 해외사례 소개 : 미국”, 133쪽.

워야 한다. 사망한 현역병의 가족에게 정보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 명의 대표자도 지명해야 한다.⁶⁴⁾ 유족에 의해서 요청된 경우에는 제공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된 조사기관인 MC10의 모든 완료된 조사 보고서 등 규정에 의한 사망보고서의 복사본을 사망자의 가족에게 제공해야 한다.⁶⁵⁾

1) 유족에 대한 경제적 보상

미국에서는 사망자의 유족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사후 금전적 보상으로는 사망조의금, 미지불 임금 및 수당, 사후 주거제공, 군인집단생명보험, 생존자 편의 연금계획, 유족보상금, 직무관련성 없는 사망 연금, 몽고메리 GI Bill 사망 급부금 등이 존재한다.⁶⁶⁾ 대부분의 급부는 순직군인의 유가족에게 해당하지만, 군인집단생명보험과 직무관련성 없는 사망보험은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군인의 유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급부만을 소개한다.

(1) 사망조의금(Death Gratuity)

보훈급부 청구의 자격을 구비한 유족에게는 비과세로 100,000 달러가 사망조의금으로 지급된다. 사망조의금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망자에게 직무수행의 내용에 상관없이 유족에게 동일하게 지급된다. 사망조의금의 목적은 군인의 사망 시부터 유족보상금 등을 받기 전까지 경제적 곤궁에서 처한 유족들에게 즉각적인 금전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⁶⁷⁾

① 대상

사망조의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사망자)에 대해서는 U.S. Code Title 10 §1475와 §1476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역 또는 예비군 훈련 중에 다음의 규정에 적시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장관은 유족에게 사망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즉시 사망조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475(a)).

-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자 또는 현역에게 허가된 여행(현역 복무를 위해 또는 현역 복무로부터 여행) 중에 사망한 자(§ 1475(a)(1))

64) 미 국방부 지침 5505.10(DoDI 5505.10. August 15, 2013.) Enclosure 2, 2.a.(2).

65) 미 국방부 지침 5505.10(DoDI 5505.10. August 15, 2013.) Enclosure 2, 2.a.(3).

66) 이에 대한 개관으로는 Powers, Rod, A Guide to Active Duty Death Entitlements, <https://www.thebalancecareers.com/active-duty-death-entitlements-3356940>, 검색일: 2020-01-19.

67) Military Compensation, “Death Gratuity”, <<https://militarypay.defense.gov/Benefits/Death-Gratuity/>>, 검색일: 2020.01-02.

- 예비군 훈련 중(군대의 통신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 또는 공부 제외, 또는 군대나 공중위생국의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에 퇴역상태로 참석한 통신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 또는 공부 제외)에 사망한 예비군(§ 1475(a)(2))
- 장관이 지정한 권한에 의해 승인되거나 요구된 경우에, 예비군의 현역 훈련(active duty for training,) 또는 예비군 훈련(inactive duty for training)(군대의 통신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 또는 공부 제외, 또는 군대나 공중위생국의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에 퇴역상태로 참석한 통신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 또는 공부 제외)을 행하도록 의무 지워진 예비군 그리고 예비군의 현역 훈련(또는 예비군 훈련)으로 또는 예비군의 현역 훈련(또는 예비군 훈련)에서 직접 이동하는 중에 또는 예비군 거주지에서 머무르는 동안 - 적절한 권한에 의해서 그렇게 승인된 경우에, 그러한 예비군 훈련 또는 연속적인 예비군 훈련 사이 기간 동안 - 사망한 예비군(§ 1475(a)(3))
- 13일 이상의 명령에 따른 예비군필수연례훈련 의무를 이행 중에 사망한 또는 그 연례훈련으로 또는 연례훈련으로부터 승인된 이동하는 중에 사망한 예비역 장교 훈련부대의 구성원; 또는 본 장(title) section 2104(b)(6)(B)의 현장 훈련 또는 순항 훈련(practice cruise)에 참여하는 중에 또는 훈련과 순항이 수행되는 장소로 또는 그 장소로부터 승인된 이동을 행하는 중에 사망한 대학생군사훈련단(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ROTC) (§ 1475(a)(4))
- 군대에 최종 합격 또는 입영(훈련 제외)을 위한 장소에 있거나 그 장소로 또는 그 장소로부터 이동하는 중에 사망한 사람, 그 장소로 갈 것이 명령되거나 지시된 사람 그리고 (A) 일시적으로 그 의무를 받아들인 사람 또는 (B) 연방병역법(50 U.S.C. 3801 et seq.)에 의해서 그 군대에서 복무하도록 선발된 자(§ 1475(a)(5))

U.S Code Title 38 section 1480에서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해당 장관은, 제대 또는 다음으로부터 해제 후 120일 이내에 사망한 자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그 유족들에게 사망 조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476(a)(1)).

- 현역(§ 1476(a)(1)(A))
- 예비군 훈련 (군대의 통신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 또는 공부 제외, 또는 군대나 공중위생국의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에 퇴역상태로 참석한 통신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 또는 공부 제외)(§ 1476(a)(1)(B))

보훈부 장관이 그 사망이 위에서 묘사한 현역 또는 예비군 훈련 동안에 초래되거나 악화된 부상 또는 질병이 원인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사망조의금이 지급될 수 있다. 또, 그러한 의무를 위해서 또는 그 의무로부터 직접 이동하는 동안에 초래되거나 악화된 부상 또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서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사망조의금이 지급될 수 있

다(§ 1476(a)(2)).

사망조의금은 또한 정보 임무에 배정된 동안 미국 밖에서 사망한 군인과 군속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1489(a)). 구체적으로는 국방부의 정보부서 임무에 배정되고 그 구성원이나 군속으로서 신분이 위장되거나 은폐된 자 또는 국방 장관이 비밀정보활동에 참여하도록 결정한 개인적인 범주에 속한 자 중에 하나에 속하면서 1980년 10월 4일 이후 미국 밖에서 지속된 부상(질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하고, 그 사망이 적대적 또는 테러리스트의 활동에 의한 경우이거나 상당한 위험요소를 가진 정보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

② 지급대상자

U.S. Code Title 10의 § 1475와 § 1476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의금의 전부(100%) 또는 일부(10% 증분)를 받을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1477(a)(1)). 그리고 대상자가 조의금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되지 않은 사망조의금은 다음의 사람이 수혜자격을 갖는다(§ 1477(b)).

- 생존한 배우자
- 만약 생존한 배우자가 없다면, 생존한 자녀와 대습에 의해 사망한 자녀의 자손⁶⁸⁾
- 만약 생존한 자녀와 그 자손이 없다면, 생존한 부모에게 또는 그들 중 생존자⁶⁹⁾
- 만약 생존한 부모가 없다면, 자격이 있는 유언집행인 또는 재산관리인
- 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다면, 당사자의 사망 시의 주소지법에 의해 자격을 가진 당사자의 다른 가장 가까운 친척

보훈대상자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시에 사망조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사람으로 배우자 아닌 자를 지정하였다면, 해당 장관은 배우자에게 그 지정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1477(a)(2)).

사망조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사망조의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아래의 순서에 따라서 다음 순위의 생존자에게 지급한다(§ 1477(e)).

- 생존한 배우자
- 만약 생존한 배우자가 없다면, 생존한 자녀와 대습에 의해 사망한 자녀의 자손⁷⁰⁾
- 만약 생존한 자녀와 그 자손이 없다면, 생존한 부모에게 또는 그들 중 생존자⁷¹⁾

68) 이 경우에 나이나 결혼 상태에 관계없이 적출자, 입양아, 사망 당시에 사자 가정의 일원이었던 의붓자식, 여상 사자의 사생아 그리고 남성 사자의 사생아 중 (A) 사자가 서명한 서면으로 인정된 자, (B) 사자의 사망 전에 재판에 의하여 그의 자녀로 인정된 경우, (C) 보훈부 장관에게 만족한 증거에 의해서 사자의 아들이라고 입증한 자, (D) 사자가 생활비를 보조하도록 사법상으로 명해진 자에게도 적용한다(§ 1477(d)).

69) 이 경우에 입양을 통한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도 인정된다(§ 1477(c)).

- 만약 생존한 부모가 없다면, 자격이 있는 유언집행인 또는 재산관리인
- 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다면, 당사자의 사망 시의 주소지법에 의해 자격을 가진 당사자의 다른 가장 가까운 친척

또한 사망조의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해당 장관은 유족이 살고 있는 지역의 부대, 시설 또는 지구의 지휘관에게 적합한 수령자를 결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1479(1)).

(2) 유족보상금(Dependency and Indemnity Compensation)

유족보상금은 복무 중, 훈련을 위한 복무 중 또는 예비군 훈련 중에 사망한 군인의 생존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과세 월별 보조금이다. 또는 복무 관련 장애로부터 사망한 재향군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특히 부모 유족보상금 (Parents DIC)은 군 복무와 관련한 이유로 사망한 군인 또는 재향군인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부모들을 위한 소득 기반 보조금이다.⁷²⁾

① 종류와 요건

• 생존한 배우자의 경우⁷³⁾

생존한 배우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VA 혜택 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요건에 대한 증명은 병역 기록, 의사의 보고서 및 의료검사 결과와 같은 것으로 가능하다.

70) 이 경우에 나이나 결혼 상태에 관계없이 적출자, 입양아, 사망 당시에 사자 가정의 일원이었던 의붓자식, 여상 사자의 사생아 그리고 남성 사자의 사생아 중 (A) 사자가 서명한 서면으로 인정된 자, (B) 사자의 사망 전에 재판에 의하여 그의 자녀로 인정된 경우, (C) 보훈부 장관에게 만족한 증거에 의해서 사자의 아들이라고 입증한 자, (D) 사자가 생활비를 보조하도록 사법상으로 명해진 자에게도 적용한다(§ 1477(d)).

71) 이 경우에 입양을 통한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도 인정된다(§ 1477(c)).

72)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Type of compensation" .

73)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bout VA DIC for spouses, dependents, and parents" , <<https://www.va.gov/disability/dependency-indemnity-compensation/>>, 검색일: 2020-01-01.

- 1957년 1월 1일 이전에 제대군인(the Veteran) 또는 군인(service member)과 결혼한 경우
-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시작되었거나 악화되는 군 복무로부터 제대한지 15년 이내에
- 제대군인 또는 군인과 결혼한 경우
- 최소한 1년 동안 제대군인 또는 군인과 혼인관계였던 자
- 보훈자 또는 순직 군인 사이에 자녀가 있고 현재 재혼하지 않은 자. 그리고 제대군인 또는 군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동거한 자. 또는 만약 별거했다면 별거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 만약 2003년 12월 16일 이후 재혼하였고 재혼 당시에 57세 이상이라면, 계속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생존한 배우자는 또한 다음의 사실 중에서 하나를 증명하여야 유족보상금⁷⁴⁾을 받을 수 있다.

- 군인은 현역, 예비군의 현역 훈련 또는 예비군 훈련 중에 사망한 자
- 제대군인은 복무 관련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자
- 제대군인이 복무 관련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특정기간 동안 ‘완전한 장애⁷⁵⁾’로 평가된 군 복무 관련 장애로 VA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자. 이 경우에는 다음의 평가 중 하나에도 해당해야 한다.

- 사망 전에 최소한 10년 동안 대상이었던 자
- 현역에서 제대한 후 사망 전에 적어도 5년 동안 대상이었던 자
- 만약 1999년 9월 30일 이후 사망한 전쟁 포로였다면, 그 사망 전에 최소한 1년 동안 대상이었던 자

• 생존한 자녀의 경우

생존한 자녀가 유족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38 U.S.C. 1313 참조).

- 미혼이어야 한다.
- 생존한 배우자의 보상금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 18세 미만이어야 한다(만약 취학 중이라면 23세 미만)
- * 만약 제대군인 또는 군인의 가족에서 입양되었다면, 그럼에도 다른 모든 자격을 충

74) 생존한 배우자의 유족보상금 요율표는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Dependency and Indemnity Compensation - Effective 12/1/19”, <https://www.benefits.va.gov/Compensation/current_rates_dic.asp>, 검색일: 2019-12-31.

75) 여기서 ‘완전한 장애’란 보훈자가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족한다면,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

또한 배우자가 증명했던 사항들을 동일하게 증명해야 유족 보상금⁷⁶⁾을 받을 수 있다. 즉, 군인은 현역, 예비군의 현역 훈련 또는 예비군 훈련 중에 사망한 자, 제대군인은 복무 관련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자, 제대군인이 복무 관련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특정기간 동안 ‘완전한 장애’⁷⁷⁾로 평가된 군 복무 관련 장애로 VA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자, 이 경우에는 다음의 평가 중 하나에도 해당해야 한다.

- 사망 전에 최소한 10년 동안 대상이었던 자
- 현역에서 제대한 후 사망 전에 적어도 5년 동안 대상이었던 자
- 만약 1999년 9월 30일 이후 사망한 전쟁 포로였다면, 그 사망 전에 최소한 1년 동안 대상이었던 자

• 생존한 부모의 경우

생존한 부모가 유족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 제대군인 또는 군인의 생물학적, 입양 또는 수양부모여야 한다.
-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 여기서 ‘수양부모’란 현역으로 마지막 입대하기 전에 제대군인이나 군인에게 부모 역할을 한 자이다.

한편 부모의 경우에도 다음의 사실 중에서 하나를 증명하여야 한다.

군인은 현역 중에 또는 예비군의 현역 훈련 근무 중에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 군인이 예비군 훈련 근무 중에 부상이나 특정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 제대군인이 복무 관련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이다.

유족 부모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하되 일정소득 초과 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족부모 보상금 수급자나 수급신청자는 매년 본인 및 배우자(동거 시)의 소득수입원(총임금, 은퇴연금, 보험보상금, 수익금, 연금, 이자, 배당금 등)을 보건부에 신고해야 한다.⁷⁸⁾

76) 생존한 배우자의 요율표 참조.

77) 여기서 ‘완전한 장애’란 보호자가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78) 안형주,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 관련 해외사례 소개 : 미국”, 136쪽.

③ 보상금 지급액

지급액은 보훈대상자의 상이등급에 따른 보상금 수준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매년 생활비 증가에 맞게 조정되고, 비과세 대상이다.⁷⁹⁾ 2020년 생존 배우자의 기본 지급액은 월 1,154달러이다(38 U.S.C. 1311(a)(1)).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까지 최소 8년간 복무 관련 100% 상이 보상금 수령 자격이 있었고, 동기간 지속적으로 결혼한 상태인 경우 246달러가 추가된다(38 U.S.C. 1311(a)(2)).⁸⁰⁾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286달러가 추가된다(38 U.S.C. 1311(b)). 배우자가 요양원의 환자이거나 맹인 등으로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286달러가 추가된다(38 U.S.C. 1311(c)). § 1311(c)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배우자가 장애로 인해서 영구적으로 바깥출입을 못하는 경우에는 135달러가 추가된다(38 U.S.C. 1311(d)).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망한 보훈자의 생존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 1명 월 488달러, 2명 701달러, 3명 915달러, 그리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174달러씩 추가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는다(38 U.S.C. 1313(a)).

(3) 집단생명보험금

군인집단생명보험금(servicemembers' Group Life Insurance- SGLI)이 40만 달러 한도에서 사망의 원인에 상관없이 사망군인의 유족에게 지급된다. 이 단체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며, 군인들은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진다. 그러나 본인이 명시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피보험자는 보험금 수령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언법상의 상속순위에 따라 지급된다.⁸¹⁾

(4) 직무관련성 없는 사망 연금

기타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망의 경우, 유족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망 연금(nonservice-connected death pension)을 신청할 수 있다. 잔존배우자, 18세 이하의 미혼 자녀, 23세 이하의 학업중인 자녀는 법정의 소득 한계치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로 인해 18세 이전에 자활역량이 없는 자녀는 그러한 조건이 지속되는 한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혼인하거나 자녀의 소득이 소득 한계치를

79) 하유성, 미국 제대군인 지원 및 제대군인 단체 활동 연구, 45쪽.

80) 하유성, 위의 책, 45쪽.

81) 안형주, 미국의 보훈제도, 국가보훈처 보훈교육원, 2005, 96쪽 이하; VA Form SGLV 8283, Claim for Death Benefits 참조.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 경우 연금률은 생존 배우자나 자녀가 다른 원천에서 받는 수입의 한도에 따라 정해진다. 유족들이 재정적으로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망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유가족들은 사망연금을 보훈부 지역사무소(VARO)에 신청할 수 있다.⁸²⁾

(5) 기타 혜택

부양가족 교육지원 프로그램(Dependents' Educational Assistance Program, DEAP)은 부양가족과 유가족에게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무 중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의붓자녀나 입양아 여부는 불문)이어야 한다.⁸³⁾

30일 이상 복무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미혼인 자녀들에게 저렴한 보험에 들 수 있는 혜택을 준다. 군 복무 중 사망한 자의 유족이 군에서 제공한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1년 동안 해당 주거를 유지할 수 있다. 또는 1년간 사영주택 또는 해외주택을 임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당을 지급한다.⁸⁴⁾

주택대출도 보증해준다. 채권자가 동의할 경우 계약금을 내지 않더라도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총 대출금 중 일부에 대해 보증해준다.⁸⁵⁾

2) 사망자에 대한 상징적 예우

(1) 국립묘지 안장

제대군인 기념 및 추모사업 등은 국가보훈부의 국립묘지 관리국(National Cemetery Administration, NCA)에서 시행한다. 2019년 현재 전국적으로 135개의 국립묘지가 있는데, 국립묘지 관리국은 131개의 국립묘지를 관할한다. 알링턴 국립묘지(Arlington National Cemetery)와 미국 병사의 집 국립묘지(the United States Soldiers' and Airmen's Home National Cemetery)는 육군성(Department of the Army)에서 관리한다. 게티스버그 등 전쟁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몇 개는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해석하는데 사용되는 가치 때문에 국립공원관리소(National Park Service)가 관리한다.⁸⁶⁾ 미국 전투 기념위원회(American Battle Monuments Commission)는 해외 소재 26개 미군 전사자 묘지

82) Powers, Rod, A Guide to Active Duty Death Entitlements, <https://www.thebalancecareers.com/active-duty-death-entitlements-3356940>, 검색일: 2020-01-19.

83) 안형주,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 관련 해외사례 소개 : 미국”, 137쪽.

84) 안형주, 위의 글, 136쪽.

85) 안형주, 위의 글, 136쪽.

86)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History - VA History” 참조.

를 관리한다.⁸⁷⁾

독립전쟁부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쟁과 분쟁의 참전 용사를 포함한 350만 명 이상이 VA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현재 VA의 국립묘지에 안장될 350명 이상의 명예 훈장 수여자를 포함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될 영예를 얻은 2,200만 명 이상의 생존한 참전 용사가 있다.⁸⁸⁾

참전 용사(예비역)와 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은 VA의 135개 국립묘지 중 한 곳에 매장될 자격이 있다. 따라서 자해사망군인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참전 용사는 불명예제대 이외의 상황에서 제대 또는 현역에서 해제되어야 하고 필요한 복무기간을 모두 채워야 한다. 전쟁에서 미국과 동맹을 맺은 정부의 군대에 복무한 미국 시민도 또한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자격 있는 참전군인과 군인의 배우자,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⁸⁹⁾ 이외에도 20년 이상 국경수비대 또는 예비군 복무자로서 퇴직연금 수급권자도 자격이 있다.⁹⁰⁾

(2) 장례비용지원과 미국 국기 제공

재향군인의 매장 비용과 특정 부양가족 또는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한 혜택이 가능하다. 매장에 대한 지원은 국립묘지에 제한된다. 비록 선택권이 특정 묘지에 제한되긴 하지만, VA는 제대군인과 부양가족에게 다양한 묘지 선택권을 제공한다.

미국 군대에서 명예롭게 복무한 고인의 관을 드리우거나 유골함과 함께 할 수 있는 미국 국기가 무료로 제공된다. 그것은 국가에 대한 제대군인의 군 복무를 기리기 위함이다. 그 제대군인이 국립묘지에 안장하게 되면, 그 깃발은 묘지의 깃발거리에 기증될 수 있다.⁹¹⁾

10 U.S Code 1481에 따른 사망군인의 경우에, 해당 장관은 생존 배우자, 혈족, 입양 친척, 부모대위권이 있는 사람 등 자격 있는 자에게 국기를 수여할 때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10 U.S Code 1482).

87) American Battle Monuments Commission, “Cemeteries & Memorials”, <<https://www.abmc.gov/cemeteries-memorials>>, 검색일: 2020-01-01.

88)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History - VA History”.

89) Military.com, “National Cemeteries”, <<https://www.military.com/benefits/burial-and-memorial/national-cemeteries.html>>, 검색일: 2020.1.1.

90) 하유성, 미국 제대군인 지원 및 제대군인 단체 활동 연구, 89쪽.

91) DAV, Death Benefits Guide, <https://www.dav.org/wp-content/uploads/Death_Benefits_Guide.pdf>, 검색일: 2020-01-02.

< 참고문헌 >

| 논문 및 도서

- Dr Nan Tian/Dr Aude Fleurant/Alexandra Kuimova/Pieter D. Wezeman/Siemon T. Wezeman,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18”, *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19, 2쪽.
- DoDSER, *Department of Defense, Suicide Event Report, Calendar Year 2017 Annual Report*, Psychological Health Center of Excell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Defense Health Agency, 2018.
- Glenn Altschuler/Stuart Blumin, *The GI Bill: A New Deal for Vetera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김정현, 미국의 군인복무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 김주경, “미국 군복무제도의 변천과 현황”, 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 손세호, 하룻밤에 읽는 미국사: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에서 트럼프 행정부까지, 알에이치 코리아, 2019.
- 안형주,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 관련 해외사례 소개 : 미국”, 2006년도 전문가 초청토론회 자료집: 군내 자살처리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안형근의원/김학송의원/박찬석의원, 2006.11.28.
- 안형주, 외국의 보훈제도(미국), 국가보훈처/보훈교육연구원, 2005.
- 이남형, “미국의 상이 제대군인 지원 제도”, 보훈연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 2015.
- 하유성, 미국 제대군인 지원 및 제대군인 단체 활동 연구, 국가보훈처, 2013.

| 인터넷 자료

- “Becoming a Soldier”, goarmy.com, <<https://www.goarmy.com/soldier-life/becoming-a-soldier.html>>, 검색일: 2020-01-05.
-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Board of Veterans’ Appeals: Annual Report Fiscal Year”, <https://www.bva.va.gov/docs/Chairmans_Annual_Rpts/BVA2018AR.pdf>, 검색일: 2019-12-31.
- “Drafting Only Men for the Military is Unconstitutional, Judge Rules”, The New York Times, 2019-02-24., <<https://www.nytimes.com/2019/02/24/us/military-draft-men-unconstitutional.html>>, 검색일: 2020-01-02.
- “National Coalition for Men v. Selective Service System (4:16-cv-03362) Document #

1: COMPLAINT” , April 4, 2013.,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4543818/1/national-coalition-for-men-v-selective-service-system/>>, 검색일: 2020-01-02.

“Protected Veteran Status: A Brief Guide” , carrerminds, <<https://blog.careerminds.com/protected-veteran>>, 검색일: 2020-01-06.

“Selective Service System: About the Agency” . Sss.gov., <<http://www.sss.gov>>, 검색일: 2020-01-03.

“The NROTC marine Option Scholarship” , Naval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https://www.nrotc.navy.mil/marine_2_1.html>, 검색일: 2020-01-03.

“What is the Minimum Military Enlistment obligation?” , the balance careers, <<https://www.thebalancecareers.com/period-of-time-to-enlist-in-military-3354093>>, 검색일: 2020-01-06.

“Who Must Register” , Selective Service System, <<https://web.archive.org/web/20180515045908/https://www.sss.gov/Registration-Info/Who-Registration>>, 검색일: 2020-01-02.

“뉴욕 징병법 거부 폭동” , 한국일보, 2017-7-1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7121715572529>>, 검색일: 2019-11-14.

“미군기지, 과연 평화를 위한 것인가” , 한겨레신문, 2017-10-20.,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15253.html>>, 검색일: 2019-12-20.

American Battle Monuments Commission, “Cemeteries & Memorials” , <<https://www.abmc.gov/cemeteries-memorials>>, 검색일: 2020-01-01.

CQ Almanac, “GI Bill Extended To Korea Veterans” , <<https://library.cqpress.com/cqalmanac/document.php?id=cqal52-1378844>>, 검색일: 2020-01-05.

DAV, Death Benefits Guide, <https://www.dav.org/wp-content/uploads/Death_Benefits_Guide.pdf>, 검색일: 2020-01-02.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HISTORY IN BRIEF, <https://www.va.gov/opa/publications/archives/docs/history_in_brief.pdf>, 검색일: 2020-01-05.

DMDC, “DoD Personnel, Workforce Reports & Publications” , <https://www.dmdc.osd.mil/appj/dwp/dwp_reports.jsp>, 검색일: 2019-12-22.

Military Compensation, “Death Gratuity” , <<https://militarypay.defense.gov/Benefits/Death-Gratuity/>>, 검색일: 2020-01-02.

Military.com, “National Cemeteries” , <<https://www.military.com/benefits/burial-and-memorial/national-cemeteries.html>>, 검색일: 2020-01-01.

National Defense Budget Estimates for FY 2020,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May 2019), <https://comptroller.defense.gov/Portals/45/Documents/defbudget/fy2020/FY20_Green_Book.pdf>, 검색일: 2019-12-21.

Powers, Rod, A Guide to Active Duty Death Entitlements, <https://www.thebalancecareers.com/active-duty-death-entitlements-3356940>, 검색일: 2020-01-19.

Stars and Stripes, “Study: Survivors of servicemembers who commit suicide should get full benefits”, <<https://www.stripes.com/news/study-survivors-of-servicemembers-who-commit-suicide-should-get-full-benefits-1.442306>>, 검색일: 2020-01-01.

The White House, “President Donald J. Trump Issues a National Call to Action to Empower Veterans and End the National Tragedy of Veteran Suicide”, 2019-03-05.,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president-donald-j-trump-issues-national-call-action-empower-veterans-end-national-tragedy-veteran-suicide/>>, 검색일: 2020-01-01.

U.S. Department of Defense, “Our Story”, <<https://web.archive.org/web/20181007223518/https://www.defense.gov/our-story/>>, 검색일: 2020-01-04.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bout VA DIC for spouses, dependents, and parents”, <<https://www.va.gov/disability/dependency-indemnity-compensation/>>, 검색일: 2020-01-01.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bout VBA”, <<https://www.benefits.va.gov/BENEFITS/about.asp>>, 검색일: 2020-01-01.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Birth defects linked to Agent Orange”, <<https://www.va.gov/disability/eligibility/special-claims/birth-defects/>>, 검색일: 2020-01-08.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Dependency and Indemnity Compensation - Effective 12/1/19”, <https://www.benefits.va.gov/Compensation/current_rates_dic.asp>, 검색일: 2019-12-31.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History - VA History”, <https://www.va.gov/about_va/vahistory.asp>, 검색일: 2019-12-31.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How to Read Compensation and SMC Benefits Rate Tables”, <<https://www.benefits.va.gov/COMPENSATION/resources-rates-read-compAndSMC.asp>>, 검색일: 2019-12-31.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Increased disability rating for time in a hospital”, <<https://www.va.gov/disability/eligibility/special-claims/temporary-increase-for-time-in-hospital/>>, 검색일: 2020-01-09.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Special Monthly Compensation (SMC) Rate Table - Effective 12/1/19”, <https://www.benefits.va.gov/COMPENSATION/resources_comp02.asp>, 검색일: 2019-12-31.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Temporary disability rating after surgery or

c a s t ” ,
 <<https://www.va.gov/disability/eligibility/special-claims/temporary-increase-after-surgery-or-cast/>>, 검색일: 2020-01-09.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Type of compensation” , <<https://www.benefits.va.gov/COMPENSATION/types-compensation.asp>>, 검색일: 2019-12-31.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automobile allowance and adaptive equipment” ,
 <<https://www.va.gov/disability/eligibility/special-claims/automobile-allowance-adaptive-equipment/>>, 검색일: 2020-01-08.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clothing allowance” , <<https://www.va.gov/disability/eligibility/special-claims/clothing-allowance/>>, 검색일: 2020-01-08.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Individual Unemployability if you can't work” , <<https://www.va.gov/disability/eligibility/special-claims/unemployability/>>, 검색일: 2020-01-10.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temporary disability (prestabilization rating)” ,
 <<https://www.va.gov/disability/eligibility/special-claims/temporary-rating-prestabilization/>>, 검색일: 2020-01-10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Title 38 U.S.C. 1151 claims” , <<https://www.va.gov/disability/eligibility/special-claims/1151-claims-title-38/>>, 검색일: 2020-01-09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eterans Compensation Benefits Benefits Rate Tables - Effective 12/1/19” , <https://www.benefits.va.gov/COMPENSATION/resource_s_comp01.asp>, 검색일: 2020-01-02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eterans compensation Benefits Rate Tables - Effective 12/1/19” , <https://www.benefits.va.gov/COMPENSATION/resources_comp01.asp>, 검색일: 2019-12-31.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eterans pension Rate Table - Effective 12/1/19” , <https://www.benefits.va.gov/pension/current_rates_veteran_pen.asp>, 검색일: 2020-01-13.

U.S. Dept. of Defense, “Trump Signs Law Establishing U.S. Space Force” ,
 2 0 1 9 . 1 2 . 2 0 . ,
 <<https://www.defense.gov/explore/story/Article/2046035/trump-signs-law-establishing-us-space-force/>>, 검색일: 2019-12-22.

US Court of Appeals for Veterans Claims, “About the Court” , <<http://m.uscourts.ca>

vc.gov/About.php>, 검색일: 2020-01-01.

Website USA.gov, <<https://www.usa.gov/branches-of-government>>, 검색일: 2019.12.20.

Wikipedia, “Direct commission officer” , <https://en.wikipedia.org/wiki/Direct_commission_officer>, 검색일: 2020-01-04.

Wikipedia, “National Coalition for Men v. Selective Service System” , <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Coalition_for_Men_v._Selective_Service_System>, 검색일: 2020-01-02.

Wikipedia, “Veterans’ Preference Act of 1944” , <https://en.wikipedia.org/wiki/Veterans%27_Preference_Act_of_1944>, 검색일: 2020-01-10.

제4장 대만의 처우실태

1. 대만의 군대

일반적으로 영토를 구성하는 가장 큰 섬의 이름인 ‘대만(臺灣, Taiwan)’으로 불리고 있는 중화민국(中華民國, Republic of China)¹⁾은 17세기 이후 서구의 점령과 일본의 식민지배를 거쳐 분단에 이르기까지 부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패망 후 1946년 7월 국민당과 공산당은 전면적인 내전(이른바 국공내전)에 돌입하였다. 초반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던 국민당 정부는 세계대전 이후 인수 작업을 주도하였고 1946년 12월에 「중화민국헌법」²⁾을 통과, 이듬해 1월 1일에 공포하였다(같은 해 12월 25일 시행). 그러나 점차 내전의 판도가 바뀌면서 1949년 12월, 패색이 짙어진 장제스(蔣介石, 1887~1975)와 국민당은 대만으로 패퇴하였다. 대만으로 물러난 국민당은 대만의 통치권을 장악하여 1987년까지 유지한 계엄령 아래에서 소위 백색공포로 알려진 탄압정치를 실시하였다. 계엄령 해제 이후 국민당은 급속도로 성장한 민주진보당(민진당)과 교대하면서 정권을 잡아 왔으며, 현재는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1956~)이 총통으로서 임기를 보내고 있다.

1949년 10월 1일 내륙에서 공산당을 중심으로 중화인민공화국³⁾(이하 ‘중국’ 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어 대만은 중국과 사실상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다소 변화가 있었다고 하나 기본적으로 「반분열국가법」이 상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원칙 아래 한편으로는 무력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있는 것⁴⁾이어서⁴⁾ 이에 대응하는 대만의 입장은 마찬가지로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남북한 관

1) 편의상 여기서는 「중화민국헌법」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 지역(평후(澎湖), 진먼(金門), 마주(馬祖) 등 포함)을 ‘대만’ 이라고 표기하였음을 밝혀둔다.

2) 「중화민국헌법」은 1991년 이후부터 증수(增修)되기 시작하여 현재 7차(2005년)까지 증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간략한 설명은 “憲法簡介”, [http://www.president.gov.tw/Page/93\(2020-01-10.\)](http://www.president.gov.tw/Page/93(2020-01-10.)).

3) 중화인민공화국은 임시헌법의 성격을 갖고 있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共同纲领)」이 통과되면서 성립되었다. 이후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이라고 불리는 것이 1982년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1988년, 1993년, 1999년, 2004년, 2018년에 걸쳐 다섯 차례 수정(修正)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서 주목할 부분은 서문(序言)에 “台湾是中华人民共和国的神圣领土的一部分。完成统一祖国的大业是包括台湾同胞在内的全中国人民的神圣职责。(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조국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것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모든 중국 인민이 마땅히 져야할 신성한 책임이다.)” 라고 하여 대만이 영토의 일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두었다는 것이다. 조문의 번역은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번역본(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cms/commonDown.do?DLD_CFM_NO=CD70BB68NRDHS1MKPHJ4&FL_SEQ=47735\(2020-01-10.\)](http://world.moleg.go.kr/cms/commonDown.do?DLD_CFM_NO=CD70BB68NRDHS1MKPHJ4&FL_SEQ=47735(2020-01-10.)).

계에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특기할 만한 것은 분단 상황에서 67년 간 의무역(義務役) 중심의 징병제를 유지해왔던 대만이 2018년부터 전면적으로 지원역(志願役)을 중심으로 하는 모병제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⁵⁾ 2000년대 들어 이미 징병과 모병을 병행하기 시작한(募徵併行) 대만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복무제(替代役) 역시 도입한 바 있다. 현재는 1994년 이후 출생한 남성을 기준으로 병력 충원에 전면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⁶⁾ 다만, 모병제로의 전환 아래에서도 「병역법(兵役法)」은 상비병역과 보충병역으로 나뉘는 사병역(士兵役) 중 상비병역에 대하여 4개월 이내의 군사훈련을 이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18~36세 사이에 해당되는 남성은 다음과 같이 5주간의 입영훈련(入伍訓練)과 11주간의 전문훈련(專長訓練)을 이수하여야 한다.⁷⁾ 또한 대체복무 역시 계속되고 있다.

<그림4-1> 4개월 상비병역 군사훈련(의무역) 신병훈련 과정



4) 이와 관련해서는 장기석·이상철, 中國과 臺灣의 交流協力 法制 研究, 법무부, 2008 참고.

5) “대만 징병제 67년 만에 소멸 ... 의무복무자 26일 前 제대완료”, 연합뉴스(2018-12-17), [http://www.yna.co.kr/view/AKR20181217110400009\(2020-01-10\)](http://www.yna.co.kr/view/AKR20181217110400009(2020-01-10)).

6)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geos/tw.html\(2020-01-10\)](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geos/tw.html(2020-01-10)).

7) 中華民國108年國防報告書編纂委員會, 中華民國108年國防報告書, 國防部, 2019, 76-77쪽; “대만 징병제 67년 만에 종료 ... “4개월 군사훈련 의무는 계속””, NEWSIS(2018.12.2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227_0000513602\(2020-01-1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227_0000513602(2020-01-10)).

<그림4-2> 대만에서의 모병제로의 전환과 처우개선



법률의 내용을 보았을 때, 대만은 의무역을 최소한의 군사교육 이수에 한정하여 유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예비역(後備役)을 확보하는 동시에, 위와 같이 지원병을 바탕으로 처우개선과 함께 군을 정예화하고자 하는 모병 중심의 병역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병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인력난이나 군의 이미지 문제 등의 이유로 당초 계획에 비해 다소 미루어져 왔었고⁸⁾,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병력 충원 방식을 변경한 병역제도의 변화가 군 관련 법제나 구조, 군 문화의 질적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므로, 전과 큰 차이를 두고서 군과 관련된 내용들을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2. 대만의 보훈정책

대체로 징병제의 전통이 있는 국가에서는 이른바 독립형 보훈조직의 형태로 보훈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오랜 기간 징병제를 유지한 바 있는 대만 역시 독립형 보훈조직의 보훈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國軍退除役官兵輔導委員會)⁹⁾가 그

8) “대만군 모병제 전환 계획 또다시 연기 ... 잇따 악재로 직업군인 지원자 줄어”, 아시아투데이 (2016-08-17),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817010008624> (2020-01-10).

9) 공식 사이트는 <http://www.vac.gov.tw> (2020-01-10).

중심이 되고 있다. 여기에 국방부 예비군사령부(後備指揮部)가 담당하는 유수업무(留守業務)로서 상이군인과 사망한 군인에 대한 보상금(撫卹金) 지급, 보완으로서 사회보험제도인 군인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 등이 보훈정책의 주요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군인 및 기타권속우대조례(軍人及其家屬優待條例)」와 「국군재대만유족상이관병 및 무의탁 권속보조금발급방법(國軍在臺遺族傷殘官兵及無依軍眷照護金發給辦法)」 등의 근거에 따라 무훈대상으로 등록된 유족 또는 1949년 중앙정부가 대만으로 패퇴할 때 군인 본인은 임무로 인하여 건너오지 못하고 그 가족만이 중앙정부를 따라 대만으로 건너온 무의탁 권속 등에게는 기타 보상금 성격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리고 충렬사(忠烈祠), 군인묘지(軍人公墓), 국군시범묘지(國軍示範公墓), 충령탑(忠靈塔)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념 및 추모사업도 보훈정책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대만의 보훈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내에 이미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소개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필요한 내용을 요약·수정하여 정리한다.¹⁰⁾

1) 기본적인 보훈정책

대만은 1949년 국공내전으로 인하여 가족과 재산을 남겨둔 채 대만으로 건너온 군인들이 중년을 넘어 제대하게 됨에 따라 국방력 강화 및 이를 위한 군대의 육성과 사회복지의 달성을 상호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로 국가보훈정책을 발전시켜 왔다고 한다. 초기 정부는 국군의 재개편을 단행하면서 현역 근무에 부적합한 군인들의 제대를 권장해 군대 내의 신진대사를 이루고자 하였다. 당시 총통 장제스는 일생 동안 군영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한 퇴역군인들을 돌보도록 1953년에 개최된 군사회의회에서 행정원(行政院)으로 하여금 전문 부서를 설립하여 퇴역군인들의 취업 및 안주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954년 11월 1일에 정부는 보훈 주무기관으로 행정원 산하에 행정원국군퇴역제역관병취업보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당시 위원회는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었다. 이후 1966년 9월 8일에 행정원국군퇴역제역관병보도위원회로 그 명칭이 바뀌었으며 그 업무는 제대군인들의 취업 지원 외에도 의료, 양로, 진학 등을 협조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몇 차례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2013년에는 이름에서

10) 주로 요약한 자료로는 김학준, “대만의 보훈제도”, 세계속의 보훈, 국가보훈처, 20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 외국보훈제도 비교연구: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대만, 보훈교육연구원, 2005; 한인희,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 관련 해외사례 소개: 대만”, 군내 자살처리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2006년도 전문가 초청토론회 자료집),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6, 145-166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 재해병사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 2007; 유영옥, 각국의 보훈정책비교론, 홍익재, 2009; 공유식·서운석, “대만 보훈정책 현황과 시사점 연구”, 대만연구 2,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 2011, 1-25쪽; 이영자, “주요 국가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복지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미국, 호주, 대만,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제13권 제1호, 한국보훈학회, 2014, 83-112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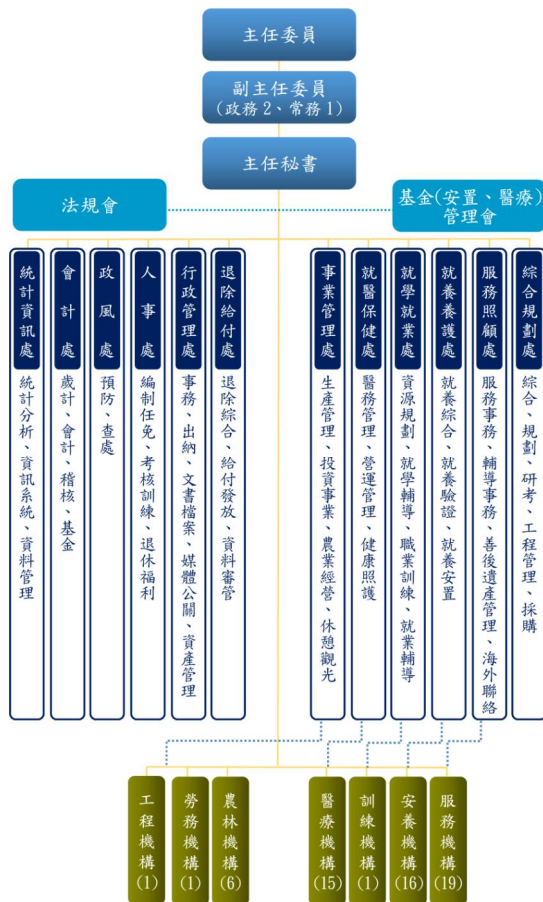
행정원이 빠져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로 이어지고 있다.

대만의 보훈관련 법령으로는 앞서 언급한 주무기관인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조직과 관련하여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조직법(國軍退除役官兵輔導委員會組織法)」(「행정원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조직조례(行政院國軍退除役官兵輔導委員會組織條例)」의 폐지제정) 및 관련 법령; 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한 「국군퇴제역관병보도조례(國軍退除役官兵輔導條例)」 및 시행세칙; 퇴역군인들의 취업, 의료 등을 돌보기 위한 「국군퇴제역관병취업안치방법(國軍退除役官兵就業安置辦法)」, 「국군퇴제역관병취의방법(國軍退除役官兵就醫辦法)」, 「국군퇴제역취양안치방법(國軍退除役官兵就養安置辦法)」, 「국군퇴제역관병생활지도관리방법(國軍退除役官兵生活指導管理辦法)」 등이 마련되어 있다.

(1) 보훈 주무기관: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보훈행정의 주무기관인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행정원 산하로 타이베이(臺北) 시에 소재하고 있다. 위원제로서 행정원장이 주임위원을 임명하고 그 아래 3명의 부주임위원(정무 2, 상무 1)과 9~13명의 위원을 둔다. 주임위원 아래에는 주임비서 1명을 둔다.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4-3>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조직표



조직도에서 실선은 지휘계통을, 점선은 대표업무의 감독을 의미한다. 내부 행정단위로서는 종합기획처(綜合規劃處), 복무조고처(服務照顧處), 취양양호처(就養養護處), 취학취업처(就學就業處), 취의보건처(就醫保健處), 사업관리처(事業管理處), 퇴제종부처(退除給付處) 등 7개의 업무처와 행정관리처(行政管理處), 인사처(人事處), 정풍처(政風處), 회계처(會計處), 통계자신처(統計資訊處) 등 5개의 보조처를 두며 별도로 법규회와 기금관리회 등 2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소속 기구로는 현재 3급 기구로서 의료기구 3개소(영민종합병원)와 4급 기구로서 봉사기구(服務機構) 19개소(영민봉사처), 양로기구(安養機構) 16개소(영민의 집), 훈련기구(訓練機構) 1개소(직업훈련센터), 의료기구(醫療機構) 12개소(영민병원), 농림기구(農林機構) 6개소(농장, 산림보육사업관리처), 노무기구(勞務機構) 1개소(타이베이노무센터), 사업기구(工程機構) 1개소(영

민공정회사)가 있다.

(2) 보훈대상자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보훈대상은 영민(榮民)으로 지칭되며 이들은 복무 10년 이상의 지원역 장교, 부사관, 사병; 군 복무 중 작전 혹은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심신장애로 인해 퇴(전)역 이후 생계가 곤란한 자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자; 사병, 부사관, 장교로 복무 중 1958년 중국이 진먼, 마주섬을 포격함에 따라 이 섬을 방어하기 위한 8·23대만해협방어전에 참전한 의무역 군인이나 기타 국방부가 인정하는 국가안전과 관련된 주요 전쟁에 참가한 자이다. 특히 대만정부는 1990년 1월에 1958년의 8·23대만해협방어전에 참전했던 진먼, 마주 지역 민방위자위대원도 보훈대상자로 인정함에 따라 이들 민간인도 보훈대상에 편입되었다. 이외에도 1945년에서 1949년 사이 국공내전에 참가한 이후 중국에 남아 있다가 개별적으로 중국에서 홍콩, 마카오 등지로 탈출해 대만정부에 의해 대만으로 이송된 자,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중국인민지원군 중 포로가 되었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54년 자유를 찾아 대만으로 귀순한 자도 보훈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보훈대상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 친족도 보훈대상자에 포함된다.

(3) 주요 보훈정책

대만의 주요 보훈정책과 관련해서는 먼저 교육 및 직업기술훈련 지원 정책이 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 보장은 보훈 주무기관인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중요한 지원 업무 중 하나이다.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보훈대상자의 진학, 평생학습 장려, 인적소양을 제고시키고, 전문 특기를 배양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입학시험 가점, 학비보조금, 장학금 지급, 각급 학교와 협조해 특별전형 실시 등의 여러 가지 교육 보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보훈대상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이나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취업 지원 정책이 있다. 대만 국방부는 전역을 앞둔 군인들에게 사전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주선하고 있다. 대만 취업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보훈기관은 자체적인 사업기구를 경영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외에도 정부기관이나 일반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고, 공무원특별고사를 통해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등의 여러 지원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도 바로 보훈대상자의 취업 지원이다.

세 번째로는 의료 지원 정책이 있다.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대만의 북부, 중부,

남부의 대도시인 타이베이, 타이중(臺中), 까오슝(高雄) 세 곳에 영민종합병원을, 그리고 전국 각지에 12개의 지역 영민병원 등 모두 15개의 병원을 설립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영민병원의 진료 대상은 보훈대상자나 가족이 위주로서 대만 보훈대상자 전속병원이라고 칭할 수 있으나 일반 시민 모두 영민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일부 영민병원의 경우 나름대로의 특정 영역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이루고 있어 대만 전체 의료체계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에는 영민병원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이 독립적인 보훈제도 내의 의료 지원이었지만, 1995년 3월 강제적인 사회보험의 하나인 전국민건강보험(全民健康保險)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보훈대상자나 군인 모두 이 건강보험에 편입되어, 보훈제도 상의 의료 지원은 사회보장제도와 완전히 결합되어 건강보험제도의 전체적인 구도 아래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제대 군인이나 상이군인 및 그 권속을 돌보는 본연의 임무에는 별다른 변화는 없다.

네 번째로는 양로 지원 정책이 있다.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업무 중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일생 동안 국가를 위해 공헌을 한 보훈대상자의 노년 양로 문제 해결이며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상이제대군인 혹은 연로해 근로능력이 없는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구를 설립해 이들을 수용한다. 이러한 양로기구는 영민의 집으로 명명해 국비로 전액 부담하며 아울러 적절한 재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국비 전액 부담의 영민의 집 외에도 1990년부터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퇴직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비부담의 영민의 집을 설립, 정부가 시설을 제공하고, 입주자는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양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일부 영민의 집 내에 자비 양로기구, 자비 기능장애인 요양기구를 설치하여 기능장애 제대군인을 돌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명절 위로금 지급; 긴급한 재난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보훈대상자나 보훈대상자 가족에 대해 긴급재난 구제금 지급; 독신의 독거 보훈대상자 및 생활이 곤란한 보훈대상자 유족의 전면적 조사; 독거 보훈대상자 보호 조치; 제대군인의 권익이 손상되거나 분규, 소송사건이 발생할 경우 각 지방 보훈대상자 지원처가 법률고문을 초빙해 무료로 자문 서비스 및 분규 조정 협조 등도 보호 지원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2) 국방부 담당의 보훈정책: 상이군인과 사망한 군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편, 군인이 작전 혹은 공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만 이로 인해 불구가 되어 군복무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대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상이군인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보상금 외에도 다음 절에서 언급하게 될 군인보험 상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들을 영민으로 인정하여 퇴제역관병보도위

원회로 하여금 치료를 맡게 하며 위에서 언급한 영민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과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1) 개요

상이군인과 사망한 군인에 대한 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의 업무는 유수업무로서 국방부 예비군사령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군인무휼조례(軍人撫卹條例)」와 시행세칙에 따라 처리된다. 보상금의 지급은 작전으로 인한 상이자, 공무 수행으로 인한 상이자 외에 질병 혹은 의외의 사고로 인한 상이자도 모두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사망자의 경우도 상이자와 동일하다. 또한 자해사망으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도 질병사망의 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범죄로 인한 자해사망은 해당되지 않는다)¹¹⁾.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자는 사유에 해당되는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작전으로 인한 상이는 작전임무를 수행하다가 불구가 된 경우, 적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불구가 된 경우, 적에게 포로가 되지 않으려다 불구가 된 경우, 비상사태 시 임무 수행 중 불구가 된 경우 등이다. 이외에도 훈련 시 무기 혹은 탄약으로 인한 상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 수행 중 폭도의 공격으로 불구가 된 것도 작전으로 인한 상이에 포함된다. 사망도 마찬가지이다.

공무 수행으로 인한 상이는 공무 수행 중 혹은 공공안전의 보위 및 공유물 보호로 인해 상이를 입은 경우, 공공재해를 구조하다가 불구가 된 경우, 영내에서 의외의 사고나 급성질병으로 불구가 된 경우나 공무출장 중 불구가 된 경우, 과도한 근무 또는 피로의 누적으로 인하여 불구가 된 경우도 포함된다. 사망도 마찬가지이다. 질병 혹은 의외의 사고로 인한 상이는 영내에서 급성질병이 아닌 병환으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군영 밖에서 의외의 사고로 상이를 입은 경우이다. 사망도 마찬가지이다. 상이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중급기능장애(重度機能障礙), 경급기능장애(輕度機能障礙)로 구분된다. 국방부에서 등급을 결정한다.

(2) 상이군인에 대한 보상금의 종류와 지급 기준

상이군인에 대한 보상금에는 상이무휼금, 섬양금(贍養金)¹²⁾, 군인보험 급부 등이 있

11) 대체복무자에 대하여도 「체대역역남무휼실시방법(替代役役男撫卹實施辦法)」에서 공무 수행으로 인한 사망 또는 장애를 얻은 자나 질병 혹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애를 얻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해사망자에 대하여도 범죄로 인한 자해사망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제6항).

다. 이 중 여기서 살펴볼 상이무훈금은 최종적인 상이 등급이 확정된 날부터, 정부는 상이자 본인을 수익자로 하는 상이무훈령을 발급하며 아울러 「군인무훈조례」 규정에 따라 연금형의 상이무훈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무훈금은 상이군인의 마지막 재직 시의 본봉에 1배를 더한(加一倍)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이 사유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상이무훈금 지급 기준(2011년 3월 29일 수정 시행)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작전으로 인한 상이의 경우는,

- 1등급 상이: 평생 매년 5개 기준수.
- 2등급 상이: 10년간 매년 4개 기준수.
- 3등급 상이: 5년간 매년 3개 기준수.
- 중급기능장애: 1차례에 4개 기준수(상이무훈령은 발급되지 않는다).
- 경급기능장애: 1차례에 3개 기준수(상이무훈령은 발급되지 않는다).

공무 수행으로 인한 상이의 경우는,

- 1등급 상이: 평생 매년 4개 기준수.
- 2등급 상이: 10년간 매년 3개 기준수.
- 3등급 상이: 5년간 매년 2개 기준수.
- 중급기능장애: 1차례 3개 기준수(상이무훈령은 발급되지 않는다).
- 경급기능장애: 1차례 2개 기준수(상이무훈령은 발급되지 않는다).

질병 혹은 의외의 사고로 인한 상이의 경우는,

- 1등급 상이: 15년간 매년 3개 기준수.
- 2등급 상이: 8년간 매년 2개 기준수.
- 3등급 상이: 1차례 3개 기준수(상이무훈령은 발급되지 않는다).
- 중급기능장애: 1차례 2개 기준수(상이무훈령은 발급되지 않는다).
- 경급기능장애: 1차례 1개 기준수(상이무훈령은 발급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공중근무요원이나 잠수함근무요원의 상이무훈금 지급 기준은 일반 상이군인 보다 비교적 더 높은 편이다. 공중 또는 잠수함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작전으로 인한 상이나 공무 수행으로 인한 상이로 3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공중근무 또는 잠수함근무 요원 상이자는 일반 작전으로 인한 무훈금 지급 기준수에 각각 7개 기준수를 더한 상이무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상이무훈금의 수익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내란 또는 외란죄의

12) 상이군인 퇴직연금으로 「육해공군군관사관복역조례(陸海空軍軍官士官服役條例)」에 근거하며 지급 기준은 같은 계급 직위의 현역 본봉의 두 배를 기준으로 하여 그 50%의 급여를 평생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이 확정되거나 종신토록 공권이 박탈되거나 사망하게 되면 지급은 중지된다. 수익자가 공권이 박탈되면 무휼금 지급은 일시 중지되지만 그 원인이 소멸되면 무휼금 지급이 회복되어 비교적 관대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3) 사망한 군인에 대한 보상금의 종류와 지급 기준

작전이나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의외의 사고로 인해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이 경우 수익자는 유족이 된다. 이 경우 보상금은 일시불 보상금의 흘금(一次卹金)과 연금형의 연무금(年撫金)으로 나뉜다. 그 외에 보험금도 지급된다.

보상금을 수령하는 유족은 다음의 순서로 규정되어 있다(이하의 유족 중 동일 순서에 여러 명이 있어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평균 분배하며, 자격포기 혹은 법정 사유로 수령에 대한 권리를 상실했을 때는 나머지 유족이 이를 수령하게 된다).

- 1순위: 부모, 배우자, 자녀. 단, 배우자는 재혼하지 않은 자.
- 2순위: 조부모, 손자녀, 과며느리, 과사위. 단, 과며느리나 과사위는 재혼하지 않은 자.
- 3순위: 형제자매. 단, 미성년 혹은 이미 성년이지만 심신장애로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
- 4순위: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단, 부양자가 없는 경우.

흘금 지급 기준(2011년 3월 29일 수정 시행)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작전으로 인한 사망: 복무기간이 30년 미만인 자는 30년으로 계산하여 모두 37.5개 기준수(최후 재직시 본봉의 가일배 금액), 복무기간이 30년을 초과한 자는 41.25개 기준수 지급.
- 공무 수행으로 인한 사망: 복무기간이 15년 미만인 자는 15년으로 계산하여 모두 21.875개 기준수, 복무기간이 15년을 초과한 자는 초과하는 매 1년에 0.625개 기준수를 더하여 최고 34.375개 기준수 지급(1년 미만은 매 1개월에 0.052개 기준수로 계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
- 질병 혹은 의외의 사고로 인한 사망: 복무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는 10년으로 계산하여 모두 15개 기준수, 복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는 증가하는 1년마다 0.5개 기준수를 더하여 최고 27.5개 기준수 지급(1년 미만은 매 1개월에 0.042개 기준수로 계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

연무금은 매년 5개 기준수가 유족에게 지급되며 지급 연한은 작전으로 인한 사망의 경

우 20년간, 공무 수행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15년간이다. 질병 혹은 의외의 사고로 인한 사망은 복무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3년으로 계산하고 복무 만 3년은 4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 2년의 복무기간이 증가될 때마다 1년을 더하여 최고 1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작전이나 공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군인의 유족 중 부모 또는 배우자나 질병 혹은 의외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군인의 유족 중 독자녀의 부모 혹은 무자녀의 배우자에게는 연무금이 평생 지급된다. 그리고 작전으로 인하여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무금의 지급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수령하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지급하며, 수령자녀가 성년이지만 여전히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사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또한 수령자녀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원인이 소멸될 때까지 계속하여 연무금을 지급하는 등의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공중 근무요원이나 잠수함근무요원이 작전이나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연무금의 원 지급 기준수에 7개 기준수를 더한 연무금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부상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작전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자가 3년 이내 부상이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는 작전으로 인한 사망의 지급 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3년이 지나 사망하는 경우는 공무 수행으로 인한 사망의 지급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자가 3년 이내 부상이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는 공무 수행으로 인한 사망의 지급 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3년이 지나 사망하는 경우는 질병 혹은 의외의 사고로 인한 사망의 지급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작전이나 공무 수행 중 실종된 경우, 지상에서 실종된 지 만 1년이 지났거나 공중 또는 해상에서 실종된 지 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행방불명이라면 작전으로 인한 사망 또는 공무 수행으로 인한 사망의 지급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작전 또는 공무 수행 이외의 실종자의 경우에는 법원의 사망선고를 거쳐 의외의 사망의 지급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작전 또는 공무 수행 실종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한 후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무효령을 철회하지만 기 지급된 보상금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않는 등 비교적 관대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3) 보훈제도의 보완: 군인보험

대만의 보훈제도는 사회보장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대만의 사회보장제도는 강제성을 띄는 사회보험을 위주로 사회구제를 통하여 이를 보조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기초는 군인보험으로부터 비롯하며, 대만정부는 군인의 사기 진작, 생활 보장 및 사회 안정을 위하여 1950년 6월 1일부터 강제적인 보험을 통해 군인이 사망, 부상, 퇴역할 경우 기본적인 경제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국방부 주관으로 보험 업무

는 대은인수(臺銀人壽保險股份有限公司, BankTaiwan Life Insurance Co., Ltd.)¹³⁾에서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관계 법령으로는 「군인보험조례(軍人保險條例)」와 시행세칙이 있다. 이와 같은 군인보험은 제대군인에 대한 보훈제도를 직접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국방부는 1998년 7월 1일부터 군인보험 외에도 국군단체보험을 실시하면서 보장을 더욱 강화하였다.

(1) 개요

군인보험은 국방부에서 주관하고 대은인수에서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군인보험의 관련기관으로는 총통부(總統府), 국가안전회의 및 소속기관, 국방부 및 소속기관(기구), 교육부 및 소속기관, 공립학교, 행정원해안순방서(行政院海岸巡防署) 및 소속기관, 기타 기관(기구), 행정법인이다.

군인보험은 국방부에서 정책, 법제, 예산 및 계획을 감독 및 지도하며 국방부 예비군 사령부에서 법령규장의 제정공포 신청, 수정 및 답변; 업무규장계획의 심사 결정; 업무 시행의 감독 심사; 피보험인 및 수익자의 자격 심사 결정; 보험료 예산의 편성; 보험금 지급 및 환급 심사 결정; 보류된 보험금 지불신청권의 기록; 사망, 장애 시 보험금 지불 안건의 심의 결정; 분쟁 안건의 조사 심의; 업무 및 경비 통계표 보고의 심사 수정 전달 보고; 정산사 초청 혹은 정산업체에 위탁하여 정산 처리; 기타 군인보험 관련 사항을 담당한다.

위탁기관에서는 업무법규장칙(章則)의 심사; 업무기술의 설계; 담보수속의 처리 및 변동사항의 기록; 기금 및 보험료의 보관; 보험비의 계산, 심사, 징수 및 기록; 각 보험금 항목의 심사; 보류된 보험금 지불신청권의 기록; 업무, 회계, 재무수지의 통계표 및 연도 결산의 제작; 피보험인 및 각 항의 보험금 지급 사례의 데이터 구축, 관리 및 운영; 정산사 초청 혹은 정산업체에 위탁하여 정산 처리; 기타 군인보험 관련 사항을 담당한다.

군인은 모두 군인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육·해·공군의 현역 군관, 사관, 사병; 군사정보 및 유격부대원으로서 국방부 또는 국방의 위임을 받은 기관의 비준을 얻고 기록이 있는 자; 동원, 임시, 교육, 의무, 점열, 보충병 훈련의 소집에 응한 자 또는 기타 단기 복무자; 국군 각 군사학교의 군 장학생 혹은 교육, 훈련대의 학생 혹은 군사훈련의 보충병역자; 국방부 소속 군사정보기관의 초빙 약정의 군사정보인원으로서 기록이 남아있는 자가 포함된다. 이들은 사정된 등급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다. 단, 국방부 및 소속

13) 공식 사이트는 <http://www.twfhclife.com.tw>(2020-01-10).

기관의 사무직, 교육담당 및 고용인원과 국군 각 군사학교의 자비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피보험인의 보험 유효기간은 소집입영, 입학, 복역, 복직, 지원입영, 고용 등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부터 시작하여 제대, 제역, 정역, 금역, 소집해제 및 사고로 인한 이직(離職) 등 명령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기까지이다. 군사학교의 경우 입학, 복학 혹은 입영보고일에 시작하여 졸업, 수료, 훈련수료, 휴학, 퇴학일에 종료된다. 국군 각 군사학교의 자비 학생 중 군 장학생으로 신청하여 전환한 자는 비준일로부터 보험이 발효하며, 국군 각 군사학교의 군 장학생이 졸업할 경우 혹은 교육훈련반대 학생이 훈련교육을 마치고 현역군관에 임관된 경우 계속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의 보험연수는 누적되어 계산된다.

(2) 보험금 지급

제대 및 장애로 인한 보험금, 육아휴직보조금 또는 권속의 장례보조금의 지급은 피보험인 본인이 수익자이며, 사망 시의 보험금은 피보험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가족 관계 중 피보험인이 지정한 사람이 받는다. 피보험인에게 이와 같은 친척이 없거나 지역적 환경 제한으로 인해 친척이 수익자가 될 수 없는 경우, 피보험인은 국방부의 심사비준을 거쳐 기타 친구나 공익법인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수익자가 지역 환경의 제한으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보험금의 지급은 수익자가 신청할 수 있을 때 심사를 거쳐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피보험인은 6개월 내 동일한 사유로 2종류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장 높은 한 종류를 그 한도로 한다.

사망 시의 보험금의 지급은 피보험인의 사고가 발생한 달의 보험수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망 원인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작전이나 공무 혹은 의외의 실종의 경우에는 지상에서는 1년, 해상이나 공중에서는 반년이 지난 후에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각기 작전 혹은 공무 혹은 의외의 사망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상이로 인해 퇴역한 군인은 무훈금 혹은 섬양금을 수령하는 것 외에도 일시불의 보험금(심신장애급부)을 지급받는다. 이 보험금은 상이자 본인이 수익자로서 당시 계급에 따른 본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상이 원인에 따라 각기 다른 금액을 받지만 경급기능장애자는 배제되고 있다. 상이 등급은 국방부에서 결정한다.

제대 시 퇴직보험금은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보험수가를 차등 지급한다.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한지 만 5년이 된 자는 5개의 보험수가를, 보험에 가입한지 만 5년이 넘은 자

는 6번째 해부터 1년마다 1개씩의 보험수가가 추가로 지급된다. 「군인보험조례」 상 규정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4-1> 대만 군인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

구분	원인	지급 기준
사망	작전	48개 보험수가
	공무	42개 보험수가
	질병이나 의외의 상황으로 인한 사망	36개 보험수가
상이	작전	- 1등급 상이: 40개 보험수가 - 2등급 상이: 30개 보험수가 - 3등급 상이: 20개 보험수가 - 중급기능장애: 10개 보험수가
	공무	- 1등급 상이: 36개 보험수가 - 2등급 상이: 24개 보험수가 - 3등급 상이: 16개 보험수가 - 중급기능장애: 8개 보험수가
	기타 질병이나 의외의 사고로 인한 장애	- 1등급 상이: 30개 보험수가 - 2등급 상이: 20개 보험수가 - 3등급 상이: 12개 보험수가 - 중급기능장애: 6개 보험수가
퇴직	보험 가입 만 5년인 자	5개의 보험수가
	보험 가입 만 6년~10년인 자	6~10개의 보험수가(1년마다 1개씩 추가)
	보험 가입 만 11년~15년인 자	11~20개의 보험수가(1년마다 2개씩 추가)
	보험 가입 만 16년~19년인 자	21~32개의 보험수가(1년마다 3개씩 추가)
	보험 가입 만 20년 이상인 자	33~45개의 보험수가(1년마다 1개씩 추가)
	보험 가입 만 5년 미만, 아직 상이보험금, 육아휴직보조금 또는 권속의 장례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은 자	마지막달 분을 기준으로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 반환

(3) 보험료 납부와 권리 제한

군인보험의 보험료율은 피보험인의 매월 보험수가금액(본봉에 준함)의 8~12%이다. 군인보험의 보험료는 매월 납부하며, 피보험인은 35%만 부담하고 나머지 65%는 정부에서 부담한다. 단, 의무역의 보험료는 정부에서 전액 부담한다.

피보험인이 보험에 가입한지 3년 미만이면서 보험료 납부를 까닭 없이 중단하거나, 작전, 공무, 질병이 아닌 이유로 자해사망하거나 장애를 얻게 된 경우¹⁴⁾, 사형수가 된 경우, 반란죄를 일으켜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해 재산이 몰수되거나 혹은 보험 기간 내 상이보험금, 육아휴직보조금 또는 권속의 장례보조금을 이미 받은 자 외에는 피보험인 본인 혹은 수익자는 납부한 일부 보험료의 무이자 반납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적 상실, 반란죄를 일으켜 판결을 받은 경우, 고의적으로 피보험인을 죽게 한 경우, 급부가 결정된 날부터 10년간 이유 없이 이를 불행사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급부의 권리를 박탈당한다.

피보험인이 작전, 공무 중 혹은 의외의 사고로 인하여 실종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부대나 고향으로 복귀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업무 관리자나 지방정부에 보험금을 이미 받았음을 신고함으로써 추징을 방지한다. 이러한 경우 복귀 후 피보험인은 보험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피보험인 또는 수익자가 사기에 의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에는 추징 외에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14) 「군인보험조례」 제18조 제1항 제2호. 이 부분은 2019년 5월에 수정되었다. 수정 전에는 “질병으로 인한” 부분이 빠져있었다. 편의행정에 대한 감찰과 관련하여 2016년에 연탄자살(燒炭自殺)한 현역 군인에게 급부가 발생한 것이 조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감찰위원들이 지적하면서, 국방부가 작전 또는 공무 수행이 아닌 이유로 자해사망한 군인을 질병으로 인한 사망(因病死亡)에 비추어 급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편의행정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현행 공무원 및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자해로 인한 사망 또는 장애에 대해 급부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고, 수정 전 「군인보험조례시행세칙」 제23조나 「군인보험조례」 제13조 등을 근거로 「군인무효조례」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인을 준용하여 급부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례의 수정 역시 자해사망을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비추어 처리하는 것과 수정 전 「군인보험조례」와의 정합성을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國防部核定軍人於服役期間非因作戰或非因公而自殺死亡者之案件種類為「因病死亡」，違反「軍人保險條例」規定；相關疑義雖早經審計部函請該部改善，惟國防部迄今仍未完成修法，衍生未依法行政之亂象，並滋爭議，遭監察院糾正。(監察院)”，
http://www.cy.gov.tw/News_Content.aspx?n=124&sms=8912&s=12752; 관련 기사로는 “自殺等於病死?軍人保險審核違法監委糾正國防部”，
<http://newtalk.tw/news/view/2018-02-22/115033> (2020-01-10).

4) 기타 보조금

「군인 및 기타권속우대조례」와 「국군재대만유족상이관병 및 무의탁권속보조금발급방법」 등의 근거에 따라 대만정부는 무휼대상으로 등록된 유족 또는 1949년 중양정부가 대만으로 패퇴할 때 군인 본인은 임무로 인하여 건너오지 못하고 그 가족만이 중양정부를 따라 대만으로 건너온 무의탁 권속 등에게 기타 보상금 성격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종류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족생활보조금

작전으로 인해 사망한 군인의 부모 혹은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 공무 수행으로 사망한 군인의 부모 혹은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로 생활이 곤란한 자, 복무 만 20년 이상 군인의 유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자, 자녀가 미성년이거나 성년이지만 재학 중인 자, 독자의 부모 혹은 자녀 없는 배우자로 생활능력이 없는 자, 중대한 재해로 중병을 앓거나 불구가 된 자는 유족의 무휼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매 반년 유족생활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군급 NT\$48,000; 영관급 NT\$42,000; 위관급 및 사관장 NT\$38,000; 하사관 및 사병 NT\$34,000).

(2) 유족생계곤란보조금

작전이나 공무 수행으로 보상 대상으로 등록되었고 아직 무휼기간 내인 유족 가운데 중병이나 중풍, 전신 불구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거나 자녀가 너무 어려서 생활이 곤란한 자는 유족생계곤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보조금은 질병 혹은 곤경 상태 또는 실제적인 수요에 따라 NT\$2,000~20,000이 지급될 수 있지만 동일 대상자 또는 동일 원인에 대해서는 1년에 1차례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3) 유족구정보조금

1949년 중양정부가 대만으로 패퇴하기 전에 적군에 의해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하여 자결한 군인의 재(在) 대만 유족은 매년 구정마다 NT\$50,000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무휼기간 중인 유족, 무휼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계속 보조하도록 등록된 유족, 가족만이 대만으로 건너간 무의탁 권속은 장군급 매 가정 NT\$5,000, 영·위관급(사관장 및 무의탁 권속 포함) 매 가정 NT\$4,000, 하사관·사병 매 가정 NT\$3,000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유족 및 권속 주택·연료보조금

1989년 6월 30일 이전 무휼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족, 가족만이 대만으로 건너온 무의탁 권속은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로 나누어 유족 및 권속 주택·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989년 6월 30일 이전에 무휼대상으로 등록되어 원래 주택보조비, 연료보조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의 매월 주택 및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은 중장 이상 NT\$920, 대령~소장 NT\$820, 대위~중령 NT\$720, 하사~중위(사관장 포함) NT\$620, 사병 NT\$520이고, 1989년 7월 1일 이후에 무휼대상으로 등록된 자에게는 계급의 구분 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NT\$120의 주택·연료보조금이 지급된다.

(5) 상이군인생활보조금

상이군인이지만 정부기관에 의하여 수용되지 않은 1등급 상이군인으로서 각종 기능상 실로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상이군인 본인, 상이군인 본인이나 직계 친속이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 중대 재해를 당했거나 직계 친속이 사망한 자, 가정이 빈곤하고 자녀가 재학 중인 자는 1년 내에 NT\$30,000 내의 상이군인생활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6) 장례보조금

무휼대상의 상이군인이나 복무 3년 이상 군인의 군속신분증을 가진 유족, 가족만이 대만으로 건너온 무의탁 권속이 사망할 경우에는 장례보조금 NT\$40,000을 지급받을 수 있다.

5) 기념 및 추모사업

대만에는 순국선열이나 전몰장병의 위패를 모신 국방부 예비군사령부 관할의 국민혁명 충렬사(國民革命忠烈祠)와 중요한 공을 세우다 사망한 군인이나 경찰, 국민 등을 기념하기 위해 이들의 위패를 모신 각지 충렬사, 그리고 작전이나 공무 수행으로 사망한 군인이나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장을 위한 국군시범묘지, 총령탑 등을 중심으로 기념 및 추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4-4> 국민혁명충렬사



국민혁명충렬사는 타이베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화민국 건국 전 여러 차례의 혁명 중에서 순국한 혁명선열과 건국 이후의 각종 전쟁에서 국가를 위하여 전몰한 선열들의 위패를 모셔 이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을 기념하는 곳이다. 직할시와 각 지방에도 충렬사가 설치¹⁵⁾되어 있으며 입사 자격은 숭선해서 적진을 돌파하다 순직한 자, 적 섬멸에 있어서 현저한 공훈을 세운 자, 적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하다 사망한 자, 기타 표창할 만한 충렬 행위자 등이며 경찰, 의용경찰, 민방위대원,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및 기타 법에 근거한 공무종사요원으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 수행을 하다가 사망했거나 기타 충렬 업적을 가진 자가 입사된다. 이 외에도 충분한 충렬 공적을 가진 일반인도 입사가 가능하다.

또한 「대만지구군인묘지통일정비건설장기계획(台灣地區軍人公墓統一整建遠程計畫)」에 따라 대만정부는 타이베이군인묘지, 이란(宜蘭), 신주(新竹), 타이중, 장화(彰化), 타이난(臺南), 까오슝, 타이둥(臺東), 평후, 렌장(連江), 자이(嘉義) 등 각 지역 군인충령사(軍人忠靈祠) 및 진먼과 화롄(花蓮)군인묘지까지 총 15개소의 군인묘지(군인충령사) 설치를 완료하였다.¹⁶⁾ 15개소 군인묘지에는 현재 총 19만 여 위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누계 13만 여 위가 매장되어 있으며, 남은 용적은 6만 여 위이다.

15) 지방정부 관할: 基隆市忠烈祠, 臺北市忠烈祠, 新北市忠烈祠, 桃園市忠烈祠, 苗栗縣忠烈祠, 臺中市忠烈祠, 彰化縣忠烈祠, 雲林縣忠烈祠, 南投縣忠烈祠, 嘉義市忠烈祠, 臺南市忠烈祠(新化), 臺南市忠烈祠(南區), 高雄市忠烈祠, 屏東縣忠烈祠, 澎湖縣忠烈祠, 宜蘭縣忠烈祠, 花蓮縣忠烈祠, 臺東縣忠烈祠.

기타: 通霄神社(구 通霄忠烈祠), 豐原區忠烈祠, 烏松區忠烈祠, 鐵砧山鄭成功廟, 太武山忠烈祠, 馬祖忠靈祠, 員林神社.

16) 이와 관련해서는 <http://www.nca.gov.tw/cemetery/> (2020-01-10).

<그림4-5> 타이베이군인묘지



「군인묘지건설계획및관리방법(軍人公墓籌建及管理辦法)」에 근거하여 군인묘지와 총령탑은 내정부(內政部) 및 각 직할시나 현(시) 정부에서 주관하며, 장례와 안장(葬厝) — 장례(營葬屍體), 매장(埋藏骨灰), 화장(存放骨灰), 수장(樹葬) — 관련 사항과 대상, 신청절차, 관리, 제사, 경비에 이르는 사항들이 모두 법제화되어 있다. 군인묘지는 복무 중 전사 혹은 공무 수행으로 사망한 자들을 안장하며, 이들의 배우자와 복무 중 질병 또는 의외 사망한 군인 및 그 배우자도 군인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또한 영예국민증을 받은 제대군인이 질병 또는 의외 사망한 경우에도 군인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며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단, 사형의 판결을 받은 경우, 수감 중에 사망한 경우, 도망 중에 사망한 경우, 자해사망한 경우, 군의 명예를 더럽힌 자는 제한된다. 그렇지만 자해사망한 경우라도 원인이 순정(純正)하고 보상을 받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군인묘지 안장에 제한을 두지 않아(같은 법 제8조 제4호)¹⁷⁾ 자해사망자에 대한 군인묘지 안장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17) “… 但自殺原因純正或自殺經撫卹有案者，不在此限。”.

<그림4-6> 국군시범묘지



1982년에 설치된 국군시범묘지는 「국군사망관병안장설치관리방법(國軍亡故官兵葬厝設施管理辦法)」을 근거로 국방부가 주관하며 제대군인의 공훈이나 계급에 따라 구역이 나뉘어져 안장되고 있다. 국군시범묘지에는 질병 또는 의외 사망을 한 제대군인 중 훈장을 받은 자, 만 20년 이상 복무한 자, 섬양금을 받은 자가 안장될 수 있으며 징역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지 않은 자(단, 과실범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징계 중 사망한 자, 기타 군의 명예를 더럽힌 자의 안장은 제한된다. 한편, 안장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방부는 2002년에 국군시범묘지 내 화장자의 유골을 안치하는 충령전(忠靈展)을 설치하였다. 충령전도 제대군인의 공훈 혹은 계급에 따라 구역이 나뉘어져 있으며 신청자격은 훈장을 받은 자, 만 10년 이상 복무한 자이다.

<그림4-7> 국군타이베이충령탑



타이베이와 장화, 까오슝 세 곳에 설치된 총령탑 역시 국방부가 주관하며 신청자격은 현역기간 중 작전이나 공무 수행으로 사망한 자, 생전에 훈장이나 표창을 받은 자, 만 10년 이상 복무한 자이다. 총령탑 납골당은 계급 구분 없이 동일한 규격과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외에도 대만정부는 타이베이에 국군역사박물관(國軍歷史文物館), 까오슝에 공군군사관(空軍軍史館)과 해군군사관(海軍軍史館), 진먼에 8·23전사관(八·二三戰史館)과 구닝터우전사관(古寧頭戰史館) 등을 설치하고 군인 및 제대군인과 관련한 기념일 등을 지정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 자해사망한 군인에 대한 대만의 처우실태

앞장에서 대만의 보훈정책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를 중심으로 독립형 보훈조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대만의 보훈정책은 국방부 예비군사령부가 담당하는 유수업무로서 상이군인과 사망한 군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보완으로서 사회보험제도인 군인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 기타 보상금 성격의 보조금 지급, 기념 및 추모 사업 등을 통하여 비교적 촘촘하게 보훈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상이군인 및 사망한 군인에 대한 보훈정책은 사인(과 상이 등급)에 따라 차이를 두고 실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대만과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무훈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과는 다르게¹⁸⁾ 자해사망한 군인에 대하여도 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 및 군인 묘지 안장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하에서는 사망한 군인 중 특히 자해사망한 군인에 대한 대만의 처우실태에 대하여 정리한다.

1) 사망한 군인에 대한 처우

사법원대법관(司法院大法官) 제430호 해석에서 군인은 광범한 의미의 공무원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병역법」 규정에 따라 소정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¹⁹⁾ 그러므로 군인의 사망사고는 「국가배상법」이나 공무원의 지위나 처우 등과 관련된 법령 및 그 해석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병역법」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

18) 중국에서는 자해사망한 군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없다.

19) “釋字第430號解釋(司法院大法官)”, .

[http://cons.judicial.gov.tw/jcc/zh-tw/jep03/show?expno=430%20\(2020-01-10\)](http://cons.judicial.gov.tw/jcc/zh-tw/jep03/show?expno=430%20(2020-01-10)).

다: 전사 또는 공무 수행으로 사망한 군인의 자녀를 그 가정이 교육과 양육의 능력이 없을 때 정부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 교육과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전투 훈련 또는 공무 수행으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정부는 국군퇴역역관병 유족에 비추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전사 혹은 공무 수행으로 사망한 군인에 대하여 정부는 안장의 책임이 있고, 장례 및 안장을 위한 장소와 추모비를 설치하고 제사, 표창한다(제5호). 전사 또는 공무 수행으로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의외 사망한 현역 군인 및 그 배우자는 군인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제6호). 군인은 기타 상훈, 무휼, 보훈, 상이 또는 사망 위문, 보조금 및 우대 등 법령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제7호). 이들 규정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보훈정책들의 근거가 되고 있다.

「병역법」이 사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보상금 지급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군인무휼조례」와 시행세칙, 이를 준용하고 있는 「군인보험조례」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인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먼저, 작전으로 인한 사망(전사)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작전 임무 중 사망
 - 적으로부터 상해 혹은 의외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 방공 임무 수행 중 피격을 받아 사망하는 경우.
 - 수송인원들이 전장에 물품을 투입하다가 기습을 받고 사망하는 경우.
 - 작전 지역 내의 폭탄, 수뢰(水雷), 지뢰 등의 제거 임무를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 적 지역에서 임무 중 사망
 - 적 지역에서 임무에 종사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 적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적에게 살해당하거나 체포당해 치사하는 경우.
-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나 포로가 되었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사망
 - 적진에서 자살로 사망한 경우.
 - 작전 중 포로가 되었지만 굴복하지 않고 자살하거나 또는 적에게 살해를 당하거나 체포된 후 사망한 경우.
- 비상사태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망
 - 반란진압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다가 사망한 경우 또는 지방전투임무 중 사망한 경우.
 - 군중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정의(正義)를 지키다가 사망한 경우.
- 위험한 범죄를 진압하는 임무 수행 중 사망
 - 폭도들의 공격을 받아 사망하거나 위난사고를 당하여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공무 수행(因公)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공무 수행 중 사망
 - 근무 중 의외 사고 혹은 갑자기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 실전연습 중에 무기나 탄약 때문이 아닌, 혹은 연습훈련이나 진지공사 중 의외의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 무기설비를 시험하다가 사망한 경우.
 - 군 내 의사나 간호사로서 법정전염병을 치료하다가 전염이 되어 사망한 경우.
- 공공안전을 보호하고 공공기물을 보호하다가 사망
 - 사회의 위해를 저지하고 공공질서를 보호하고 군용재산 탈취를 방지하다가 사망한 경우.
- 공공재해구호 중 사망
 - 공공재해가 발생했을 때 용감하게 인원과 물자를 구하다가 사망한 경우.
- 병영 내에서 의외의 사건 또는 갑자기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
 - 병영 내에서 발생한 의외의 사건 또는 갑자기 질병이 발생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사망, 혹은 직접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 병영으로 귀대하다가 의외의 사건 또는 질병으로 사망
 - 합법적인 근무 시간에 적당한 교통방법으로 직접 병영과 일상 거주지를 오고 가는 노선에서 발생한 의외의 사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이때 의외의 사건 또는 질병은 반드시 주어진 임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한다. 다만, 도로교통사정으로 우회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출발지점, 노선의 경과와 교통 방법, 운전 시간 등 각종 요인을 자세하게 검사한 뒤 불가항력으로 반드시 그 길로 가야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정상적인 길로 가다가 사망한 것으로 본다.
- 공무출장 중 위험을 당하거나 또는 질병으로 사망
 - 조사를 통하여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출발 이후 임무를 마치고 병영으로 귀대 혹은 거주지로 귀대하다가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이때 의외의 사건 또는 질병은 반드시 주어진 임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한다.
- 과도한 근무 또는 과로로 인하여 사망
 - 최근 3년간 연말 근무평정 2년 “甲等” 이상, 1년 “乙上” 이상 근무 성과를 내다 사망한 경우. 다만, 최근 3년간 연말 근무평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평시의 평가 자료와 원래 복무단위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인증해야 한다. 질병으로 인해 연속 청원휴가를 받은 사람은 청원휴가를 시작하기 전 3년 동안 연말 근무평정 또는 평가 자료로 인증해야 한다. 과로의 경우, 원래 복무단위가 과로와 관련하여 중대한 책임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군인의 과도한 근무와 과로는 그 직업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 또는 의외의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현역 기간 중 신체의 상처나 질환, 질병의 완급으로 사망한 경우이다. 상처가 심해 사망한 경우, 현역 복무 시 상처를 입고서 그 상처가 심해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원래의 상처를 악화시키지 않고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법령이 사인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각 사인에 따라 처우, 보상금이나 보험금, 보조금의 지급, 장례 및 안장의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청 시에는 반드시 사인에 따르는 증명을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 각 사인에 따른 차등 처우에 대하여는 앞에서 정리한 바 있다.

2) 자해사망한 군인에 대한 처우

언급한 바 있듯이 대만에서는 자해사망자에 대하여도 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 및 군인묘지 안장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군인무효조례」(제8조 제3항)와 이를 준용하는 「군인보험조례」, 그리고 대체복무자의 경우에는 「체대역역납무효실시방법」(제3조 제6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군인묘지 안장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군인묘지건설계획및관리방법」 제8조 제4호가 근거가 될 수 있다. 단, 대만은 사인에 따라 보훈정책에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판정의 결과가 자해사망인 경우에는 질병사망의 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²⁰⁾(범죄로 인한 자해사망은 해당되지 않는다)되며 법령이 사인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자해사망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사안의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좁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 따라서 자해사망 시 보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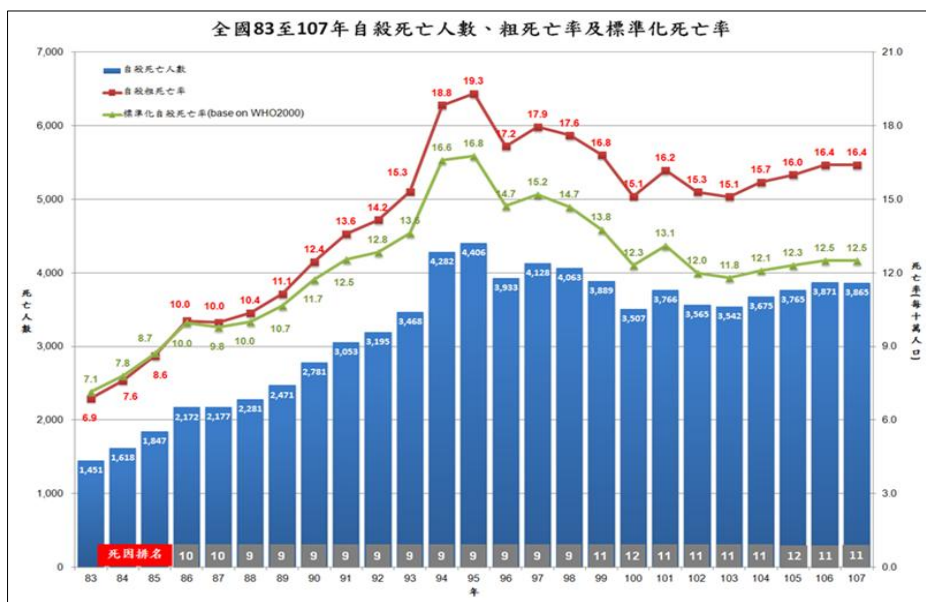
- 보상금을 수령하는 유족의 순서:
 - 1순위: 부모, 배우자, 자녀. 단, 배우자는 재혼하지 않은 자.
 - 2순위: 조부모, 손자녀, 과며느리, 과사위. 단, 과며느리나 과사위는 재혼하지 않은 자.
 - 3순위: 형제자매. 단, 미성년 혹은 이미 성년이지만 심신장애로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
 - 4순위: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단, 부양자가 없는 경우.
- 출금 지급 기준: 복무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는 10년으로 계산하여 모두 15개 기준수, 복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는 증가하는 1년마다 0.5개 기준수를 더하여 최고 27.5개 기준수 지급(1년 미만은 매 1개월에 0.042개 기준수로 계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 기준수는 최후 재직시 본봉의 가일배 금액.
- 연무금 지급 기준: 매년 5개 기준수, 지급 기한은 질병 혹은 의외의 사고로 인한 사망은 복무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3년으로 계산하고 복무 만 3년은 4년으로 계산하여 이후 매 2년의 복무기간이 증가될 때마다 1년을 더하여 최고 12년으로 제한.
- 보험금 지급 기준: 36개 보험수가(피보험인의 사고가 발생한 달의 보험수가 기준. 보험수가는 본봉에 준함).
- 자해사망이더라도 원인이 순정하고 보상을 받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군인묘지 안장에 제한을 두지 않음(「군인무효조례」의 내용에 비추어보았을 때, 범죄사실로 인하여 자해사망을 하지 않은 자해사망자라면 군인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된다).

(1) 군인의 자해사망 현황

대만에서 군인의 자해사망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거의 공개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관계 당국에서는 군인의 자해사망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전제하고 원인 분석과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 군인의 자해사망률에 대하여는 몇몇 공개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 최근의 것을 추려 대략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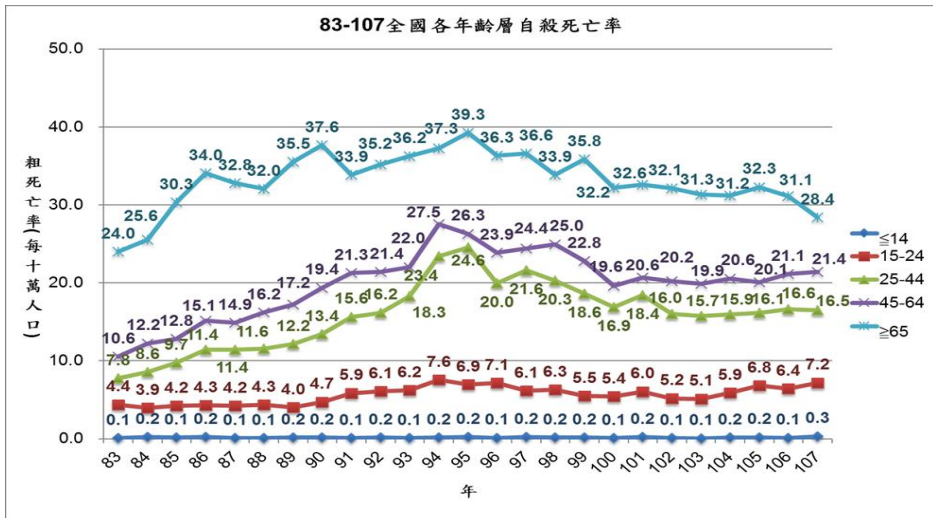
우선, 국방부의 보고²¹⁾에 의하면 2000년~2012년 사이의 군인 사망자는 총 2088명인데 그 중 자해사망은 332명이라고 한다. 자해사망의 보상 기준이 되고 있는 질병에 의한 사망자 246명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그림4-8> 대만의 자해사망률과 자해사망자 수(1994~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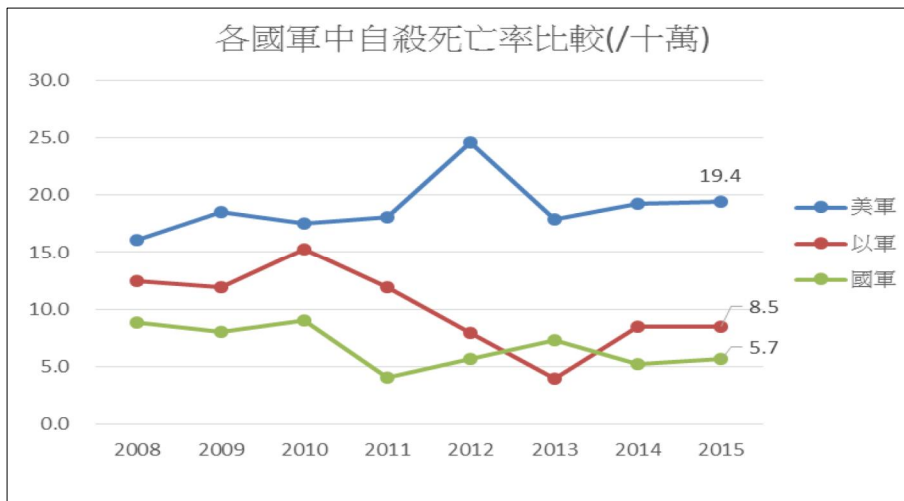


21) “國防部：國軍近13年死2088人，332人自殺，5人作戰亡”，ETtoday新聞雲(2013-08-05)，<http://www.ettoday.net/news/20130805/250987.htm#ixzz68dEF1QQ5>(2020-0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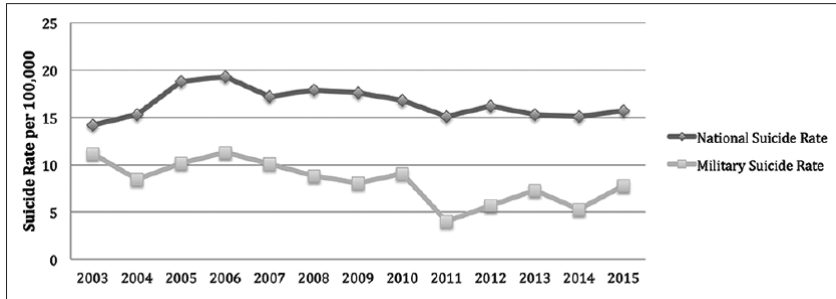
<그림4-9> 대만의 연령별 자해사망률(1994~2018)



<그림4-10> 미군, 이스라엘군, 대만군의 자해사망률 비교(2008~2015)



**<그림4-11> 대만 전체 자해사망률과 군인 자해사망률
비교(2003~2015)**



위의 자료들과 관련 연구²²⁾를 살펴보면 대만 군인의 자해사망률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23) 24)} 물론 자해사망률의 변화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당국의 군인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군인의 자해사망에 대해 병리적으로

- 22) 가령 丁華·吳濬廷, “軍人自殺徵兆與自殺行為之關連性分析”, 復興崗學報 108期, 2016, 75-94 쪽; Yen-Feng Lee·Dong-Sheng Tzeng, “Military Suicide among Taiwanese Soldiers: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Medical Sciences 38-1, 2018, 38-41쪽 등.
- 23) 2010년에 병력 총원 단위에서 대대적인 개선이 있었던 것, 2013년에 이른바 홍중추(洪仲丘, 1989-2013) 사건을 계기로 군의 위법한 조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개선이 있었던 것과 자해사망률의 감소 지점이 거의 맞물려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 24) 위의 주에 언급된 홍중추 사건에 대하여 개관하자면, 의무역 사관이었던 홍중추는 신주현 후커우향(湖口鄉) 육군 6군단 장갑 542여단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2013년 7월 6일에 퇴역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3년 6월 말,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와 MP3 플레이어를 군영에 반입하다 보 안규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사관 상벌위원회에 회부되어 타오위안(桃園)현 양메이(楊梅)시에 있는 269기계화보병여단 가오산딩(高山頂) 주둔지에 보내져 군기교육(悔過)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 중인 7월 3일, 옥외기온이 고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중추는 훈련을 받았으며, 훈련 중 물을 요구했지만 한번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17시 30분 훈련이 종료되었을 때 홍중추는 호흡곤란과 경련을 일으켰다. 홍중추는 먼저 타오위안 현 내의 병원에 보내졌지만 이미 체온이 44도에 달하였고, 그 후 타이베이 시의 삼군총의원(三軍總醫院)에 보내졌지만 고체온, 전신의 내출혈 등의 증상이 심각하여 이튿날 이른 아침에 사망했다. 사인은 과도한 운동에 의해 야기된 열중증, 저나트륨혈증으로 오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알려졌다. 홍중추가 사망한 날부터 유족들이 소송을 시작하였고, 수사와 재판은 군사재판이 아니라 일반재판으로 진행되었다. “洪仲丘死亡案軍方結案報告”, [http://udn.com/udnplus/hung.doc\(2020-01-10\)](http://udn.com/udnplus/hung.doc(2020-01-10)). 이 사건은 대만의 군인 징벌제도개혁을 견인하였고, 무엇보다 현역 군인이 평시에 일반 사법체계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군사재판법」의 개정) 하였으며, 사망한 군인의 사인 조사와 인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张华, ““洪仲丘案”冲击台湾军队发展”, 世界知识 2013-18, 48-49 쪽; 明晨燕, “台湾军事司法制度的改革对大陆的借鉴意义”, 现代经济信息 2014-10, 376-377쪽. 한편, 군사재판의 문제와 현역 군인이 평시에 일반 사법체계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의 의의와 평가에 대하여는 이계수 외,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5 참고.

접근하면서 대책을 강구해왔던 노력²⁵⁾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아직 군의 구조나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질적 변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고, 대부분 군인이 될 수 있는 연령대의 주요 사인으로 여전히 자해사망이 언급되고 있는 만큼²⁶⁾, 군인의 자해사망에 대한 대만 당국의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자해사망에 대해 병리적으로 접근하는 당국의 태도는 대만 보훈제도의 특징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처우 현황

자해사망한 군인에 대하여 실무에서는 이를 질병에 의한 사망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단, 범죄로 인한 자해사망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근거가 되는 법령이 사인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자해사망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사인의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좁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어떠한 사망 사건이 아래 조건들에 해당된다면, 실무에서는 질병에 의한 사망의 기준에 따라 급부하게 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① 첨부된 증명, 유관기관의 판정 등이 자해사망에 해당된다.

법령의 규정 및 실무상, 보상 등의 급부 신청 시 해당되는 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유관기관의 판정도 포함된다. 다만, 유족의 이의 제기 내지 다른 사인의 가능성이 발견되는 경우 등, 예컨대 의문사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수사과 재판을 거쳐 사실을 확인하고, 사망한 군인에 대하여는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내용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진다.

② 평시에 발생하였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사인을 구분하고 있으며,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나 포로가 되었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자해사망하는 경우(작전에 의한 사망)는 평시에 발생한 자해사망과 다르게 취급된다. 평시에 발생한 자해사망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공무수행(공무관련성)의 인정인데, 법령에서는 공무수행에 해당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인과관계의 증명을 함께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여기에는 사인에 대한 유관기관의 판정 또한 포함된다) 실무는 공무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령 최근의 판례를 살펴보면²⁷⁾, 군인 쑤○○(蘇○○)의 급성 스트레스 장애(急性壓力疾患)에 의한 투신사망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에서 원심은 재판 중 발견된 새로운 증거들에 따라

25)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 기보고 된 것으로 한인희, 앞의 글, 162-164쪽.

26) 가령 Yen-Feng Lee·Dong-Sheng Tzeng, 앞의 논문, 38쪽.

27) 民國103年(2014년)6월20일 最高行政法院103年判字第319號行政判決.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복무 중 괴롭힘, 부당하고 과중한 훈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으로 사망에 공무원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²⁸⁾, 최고행정법원에서는 「군인무훈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인을 열거적 규정으로 보고서, 「군인무훈조례」 제8조 제3항이 복무 중 자해사망한 군인들을 질병에 의한 사망의 기준에 따라 처우하는 것은 공무원관련성의 증명과 관련된 어려움을 고려한 “특별입법규범(特別立法規範)” 이므로 영내에서 현역 군인이 자해사망한 때에도 이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는 국방부의 상고 취지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요컨대 자해사망은 개인적, 정서적인 문제 등이 크게, 그리고 다양한 변수 또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임무 수행과의 역학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²⁹⁾ 이러한 실무의 태도는 자해사망을 병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30) 31)}

③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가 아니다.

탈영 등 범죄에 따른 면피를 위하여 자해사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군인무훈조례」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군인보훈조례」의 규정에 따라 질병에 의한 사망의 기준에 의하여 보상이 지급된다. 또한 법령의 해석상 군인묘지에도 안장될 수 있다.

28) 民國103年(2014년)1月23日 臺北高等行政法院102年訴字第995號行政判決.

29) 대체복무자와 관련해서는 民國108年(2019년)7月31日 最高行政法院108年判字第377號行政判決 등.

30) 구 「공무원무훈법(公務人員撫卹法)」에서는 「군인무훈조례」와 다르게 공무원이 자해사망한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이 부분이 음영부에 놓여 있었다. 실무 관례상 공무원이 자해사망한 경우 질병에 의한 사망의 기준에 따라 보상하거나 그마저도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었다(이와 관련해서는 “公務員自殺比照病故撫卹”, 自由時報(2005-08-19), <http://news.ltn.com.tw/news/politics/paper/30432>; “公務員自殺今年起不撫卹”, 中央通訊社(2011-07-14), <http://www.cna.com.tw/news/firstnews/201107140060.aspx>; “公務人員自殺死亡可否辦理撫卹相關問題研析(立法院)”, <http://www.ly.gov.tw/Pages/Detail.aspx?nodeid=6590&pid=85521> 등. 「공무원무훈법」상 자해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불치의 병으로 자해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무훈금(遺族撫卹金)을 지급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 사례에서, 대만 최고행정법원은 「군인무훈조례」 제8조 제3항 등의 논거를 들어 자해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도 있었다. 民國102年(2013년)6月20日 最高行政法院102年判字第381號行政判決. 이와 관련된 여론의 형성과 연금개혁을 이유로 입법원은 자해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그 보상의 근거를 법제화한 「공무원퇴직자무훈법(公務人員退休資遺撫卹法)」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령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이와 관련해서는 “年改有共識公務員自殺死亡可撫卹判刑者不適用”, 新頭殼(2017-06-16), <http://newtalk.tw/news/view/2017-06-16/89506>; “年改法案二讀: 公務員自殺可撫卹, 婚10年可領遺屬年金”, 民報(2017-06-26), <http://www.peoplenews.tw/news/96d6f435-2bb8-44fd-a68f-42850ce7135b>(2020-01-10). 같은 법 제52조 제2항은 “自殺死亡比照病故或意外死亡認定.但因犯罪經判刑確定後,於免職處分送達前自殺者,不予撫卹.(자해사망은 질병 또는 의외의 사망에 비추어 (보상) 인정된다. 단 범죄로 인하여 형이 확정된 후 면직처분이 송달되기 전에 자해사망한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다.

31) 가령 최근의 판례로 民國108年(2019년)5月30日 臺北高等行政法院107年訴字第1040號行政判決.

이와 같이 법령이 사인을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고, 자해사망을 질병에 의한 사망의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는 점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높은 공무 수행의 인정에 대한 실무의 부담감을 덜어줌과 동시에 실무의 태도를 소극적으로 제한하는 빌미를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대만에서 자해사망한 군인에 대한 처우는 「군인무훈조례」 제8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거의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²⁾ 또한 자해사망한 군인에 대한 군인묘지의 안장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둔다면, 자해사망한 군인에 대하여 대만은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소결

중국과의 분단 상황에서 67년 간 의무역 중심의 징병제를 유지하여 왔던 대만은 2018년부터 전면적으로 지원역을 중심으로 하는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이미 징병과 모병을 병행하기 시작하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복무제 역시 도입한 바 있는 대만의 병역제도는 현재 법률의 내용을 보았을 때, 의무역을 최소한의 군사교육 이수에 한정하여 유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예비역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원병을 바탕으로 처우개선과 함께 군을 정예화하고자 하는 모병 중심의 병역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만의 병역제도의 변화는 마찬가지로 분단의 상황에 처

32)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경우가 대조적이다. 헌법의 규정상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일본에서는 자위대원의 사망이나 장애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国家公務員災害補償法)」, 「국가배상법」 등을 그 근거로 한다. 해당 법령은 공무상의 재해(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또는 통근(通勤)에 의한 재해에 대하여 그 보상을 규정하고 있어서 공무원관련성의 인정이 보상에 있어 핵심이 된다. 일본의 재해 보상은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여부가 결정되며, 자해사망의 경우 공무원관련성의 인정은 더 어렵게 되어있다. 자위대원의 경우 자해사망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것이어서 개별 원인에 대하여 특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원칙적으로 공무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방위성(防衛省)의 입장이다. 다만, 공무의 부담에 의하여 정신질환이 생기고 당해 질환이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경우에는 공무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衆議院議員阿部知子君提出自衛隊員の自殺、殉職等に関する質問に対する答弁書 (衆議院)”,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b189246.htm).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사안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일괄 해법의 대만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한편, 일본에서도 근래 특히 초과근무나 과로에 의한 정신질환이 자해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精神疾患等の公務上災害の認定について(人事院)”, http://www.jinji.go.jp/kisoku/tsuuchi/16_saigaihoshou/1611000_H20shokuhou114.html (2020-01-10))에 관심을 두고서 공무원관련성을 인정하고 화해(和解) 등의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パワハラ)에 의한 우울증에 따른 자해사망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해있는 남한의 병역제도의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상이군인과 사망한 군인 및 그 유족에 대한 처우(보훈정책)와 관련하여 대만의 사례는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오랜 기간 징병제를 유지한 바 있는 대만은 이른바 독립형 보훈조직의 보훈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군퇴역역관병보도위원회가 그 중심이 되고 있다. 여기에 국방부 예비군사령부가 담당하는 유수업무로서 상이군인과 사망한 군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보완으로서 사회보험제도인 군인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 등이 보훈정책의 주요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무휼대상으로 등록된 유족 또는 1949년 중양정부가 대만으로 패퇴할 때 군인 본인은 임무로 인하여 건너오지 못하고 그 가족만이 중양정부를 따라 대만으로 건너온 무의탁 권속 등에게는 기타 보상금 성격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리고 총렬사, 군인묘지, 국군시범묘지, 총령탑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념 및 추모사업도 보훈정책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하여 비교적 촘촘하게 상이군인과 사망한 군인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대만의 보훈정책에서 특징적인 것은 사인(과 상이 등급)에 따라 차이를 두고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만은 자해사망자에 대하여도 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 및 군인묘지 안장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군인무휼조례」(제8조 제3항)와 이를 준용하는 「군인보험조례」, 그리고 대체복무자의 경우에는 「체대역역남무휼실시방법」(제3조 제6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군인묘지 안장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군인묘지건설계획및관리방법」 제8조 제4호가 근거가 될 수 있다. 자해사망한 군인에게서는 질병사망의 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이 아래와 같이 지급(범죄로 인한 자해사망은 해당되지 않는다)된다.

- 보상금을 수령하는 유족의 순서:

- 1순위: 부모, 배우자, 자녀. 단, 배우자는 재혼하지 않은 자.
- 2순위: 조부모, 손자녀, 과며느리, 과사위. 단, 과며느리나 과사위는 재혼하지 않은 자.
- 3순위: 형제자매. 단, 미성년 혹은 이미 성년이지만 심신장애로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
- 4순위: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단, 부양자가 없는 경우.

- 휴금 지급 기준: 복무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는 10년으로 계산하여 모두 15개 기준수, 복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는 증가하는 1년마다 0.5개 기준수를 더하여 최고 27.5개 기준수 지급(1년 미만은 매 1개월에 0.042개 기준수로 계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 기준수는 최후 재직시 본봉의 가일배 금액.

- 연무금 지급 기준: 매년 5개 기준수, 지급 기한은 질병 혹은 의외의 사고로 인한 사망은 복무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3년으로 계산하고 복무 만 3년은 4년으로 계산하

며 이후 매 2년의 복무기간이 증가될 때마다 1년을 더하여 최고 12년으로 제한.

- 보험금 지급 기준: 36개 보험수가(피보험인의 사고가 발생한 달의 보험수가 기준. 보험수가는 본봉에 준함).

- 자해사망이더라도 원인이 순정하고 보상을 받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군인묘지 안장에 제한을 두지 않음(「군인무휼조례」의 내용에 비추어보았을 때, 범죄사실로 인하여 자해사망을 하지 않은 자해사망자라면 군인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법령이 사인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자해사망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사안의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좁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법령이 사인을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고, 자해사망을 질병에 의한 사망의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는 점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높은 공무 수행의 인정에 대한 실무의 부담감을 덜어줌과 동시에 실무의 태도를 소극적으로 제한하는 빌미를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안의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해 보상의 여부가 달라지는 일본 등의 사례와는 대조적으로, 대만에서 자해사망한 군인에 대한 처우는 「군인무휼조례」 제8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거의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해결’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음영 내지 반영부(penumbra)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하나의 선택지로서 최소한 타협할 수 있는 수준의 법제화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대만의 사례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해사망한 군인에 대한 군인묘지의 안장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자해사망한 군인에 대하여 대만은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법령, 판례 등³³⁾

「兵役法」.
「國軍退除役官兵輔導委員會組織法」.
「國軍退除役官兵輔導條例」 및 시행세칙.
「國軍退除役官兵就業安置辦法」.
「國軍退除役官兵就醫辦法」.
「國軍退除役官兵就養安置辦法」.
「國軍退除役官兵生活指導管理辦法」.
「軍人撫卹條例」 및 시행세칙.
「軍人保險條例」 및 시행세칙.
「陸海空軍軍官士官服役條例」.
「替代役役男撫卹實施辦法」.
「軍人及其家屬優待條例」.
「國軍在臺遺族傷殘官兵及無依軍眷照護金發給辦法」.
「軍人公墓籌建及管理辦法」.
「國軍亡故官兵葬厝設施管理辦法」.
「公務人員退休資遣撫卹法」.
「公務人員撫卹法」(구 법령).
民國103年1月23日 臺北高等行政法院102年訴字第995號行政判決.
民國103年6月20日 最高行政法院103年判字第319號行政判決.
民國108年7月31日 最高行政法院108年判字第377號行政判決.
民國102年6月20日 最高行政法院102年判字第381號行政判決.
民國108年5月30日 臺北高等行政法院107年訴字第1040號行政判決.

| 단행본, 논문 등

Lee, Yen-Feng·Tzeng, Dong-Sheng, “Military Suicide among Taiwanese Soldiers: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Medical Sciences* 38-1, 2018, 38-41쪽.
明晨燕, “台湾军事司法制度的改革对大陆的借鉴意义”, 现代经济信息 2014-10,

33) 대만 법령 검색은 “全國法規資料庫”, <http://law.moj.gov.tw/Index.aspx>; 판례 검색은 “司法院法學資料檢索系統” <http://law.judicial.gov.tw/default.aspx>.

376-377쪽.

张华, ““洪仲丘案”冲击台湾军队发展”, 世界知识 2013-18, 48-49쪽.

丁華·吳濬廷, “軍人自殺徵兆與自殺行為之關連性分析”, 復興崗學報 108期, 2016, 75-94쪽.

공유식·서운석, “대만 보훈정책 현황과 시사점 연구”, 대만연구 2,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 2011, 1-25쪽.

김학준, “대만의 보훈제도”, 세계속의 보훈, 국가보훈처, 2005.

유영옥, 각국의 보훈정책비교론, 흥익재, 2009.

이계수 외,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5.

이영자, “주요 국가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복지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미국, 호주, 대만,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제13권 제1호, 한국보훈학회, 2014, 83-112쪽.

장기석·이상철, 中國과 臺灣의 交流協力 法制 研究, 법무부, 200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 외국보훈제도 비교연구: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대만, 보훈교육연구원, 20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 재해병사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 2007.

한인희,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 관련 해외사례 소개: 대만”, 군내 자살처리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2006년도 전문가 초청토론회 자료집),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6, 145-166쪽.

| 인터넷 자료 등

“憲法簡介”, <http://www.president.gov.tw/Page/93>.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번역본(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cms/commonDown.do?DLD_CFM_NO=CD70BB68NRDHS1MKPHJ4&FL_SEQ=47735.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geos/tw.html>.

“國軍退除役官兵輔導委員會”, <http://www.vac.gov.tw>.

“臺銀人壽”, <http://www.twfhclife.com.tw>.

“國防部核定軍人於服現役期間非因作戰或非因公而自殺致死亡者之案件種類為「因病死亡」, 違反「軍人保險條例」規定; 相關疑義雖早經審計部函請該部改善, 惟國防部迄今仍未完成修法, 衍生未依法行政之亂象, 並滋爭議, 遭監察院糾正。(監察院)”, http://www.cy.gov.tw/News_Content.aspx?n=124&sms=8912&s=12752.

“軍人忠靈祠”, <http://www.nca.gov.tw/cemetery>.

“釋字第430號解釋(司法院大法官)”，<http://cons.judicial.gov.tw/jcc/zh-tw/jep03/show?expno=430%20>.

“洪仲丘死亡案軍方結案報告”，<http://udn.com/udnplus/hung.doc>.

“公務人員自殺死亡可否辦理撫卹相關問題研析(立法院)”，<http://www.ly.gov.tw/Pages/Detail.aspx?nodeid=6590&pid=85521>.

“衆議院議員阿部知子君提出自衛隊員の自殺、殉職等に関する質問に対する答弁書(衆議院)”，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b189246.htm.

“精神疾患等の公務上災害の認定について(人事院)”，http://www.jinji.go.jp/kisoku/tsuchi/16_saigaihoshou/1611000_H20shokuho114.html.

| 신문기사 등

“대만 징병제 67년 만에 소멸 ... 의무복무자 26일 前 제대완료”，연합뉴스(2018-12-17)，<http://www.yna.co.kr/view/AKR20181217110400009>.

“대만 징병제 67년 만에 종료 ... “4개월 군사훈련 의무는 계속””，NEWSIS(2018-12-27)，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227_0000513602.

“대만군 모병제 전환 계획 또다시 연기 ... 잇따 악재로 직업군인 지원자 줄어”，아시아투데이(2016-08-17)，<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817010008624>.

“自殺等於病死?軍人保險審核違法監委糾正國防部”，新頭殼(2018-02-22)，<http://newtalk.tw/news/view/2018-02-22/115033>.

“國防部：國軍近13年死2088人，332人自殺，5人作戰亡”，ETtoday新聞雲(2013-08-05)，<http://www.ettoday.net/news/20130805/250987.htm#ixzz68dEF1QQ5>.

“公務員自殺比照病故撫卹”，自由時報(2005-08-19)，<http://news.ltn.com.tw/news/politics/paper/30432>.

“公務員自殺今年起不撫卹”，中央通訊社(2011-07-14)，<http://www.cna.com.tw/news/firstnews/201107140060.aspx>.

“年改有共識公務員自殺死亡可撫卹判刑者不適用”，新頭殼(2017-06-16)，<http://newtalk.tw/news/view/2017-06-16/89506>.

“年改法案二讀：公務員自殺可撫卹，婚10年可領遺屬年金”，民報(2017-06-26)，<http://www.peoplenews.tw/news/96d6f435-2bb8-44fd-a68f-42850ce7135b>.

| 그림 출처

“4개월 상비병역 군사훈련(의무역) 신병훈련 과정”, 中華民國108年國防報告書編纂委員會, 中華民國108年國防報告書, 77쪽.

“대만에서의 모병제로의 전환과 처우개선”, 위의 책, 105쪽.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조직표”, <http://www.vac.gov.tw/Public/Images/201902/59419022118129903a.png>.

“국민혁명총렬사”, http://www.taiwan.net.tw/att/1/big_scenic_spots/pic_9508_7.jpg.

“타이베이군인묘지”, <http://mapio.net/images-p/30239678.jpg>.

“국군시범묘지”,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d/d2/Wuchih_Mountain_Military_Cemetery.jpg.

“국군타이베이총령탑”, <http://mapio.net/images-p/86399269.jpg>.

“대만의 자해사망률과 자해사망자 수(1994~2018)”, http://tspc.tw/tspc/uploadfiles/Image/107_suicide_rate.png.

“대만의 연령별 자해사망률(1994~2018)”, [http://tspc.tw/tspc/uploadfiles/Image/107_suicide_rate\(age\).png](http://tspc.tw/tspc/uploadfiles/Image/107_suicide_rate(age).png).

“미군, 이스라엘군, 대만군의 자해사망률 비교(2008~2015)”, <http://www.tsgh.ndmctsg.edu.tw/files/web/194/menu/30000/content/SuicidePrevention.pdf>, 19쪽.

“대만 전체 자해사망률과 군인 자해사망률 비교(2003~2015)”, http://www.jmedscindm.com/viewimage.asp?img=JMedSci_2018_38_1_38_225575_f1.jpg.

제5장 이스라엘의 처우실태

1. 이스라엘군대 개관

1) 이스라엘군의 역사 및 특징

1948년 5월 14일 정식 국가로 설립된 한반도의 약 10분의 1정도의 면적인 이스라엘은¹⁾ 정식 국가의 설립과 함께 주위 아랍 국가들과의 적대적인 관계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이 끊임없는 위협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와 같은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대비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 1948년 1차 중동전쟁 중 이스라엘 방위군(Israel Defense Forces)이 창설되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1948년 창설된 이래 6차례의 주요 전쟁을 치르며 수많은 실전경험과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하였다.²⁾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의 주권과 영토를 보호하고, 모든 형태의 테러행위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제기습 및 속전속결의 전쟁전략 일환으로 장기 휴가의 경우에도 항시 총기 및 실탄을 휴대하고 있으며³⁾ 민·관 총력전의 개념으로 예비군을 중심으로 군을 운용하고 있다.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국가 재건의 시대적 사명과 함께 전 국민의 병역 의무의 이행 및 보훈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건국 초기부터 인식되었다. 그러나 빈번한 주위 아랍 국가들과의 위기 상황과 동반한 국가의 경제적 부담은 이스라엘 보훈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이전과는 다른 상대적 평화 정세의 형성과 세계적 현상인 개인주의 및 이데올로기의 약화는 이스라엘에서도 병역기피 현상을 초래하였다.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의 보훈 정책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고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그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변화의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⁵⁾

1)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위치한 유대 공화국(Medinat Israel, 정식명칭 The State of Israel).

2) <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israel-s-wars-and-operations>(2019-12-15).

3) 외부 및 휴가 시 총기를 휴대하는 것이 군인 자살의 위험요인으로 평가되어 한때 금지되었으나 테러 등의 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총기소지 금지조치는 취소되었고 항시 총기를 휴대하도록 하고 있다.

4) Jerusalem Post(2009.11.30.)는 이스라엘 정부 발표를 인용하여 남자의 병역 기피율은 25%, 여자의 병역 기피율은 40%에 육박한다고 보도하였다. 남자의 병역 기피율 25% 중 13%는 종교상의 이유로, 5%는 해외 체류나 건강상의 이유로, 나머지 7%는 여타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병역 기피율 40% 중 30%는 종교상의 이유로, 나머지 10%는 결혼, 해외 체류, 건강상의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이명남, 이스라엘 보훈제도 및 정책연구, 국가보훈처, 2006, 4쪽.

2) 이스라엘군의 군사정책 및 군복무의 종류

(1) 방위체제 및 특징

이스라엘군의 방위체제는 3가지 조직적 토대 위에 구축되어 있다.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편제, 이스라엘 방위군 중심의 군 체제, 그리고 민간 방위산업체 등이 그것이다. 가장 중요한 조직은 1948년 1차 중동전쟁 중 창설된(1948.5.28.) 이스라엘 방위군(IDF)이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국가 건립 이후 현재까지 주위 아랍국들과 수차례의 주요 전쟁을 수행하였고, 국경 수비 및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에 대항하여 온,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투훈련을 받은 무장 군대로 평가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선제기습 및 속전속결의 전쟁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에 맞도록 이스라엘군은 항시 총기 및 실탄을 휴대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자적이며 자주적인 전쟁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쟁기획 및 작전수행 등의 자주적 전쟁수행과 함께 정보수집에 있어서 독자적 수집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군의 운영체제는 예비군 중심의 민·관 총력전 체제 및 통합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인적자원과 사병의 복무환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군은 동일 연령 및 유대교 등으로 강한 운명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사병 다수는 주거지에서 출퇴근을 하며 사회와 격리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군복무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지도부 구성 이면에 평등이념에 근거한 비격식적이고 균일한 계급제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지도부로의 승격은 다수의 국가에서와는 달리 사관학교와 같은 엘리트 기관이 아닌⁶⁾ 일반 사병으로부터 철저한 능력에 따라 배출되고 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수행한 주요 전쟁으로는 1948년 독립전쟁(War of Independence), 1956년 이집트와의 전쟁(Suez-Sinai Campaign; 제1차 중동전쟁), 1967년 6일 전쟁(Six-Day War; 제2차 중동전쟁), 1973년 욕키푸르 전쟁(Yom Kippur War; 제3차 중동전쟁), 1982년-1985년 PLO와의 1차 레바논 전쟁 및 2006년 헤즈볼라와의 2차 레바논 전쟁 등이 있다.⁷⁾

6) 이스라엘에는 별도의 절차에 따른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수 사관학교가 없으며, 전 국민 의무복무를 기본으로 하는 이스라엘 방위군 내 통합 기능에 따라 각 특수부대에서 훈련을 전담하고 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기능은 각 육·해·공군 산하 특수부대가 사관학교의 기능을 겸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7) <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israel-s-wars-and-operations>(2019-12-15).

(2) 군복무 종류

이스라엘군의 군복무는 크게 의무 복무(Compulsory Service), 예비군 복무(Reserve Duty) 및 직업군 복무(Career Military Service)로 구분할 수 있다.⁸⁾ 각 군복무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의무 복무(Compulsory Service)를 살펴보면, 신체 건강한 모든 남녀는 18세가 되면 징집된다. 남자는 3년 그리고 여자는 2년 동안의 의무 복무를 이행하게 된다. 그러나 신체적·정신적 부적격자는 의무 복무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신규 이민자들은 나이와 이민 당시에 부여된 체류 지위에 따라 군복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된다. 또한 기혼 여성, 아랍계 시민권자⁹⁾ 및 예시바(yeshiva)¹⁰⁾ 학생 등은 의무 복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주위 아랍 국가들로부터의 위협의 감소, 위협에 대한 충분한 대처 능력 및 전쟁 수행능력의 구비, 기계화전 및 특수전 중심의 전쟁양상의 변화, 징병대상 인구 증가 등을 이유로 하여 남자의 의무 복무 기간을 32개월로 축소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¹¹⁾ 이스라엘 군복무제도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에 대한 의무 복무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의무 복무는 국민의 군대라는 이스라엘 방위군(IDF)의 신조를 지지해주며 사회 전체가 국가 안보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 여군은 사병의 34%, 그리고 장교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방위군의 직책 중 92%의 직책에 지원할 수 있다. 2012년 이후, 전투병으로서의 여군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600명의 여군이 합동전투대대에 합류하였고, 이 추세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2017년 2,700명 이상의 여군이 이스라엘방위군 혼성대대에 선발되었다.¹²⁾

8) 2018년 현재 이스라엘군은 현역 18만명과 예비군 45만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의무복무자 21%, 직업군인이 6%, 예비군 73%로 구성되어 있다.

9) 대부분의 아랍계 시민권자들은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과의 적대관계로 인하여 유대국가 존립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는 그룹(a threatening minority)으로 인정되어, 시민권자의 최대 의무이자 권리로 여기지는 군 복무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아랍계 내의 또 다른 소수집단인 드루즈(Druze)와 베두인(Bedouin)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군 복무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군 복무와 연관되어 제공되는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 등에 있어서 유대계 이스라엘 시민권자들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Refugee Review Tribunal(Australia), RRT RESEARCH RESPONSE(ISR34012), 2008, 4쪽).

10) 예시바(yeshiva)는 유대인 교육기관으로서 탈무드와 유대교 율법 등을 교육한다. 전통적으로 남성만을 위한 교육기관이었으나 현대에는 여성에게도 문호가 열려있다.

11) 김인국, “이스라엘군의 복무제도”, 국방이슈브리핑시리즈(2018-18), 한국국방연구원, 2018, 3쪽.

12)

<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women-of-the-israel-defense-forces-table-of-contents>

<표5-1>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여성 (전투) 군인의 역사¹³⁾

1948년	독립 전쟁 중 전투병으로서의 여군
1948 - 1990년대 후반	비전투병으로서의 여군
1990년대 후반 - 현재	조종사 및 특수 부대를 포함한 대다수 전투병으로서의 여군 ¹⁴⁾

다음으로 예비군 복무(Reserve Duty)에 관하여 살펴보면, 의무 복무를 마친 모든 군인은 이스라엘군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예비군으로 등록 및 편제된다. 남자의 경우에는 40-45세까지 연 평균 약 1개월간 복무를 하며, 비상사태 시에는 복무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의무 복무 기간의 단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예비군 연간 복무 일수를 단축하는 방안 역시 논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군 복무(Career Military Service)에 관하여 살펴보면, 의무 복무 중 희망자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장교나 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직업군인은 이스라엘군의 지휘 및 행정체제의 중추적 역할과 함께 그 구성에 있어서 핵심 요소로서 조종사 학교 또는 특수 군기술학교를 졸업한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직업군인으로 복무해야 한다.

3) 이스라엘군의 우리와의 차이점¹⁵⁾

첫째, 유대인의 문화적 유산과 신념체계로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성서에 근거하여 약속의 땅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강렬한 애착을 지니고 있으며 하느님의 군대로서 하느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군 복무를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며, 징병제에 대한 거부감이 낮은 편이다.¹⁶⁾ 또한 사회적으로도 군에서 실패하면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둘째, 병 활용개념의 차이로서 지상군의 경우 병은 직접적인 교전 당사자이다. 이스라엘군도 우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차이점은 전투행위가 2018년 기준 45만명인 예비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병은 유사시 최소한의 방어임무만을 수행

(2020-01-10).

13) [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history-of-women-in-idf-combat-units\(2020-01-13\)](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history-of-women-in-idf-combat-units(2020-01-13)).

14) IDF의 정책 전환으로 2017년 IDF 전투 부대에 1,000 명의 여성이 입대하였다 ([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history-of-women-in-idf-combat-units\(2020-01-13\)](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history-of-women-in-idf-combat-units(2020-01-13))).

15) 김인국, “이스라엘군의 복무제도”, 국방이슈브리핑시리즈(2018-18), 한국국방연구원, 2018, 3-4쪽.

16)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병역 기피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고 있으며 최전방 지역 근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병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셋째, 징병검사의 차이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징병검사는 병역면탈의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스라엘군의 경우에는 군에서 필요한 사람을 선발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평판은 높은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는 것이 제대 후 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평가·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¹⁷⁾ 따라서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그와 같은 사회적 평판이 높은 부대에서 군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때부터 의무 복부 병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넷째,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이스라엘군은 의무 복무 후 제대하는 장병의 경제적 독립과 민간직장 적응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4개의 지역 본부와 53개의 청소년 센터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취업지원, 교육훈련 지원 및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역과 동시에 전역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2. 이스라엘군의 자해사망자 현황

1) 자해사망자 통계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 역시 군복무중 자해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980년부터 최근 2017년까지의 발표 및 보도된 여러 자료를 종합한 결과를 살펴보면, 1980년부터 2017년까지 - 자료가 없는 2007-2010년 4년간(매년 약 20여명 자해사망추정)은¹⁸⁾ 별도로 하더라도 - 매년 적게는 7명, 많게는 43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자해사망하였다. 자해사망자 수는 1994년(43명)과 1995년(43명) 2년간 최고치에 달하였으며 이후 몇 가지 조치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조치로는 2005년도에 개발된 자살 예방 프로그램(Suicide Prevention program; SPP)와 2006년 시행된 장기휴가시의 무기소지금지조치 등이 그것이다. 또한 군

17) 예를 들어, 사회 고위층 인사의 군 간부경력력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18) 이스라엘 타임지에 따르면 2006년 일주일 이상의 장기 휴가시 무기소지금지조치가 2005년도와 비교할 때 자살률을 상당히 감소시켰으며 이후 자살수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도에는 단지 7명이 이르렀다고 한다(Suicide was top cause of death for IDF soldiers in 2016 (<https://www.timesofisrael.com/idf-15-soldiers-committed-suicide-in-the-past-year/> 검색일 2019.12.12.)). 따라서 발표 자료가 없는 2007년 - 2010년간 매년 약 20여명 정도가 자살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인들이 군대 문화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Moledet 또는 Homeland로 알려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¹⁹⁾

<표5-2> Suicide cases in the Israeli army since 1980-2017

1980(35)	1981(20)	1982(31)	1983(19)	1984(36)
1985(26)	1986(15)	1987(29)	1988(30)	1989(41)
1990(35)	1991(41)	1992(37)	1993(38)	1994(43)
1995(43)	1996(29)	1997(32)	1998(37)	1999(30)
2000(24)	2001(38)	2002(26)	2003(37)	2004(28)
2005(36)	2006(28)	2007(20*)	2008(20*)	2009(20*)
2010(20*)	2011(21)	2012(14)	2013(7)	2014(15)
2015(15)	2016(15)	2017(16)		

※ 연도별 자해사망자수, 2007-2010년 자해사망자수(*추정치)

2) 자해사망자 구성(2016년의 경우), 시기 및 주된 이유

군 복무 중 사망자의 구체적 사유를 2016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년 총 사망자 41명 중 자해사망 15명, 작전 중 사망 4명, 기지내 사고 9명, 비번 중 자동차사고 7명, 그리고 병사가 6명이었다.²⁰⁾ 2016년 총 사망자 41명 중 자해사망자 15명의 복무형태를 살펴보면, 의무복무중인 징집병 12명, 직업군인 2명, 그리고 복무 중인 예비군 1명이었다. 그리고 자해사망자는 전원 남성 군인이었다.²¹⁾

자해사망의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전체 자해사망사고의 30%가 입대 후 6개월 내 발생하였고 이스라엘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주된 자살 이유로는 입대 후 부적응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군인들의 여성·아이들에 대한 강제진압 스트레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²²⁾

19) Suicide was top cause of death for IDF soldiers in 2016 (<https://www.timesofisrael.com/idf-15-soldiers-committed-suicide-in-the-past-year/> 2019-12-12.).

20) Suicide was top cause of death for IDF soldiers in 2016 (<https://www.timesofisrael.com/idf-15-soldiers-committed-suicide-in-the-past-year/> 검색일 2019-12-12.).

21) 매년 자살자 중 남성사망자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정 소수민족출신의 자살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icide was top cause of death for IDF soldiers in 2016 (<https://www.timesofisrael.com/idf-15-soldiers-committed-suicide-in-the-past-year/> 검색일 2019-12-12.)).

22) Leah Shelef et al, "No Way Out: Entrapment as a Moderator of Suicide Ideation Among

3) 자해사망에 대한 법원의 태도

(1) 자해사망에 대한 평가와 자살성(suicidality)

이스라엘 법원은 자살에 관하여 모호한 심리학적 개념을 받아들임으로써 자해사망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²³⁾ 이스라엘 법원은 오랫동안 자해사망을 범죄, 정신 질환 or 일탈적 행동으로 평가해왔으며(Murray, A.(1998). *Suicide in the Middle Ages*, vol. 1: *The violent against themselves*.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심지어 유가족에게 생명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자해사망 군인의 죽음을 상품화하였다(Blumenthal, S. L.(2011). *Death by his own hand*: Accounting for suicide in nineteenth-century life insurance litigation. In A. Parker, A. Sarat, & M. Umphrey(Eds.), *Subjects of responsibility*(pp. 98-144). New York, NY: Fordham University Press.)는 비판을 받고 있다.²⁴⁾ 또한 자해사망의 이유에 대한 법원의 심리적 추론(Antabi v. the State of Israel, 2004)은 자해사망을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는 법원이 자해사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살성(suicidality)으로 불리는 지속적인 정신적·개인적 상황(조건)이라는 새로운 심리학적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suicidal individuals, suicidal thoughts, 그리고 suicidal tendencies와 같은 용어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자해사망(self-demise)을 식별되고 치료될 수 있는 심리상태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²⁵⁾ 자살성(suicidality)이 질병으로 인정되고 있지는 않으나 법원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자해사망한 군인의 심리적 문제가 자해사망을 유발한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판결하고 있다.²⁶⁾

Military Personnel”,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72, 2016, 1050쪽.

23) Nitzan Rothem/Eyal Ben-Ari, “Mutuality and the study of suicide: Psychological notions on military suicides in Israeli courts”, 『*The Sociological Review* 1-18』, 2019, 2쪽.

24) Nitzan Rothem/Eyal Ben-Ari, “Mutuality and the study of suicide: Psychological notions on military suicides in Israeli courts”, 『*The Sociological Review* 1-18』, 2019, 2쪽.

25) Nitzan Rothem/Eyal Ben-Ari, “Mutuality and the study of suicide: Psychological notions on military suicides in Israeli courts”, 『*The Sociological Review* 1-18』, 2019, 2쪽.

26) Nitzan Rothem/Eyal Ben-Ari, “Mutuality and the study of suicide: Psychological notions on military suicides in Israeli courts”, 『*The Sociological Review* 1-18』, 2019, 3쪽; 군이라는 환경은 훈련과 전투에서의 성공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남자다움과 동지애라는 문화적 표현을 강조한다. 군대는 국가공동체에 대한 상당한 헌신을 요구하여 군인의 이미지를 가치 있는 시민과 가치 있는 남성의 이미지를 배양하고 있다(Nitzan Rothem et al, “Mutuality and the study of suicide: Psychological notions on military suicides in Israeli courts”, 『*The Sociological Review* 1-18』, 2019, 4쪽).

(2) 국가책임, 사상자 회피(casualty aversion) 경향, 외상(trauma)

이스라엘에서의 복무 중 군인의 자해사망에 대한 평가는 자해사망군인에 대한 국가책임의 인정과 관련되어 있다. 즉 전투현장이든 비전투현장이든 이타주의적인 희생에 대한 군인의 의지와 군인의 삶과 복지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1990년대부터 이스라엘 사회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군과 군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상실의 아젠다, 즉 사상자 회피(casualty aversion) 경향 - 전쟁 및 군복무의 결과로서 생명 상실에 대한 회피 경향 - 와 관련하여 이스라엘군은 군에서의 사망을 멋진 사망(good ones)으로 구축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유가족의 슬픔과 사상자 회피 경향은 이스라엘군으로 하여금 자해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적 문제를 조사 또는 차단함으로써 자해사망을 예방 및 차단하고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²⁷⁾ 이에 따라 이스라엘 군인들은 입대 전 자살성(suicidality)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으며, 특이점으로는 미군에 대한 연구와²⁸⁾ 달리 이스라엘 방위군(IDF)의 자해사망에 대한 심리적 설명은 외상(trauma)을 자해사망과 거의 연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²⁹⁾

(3) 심리적 추론을 사용한 사망원인의 추정(Antabi v. the state of Israel, 2004)

Antabi v. the state of Israel(2004)³⁰⁾ 판결을 살펴보면, 군 수사기관은 자살로 결론을 내렸지만, 법원 전문가들은 사망 원인에 관한 일치되지 않는 두 가지 견해를 발표하였다. 첫 번째 견해는 자살한 군인이 부대 내에서의 사회적·직업적 부적응과 담당 임무와 임무수행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자살하였다고 하였다. 두 번째 견해는 그 군인의 죽음이 무기 취급의 소홀함 또는 총기 사용 게임의 사고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이 일관되지 않은 두 견해로 인하여 유가족은 법원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였고, 법원은 자살행위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모순되는 사회적 일탈행위이기 때문에 자살의 결심은 자살의지에 관한 실제적이고 엄격한 증거를 필요로 하며, 자살은 인간의 도덕적, 규범적, 종교적 기준으로 부터의 일탈적 행위라고 하였다. 자살을 비정상적이고 비도적인 것으로 보는 법원은 자살

27) Nitzan Rothem/Eyal Ben-Ari, "Mutuality and the study of suicide: Psychological notions on military suicides in Israeli courts", 「The Sociological Review 1-18」, 2019, 5쪽.

28) Piscitelli Francesca, "Suicide in The United States Military and Other Nations' Militaries: A Comparison", School of Graduate Psychology, 2011, 14쪽.

29) Nitzan Rothem/Eyal Ben-Ari, "Mutuality and the study of suicide: Psychological notions on military suicides in Israeli courts", The Sociological Review 1-18, 2019, 5쪽.

30) Nitzan Rothem/Eyal Ben-Ari, "Mutuality and the study of suicide: Psychological notions on military suicides in Israeli courts", The Sociological Review 1-18, 2019, 8-9쪽.

에 있어서 살고자 하는 욕망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인간은 삶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수사 자료에는 사망한 군인의 삶의 의지를 반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사망한 군인은 강력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지지하는 가족, 즉 규범적인 핵가족에 속하였기 때문에 삶에 대한 의지가 충분하였다고 하였다. 법원은 따뜻한 가정과 헌신적인 군복무의 긍정적인 영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개인과 사회 환경 사이의 상호 감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규범적 중요성을 확인하였다.³¹⁾

(4) 자해사망의 군복무연관성과 보상(M. Agiv v. The pension officer, 2007)

이스라엘 국방부는 군인의 사망이 ‘군복무의 결과로서(in consequence of service)’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을 허용하고 있다. 군인의 사망과 군복무의 연관성에 대한 규정은 ‘사상자가족법(보상 및 재활)(Families of Casualties -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1950)’이 1976년에 개정되면서 규정되었다. 1950년 제정된 사상자가족법은 1976년 유족보상금의 사유에 자해사망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다소 모호한 용어인 ‘군복무의 결과로서(in consequence of service)’라는 용어로 인하여 동법의 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스라엘 법원은 민사절차규정(Civil Procedure Regulations, 5744-1984)에 따라 정신과전문의로 하여금 복무연관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결과 사망과 복무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해사망군인의 유족에게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보상 등을 제공하고 있다.³²⁾

그러나 동 조항은 어떤 결과에 대하여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보상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전장에서 또는 훈련 중 사망과 달리, 자해사망은 반드시 군복무 자체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항소위원회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법원은 자해사망과 관련된 사건에서 ‘군복무의 결과로서(in consequence of service)’ 고려되는 모든 사항을 법정에서 심사하고 있다.³³⁾

31) 자살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 이후 유가족은 군 수사기관이 마치 사망한 군인이 자살한 것처럼 발표하여 고인의 명예 훼손과 유가족에게 고통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600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Nitzan Rothem/Eyal Ben-Ari, “Mutuality and the study of suicide: Psychological notions on military suicides in Israeli courts”, 「The Sociological Review 1-18」, 2019, 9쪽).

32) Nitzan Rothem/Eyal Ben-Ari, “Mutuality and the study of suicide: Psychological notions on military suicides in Israeli courts”, The Sociological Review 1-18, 2019, 9쪽.

33) Nitzan Rothem/Eyal Ben-Ari, “Mutuality and the study of suicide: Psychological notions on military suicides in Israeli courts”, The Sociological Review 1-18, 2019, 9쪽.

유가족과 정부 양 측은 모두 자해사망 군인의 정신적·사회적 상황에 관한 사망 이후의 견해를 제시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두한 정신과 전문의에게 의존하고 있다. ‘정신의학적 증거(psychiatric evidence)’로 간주되는 이 평가는 개인적 특성과 감정 상태가 군인의 자해사망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자해사망한 군인과 대면하지 못한 유가족 측의 정신과 전문의와 국방부 측의 정신과 전문의는 사망한 군인이 정신과적 병리현상(mental pathology)으로 고통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음을, 가족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했거나 충분히 받았음을(gained little, or enough, support from their families), 관리할 수 있거나 가혹한 군의 요구사항에 직면했었는지(faced manageable, or harsh, military demands), 진정으로 사회에 기여했는지(insignificantly, or sincerely, contributed to their society) 등을 법정에서 주장한다. 보상에 관한 모든 판결에서 유가족 측의 정신과 전문의는 자살을 기초 훈련 기간 중의 스트레스와 같은 군복무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방부 측의 정신과 전문의는 군인의 자살은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으며 단지 개인적인 병리현상과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한다.³⁴⁾

보상 관련 소송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항상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다. 1976년 이후 공개된 최초의 판결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견해가 인용되지 않았다. 그 최초의 판결에서 자해사망 군인의 형제는 자해사망과 군복무를 연관시키는 유가족의 견해를 지지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사망군인의 부대 사령관은 자해사망을 고등학교 시험에서의 실패와 관련시키는 국방부 견해를 지지하였다.³⁵⁾

결론적으로 법원의 판결은 유가족 측과 국방부 측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상충된 견해 사이에서의 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군복무중의 사망한 군인의 보상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원은 군복무의 결과로서 평가 및 고려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결정하지 않고 상충되는 정신과 전문의의 평가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 있다.

25세의 장교였던 Agiv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서의 정신과 전문의의 참여가 대표적인 예이다(M. Agiv v. The pension officer(2007)).³⁶⁾

군의 장학금으로 물리학을 공부한 Agiv는 공군에 중위로 입대하였고 소령의 보좌관으

34) Nitzan Rothem/Eyal Ben-Ari, “Mutuality and the study of suicide: Psychological notions on military suicides in Israeli courts”, The Sociological Review 1-18, 2019, 9쪽.

35) Nitzan Rothem/Eyal Ben-Ari, “Mutuality and the study of suicide: Psychological notions on military suicides in Israeli courts”, The Sociological Review 1-18, 2019, 9-10쪽.

36) Nitzan Rothem/Eyal Ben-Ari, “Mutuality and the study of suicide: Psychological notions on military suicides in Israeli courts”, The Sociological Review 1-18, 2019, 10쪽.

로서 군복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Agiv는 2000년 자신의 개인 무기를 사용하여 영내에서 자살하였다. 국방부는 유가족인 그의 어머니에게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 결정에 대하여 유가족은 항소하였다. 법원은 양측의 정신과적 평가를 숙고하여 판결을 내렸다. 양측의 정신과 전문의의 견해와 그에 따른 법원의 결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방부 측의 정신과 전문의는 사망한 군인의 복무 여건은 가혹하지 않았으며 복무 여건은 자살에 기여하지 않았고, 그 군인의 자살은 애착을 갖고 있던 여자 친구와의 이별에서 비롯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견해는 군의 영향력(사망과 군복무와의 연관성)을 축소한 반면 사망군인의 개인적 성격과 가족과 친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유가족 측 정신과 전문의는 사망한 군인은 막중한 책임과 실제로 담당할 수 없는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고 직책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가혹한 조건은 자살을 초래한 압박감의 근원이 되었다고 평가하여 가혹한 군복무조건이 자살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방부 측의 변호사는 유가족 측 정신과 전문의의 전문성을 무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유가족 측의 정신과 전문의의 전문성을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법원은 유가족 측의 전문가를 비전문가로 암묵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국방부 측 정신과 전문의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자살(성)이라는 개념을 채택하여 자살한 군인에 대한 사회적 및 조직적 영향력을 축소하고자 하였다(M. Agiv v. The pension officer, 2007). 이후 새로운 역할로의 진입은 자살 행위를 유발하는 유인 그 자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Agiv v. The pension officer, 2009). 법원의 두 판결은 모두 자해사망한 Agiv의 죽음은 외로움, 낮은 자존감, 비합리적 평화주의, 엄격한 채식주의와 같은 자살(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평화주의와 채식주의가 정치적 인식을 표명할 수 있지만, 법원은 이러한 특성을 사용하여 사망한 Agiv를 어려움에 처한 개인으로 특정화하여 위와 같이 병리학적인 개념을 수용함으로써 법원은 군의 책임을 부정하였고 이에 따라 자해사망한 Agiv의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보상을 부정하였다. 법원은 자살성향의 개인이라는 모호한 심리적 개념에 기초하여 그 결정을 하였다. 자해사망(self-demise)을 내적인 문제(internal malaise)로서 설명하고 이스라엘 군인이 복무하는 강압적인 상황을 다루는 것을 회피하였다. 결론적으로 자해사망(self-demise)을 자살성향(suicidality)과 연관지음으로써 이스라엘 법원은 죽음을 추구하는 병사(death-seeking soldiers)라는 개념을 만들어 공공의 이익을 방어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행복도 보장하지 못하는 개인으로 평가하였다. 이스라엘 법원은 군복무중 처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을 정신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평가하여, 군인, 가족, 그리고 국가 사이의 상호성(mutuality)이라는 개념을 축소하고, 표준화하며 개별화하고 있다. 이스라엘 법원은 심리적 추론을 채택하고 개인의 책임을 평가하면서 잠재적으로 집단적 관심사항에 관한 토론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³⁷⁾

4) 자해사망 예방조치 및 자살 예방 프로그램(SPP)

자해사망자 통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군에서의 지속적인 자해사망자의 발생, 특히 2005년 36명의 군인이 자살한 후 총기가 자살행위에 사용되지³⁸⁾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국방부는 2006년부터 일주일 이상의 장기휴가 시 복무중 무기를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금지하였다. 2010년 발표된 군보고서에 따르면, 이 금지조치로 인하여 이스라엘군의 자살률이 40%이상 감소하였고³⁹⁾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률을 57% 감소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테러 등의 위협 요인으로 인하여 장기휴가 중 무기소지 금지조치는 이후 취소되었고 이 취소조치는 자살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이전과 달리 장기휴가 시 무기를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허용되었으나 일정한 감독조치가 취해지고 있다.⁴⁰⁾

(1) Mental Health Center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인 이스라엘은 자살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복무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edical Corp 산하에 Mental Health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약 100여명의 관련 군의장교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육·해·공군 전 장병에 대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단, 연대, 대대별로 센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독립 건물로 인근 부대 장병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⁴¹⁾

<Mental Health Center 임무>

- 모든 정신적 질환 전담
- 조기 발견에 역점
- 치료 후 정상적인 군 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
- 군복무 부적합 판단 시 퇴역조치

37) Nitzan Rothem/Eyal Ben-Ari, "Mutuality and the study of suicide: Psychological notions on military suicides in Israeli courts", The Sociological Review 1-18, 2019, 1쪽.

38) ROBERT KOHN et al, Epidemiology of Youth Suicide in Israel,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 36, 1997, 1537-1538쪽.

39) 2005년도에는 36명이 자살하였으나 2006년에는 28명이 자살하였다.

40) Suicide was top cause of death for IDF soldiers in 2016 (<https://www.timesofisrael.com/idf-15-soldiers-committed-suicide-in-the-past-year/> 검색일 2019.12.12.).

41) 최병순, 군 자살사고 예방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권익위원회, 2008, 48-49쪽.

(2) 이스라엘 방위군(IDF)의 자살 예방 노력

이스라엘에는 자살에 관한 법률이 없다. 보건부 산하의 위원회는 다양한 대처 방법을 모니터링하였고 특정 민간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의한 연구를 지원하였다. 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자살 예방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자살 예방을 위한 전국 협의회를 2014년에 설립하였다. 1966년 - 2005년 사이에 자살 예방 프로그램(SPPs)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일차 진료 의사에게 조기 발견과 우울증 치료법을 교육하는 것이 치명적인 자살 방법 및 자살률을 감소시켰다고 한다. 자살 위험 요인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루는 결과물은 거의 없으며 엄격한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군 복무 중 여전히 자살하고 있다.⁴²⁾

2005년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때 IDF의 정신건강부서 등이 연합하여 자살 예방 프로그램(SPP)을 개발하였다. IDF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은 자살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시행함으로써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받은 부대 지휘관들로부터 시작되었다. IDF는 두 가지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였다. 첫째, 질적심사위원회(quality-testing committee)가 군 조사기관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IDF의 절차가 확립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조치는 군위원회를 보완할 민간자문팀(civilian advisory team)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민간자문팀은 IDF에 소속되지 않았고 학계와 민간 부문에서의 연구 성과와 연계를 통하여 보다 폭 넓은 시각을 제공하여 군의 견해를 대체하도록 하였다.⁴³⁾ 2005년에 설립된 IDF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SPP)은 추가 전문분야를 포함하도록 개선 및 확대되었다. IDF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SPP)은 2006년 - 2014년까지 자살률을 거의 50% 정도로 감소시켰다고 평가되고 있다.⁴⁴⁾

(3) IDF 자살 예방 프로그램(SPP)의 구체적 내용⁴⁵⁾

42) 주목할 만한 것은 군 자살의 28%만이 군복무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43) Leah Shelef et al, "A military suicide prevention program in the Israeli Defense Force: a review of an important military medical procedure", Disaster Mil Med, Vol.1, 2015, 2-3 쪽.

44) Leah Shelef et al, "A military suicide prevention program in the Israeli Defense Force: a review of an important military medical procedure", Disaster Mil Med, Vol.1, 2015, 4 쪽.

45) Leah Shelef et al, "A military suicide prevention program in the Israeli Defense Force: a review of an important military medical procedure", Disaster Mil Med, Vol.1, 2015, 2 쪽.

2005년에 설립된 IDF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SPP)은 2006년부터 추가 조치가 행해졌다. 첫째, 무기 이용가능성에 대한 IDF의 기본 접근 방식이 대폭 수정되었고 무기에 대한 접근성이 감소되었다.⁴⁶⁾ 둘째, 지휘관들이 더욱 책임감을 갖도록 절차 및 명령계통이 개정되었다. 셋째, 타임라인(timeline)과 대상집단(population)이라는 두 가지 축에서 지휘관과 정신건강장교(MHO)를 대상으로 정신 교육 강화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⁴⁷⁾ 넷째, 추가 심리 교육 조치는 모든 병사들에게 상호 책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이 포함되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병사를 치료하고 동료 장교로서 지휘관들을 컨설팅하도록 정신건강장교(MHO)의 가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신건강장교(MHO)를 각 부대에 배치하도록 하였다.

3. 이스라엘 보훈제도 및 관련 법령

1) 보훈제도의 토대

총체적 유대 민족주의(Jewish Nationalism)의 표현인 시온주의는 유대인들의 역사적 고향인 시온, 즉 이스라엘 땅에 대한 유대인의 열망이 나타난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시온주의는 유대민족의 자유와 독립, 국가의 재건과 안보를 쟁취하기 위한 정치운동인 동시에 문화적 재확립과 일체감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다른 민족주의와 마찬가지로 시온주의는 여러 사상들과 상호적 영향 하에 다양한 흐름을 형성하였다. 자유주의와의 결합은 자유주의적 시온주의를, 사회주의와의 결합은 사회주의적 시온주의를, 그리고 유대교의 종교적 신념과 결합된 민족주의는 종교적 시온주의를 형성하였다.⁴⁸⁾

1948년 이스라엘의 국가 설립은 주위 아랍국가들과의 불가피한 지속적인 분쟁을 담보로 얻어진 결과이며, 이스라엘의 건국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로부터의 해방과 유대인 자신

46) 이스라엘 방위군의 정책 변경 후 자살률이 40%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감소는 대부분 주말 동안 총기를 사용한 자살의 감소였으며 주중 자살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Lubin G et al, "Decrease in suicide rates after a change of policy reducing access to firearms in adolescents: a naturalistic epidemiological study", Suicide Life Threat Behav, Vol. 40, 2010, 421-424쪽).

47) 타임라인 축(timeline axis)은 기본 훈련, 첫 6개월 복무, 마지막 6개월, 전역 전과 같이 군인의 군복무 기간 중 면밀한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특정 기간을 의미한다. 대상집단 축(population axis)은 두 가지 특정 그룹, 이민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높은 위험성 지표를 특징으로 하는 군인과 군인의 기초 훈련 기간 등 비교적 단기간 많은 군인들과 함께 복무하는 훈련 교관 및 지휘관 등을 의미한다.

48) 이명남, 이스라엘 보훈제도 및 정책연구, 국가보훈처, 2006, 4쪽.

들의 삶과 정체성을 발전·확립시킬 수 있는 유대인의 역사적 고향에 유대인의 국가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법적으로 확립한다는 시온주의의 목적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온주의는 국가 설립으로 역사적 소명을 다한 것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근간을 이루는 이데올로기이며 세계 도처의 유대인들과의 결속을 견고하게 하는 유대 정신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훈제도 역시 이러한 시온주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발전되어왔다.⁴⁹⁾

2) 보훈제도

(1) 개요

이스라엘은 1948년 국가 설립 이래 주위 아랍국가들과의 끊임없는 전쟁과 군사 분쟁을 겪어 왔다. 이스라엘 사회보장제도는 그와 같은 정치적·군사적 분쟁 상황 속에서 발전하게 되었고, 특히 상이군인을 위한 혜택은 국가 설립의 역사적 배경과 주위 아랍국가들과의 군사적 분쟁의 상황으로 인하여 상당히 관대하고 포괄적으로 구축되었다. 보훈제도의 원형은 일반적 사회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전국가인 이슈브(Yishuv)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 The Jewish Agency를 거쳐 유대국가평의회 산하에 군인과 군인 가족을 위한 복지위원회가 설립되어 복무 중 전사한 군인의 유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1948년 국가 설립과 함께 시작된 독립전쟁으로 인하여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상이군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사회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들을 제정하고 이스라엘 방위군(IDF) 내 재할 및 각종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을 설립하게 되었다.⁵⁰⁾

(2) 기본이념 및 목표

국민들은 전사자 및 상이자의 희생이 국가존립의 토대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장에서 전사 및 부상당한 군인과 유가족을 보살필 의무가 있다. 보훈제도의 목표는 국가차원과 개인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국가차원에서의 목표는 군과 사회의 사기양양에 기여함에 있고 개인차원에서의 목표는 군복무 중 사망 및 부상자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과 함께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다.

49) 이명남, 이스라엘 보훈제도 및 정책연구, 국가보훈처, 2006, 6쪽.

50) 한국보훈학회, 외국보훈제도 비교연구 -영국·캐나다·이스라엘·일본·중국-, 2006, 3쪽; 이명남, 이스라엘 보훈제도 및 정책연구, 국가보훈처, 2006, 25쪽.

3) 보훈 관련 법령

이스라엘의 보훈관련 법령의 개략적인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다.⁵¹⁾ 이스라엘 국가 건립과 함께 1948년 상이군인과 가족에 대한 생활지원·사회복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국방부 재활국(Rehabilitation Department)이 설치되었으며 1949년에는 제대군인(고용복귀)법과 상이법(연금 및 재활) 제정되었다. 이후 1950년 사상자가족법(보상 및 재활)과 군인 묘지법, 1954년 반나치전쟁부상자법, 그리고 1955년 경찰법(상이자 및 사망자)이 제정되었다.

(1) 제대군인(고용복귀)법(1949)

신생 크네셋(입법부)에서 다루어진 최초의 보훈 관련 법률인 제대군인(고용복귀)법(1949)은 제대군인, 사망 군인의 미망인, 고아, 부모 및 상이군인의 피부양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취업권 규정은 물론 전 제대군인을 위한 훈련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2) 상이법(연금 및 재활)(Invalids Law (Pensions and Rehabilitation 1949))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복무하던 상이 제대군인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 연금과 재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⁵²⁾ 제2차 세계대전 당시 Yishuv 기관의 요청에 따라 영국 여단과 기타 다른 형태로 군에 복무한 자, 이스라엘 경찰과 교도소 담당관, Yishuv 시기의 지하조직에 참여한 자로서 전시 혹은 평화시 복무 기간 동안 발생한 부상 혹은 질병의 결과로 초래된 경우(고의적 부주의의 결과로 인한 경우 제외)를 포함하고 있다.⁵³⁾

(3) 사상자가족법(보상 및 재활)(Families of Casualties -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1950)

복무 중 전사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 그리고 복무 중에 발병한 질병의 악화로 사망한 군인 및 상이자법(연금과 재활)에 의거하여 인정된 장애의 결과로 사망한 군인의 가족을 위한 보상 및 사회적 재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950년 제정된 사상자가족

51) 한국보훈학회, 외국보훈제도 비교연구 -영국·캐나다·이스라엘·일본·중국-, 2006. 4쪽

52) Daniel Friedmann, "The Unmarried wife in Israel law", Israel Yearbook on Human Rights, Vol. 2, 1972, 287쪽.

53) 이명남, 이스라엘 보훈제도 및 정책연구, 국가보훈처, 2006, 27쪽(비군사적 원인(교통사고 등)에 의한 상이자는 상이법 혹은 국립보험원에 의한 일반 배상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법은 1976년 유족보상금의 사유에 자해사망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호한 용어인 ‘복무의 결과로서(in consequence of service)’라는 복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가족·기념사업국(The Department of Families and Commemoration)은 사망한 군인과 유가족에게 명예와 헌신을 표명하기 위하여 조직된 이스라엘의 공식 기구로서, 주된 업무는 사망 군인의 유가족(부모, 미망인, 고아) 지원과 관련 기념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유가족에 대한 지원으로는 보상 및 수당, 주택 지원, 의료 지원, 직업 재활, 자녀 교육 및 심리적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념사업으로는 개인적 및 국가적 차원의 추모 행사의 관리와 함께 편찬사업 및 국립묘지 행정과 관리 등을 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사상자가족법(1950) 및 군인묘지법(1950)이 있다.⁵⁴⁾

사망한 군인과 유가족의 자격은 사상자가족법(보상 및 재활)(Families of Casualties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Law 5710-1950)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념 혜택 자격은 IDF 사상자의 매장 및 기념에 관한 군인묘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① 유가족인 부모에 대한 지원 및 보상

유가족인 부모는 영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상자가족법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으며 또한 보상금은 양도, 담보 대출, 보증으로 사용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유치될 수 없다. 유족으로 인정된 부모에 대한 보상은 사망 한 지 1년 이내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군복무중 사망한 군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사망한 후 1년이 지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망 군인의 부모 및 결혼 상태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두 부모, 미혼 부모, 자녀 수 및 연령).

유가족인 독신 부모에 대한 월간 보상금액은 두 부모에게 지급되는 월 보상금액의 80%를 지급한다. 22세 미만의 다른 자녀(첫 자녀의 20%, 추가 자녀의 11%)가 있는 부모에게는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둘 이상의 자녀를 잃은 것으로 인정되는 유가족에게는 200%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유가족인 사망군인의 부모는 부모의 사망, 결혼, 이혼, 추가 자녀의 출생 등 결혼 및 가족 상태의 변화에 대해 보상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⁵⁵⁾

54) Israel Ministry of Defence. n.d. ‘Brochure about mishpahot-hantzaha for English speakers’ ; <https://www.mishpahot-hantzaha.mod.gov.il/mhn/documentarts/english%20version.pdf> (2019.12.20.), 2쪽.

55) Israel Ministry of Defence. n.d. ‘Brochure about mishpahot-hantzaha for English speakers’ ;

사망 군인의 유족인 부모가 다른 자녀를 낳은 경우에는 출산 보조금의 형태로 일회성 특별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부여되며 개인 지원이 필요한 일상적인 기능 장애가 있는 유가족에게는 의료 장애로 인한 가정지원이 제공된다.⁵⁶⁾

② 미망인과 고아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유가족으로 인정된 미망인은 월 단위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액은 미망인의 연령, 자녀의 수·연령 및 자녀가 IDF 군인인지 여부에 따라 차등이 있다. 자녀가 없는 미망인은 성인 자녀가 있는 미망인이 수령하는 보상금의 98%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상금은 양도, 담보 대출, 보증으로 사용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유치될 수 없다.⁵⁷⁾

가) 자녀의 연령에 따른 미망인에 대한 보상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미망인은 월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1세 이하의 추가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월간 보상금의 11%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미망인은 월간 보상을 받을 수 있다.⁵⁸⁾ 자녀가 21세 이상인 미망인은 21세 이하의 미혼 자녀를 가진 미망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89%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21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미망인은 자녀가 IDF 정규 복무중인 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1-24세의 자녀가 있는 미망인은 각 자녀에 대해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4세 이상인 60세에 달하지 않는 미망인에게는 추가로 10%의 연금이 지급된다. 60세 이상의 미망인에게에는 추가로 10%의 연금이 지급된다. 유가족인 부모의 경우와 같이 보상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⁵⁹⁾

<https://www.mishpahot-hantzaha.mod.gov.il/mhn/documenarts/english%20version.pdf> (2019.12.20.), 5쪽.

56) Israel Ministry of Defence. n.d. 'Brochure about mishpahot-hantzaha for English speakers'; <https://www.mishpahot-hantzaha.mod.gov.il/mhn/documenarts/english%20version.pdf> (2019.12.20.), 8쪽.

57) Israel Ministry of Defence. n.d. 'Brochure about mishpahot-hantzaha for English speakers'; <https://www.mishpahot-hantzaha.mod.gov.il/mhn/documenarts/english%20version.pdf> (2019.12.20.), 17쪽.

58) Israel Ministry of Defence. n.d. 'Brochure about mishpahot-hantzaha for English speakers'; <https://www.mishpahot-hantzaha.mod.gov.il/mhn/documenarts/english%20version.pdf> (2019.12.20.), 17쪽.

59) Israel Ministry of Defence. n.d. 'Brochure about mishpahot-hantzaha for English speakers'; <https://www.mishpahot-hantzaha.mod.gov.il/mhn/documenarts/english%20version.pdf> (2019.12.20.), 17-18쪽.

나) 특별 미망인 보조금/정기 보조금(7년마다)

미망인은 일반 보상금 외에 미망인이 되었을 때 특별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미망인이 된 후 매 7년마다 일회성 특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기적인 보상 외에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⁶⁰⁾

다) 고아 학비 보조금(초등학교 + 초등학교 이후과정)

고아인 자녀를 둔 미망인은 과외 활동 및 학교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계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매년 8월 미망인에게 자동으로 지급된다. 8월 이후에 인정한 미망인은 승인한 달을 기준으로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학년도가 끝날 때까지 비례적으로 지급한다.⁶¹⁾

라) 임신 및 출산 보조금

사망한 군인의 임신한 미망인은 임신 7개월부터 출산까지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추가 보상금은 지급할 월별 보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임신한 미망인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임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망한 군인의 임신한 미망인은 특별 출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보조금은 자녀가 없는 미망인에게 제공되는 3개월의 보상금에 해당한다. 출산 보조금은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일정하며 고정되어 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⁶²⁾

③ 묘지 및 묘비

묘지 및 묘비의 외관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념국은 유가족에게 묘비에 물건을 추가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묘비 옆에 심어진 나무 역시 포함된다. 또한 배우자와 부모는 묘비에 개인 비문을 추가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는 다른 모든 유가족의 동의하에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사망한 군인이 매장된 지역 기념국 관리자

60) Israel Ministry of Defence. n.d. 'Brochure about mishpahot-hantzaha for English speakers'; <https://www.mishpahot-hantzaha.mod.gov.il/mhn/documenarts/english%20version.pdf> (2019.12.20.), 19쪽.

61) Israel Ministry of Defence. n.d. 'Brochure about mishpahot-hantzaha for English speakers'; <https://www.mishpahot-hantzaha.mod.gov.il/mhn/documenarts/english%20version.pdf> (2019.12.20.), 20쪽.

62) Israel Ministry of Defence. n.d. 'Brochure about mishpahot-hantzaha for English speakers'; <https://www.mishpahot-hantzaha.mod.gov.il/mhn/documenarts/english%20version.pdf> (2019.12.20.), 21쪽.

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비문의 길이는 두 줄로 48자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념국과 유가족 기념사업국은 균일한 묘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묘비는 30일째 되는 날까지 설치되어야 하며, 묘비가 설치되기 이전에 군 묘지 규정에 따라 유가족은 사망한 군인의 개인 정보와 사망 상황에 근거하여 묘비의 비문내용을 제출해야 한다.⁶³⁾

유가족은 고인의 분묘에 대한 묘의 습득을 증명하는 송장 제출용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소급하여 취득할 수는 없다.⁶⁴⁾ 유가족 기념사업국은 유가족인 부모 및 배우자의 묘비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서는 고인의 사망 후 1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소급하여 제출할 수 없다.⁶⁵⁾

(4) 군인묘지법(Military Cemeteries Law, 1950)

1950년 제정된 군인묘지법은 묘지의 설립 및 묘비의 설치 등에 관한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망 군인의 안장과 관련한 관장기구로는 국방부 유가족·기념 사업국(The Department of Families and Commemoration)과 전사자 기념을 위한 시민평의회(The Public Council for Remembrance of Fallen Soldiers)가 있다. 추모시설로는 헤르즐(Herzl) 국립묘지, 헤르즐(Herzl) 군인묘지, 유대인 학살기념관(Yad Vashem),⁶⁶⁾ 시온주의자들의 희생과 순교를 기리는 장소인 텔 하이(Tel Hai)⁶⁷⁾, 그리고 마사다(Masada) 유적지⁶⁸⁾ 있다.

63) Israel Ministry of Defence. n.d. 'Brochure about mishpahot-hantzaha for English speakers'; <https://www.mishpahot-hantzaha.mod.gov.il/mhn/documenarts/english%20version.pdf> (2019.12.20.), 28쪽.

64) Israel Ministry of Defence. n.d. 'Brochure about mishpahot-hantzaha for English speakers'; <https://www.mishpahot-hantzaha.mod.gov.il/mhn/documenarts/english%20version.pdf> (2019.12.20.), 29쪽.

65) Israel Ministry of Defence. n.d. 'Brochure about mishpahot-hantzaha for English speakers'; <https://www.mishpahot-hantzaha.mod.gov.il/mhn/documenarts/english%20version.pdf> (2019.12.20.), 29쪽.

66) 헤르즐 국립묘지, 헤르즐 군인묘지, 유대인 학살기념관(Yad Vashem) 이 세 장소는 기념산(the Mount of Memory)으로 불리고 있다. 유대인 학살기념관이며 기념물과 이름의 의미를 가진 Yad Vashem은 헤르즐 산의 한 구획으로써 1950년 건립되었다. 동 기념관의 설립 목적은 홀로코스트로 희생된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600만 희생자 각각의 기억과 이야기를 보존하며 후세에 홀로코스트의 유증을 전하고자 함과 동시에 유대인 구출을 위해 애쓴 외국인들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를 표현함에 있다.

67) 유대 국가 설립을 위한 시온주의자들의 희생과 순교를 기리는 유대인의 거룩한 장소들 중 최초로 건립되었다. 시온주의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 중 하나인 요세프 트럼펠도르(Yosef Trumpeldor)의 영웅적 죽음을 기념함과 동시에 국토 수호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대 정치적 시온주의의 선구자인 테오도르 헤르츨(Theodor Herzl, 1860-1904)을 기념하여 명명한 예루살렘의 헤르츨 산에 위치한 국립묘지는 인근 군인 묘지와 홀로코스트 박물관인 야드 바셈(Yas Vashem)과 연결되어 이스라엘 호국·보훈이념의 심장부이며 국가적 차원의 기념 및 추모 행사의⁶⁹⁾ 중심 장소이다. 헤르츨 산에 위치한 국립묘지는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세밀하게 계획된 숲 조경을 통해 일반 국립묘지와 군인묘지로 구획이 나뉘어 있다.⁷⁰⁾

① 군인묘지 및 국립묘지

가) 헤르츨(Herzl) 군인묘지

전쟁에서의 용맹성과 특별 공훈을 인정받은 전사자가 안장된다. 헤르츨 산기슭에 이스라엘 독립전쟁시 전사한 군인들과 이후의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이 안장된 곳이다. 현충일에 전사자 추모식을 국가 행사로 진행하고 있다. 현충일 개최식은 1969년부터 헤르츨 군인 묘지가 아닌 동예루살렘의 통곡의 벽(The Wailing/Western Wall)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작전 중 실종되거나 이름 없이 죽어간 전사자들을 위한 공식 기념식은 군인 묘지에서 열리고 있다. 전국에 분포하는 군인 묘지 중 중심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으나, 묘비 디자인은 전 군인묘지에서 동일하며 본질적으로 모든 전사 군인에 대한 예우에서 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민간 국립묘지의 묘지 및 묘비와도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⁷¹⁾

나) 헤르츨(Herzl) 국립묘지

헤르츨 국립묘지는 건립 후 이스라엘 국민 전체의 호국 순례지가 되었고, 학생 및 군인 단체들의 정례적인 방문 장소가 되었다. 국가 기념행사의 중심 장소로서 예루살렘을 국가의 수도로 그 위상을 공고히 하는 의례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이스라엘 국가 회복과 시온주의의 상징적 연합과 일체성 생성의 중심 장소이기도 하다. 헤르츨 국립묘지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의 만남이 민족적 전통의 프레임 내에서 사회적으로 조직화되고 문화적으로 조정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⁷²⁾ 국립묘지 건립 후 청소년 준군사여단인 가드니는 유대 영웅주의적 축제와 예루살렘으로의 정부 이전 결정을

68) 서기 70년, 로마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살아남은 일단의 유대 저항세력들이 최후까지 저항하던 천혜의 요새로서 전설적인 저항정신과 비극적 종말의 역사가 현대 이스라엘의 호국 정신으로 승화된 유적이다.

69) Eyal Ben-Ari, "A Good Military Death", Armed Forces & Society, Vol. 31, No. 4, 2005, 659쪽.

70) 이명남, 이스라엘 보훈제도 및 정책연구, 국가보훈처, 2006, 82쪽.

71) 이명남, 이스라엘 보훈제도 및 정책연구, 국가보훈처, 2006, 83쪽.

72) Maoz Azaryahu, "Mount Herzl: The Creation of Israel's National Cemetery", Israel Studies, Vol.1, No.2, 1996, 46쪽.

경축하는 의미에서 헤르즐 산에서 하누카 경축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상 및 군 장성들이 참석함으로써 행사의 정치적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다.⁷³⁾

<그림5-1> Tel Hi 비석



<그림5-2> 마사다(Masada)



(5) 기념일 및 추모 프로그램

73) 이명남, 이스라엘 보훈제도 및 정책연구, 국가보훈처, 2006, 85쪽.

① 전사자 기념사업부

1949년 1월 설립되었고 1950년 군인묘지법에 따라 이스라엘 방위군의 전사 군인을 위한 군인묘지, 군부지 및 민간인 공동묘지로의 안장을 위한 묘지 선정, 유지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스라엘 전역의 42곳의 군인묘지와 안치소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묘비와 비문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군 묘지 부지 및 비상시의 임시 군 묘지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유가족 지원프로그램으로 상중 제7일(Shiva)과 30일(Shloshim) 및 1주기 기일에 묘지 방문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하고 있다. 전사자의 묘비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비교전(non-belligerence) 기간 중 30일(Shloshim) 이전까지 건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전시에는 사망 군인은 임시 묘지에 안장하고 보통 매장일로부터 12개월 후 영구 묘지로 이장하고 있다. 전사자의 부모와 미망인은 개인별로 추모비용을 지급받으며, 또한 매년 추모식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는다.⁷⁴⁾ 사망 군인은 유가족이 민간 묘지에 매장하기를 선택하지 않는 한, 유가족이 선택한 군인 묘지에 안장된다. 사망 군인을 민간 묘지에 안장할 경우에는 이스라엘 방위군의 안장에의 참여방법 및 고인의 표준 안장을 보장할 조건들이 제시되어야 하며, 사망 군인의 유가족이 사망 사실을 통보받은 후 12시간 이내에, 묘지를 선택하거나 상기 규정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망 군인은 군 묘지 중 하나에 매장되어야 한다.⁷⁵⁾

② 전사자 기념을 위한 시민평의회(The Public Council for Remembrance of Fallen Soldiers)

전사자 기념을 위한 시민평의회는 군인묘지법(1950)에 의거하여 1951년 설립되었다. 시민평의회는 전사자 기념사업부와 연계하여 국립묘지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묘비 형태의 결정 및 기타 편찬사업 등을 행하고 있다. 초대 회원은 모두 유가족 부모로 이루어졌으며 현재 회원은 국방부 장관이 임명한다.⁷⁶⁾

4. 보훈조직

1) 국방부 산하 재활국(The Rehabilitation Department)

2005년 부서 분리 이전까지 상이법 및 사상자가족법(보상 및 재활)의 집행과 행정을 담당하였다. 상이군인, 유가족(부모, 미망인, 고아) 관련 보상, 재활, 의료 및 기타 지원에 관한 모든 심사 및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이었으나, 2005년 2월 상이군인 재활국과 유

74) 이명남, 이스라엘 보훈제도 및 정책연구, 국가보훈처, 2006, 89쪽.

75) Military Cemeteries Law(1950) § 4(place of burial of a soldier) (a)(b)(c).

76) 이명남, 이스라엘 보훈제도 및 정책연구, 국가보훈처, 2006, 90쪽.

가족·기념사업국으로 분화되었다. 상이군인과 전사자 유가족의 복지 및 고통 경감의 국가안보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른 필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⁷⁷⁾

(1) 상이군인 재활국

상이군인 재활국은 텔아비브에 위치한 본부와 예루살렘, 텔아비브, 하이파, 티베리아스, 브엘 세바, 브네이 브락, 르호봇 등 7개 지방청이 있다. 텔아비브에 위치한 상이군인 재활국 본부는 모든 프로그램의 행정적 감독과 조정 및 정책기획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 직능 부처에는 소청과 자격결정과, 보상·혜택지원과, 재활지원과, 기념사업과, 법무담당과, 정보처리과, 관리예산과 등이 있다. 또한 예산과 인력 관리, 내부감사 및 수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본부의 보상담당관은 제대군인에 대한 연금 수급권에 관한 심사와 결정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의료위원회를 통하여 제대군인의 상이 정도 평가 및 이에 따른 연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다.⁷⁸⁾

(2) 유가족·기념사업국(The Department of Families and Commemoration)

사망 군인의 유가족(부모, 미망인, 고아)을 위한 지원 및 기념사업 총괄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는 보상 및 수당, 주택 지원, 직업 재활, 자녀 교육, 각종 세제 혜택 및 지속적인 심리적 지원 등이 있다.⁷⁹⁾ 또한 개인적·국가적 차원의 각종 추모 행사, 편찬사업, 국립묘지 행정 및 관리⁸⁰⁾ 등을 행하고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사상자가족법(보상 및 재활)(1950)과 군인묘지법(1950)이 있다.

2) 국립보험원(Bituah Leumi; The National Insurance Institute of Israel)

1954년 설립된 국립보험원(Bituah Leumi)은 자살테러와 같은 적대적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Victims of hostile acts)에 대한 연금과 재활서비스를 담당한다. 상이군인

77) 이명남, 이스라엘 보훈제도 및 정책연구, 국가보훈처, 2006, 30-31쪽.

78) 이명남, 이스라엘 보훈제도 및 정책연구, 국가보훈처, 2006, 31-32쪽.

79) Israel Ministry of Defence. n.d. 'Brochure about mishpahot-hantzaha for English speakers'; <https://www.mishpahot-hantzaha.mod.gov.il/mhn/documenarts/english%20version.pdf> (2019-12-20.), 5-16쪽.

80) Israel Ministry of Defence. n.d. 'Brochure about mishpahot-hantzaha for English speakers'; <https://www.mishpahot-hantzaha.mod.gov.il/mhn/documenarts/english%20version.pdf> (2019-12-20.), 28-29쪽.

재활국 산하 지방청과 유가족·기념사업국 산하에 8개의 권역별로 조직되어 있다. 국립보험원은 이스라엘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상이군인 및 유가족과 관련된 지원은 국방부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테러 희생자에 대한 지원은 국립보험원이 담당하고 있다.

테러 희생자 보상 및 재활 지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원 대상은 이스라엘 국민 혹은 이스라엘에 적법하게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의 가족이다. 보상 및 재활 지원으로는 치료 지원, 보상 및 연금 등 상이법과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보상 결정에 관한 심사와 통지기간은 각 경우에 따라 몇 주에서부터 수개월까지 소요된다. 보상금액의 산정 역시 구체적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⁸¹⁾

5. 상이군인 보상 정책

상이법이 규정하는 상이의 개념은 상해, 질병 혹은 질병 악화의 결과로 인한 정상적인 활동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하며, 동 법률은 군 복무와 관련되거나 관련 가능성이 있는 질병 또한 포함한다. 보상 프로그램에는 상이 제대군인을 위한 상이연금, 보조 수당, 의료서비스 공급, 보조기구, 심리 상담, 교육, 직업재활, 직업소개, 사업과 주택대부 지원 등이 있으며 이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이국이 전담하고 있다. 한편, 전사자 유가족에게는 연금, 보조 수당, 교육 재정지원, 직업재활, 직업소개, 주택대부, 심리적 및 전반적 재활 상담이 포함되고 있으며 유가족·기념사업국이 전담하고 있다.⁸²⁾ 앞서 유가족·기념사업국의 유가족을 위한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살펴보았기에 여기서는 상이법상의 보상 및 주무부처 외 정부 부처 및 기타 관련단체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상이군인 보상 정책(상이국)⁸³⁾

(1) 상이인정 및 상이등급 판정기준

국방부 장관에 의해 임명되는 전문 의료인들로 구성된 의료위원회가 발병 당시부터의 입원 및 처방에 이르는 모든 진료기록과 정밀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장애상이평가표(Disability rating schedule)에 의거하여 백분율로 상이정도를 평가한다. 상이정도가 가장 심한 조건을 우선하여 고려한 후, 나머지 조건들을 심한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81) 이명남, 이스라엘 보훈제도 및 정책연구, 국가보훈처, 2006, 61-62쪽.

82) 이명남, 이스라엘 보훈제도 및 정책연구, 국가보훈처, 2006, 38쪽.

83) 이명남, 이스라엘 보훈제도 및 정책연구, 국가보훈처, 2006, 38-44쪽.

감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상이율은 100%를 넘지 못하나, 상이율이 극심한 경우에는 100% 상이율에 40%를 추가하여 특별 상이율이 부여된다.⁸⁴⁾ 영구 상이와 일시 상이 정도가 의료위원회에 의해 구별되어지며, 일시 상이자는 위원회가 정한 날짜에 따라 주기적 재검사를 실시하며, 영구 상이로 악화될 경우 보상담당관이 직접 발의하거나 상이자의 요청에 의해 재진단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장애율을 바꿀 수 있다.

(2) 상이군인 보상 종류, 지급 기준 및 지급액

① 일회성 보상금

영구상이등급이 10-19%인 상이자는 월정 연금과 다른 혜택 대신 일회성 보상금(일시금)을 지급 받는다. 보상금 지급은 상부 이의신청위원회에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조건 하에 실행된다.

② 상이연금

상이의 결과로 초래된 수입 손실과 장애로 인한 고통과 불편에 대한 보상이 제공된다. 따라서 생계를 스스로 유지할 수 있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상이 제대 군인에게도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다. 수혜 자격으로는 상이법에 의거하여 복무관련 장애상이 정도 20% 이상인 경우가 해당되며 영구 상이자는 평생 연금이 지원되며, 일시 상이자는 장애정도의 변화가 혜택의 증가, 감소 혹은 중단을 보장할 만큼 확실할 때까지 지급된다.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청 제출시 연금은 제대일로부터 지급되며, 소청이 제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면 소청서 제출일부터 지급된다.

③ 보조 수당

가) 질병 수당

상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제대군인이 상이로 인해 초래된 의료조건으로 의해 일을 할 수 없으며 여타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 연금 대신 질병 수당을 지급한다. 질병 수당은 중간급 정도 공무원의 봉급에 준하여, 월 단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나) 실업 수당

복무관련 상이 20% 이상인 제대군인이 일시적으로 실직하는 경우 실직기간 동안 특별 보조금을 월별로 지급한다. 단,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을 위해 등록하고, 여타 생계수단이 없으며, 이전에 어떤 형태의 경제적 재활 혜택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84) Invalids(Pensions and Rehabilitation) §2(b).

④ 취업 불능자 연금

상이 50% 이상인 제대군인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제한으로 인해 영구히 자력갱생할 수 없으며 여타 적절한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 기본 연금에 추가연금이 지급된다. 다른 법에 따른 연금 혹은 다른 수입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상이자는 법령에 따라 자격심을 받아야 한다.

2) 주무부처 외 정부 부처 및 기타 관련단체 지원⁸⁵⁾

(1) ZDVO (Zahal[IDF] Disabled Veterans Organization)(1949)

이스라엘 방위군 내 유일한 공식 상이제대군인 대표 단체로서 상이 제대군인의 삶의 질 향상과 법적 권리 보호, 법령안 발의를 통해 권익신장 수행 등 회원 복지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건국 이래 지속적인 전시상황으로 늘어난 상이군인의 수에 비례하여 ZDVO의 회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5개 지부를 통해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활·요양시설인 전사의 집(Warrior's Home) 및 요양소(Beit Kay)를 지원·운영하고 있다.

(2) 야드 라바님(Yad Labanim)(1948)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들의 유가족을 중심으로 전사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에 대한 권익 신장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유대계는 물론 비유대계 유가족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로서 유가족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고 그에 합당한 절차와 규정을 수정할 것을 발의하며 또한 신규 회원들을 돕는 지원 메커니즘을 만들어 사회적 활동을 돕고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재활국 및 유가족·기념사업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여러 위원회들을 대표하면서 국방부의 법정자문기구인 전사자 기념을 위한 시민평의회(The Public Council for Remembrance of Fallen Soldiers)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미망인 및 고아단체(IDF's Widows and Orphans Organization)(1991)

이스라엘 방위군과 보안부대에서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을 대변하고 유가족에게 사회적·재정적·정서적·의료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동 단체는 미망인 및 고아인 회원에게 Bar and Bat Mitzvot,⁸⁶⁾ 결혼식 및 교육 여행과 같은 중요한 인

85) 이명남, 이스라엘 보훈제도 및 정책연구, 국가보훈처, 2006, 59-60쪽.

86) Bar and Bat Mitzvot는 소년의 성년식인 Bar mitzvah와 소녀의 성년식인 Bat mitzvah를 의미한다

생의 시점에 그와 같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복지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회원에는 외교단, 경찰, 국경수비대의 미망인과 고아도 포함되며 Yad Labanim 과 마찬가지로 비유대계 유족도 포함하고 있다.⁸⁷⁾

다(https://en.wikipedia.org/wiki/Bar_and_bat_mitzvah(2020-01-10).
87) <https://www.idfwo.org/?CategoryID=729>(2020-01-13).

< 참고문헌 >

| 논문 및 도서

김인국, “이스라엘군의 복무제도”, 국방이슈브리핑시리즈(2018-18), 한국국방연구원, 2018.

이명남, 이스라엘 보훈제도 및 정책연구, 국가보훈처, 2006.

최병순, 군 자살사고 예방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권익위원회, 2008.

한국보훈학회, 외국보훈제도 비교연구 -영국·캐나다·이스라엘·일본·중국-, 2006.

Daniel Friedmann, “The Unmarried wife in Israel law”, Israel Yearbook on Human Rights, Volume 2, 1972.

Eyal Ben-Ari, “A Good Military Death”, Armed Forces & Society, Vol. 31, No. 4, 2005.

Leah Shelef et al, “A military suicide prevention program in the Israeli Defense Force: a review of an important military medical procedure”, Disaster Mil Med, Vol.1, 2015.

Leah Shelef et al, “No Way Out: Entrapment as a Moderator of Suicide Ideation Among Military Personnel”,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72, 2016.

Lubin G et al, “Decrease in suicide rates after a change of policy reducing access to firearms in adolescents: a naturalistic epidemiological study”, Suicide Life Threat Behav, Vol. 40, 2010.

Maoz Azaryahu, “Mount Herzl: The Creation of Israel’s National Cemetery”, Israel Studies, Vol.1, No.2, 1996.

Nitzan Rothen/Eyal Ben-Ari, “Mutuality and the study of suicide: Psychological notions on military suicides in Israeli courts”, The Sociological Review 1-18, 2019.

Piscitelli Francesca, “Suicide in The United States Military and Other Nations’ Militaries: A Comparison”, School of Graduate Psychology, 2011.

Refugee Review Tribunal(Australia), RRT RESEARCH RESPONSE(ISR34012), 2008.

ROBERT KOHN et al, Epidemiology of Youth Suicide in Israel,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 36, 1997.

| 인터넷 자료

Israel Ministry of Defence. n.d. 'Brochure about mishpahot-hantzaha for English speakers';
<https://www.mishpahot-hantzaha.mod.gov.il/mhn/documentarts/english%20version.pdf>(2019.12.20.).

Suicide was top cause of death for IDF soldiers in 2016
(<https://www.timesofisrael.com/idf-15-soldiers-committed-suicide-in-the-past-year/>(2019.12.12.).

제6장 한국의 처우실태

1. 한국 군대와 자해사망자 현황

1) 한국군대

헌법 제39조에 의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며, 병역법상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자원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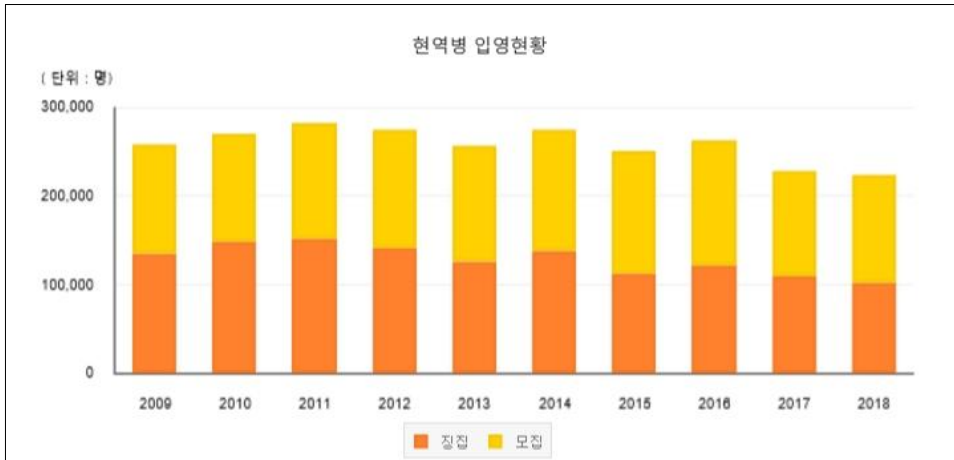
한국은 1949년 제정된 병역법에서 징병제를 기본 병역제도로 규정한 이래 지금까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OECD 회원국 37개 중 한국과 같이 징병제를 택한 국가는 13개국이다. 이 중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모두 대체복무제를 시행한다. 징병제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추세를 보자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주의 파고 속에서 많은 국가들이 기존의 징병제에서 탈피하기 시작했다. 영국과 미국은 각각 1960년, 1973년에 모병제로 전환하였고, 독일도 통일 이후 2000년대 초부터 군대정원을 축소하다가 2011년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2015년 모병제 도입을 결정하고 2018년 실시하였다. 최근 한국에서도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육군 46만 4천여명, 해군 7만여명(해병대 2만 9천여명 포함), 공군 6만 5천여명, 총 59만 9천여명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으며²⁾, 매년 20만 이상이 징집과 모집의 형태로 입대한다. 여기서 모집이란 징집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특수분야의 병을 본인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여 군에 입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민 개병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징집을 원칙으로 한 지원(모집)제를 병행한다.

1) 병역법 제11조 제1항.

2) 국방부는 2022년까지 육군병력을 36만5천 명으로 감축하고, 해군과 해병대, 공군은 현 정원을 유지하여 총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 감축할 예정이다.

<그림6-1> 2009~2018년 현역병 입영 현황



출처: 현역입영과(14개 지방병무청의 현역병입영현황 보고자료 및 통계시스템) ·
현역모집과(통계시스템)

한국군대의 복무기간은 현재 육군·해병대 병과 의무경찰대원·상근예비역은 18월이고, 해군 병과 의무해양경찰대원·의무소방원이 20월, 공군병이 22월이다.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은 21월이고, 산업기능요원은 23월이다. 복무기간은 징집병의 병역부담을 완화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단축되어 왔다. 월급은 2019년 기준 병장 405,700원, 상병 366,200원, 일병 331,300, 이병 306,100원으로, 다른 징병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표6-1> 징병제 국가 병사 임금 비교 (2012년 기준)

(단위: 원)

국가	최소급여	최대급여	평균급여
한국	81,500	108,000	94,750
대만	232,600	251,700	242,150
이스라엘	107,160	227,860	167,510
에스토니아	150,000	220,000	185,000

*출처: 육군 병력구조개선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안보경영연구원, 2012

한국은 1991년 이후 현재까지 걸프전, 소말리아, 서부 사하라, 앙골라, 동티모르, 아프간, 이라크, 레바논, 소말리아 아데만 해역, 아이티, 아랍에미리트(UAE), 남수단, 필리핀, 시에라리온, 독일, 예멘에 총 55,483명을 파병하였으며, 2019년 현재 기준 해외파병

군은 1,039명이다.

2) 자해사망군인 통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한 해 평균 105명이 군대에서 사망하고, 그 중 67명이 자살로 처리되었다. 국방부는 ‘자살 예방 종합시스템’을 시행하여 ‘식별-관리-분리’의 단계별 예방조치 등을 통해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에 따라 자해사망 군인의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통계에 따르면 군 사망 사고의 원인 중 자해사망사고가 두 번째로 높고, 전체 사망자 중 그 비중이 65.1%에 이른다.

자살에 대한 전 사회적인 예방프로그램이 도입·시행되면서 군대 역시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효과로 자해사망사고가 감소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한국군대가 가진 특수성-유일한 분단국가로서 군사적 긴장감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고,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인의 자해사망위험성은 여전히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자해사망군인에 대한 국가책임의 문제도 이러한 특수한 맥락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이다.

<표6-2> 2009~2018년 군 사망사고 현황

(단위: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113	129	143	111	117	101	93	81	75	86
안전 사고 (*)	소계	32	46	42	38	37	25	28	24	23	26
	차량	13	9	18	17	15	12	6	5	10	6
	항공/ 함정	-	13	5	1	2	0	0	7	0	7
	익사	7	4	2	2	6	3	5	0	3	5
	폭발	-	-	1	-	-	1	1	3	3	1

	추락/ 충격	8	8	5	5	7	2	5	4	1	4
	화재	-	-	-	3	-	0	0	0	0	1
	기타	4	12	11	10	7	7	11	5	6	2
군기 사고 (**)	소계	81	83	101	73	80	76	65	57	52	60
	자살	81	82	97	72	79	67	57	54	51	56
	총기	-	-	4	-	-	5	0	0	0	0
	폭행	-	1	-	1	-	1	0	0	0	0
	기타	-	-	-	-	1	3	8	3	1	4

* 안전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불안정한 인간의 행동과 불안정한 물리적 상태 및 조건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 부상 또는 물자의 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의미한다.

** 군기사고는 군형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각종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한 사건, 사고로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를 의미한다.

군인의 자해사망을 민간사회에서의 일반인 자해사망과 비교해봤을 때 자해사망의 원인과 방법, 사망의 결심과 실행까지의 시간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2006~2010년 6월까지 집계된 자해사망군인은 348명이었다. 사망자들의 자살원인으로는 ‘복무 부적응’ 이 89명(25.6%)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환경’ 이 61명(17.5%), ‘업무부담 및 부수적 원인’ 이 58명(16.7%), ‘염세비관’ 이 55명(15.8%)으로 집계되었다.¹⁾ 자해사망군인의 경우 의사, 추락, 음독 등 민간사회에서의 자해사망 방법과는 달리 의사, 투신, 총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의 수단도 총기 및 수류탄 등과 같은 군용물을 이용하였다. 또한 자해사망 군인의 경우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시간이 민간사회의 자해사망보다 매우 짧다. 군 내부의 각종 악습에 노출되거나 자신이 업무상 잘하지 못해 선임자들의 질책을 받게 될 때, 갈등을 유발한 후 자살을 실행하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다. 이는 당장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를 자살 실행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²⁾

1) 민중의 소리, “일병 자살...최근 5년간 군대 자살자 수는 348명”, 2010-10-15. <http://www.vop.co.kr/A00000440504.html> (2019-11-18.).

2) 전충현, 임석현, “군자살자의 자살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부검 적용 방안”, 과학수사학, 2012, 81-82쪽.

<표6-3> 2006~2010.6. 자해사망군인 자해사망 수단

수단/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6
계	77	80	75	81	82
의사	37	51	38	56	50
투신	14	13	16	13	13
총기	20	11	17	7	11
음독(가스중독)	2	3	2	1	7
기타(폭발, 분신)	4	2	2	4	1

*출처: 2010년 국정감사 언론 보도 참고

2. 한국의 보훈법제

1) 보훈법제의 종류

한국의 보훈법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 보상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등에 근거하여 예우 보상을 하고 있다.

<표6-4> 예우보상의 내용 및 관련 법률

종류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 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

	가유공자, 618 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지원대상자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 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1급 내지 7급)를 입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분(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625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시 사망하신 분 또는 행방불명 되신 분, 5·18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하신 분,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하신 분
고엽제 후유(의)증	본인,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제대군인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분), 중기복무제대군인(5년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분)

2) 군 사망사고에 관한 보훈법제

군 사망사고의 경우 「군인사법」과 「군인연금법」에 따라 보상근거와 보상내용을 정하고, 사망 구분과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에 따른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전몰군경이나 제5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 등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망의 구분

군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군인사법 제54조 및 전공사상사 처리훈령에 따라 사망을 구분한다. 국방부 전공사상 분류기준표에는 ‘전사·전상’, ‘순직·공상’, ‘일반사망·비전공상’으로 나누고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군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일반사망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4. 전상자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5. 공상자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순직심사는 각 군 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순직으로 인정된 사례들의 다수가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훈처가 선제적으로 유공자로 인정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고, 유족들은 소송을 거쳐서 겨우 인정받는 실정이다. 국방부가 순직 Ⅰ, Ⅱ, Ⅲ으로 판단하는 경우 보훈처가 다시 심사하여 일부는 국가유공자로, 일부는 보훈보상자로, 나머지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망자로 취급하고 있다.

2011년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 국가유공자 제외대상에서 ‘자해로 인한 사

망' 이 삭제되고, 자해사망은 군인사법상 순직Ⅲ형으로 분류되었다. 군인사법 시행령의 순직자 분류기준표는 순직Ⅲ을 2-3-1부터 2-3-11까지 11개 유형으로 제시한다. 이 중 자해사망의 유형은 2-3-7부터 2-3-10까지 4가지이다. 이는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의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2-14에도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내용에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나 '직접적 원인' 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자해사망의 유공자 인정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는 자해사망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려는 유공자법 개정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으며,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되지 않은 자해사망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 는 2012년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맞지 않게 되었다.

<표6-5> 순직자 분류기준표 중 순직Ⅲ형

2-3-7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u>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u>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8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9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u>직접적인 원인이 되어</u>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0	2-3-7부터 2-3-9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u>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u>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전몰군경 등이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 가 인

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여부도 인정되어야 한다.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된다.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에 비해 보상금은 약 70% 정도이며, 의료지원에서도 혜택이 적다.

<표6-6>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내용 비교

구분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재해사망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보 상 금		◦상이 정도 등에 따른 일정액 ◦순직군경	◦국가유공자의 70% 수준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151만 3천원	105만 9천원
	부모	148만6천	104만
	미성년(성년장애)자녀	175만4천	122만8천
의료지원		◦배우자 60% 감면 (선 순위 유족 1명) ◦보철구 지급, 보철용 차량	◦배우자 60% 감면 (선 순위 유족 감면 비대상) ◦보철구 지급(보철구차량 비대상)
국립묘지		국립묘지 안장	국립묘지 안장

(3) 사망보상금 및 유족연금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의무경찰 등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의무경찰 등이 전투 또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우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군인의 사망에 대한 보상금은 군인연금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른다.

군인연금법 제31조(사망보상금) ①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이 제3호에 따른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제3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전사: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
2. 특수직무 순직: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망: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8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망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사망보상금을 산정한다.

④ 외국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견기간 중의 근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간부는 군인연금법에 의해 본인 또는 유족의 생활적 안정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으나 일반 병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이 유족들에게 매우 절박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군인연금법 제31조와 제32조는 예외적으로 병에게 적용되어 국방부에 의해 순직(순직 Ⅰ, Ⅱ, Ⅲ)으로 처리된 병의 유족에게 1억 5천만원 정도의 사망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한도 안에서 국방부의 순직처리는 병에 대한 보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6-7>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기준

구 분		2013. 7. 1 개정전	2013. 7. 1 개정후
사 망 보 상 금	전사	소령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액 평균액의 57.7배
	특수직무 순직	소령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
	일반순직	보수월액의 36배 *최저 보수월액: 상사18호봉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최저 기준소득월액: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42배
	공무 외 사망	보수월액의 12배 *최저보수월액: 중사최저호봉	폐지

*출처: 국방부 홈페이지 (2016. 4. 15. 게시물)

(4) 국립묘지 안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하더라도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이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을 제외한다. 한국의 국립묘지는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그리고 국립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호국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 안장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표6-8> 국립묘지의 종류 및 안장 대상

종류	안장 대상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순국선열·애국지사 ◦현역군인·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군무원은 근무 중 사망한 자는 안장대상) ◦무공수훈자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20년

	<p>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은 81.1.10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p> <p>◦전몰·순직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순직경찰관은 82.1.10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p> <p>◦전·공상군경(군무원으로서 부상을 입고 퇴직후 사망한 사람은 안장대상이나,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은 비해당)</p> <p>◦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 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정한 실습훈련 및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중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94.9.1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p> <p>◦재일학도의용군인</p> <p>◦의사상자(70.8.4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p> <p>◦순직·공상공무원(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으로서 이 법시행('06.1.30) 이후 사망한 사람중 교정직공무원 또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규정에 의한 위험직종 종사자 : 직무수행중 사망한 순직공무원 또는 직무수행중 예우법에의한 상이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재해복구 현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현장에서 사망한 순직공무원 또는 재해예방·재해복구현장에서 예우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심의·결정된 사람)</p> <p>◦국가사회공헌자(상훈법 규정에 의한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국민적 추앙이 되는 인물이나 위의 요건 외에 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심의·결정된 사람</p>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p>◦1960년의 3.15항쟁과 4.19혁명에 의한 사망자·부상자·공로자</p> <p>◦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의한 사망자·부상자·희생자</p>
국립 영천/임실/이천/	<p>◦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p> <p>◦참전유공자</p> <p>◦군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p>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다만,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과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그리고 현역군인과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경우에도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하였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 2 호). 따라서 국방부가 순직(순직 Ⅰ, Ⅱ, Ⅲ)으로 결정한 자해사망자의 유해도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다.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즉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형법 상 내란죄·외환죄·간첩죄·이적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3호).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도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국립 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도 국립묘지 안장이 제한될 수 있다(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 영예성의 훼손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 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3. 자해사망군인에 대한 보훈법제의 변화

1) 판례

(1)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도 자해행위를 자유로운 의지로 판단

현재 군 복무 중인 병들은 신체의 자유 등이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군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발생하는 자살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이 국방의 의무를 가지는 장병에 대한 관리 책무를 가지고 있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논리상 당연하다.³⁾ 그럼에도 군내 자해사망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자살을 군기의 문란이나 전투력의 침해로 규정하였다.⁴⁾ 이를 테면, “군인은 개인의 몸이기 이전에 국가의 몸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로 처신을 함부로 할 수 없는 특수한 위치이고, 일반인에게

3) 양철호, “군 장병 자살과 국가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유럽헌법연구, 2017, 409쪽.

4) 이재승, “군내 자살처리자에 대한 국가책임의 근거와 범위”, 2006, 군의문사위 2006년도 전문가 초청토론회 자료집, 70쪽.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자해가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상해죄로 처벌되는 것과 같이 자살 행위는 ‘군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로 보았다. 또 병력은 전투력의 기본요소로서 전투, 비전투를 막론하고 병력의 손실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하는데 자살은 이런 병력의 비전투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며, 대개 자살은 개인 사정과 부대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고 있으나 자살사고가 발생하면 그 부대의 취약점이 노출되고 병사들은 같은 입장인 자살자를 동정하게 되며 조그마한 불만도 부대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돌변하게 된다.”⁵⁾는 것이다.

자해사망군인은 개인 책임(잘못)으로 전가되는 ‘자살자’로 구분되어 전공이나 공무 사망자에 비해 신분상의 차별을 두었다. 이는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판례의 태도는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자살은 나약한 성격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⁶⁾, “망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에 실패하여 망인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⁷⁾, “망인의 가정환경, 건강, 상태, 나약한 성격 등으로 군부대 생활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라고 언급하면서 자해사망사고를 개인 탓으로 돌리고 국가유공자로도 인정하지 않았다.⁸⁾

종래 판례는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자유의지가 개입되면 자해행위로 보아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였다.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2004.3.12. 선고 2003두2205 판결에서 “가혹행위와 자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자살과 관련된 질병의 유무,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⁹⁾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의 취지는 서울고등법원 2004.6.25. 선고 2003누12846, 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두14578,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두12521 판결에서도 대체로 유지되었다.

5) 서영득, “군내 사망사고 처리실태와 제도적 개선방향”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교육강연자료 (2006) : 이계수, “군인의 죽음과 인권”, 법학논총 21,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346쪽에서 재인용.

6)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7)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8) 김안나, 김성기, “군내 자살처리자 가족의 사회적 배제와 지원방안 연구”, 정책현안자료 2007-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4쪽.

9) 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2205.

같은 취지의 판결은 계속되었다. 원심이 자해사망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였다. 그 사건은 다음과 같다.

2002년 육군에 입대한 망인이 신병교육을 받은 다음 해인 2003년 3월부터 ‘우측 발목 연부조직 종양’ 치료를 받던 중 담당 업무에 적응하기 어려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상태에서 자신감을 잃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선임병들로부터 괴롭힘과 질책을 받아 오던 망인은 퇴원 직후 행정인력이 감축되면서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었고 그로 인해 새벽까지 근무를 하는 등 만성적 수면부족에 시달렸다. 이후 또다시 폭행과 욕설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교보재 창고에서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대법원은 “군복무 중 망인의 우울 정서를 동반하는 적응장애가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망인의 적응장애는 선임병의 거듭된 가혹행위와 질책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직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나이와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것이 망인으로 하여금 적응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망인의 가정환경, 건강 상태, 나쁜 성격 등으로 군부대 생활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자살 당시의 망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적응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¹⁰⁾ 고 판시하였다.

(2)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자해사망도 국가유공자대상으로 인정한 판례

자해사망사고가 높은 비중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언론에 널리 알려지면서 자해사망자에 대한 법제도에 변화가 있었다. 2011년,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어 자해사망에 관한 조항 삭제 및 보호보상자법이 제정·시행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¹¹⁾” 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기존의 ‘자유의지의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결정’ 하던 법리에서 벗어나 직무 및 교육훈련과 자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비록 군 장병의 자유로운 의지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수의견에 대한 전수안의 보충의견서는 “자살자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10)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21 판결.

11)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판결.

나약함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며,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 또한 국가의 책무다. (중략) 군입대자 대부분이 18세 내지 25세 사이의 젊은이로서 청소년기에서 성년기로 이행하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있다는 점과 현재와 같은 징병제하에서 군 복무 여부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거나 개인의 적성에 따라 복무의 종류와 강도를 달리하지는 못한다는 점, 군사 목적의 효율적 훈련과 교육을 위한 군대 내 고유한 지휘체계 내지 계급제 등의 특수성, 친구들과 사회·가정으로부터 격리되어 일체의 생활을 부대 내에서 하게 되는 과정에서 개인에 따라 적응의 정도와 적응 기간에 차이가 있고 특히 입대 초기의 적응단계에서 정서장애, 행동장애 등을 겪을 수가 있으며¹²⁾” 라고 명시하였다. 이 판결의 취지는 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두3927, 대법원 2012.8.17. 선고 2012두8762에서 유지되었다.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 삭제 : 자해사망자도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인정

2011년 개정 전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에 따르면 자해사망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대상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다 2011년 9월 15일 국가유공자 제외경우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자해사망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 [전문개정 2011. 9. 15] 4호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삭제

(2) 보훈보상자법 제정 :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망자에 대한 구제방안

보훈보상대상자는 재해사망군경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으로 규정하였다. 자해사망자와 관련해서

12)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판결.

는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15호에 명시하였다.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3) 국방부 전공사상사처리훈령 개정 : 국방부의 자해사망자 순직 인정

전공사상사 처리훈령은 2012년 7월, 2014년 3월, 2014년 9월에 걸쳐 개정되었다. 먼저 2012년 7월 개정으로 공무 관련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도 순직으로 인정되었다. 이후 2014년 3월에는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라는 문구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로 개정되었고, 같은 해 9월에는 ‘사망 또는 상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자.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자해행위는 다음과 같다’ 로 개정되었다.

<표6-9> 전공사상사처리훈령(2-14) 개정내용

개정일	개정내용
2012.7.1	<p>사망 또는 상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2014.3.12	<p>사망 또는 상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

	인 원인이 되어 <u>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u>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2014.9.1	<p><u>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자.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자해행위는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공무와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전공사망심사위원회 및 전공상심사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4. 소결 : 한국보훈법제의 문제점

2019년 10월 국정감사 8월까지 국가유공자 신청접수 대비 심사 미완료 계류 안건의 비중이 2015년 13.1%에서 2019년 말 기준 39.7%로 증가하였고, 심사를 받았지만 인정받지 못한 비율도 52.6%에 달한다.¹³⁾

국가유공자법 개정 전에는 ‘자해사망군인에 대한 예외규정’, ‘자유로운 의지’ 여부가 문제였다면, 국가유공자법 개정 및 보훈보상자법 재정 이후에는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 ‘직접적인 관련성’, 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자해사망군인에 대한 예외규정’,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인가의 여부’는 앞에서 언급한 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27363의 판결 등을 통해 극복되었지만 2011년 개정된 보훈보상자법이나 군인사법은 오히려 국가유공자를 위계화하고, 등급화함으로써 2012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15호) : 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27363판례취지와 배치

보훈보상자법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못한 사망자를 구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 및

13) 서울일보, “[국정감사]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심사 못받는 비율 40% 육박”, 2019-10-10.
<http://www.seoui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737> (2019-11-18).

시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할 사람까지도 보훈보상대상자로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5는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 규정은 자해사망의 원인이 이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것이고,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사정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까지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예정한 자해사망으로서 ‘국가유공자’ 범주에 해당한다. 2012년 대법원은 “(구국가유공자법) 제4호가 들고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역시 위 각 호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더구나 보훈보상법 시행령 위 15호는 대법원의 유공자인정기준보다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보훈보상자에게 요구한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15호는 판례의 취지와는 달리 국가유공자 대상자를 보훈보상대상자로 격하시킨다.

2)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지원자의 구분 : 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27363 판례취지와 배치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이 기준으로 인해 자해사망자의 상당수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되고 있다.

창원지법 2019. 4. 24. 선고, 2018구단12191 판결은 “입대 전 육체적·정신적 문제가 없었던 망자가 입대 이후 사망할 때까지 7개월가량 지속적인 육체적 고통에 시달려 왔고, 단체생활에서 열외·고립되어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한 상태였으며 그것이 원인이 되어 불면증, 우울감, 무기력을 겪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망자가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중대장 등에게 청원휴가를 요청하였음에도 모두 거부되었고 그 상황에서 이루어진 소속 중대에 대한 검열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보복조치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자신 및 동료 중대원에 대한 열차려와 계속된 내무감사로 망자가 극도의 수치심과 동료에 대한 미안함, 자책감을 느꼈으며, 이에 해소되지 않는 육체적 고통과 우울감 등 기저질환이 결합하여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행동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자가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상이 심해져 있는 와중에 자신 때문에 자신과 동료들이 열차려를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심적인 고통이 극단으로 치달아 자유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사망이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고 보았다.

위 판례에서 확인하였듯이 국가유공자 인정의 문턱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대부분의 사건을 모두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한 자살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는 시행령을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 현재 시행되고 있다. 법원도 국가유공자 대신에 보훈보상자로 인정함으로써 현재 왜곡된 법관념을 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과 법원의 판결은 2012년 대법원의 판결에도 배치되므로 자해사망군인의 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법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3) 국립묘지안장의 문제

국립묘지 안장은 망자에 대한 예우로서 유족들의 요구가 높았고, 이에 2007년 당시 열린우리당의 장영달 의원은 군 복무와 관련된 이유로 자살한 군인의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¹⁴⁾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회기만료 폐지되었다.

14) 제안 이유 : 현행법은 현역군인·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현충원에 안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했으나 군생활 미적응 등의 사유로 군 복무 중 사망 또는 자살한 경우 사후처리를 유족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군 복무 중 자해로 인하여 사망한 자라 할지라도 그 직접적 동기가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 혹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립묘지에 그 유골을 안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군 복무 중 자해로 인해 사망한 자 중 그 직접적 동기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립묘지에 그 유골을 안치할 수 있도록 함(안

현재 국방부에서 순직인정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국방부가 순직Ⅲ형으로 결정한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어서 그 사이 자해사망군인의 유족들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은 자해사망이나 병사나 사고사의 경우에 군인을 예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묘지와 애도의 문제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립묘지를 국가유공자의 명예현창을 위한 공간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공동체를 위한 고역에 종사하던 군인의 죽음을 보편적으로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유하는 경우에만 비순직 군인의 유해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5조제5항 신설).

< 참고문헌 >

| 도서, 논문, 단행본

- 이재승, “국가범죄”, 엘피, 2010
- 권오성,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기준”, 한국노동법학회, 2017
- 권인숙, “징병제하 인권침해적 관점에서 군대문화 고찰”, 민주주의와 인권, 2009
- 김민영, 김윤진, 신주영, 이도감, 정동일, 이재욱, “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보훈 및 국가 배상 연구”,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7
- 김안나, 김성기, “군내 자살처리자 가족의 사회적 배제와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07
- 김호철, “군의문사 진정사건을 통해 본 자살처리자 문제현황”, 군의문사위 2006년도 전문가 초청토론회 자료집, 2006
- 노호창, “자살한 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에 대한 쟁점”, 한국노동법학회, 2013
- 양승엽, “스트레스 자살에 있어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대법원 2016.1.28. 서고2014두5262 판결”, 노동법학, 2016
- 양승엽, “정신질환에 따른 자살에 대한 공무상 질병 인정 기준”, 한국노동법학회, 2016
- 양철호, “군 징병 자살과 국가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유럽헌법연구, 2017
- 오윤성, “군 내 사망사건 중 의문제기 감소방안에 대한 연구-자살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005
- 이계수, “군인의 죽음과 인권”,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이서형, “한국의 보훈제도 역사와 보훈문화의 선진화과제”,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2010
- 이영자, 이효재, “보훈의료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08
- 이재승, “군내 자살처리자에 대한 국가책임의 근거와 범위”, 군의문사위 2006년도 전문가 초청토론회 자료집, 2006
- 임성훈, “군내 자살처리자 관련 판례 분석과 현 제도의 문제점”, 군의문사위 2006년도 전문가 초청토론회 자료집, 2006
- 전극수, “군의무복무중 자살한 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2009
- 전충현, 임석현, “군자살자의 자살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부검 적용 방안”, 한국과학수사학회, 2012
- 조성제, “군인의 사망과 관련된 법률관계”,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

문무철, “고충민원 사례로 본 군폭력자살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 2014

“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 국민권익위원회, 2013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 근로복지공단, 2016

| 신문기사

민중의 소리, “일병 자살...최근 5년간 군대 자살자 수는 348명”, 2010-10-15.

<http://www.vop.co.kr/A00000440504.html> (2019-11-18.)

조선일보, “군복무중 과중한 업무로 자살...보훈대상자 인정”, 2018-12-2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4/201812240087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2019-10-19)

Legal Times, “군복무 중 허리 통증으로 우울증 심해져 자살...보훈보상대상”, 2019-05-11.

(2019-10-15.)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145>

서울일보, “[국정감사]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심사 못받는 비율 40% 육박”,

2019-10-10,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737> (2019-11-18.)

메디컬투데이, “법원, 군대 축구로 무릎 부상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2019-03-20,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49346> (2019-10-11.)

법률신문, “사고경위 불명확 이유만으로 재해사망군경 인정 거부는 잘못”, 2019-11-14,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7228> (2019.12.10.)

연합뉴스, “보직 변경 스트레스에 극단적 선택한 군인...법원 "공무상 사망"”,

2019-12-12,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162000004?input=1195m> (2019-12-24)

제7장 정책적 제언

1. 보훈법제의 총평

보훈사건으로서 군인의 자해사망을 취급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해당국가의 연관법제와 법전통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인보훈법제는 사회보장법제, 공무원법제, 연금법제 등과 상호연관 속에서 경로의존성을 보여준다. 사회보장제도가 허술한 사회에서는 보훈청구권은 유족에게 사활적인 사항이 되고 동시에 법리의 확장이 요구되지만, 충실한 사회보장제도를 갖춘 사회에서는 보훈법리의 엄격한 유지가 제도간의 조화와 분화에 오히려 기여한다. 보훈법제의 이러한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제도의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지금까지 자해사망군인에 대한 연구를 다음과 같이 개괄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초기 보훈법제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인의 자해사망을 불온시하고 그 유족들에게 보훈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초기에는 대부분의 사회가 숭고하고 명예로운 죽음(전사)을 찬양하고, 자해사망을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규정하고 종교적 또는 도덕적 견지에서 비난하였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시각에서 탈피하지 못한 법문화가 적지 않지만, 자해사망에 대한 사회학적·병리학적 통찰을 기반으로 점차 자해사망을 개인적 선택의 결과로 보지 않고 구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또한 자해사망을 포함하여 군인의 죽음에 대하여 국가공동체의 특별한 배려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대중적인 공감과 이해도 현저하게 확산되었다.¹⁾ 군인의 자해사망을 힘들고 위험스러운 병역의 본질적 위험에서 불가피하게 파생하는 현상으로 인정함으로써 군인의 자해사망을 국가의 책임으로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널리 수용되고 있다.

군인의 자해사망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일치하지만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나라마다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자해사망에 있어서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추정하고 두터운 보훈혜택을 제공하는 편이다. 국제적으로 수많은 전장을 유지하면서 모병제를 시행하는 나라로서 미국은 자원 입대자에게 관후한 처우를 골자로 한 전향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거에 군인의 자해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데에 인색하였던 한국, 대만, 이스라엘도 오늘날에는 국가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 국가들 간에도 국가책임의 인정 방식 또는 범위에서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 현재로서 순직자와 비순직자(비순직 자해사망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법제는 없다.

1) 이재승, 국가범죄, 엘피, 2010, 237쪽 이하.

그러한 동일시정책은 모든 죽음을 해당 국가공동체가 책임져야할 사회적 정치적 불행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만 실현될 것이다. 그러한 원대한 시대에는 보훈법제, 연금법제, 보험법제가 하나의 방향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보훈법상 책임원리도 개인적 책임과 공동체적 책임을 혼합한 전체법질서의 표상에서 과도하게 이탈할 수 없다. 독일은 자해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제한적인 보훈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의 보훈법제는 순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각종 보훈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일반사망자(비순직자) 유족의 곤궁한 상태를 거의 외면한다. 대만은 자해사망을 전체적으로 병사로 간주하고 순직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일정률을 제공한다. 대만의 제도는 순직으로 인정할만한 자해사망조차 병사로 처리하기 때문에 또 다른 불만요인을 갖고 있지만 대다수 자해사망에 일정률의 보훈혜택을 통일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우수하다. 아마도 대만의 방식에 한국의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중첩시킨다면 매우 우수한 법제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연결성을 통찰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선행해야 한다. 책임근거와 명분을 충실하게 축적하고 공명하는 한에서 기존의 책임원리를 능가하는 새로운 원리를 제도화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징병제 아래서 의무복무군인의 죽음을 전면적으로 국가의 책임사항으로 확립하자는 주장도 이제 실행에 옮길만하다고 여겨진다.

군인의 보훈사건(공무상 사망)의 판정에 있어서 독일이나 대만, 미국 등 조사대상국가들은 단일한 절차를 운용하지만 한국에서는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각각의 판정절차(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보훈처 소관으로, 군인사법과 군인연금법은 국방부의 소관으로)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보훈처를 국방부의 외청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출범시키면서 권한경계를 명료하게 확정하지 못한 조직설계상의 과오로 여겨진다. 어쨌든 군인의 죽음을 복수의 국가기관들이 상이하게 판정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현상으로서 유족에게는 끝없는 고통의 시작이다. 단일한 법제 안에서 단일한 기관이 순직 여부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판단하고 합당한 분류방식에 따라 보훈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국가보훈법제의 통합운동을 재설계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군인보훈법제의 통합운영이 시급하다.²⁾ 우선적으로 군인 보훈사건의 판정(순직)에 대해 군인사법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보훈법의 보훈심사위원회 간에 견해의 불일치가 없어야 한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양부처간의 합동심사위원회로 운영하고 이 위원회의 결정을 보훈법

2)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법은 최상위법으로 전제하고, 군인사법상의 보훈사건에 관한 장과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을 ‘군인보훈법’으로 통합정비하고, 군인보훈법은 순직여부, 보훈혜택유형을 규정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군인연금법 자체를 군인보훈법으로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실제로 이 법역에서 연금의 중복과 선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제도설계상의 불안전함과 중복으로 이해된다.

제의 운용과정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군인연금법과 보훈법제간의 영역획정을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순직이라는 사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법이 동시에 경합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개별법제들간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특히 군인연금법을 직업군인을 위해서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재검토하고, 바람직하다면 병에게 보완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군인이 기여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군인연금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은 퇴역군인에게 공무원보훈법(이 법에도 공무원이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에 따라 노후연금을 제공한다. 한 마디로 독일의 군인보훈법은 모든 문제를 하나의 법 안에서 해결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군인연금 재정에 대한 국가기여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제도에서는 군인의 죽음 일체를 군인연금법으로 다루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 경우 의무복무군인의 기여금은 국가가 대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군복무기간이 연금 크레딧으로 국민연금기간에 산입되는 수준에서 이 문제가 고려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통합적인 보훈 및 연금법제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인에 대한 보훈법제는 단일해야 한다. 한국의 보훈법제는 국가유공자법을 중심으로 부수적인 법들이 배치되어 있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적 인정제도를 통해 희생을 광범위하게 국가적 수준에서 통합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는 희생자들의 요구를 분류차별화 하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불화도 축적한다. 근본적으로 국가유공자법이라는 명칭을 갖는 법을 왜 제정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우선적으로, 다른 나라에는 특수한 공적에 대해 훈포상을 수여하는 상훈법을 제외하고 국가유공자라는 명예를 부여하고 나아가 경제적 보상까지 제공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체로 상훈법이 특수한 상징적 영예를 부여하고, 보훈법제가 유족의 생활보장 혹은 퇴역자들의 생활안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한국의 국가유공자법은 통상의 보훈법제의 목표를 초과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법의 정신이 민주적이기보다는 국가주의적이고, 현대적이기보다는 봉건적이고, 죽은 자에 대해 애도와 유족의 배려를 지향하기보다는 영광의 현창을 지향한다. 그렇기에 국가유공자법이 존재하는 한에서 공적인 인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명예중시문화는 한국의 유교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근대 국가주의를 통해 가속화되었다.³⁾ 또한 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만 보훈혜택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법제화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법은 생활안정이라는 보훈목적에 충실할 수도 없다. 이제 국가유공자법을 간단히 폐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보훈제도의 재구성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점진적인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3) 이재승, 묘지의 정치, 통일인문학 제68호, 2016, 257-296쪽.

단기적인 목표는 유공자 인정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다. 보훈법제는 희생자에 대한 숭고한 명예, 유족에 대한 경제적 생활보장, 고인들에 대한 보편적 애도를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 보훈법제는 장차 숭고한 명예의 현창(顯彰)에서 경제적 생활보장과 애도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경제적 생활보장과 보편적 애도로 이행함에 따라 보훈법제는 사회통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2011년에 제정된 보훈보상자법은 군인의 죽음을 등급화함으로써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국가유공자라는 명칭을 가진 법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공자 논란은 초래되지 않는다. 독일의 군인보훈법(Soldatenversorgungsgesetz)은 전사자, 순직자, 자해사망자, 일반사망자까지 모두 동일한 법제 안에서 규율하면서 혜택을 다각도로 가감조정할 뿐이다. 대만의 군인무훈조례도 마찬가지이다.

2. 제안방향

각국의 관행을 참조한 가운데 보고서의 정책적 제안방향을 현재의 관행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7-1> 현재 관행과 제안 방향 대비

현재 관행			제안 방향		
분류	유공자여부	안장여부	분류	유공자여부	안장여부
전사	국가유공자	○	전사	국가유공자	○
순직 I-III			순직		
일반사망	X	X	일반사망	비순직 지원대상자	X
				X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는 사망을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판단한다. 자해사망 사건도 이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적진에서 기밀유지를 위해 자해사망한 경우를 전사로, 과중한 업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병적인 심리상태에서 자해사망한 경우를 순직으로, 복잡

한 가정사를 비관하여 군인이 자해사망한 경우를 일반사망으로 규정할 수 있다. 현재 유공자 여부는 보훈처가 판단하고, 보훈처는 순직을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일반사망자로 다시 분류한다. 보훈처는 사망한 군인의 안장여부에 대해서 국방부의 순직결정을 수용하고 있다. 현재의 관행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자고 제안한다.

첫째로, 군인사법상 전사(국방부결정)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 이들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전몰군경(제4조 제1항 3호)에 준한다.

둘째로, 군인사법상 국방부가 판단한 순직Ⅰ-Ⅲ 유형을 보훈처가 재심사하여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자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현재의 관행을 폐지하고 순직Ⅰ-Ⅲ 유형을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상 순직Ⅰ, 순직Ⅱ, 순직Ⅲ의 등급구분은 폐지되고 순직으로 단순화한다. 순직의 분류는 보훈의 등급이 아니라 사망의 유형을 의미할 뿐이다. 순직여부는 국방부와 보훈처가 공동결정하도록 제도화한다.

셋째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반사망(공무에서 벗어난 죽음,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죽음)은 제한적인 보훈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인의 죽음의 이유보다는 군인 가족의 불행과 생활에 초점을 이동시켜야 한다. 이러한 범주를 표에 비순직 지원대상자로 규정하였다. 비순직 지원의 내용은 현재의 보훈보상자법의 지원내용에 준하여 전반적으로 재조정한다.

넷째로, 중대한 범죄를 자행하고 유죄판결을 우려하여 자해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는 유공자법상의 보훈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섯째로, 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순직 여부에 관계없이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따라서 단순한 자해사망자나 일반사고 사망자도 군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불행을 겪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를 자행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군인이나 유죄판결을 우려하여 자해사망한 군인은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는다.

3. 보훈법제의 개선점

앞의 제안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다음과 같이 보훈법제와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1) 직접적 관련성 문제

순직군경과 관련해서 볼 때 국가유공자법이나 보훈보상자법은 모두 공무수행과 연관된 죽음, 순직을 다루기 때문에 별도의 법제로 운영할 이유가 없다. ‘질은 순직’과 ‘열은 순직’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2012)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2012)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2015)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라는 문구가 2012년 법개정을 통해 보훈법제 전반에 처음 등장하였다. 그러나 그 전에 국가유공자법은 직접적 관련성을 규정하지 않았다. 과거의 법조문이 보편적이고 무난한 규정방식이다.⁴⁾ 2012년 법개정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공무상 사망으로서 순직여부를 판정하는 데에 ‘직접적 관련’은 전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의 법제가 공무관련성에 입각한 국가책임을 추구하는 보훈법의 정신에 더 부합한다.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직무수행’과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2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사이에 존재하는 ‘간접적

4) 국가유공자법 제2조 제1항 5호: 순직군형: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은 근거없이 저평가되거나 배제되고 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라는 표현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하고 형용모순에 가깝다. 군대 전체가 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조직된 것인데 그중에서 어떤 직무나 지위 또는 활동만을 선별한다는 것이 매우 자의적이다. 더구나 군인이 수행하는 특정업무들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은 국가안보를 위해 생명을 바치도록 훈련을 받아왔으며 언제든지 동원되어야 하는 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직접적 관련성”을 강조하는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 군인사법은 군인의 본성을 통찰하지 못한 안이한 규정이다.

직접적인 관련 여부를 기준으로 사망자에게 다른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반한다. 군인의 사망이 결국 직무수행과 관련 되어있다면 당연히 공무상의 사망, 즉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미 국가유공자법이 전몰군경(4조 제1항 3호)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상의 사망, 순직 이외에 또 다른 열등한 범주를 설정하여 차별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다. 순직을 일반적인 공무수행자의 순직과 위험업무자의 순직을 구분하는 것도 순직의 등급으로 파악해서는 안 되며 위험직무 사망자에게 제공되는 일회적 우대 조치에 한정해야 한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사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훈보상자법의 적용대상자나 국가유공자법의 적용대상자도 동일하게 공무상의 사망에 해당한다. 더구나 직무의 내용이나 성격은 사망한 군인이 선택할 수 없고, 직무명령에 의해 해당 군인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망한 군인이 차별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보훈법제가 통일적 규율 사항을 불합리하게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반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나아가 국가유공자법이 무공수훈자나 보국수훈자의 경우 그 사망과 직무간의 연계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훈법제가 일반 순직군인에게 불평등한 관점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단기복무자 및 병에 대한 심각한 차별을 내포한다. 보훈급부를 위해서는 직무관련성만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군인사법에서 ‘직접적 관련성’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한다. 2012년 개정전으로 환원하고, 직접적 관련성을 전제로 하여 애매한 중간영역을 상정한 보훈보상자법을 최소한 군인보훈과 관련해서는 폐지해야 한다.

개정제안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5호.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2. 순직자(단일규정)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2) 전공사상분류기준

군인사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의 별표상의 순직자분류방식이나 사망자분류방식은 통일성을 갖추지 못했다. 군인사법은 국방부의 관할사항으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지원자법은 국가보훈처의 관할사항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기관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군인의 유족들은 이중적인 절차의 부담을 지거나 빈번히 모순된 결정에 직면하는 것이 현실이다. 독일의 보훈의료규정처럼 의료법적 판정기준을 통일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는 2012년 대법원 판결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군인사법 및 군인사법 시행령의 전공사상자 분류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인사법 제54조의2는 사망자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분류하고, 순직자를 순직Ⅰ, 순직Ⅱ, 순직Ⅲ으로 분류한다. 사망자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것은 다만 법제에서도 볼 수 있으나 군인사법은 순직자를 다시 세분류함으로써 순직자를 부당하게 등급화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군인사법의 시행령은 군인사법의 문제점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순직으로 인정된 자해사망을 순직Ⅲ의 유형으로 한정함으로써 불이익한 처우를 예정한다. 전사자를 특별하게 예우하는 사례는 볼 수 있지만 순직자를 등급화 또는 위계화하는 방식은 다른 나라에서 찾기 어렵다. 따라서 군인사법 및 그 시행령상 순직Ⅰ, 순직Ⅱ, 순직Ⅲ의 구분을 폐지하고 순직Ⅰ, 순직Ⅱ, 순직Ⅲ을 공무상 사망으로서 ‘순직’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대만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누고 전사, 순직, 일반사망 사이에 단지 보상금의 차이를 두었고, 독일은 순직과 일반사망으로 나누고 보훈혜택에서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으며, 특수한 위험업무 순직자(한국 군인사법상 전사자나 순직Ⅰ형에 유사함)에게는 일반적 순직자와 달리 일회적 재해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국방부가 순직Ⅲ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자해사망자를 보훈처가 보훈보상자에서도 배제하는 사태도 제도운용에서 심각한 잘못이다. 국방부나 국가보훈처가 자해사망을 보훈대상에서 지속적으로 격하시키는 관행은 2012년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된다. 자해사망은 단지 순직의 한 형태일 뿐이지, 순직의 열등한 범주가 아니다.

3)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별표1) 15호

국가유공자법은 2011년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배제사유(제4조 제6항)에서 “4호.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삭제하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1(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도 자해사망을 특별히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자해사망자도 일정한 요건 아래서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하였다.

2011년 제정된 보훈보상자법은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두지 않음으로써 국가유공자법의 취지를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제2조 제3항). 그러나 보훈보상자법은 ‘직접적인 관련성’을 매개로 국가유공자법의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 보훈보상자법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별표1)]에서 자해사망이라는 범주를 설정함으로써 자해사망자를 애시당초 보훈보상자로 격하시키고 있다.

15호.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그러나 15호의 내용은 2012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감안하면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할 사례에 해당한다.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1의 15호 사유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1에 추가해야 할 사항이다. 별표1의 15호는 국가보훈처가 자해사망을 처음부터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할 근거규정으로 역기능을 수행한다.

4) 보훈보상자법의 폐지 및 비순직 지원대상자

변칙적인 순직등급에 의존한 현재의 보훈보상자법을 폐지해야 한다. 현재 보훈보상자로 인정된 사례는 국가유공자법의 적용대상자로 보는 것이 직무연관된 사망에 대한 국가책임논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훈보상자로 판정받은 사망자의 유족들에게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지위를 부여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 일반사망자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보훈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순직자 지원조항을 국가유공자법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지원제도는 미국의 직무관련성 없는 사망연금(non-service connected death pension)이나 독일의 비순직 군인의 유족에 대한 기한부 지원(군인보훈법 제42조)에서 실현되었다. 죽음의 찬양이 아니라 군인가족의 생활안정으로 보훈법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실제로 구국가유공

자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적 뿌리가 존재하였다.

국가유공자법 제12조2(비순직 유족에 대한 지원금)

①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계없이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연금수급, 자산의 보유정도, 자녀의 연령 및 자립정도를 고려하여 제12조의 보상금의 7할의 한도 안에서 유족의 생활지원금을 제공한다. 지원금의 지급기한과 지급정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전향의 사망이 이 법 제79조에 열거된 범죄 및 군형법 위반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4. 의무복무군인에 대한 특별규정

의무복무군인에 대한 특별취급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병역을 수행하는 군인이 지는 중압감은 군인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지 징병제인가, 모병제인가, 의무복무군인가, 직업군인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분단상황, 한국전쟁, 적대적 대치상태, 징병제의 압박을 감안할 때, 동족과 대치하고 동족과의 전투상황에서 동족을 사살할 수밖에 없는 중압감은 다른 직종이나 다른 나라의 군대에서 찾기 어렵다. 2018년에 대법원이 병역거부권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와 병영생활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감은 전혀 완화되지 않는다. 의무복무군인의 부담은 더 무겁고, 징병제로 인한 부담은 징집당국에게도 큰 압박으로 작용한다. 다양한 심리적-정신적 장애를 징병검사과정에서 발견하고 스크린하지 못한 데에 대한 당국의 책임도 심각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의무복무군인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직무관련성 간주규정 또는 추정규정

의무복무군인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예외 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최근에 이학용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은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현역병의 사망사건에서 직무관련성을 추정하는 것은 온건한 방식이다. 자해사망과 관련해서 보자면 미국의 판정규정은 이러한 추정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의 보훈법제도 군인의 공상 인정에 대해서 추정규정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추정규정은 군당국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사망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게 되고, 자해사망도 직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병적인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인정하게 한다. 물론 군인이 국가유공자법 제79조상의 범죄와 군형법상의 중대 범죄를 범한 연후에 자해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자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학용 의원 대표발의)

제6조의8(군인의 순직군경의 인정에 대한 특례)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 중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어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이라 한다)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현역병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역병이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
현역병이 국가의 수호·안정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하였다는 사실

그러나 이학용 의원안은 몇 가지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로, 추정의 특례를 현역병에 한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군인의 사망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을 추정해야 하겠지만 최소한 단기복무군인의 사망사건에서 직무관련성을 추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단기복무를 수행하는 부사관이나 장교들이 최근에 복무기간 중 불행한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둘째로, 기관장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사망했다는 사실(2호)”을 반증할 수 있게 한 점은 불만이다. 본문에서 추정한 것을 고스란히 반증할 수 있게 하였는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도 직무수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백안시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개정안의 1호와 2호간의 불협화나 부당한 제약이 존재한다. 개정안 2호는 개정안 1호보다 사망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이다. 1호가 언급하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6항⁵⁾ 2호상의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와 개정안 2호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사망했다는 사실”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전자는 직무관

5)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관련성이 없는 경우이고, 후자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직무수행 사례이다. 자해사망자의 유족을 우대하는 취지라면 개정안 2호를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학용 의원안이 ‘직접적 관련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제2조를 수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안적 개정안을 제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국가유공자법의 “직접적 관련성”을 삭제하는 경우에만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법 제2조에서 직접적 관련성 문구를 삭제하고 이 개정안에서 직무관련성을 추정한다면 자해사망자의 유족을 우호적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대안1).

근본적으로 현역병 및 의무복무기간중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사망(자해사망, 병사, 휴가중 사고사)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특별규정(대안2)을 상정할 수도 있다. 이는 군인과 그 희생에 대한 특별한 존중과 공동체의 무한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입법이다. 아직 이러한 입법례는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현대한국 군대의 특수성이나 경제적 역량을 감안할 때 국가적 보험으로서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대안1)

제6조의8(군인의 순직군경의 인정에 대한 특례)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 중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어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병이나 「군인사법」상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그 사망과 이 법 제79조상의 범죄나 군형법상의 범죄 간에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상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현역병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사망이 공무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안2)

제6조의8(군인의 순직군경의 인정에 대한 특례)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 중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어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병이나 「군인사법」상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그 사망과 이 법 제79조상의 범죄나 군형법상의 범죄 간에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군인단체보험

보고서가 앞서 제시한 방안을 시행한다면 사망한 군인과 관련해서는 미군이 운영하

는 집단보험(SGLI)을 도입할 필요는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방안을 법제화하지 못하는 국면에서는 생활안정을 얻지 못하는 사망군인의 유족을 위해 군인단체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보험료 납부의무를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나 국가가 대신 납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의무복무자나 단기복무자에게는 국가대납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실제로 군인사법에 따라 전사자와 순직자의 유족에게 국방부가 1억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지급금이 실제로 단체보험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 경우 순직여부를 불문하고 지급하는 것이 국가보험의 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이다.

5. 국립묘지 안장

국립묘지나 국가관리묘역에 분묘를 조성하는 방식은 점차 변화를 겪고 있다. 묘지조성에서 자연장, 납골당, 각명비 형태로 안장방식이 바뀌고 있다. 현재 보훈처 내의 안장심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판정하며, 국가유공자 인정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국방부가 군인사법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한 군인의 경우에는 즉시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관행으로 확립되었다. 이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군인의 일반사망(사고사나 비순직 자해사망)의 경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 경우에도 사망한 군인에 대한 특별한 애도의 공간으로서 국립묘지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동작동 국립묘지(국립서울현충원)는 표현된 현창과 영예의 공간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군인의 죽음 일반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통합적인 안장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죽음과 직무간의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 오히려 사망한 군인에 대해 특별히 애도가 필요하므로 자해사망자나 일반사고 사망자라 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차 군인의 묘역이 기념비 또는 각명비의 형태로 전환하는 장기적인 묘지정책에 비추어보더라도 통합적인 수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범죄나 군형법상 범죄를 범하고 처벌을 우려하여 자해사망한 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죄의 경중을 가려 안장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방식도 바람직하다.

국립묘지법 제6조 ⑦(비순직 군인의 안장)

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다만 그 사망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상의 범죄나 군형법상의 범죄 간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발간등록번호 11-1290000-000793-01

- 자해사망 군인의 예우에 관한 외국 법제 및 적용방안 연구 -

발 행 2020년 1월 20일

발주처 국 방 부

연구책임자 이 재 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 쇄 이호문화사 (02) 454-9217